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140-100001-10



2025년 연구보고서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중·고령기를 중심으로

2026. 3.



<https://mods.go.kr/dsri>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중·고령기를 중심으로

안상건 · 이영미 · 김강빈 · 황남희 · 박소은 · 박은자 · 김세진 · 김은지



발간사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혁신과 효율성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AI 기반의 공공 AX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2025년 연구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기술을 국가통계에 접목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 기술혁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현장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조사자료의 내용검토 및 자동분류, 질의응답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통계 생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우캐스트 지표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는 통계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방법론 연구와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확률표본과 자원자표본을 통합한 추정 방안 연구는 응답자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비확률표본의 병행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료수집 개선 연구와 데이터 통합방법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통합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돌봄 분야 국가통계 활용 방안과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 연구는 데이터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이동통계 심층 분석 연구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중·고령기 비교 연구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표 작성 연구와 퇴직연금 적립금 배분 방법 연구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사람을 잇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국가통계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자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가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생애과정 및 코호트 선정에 대한 문헌고찰	5
제1절 생애과정과 중·고령기 특성	5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중·고령기 연령 범주	10
제3절 중·고령기 코호트 선정과 코호트별 특성	14
제3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가족·주거	22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23
제2절 가족 형성과 구조	24
제3절 주거 경로의 변화	38
제4절 소결	48
제4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돌봄	49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50
제2절 부모 돌봄 인식의 변화	53
제3절 돌봄 자원	55
제4절 소결	70
제5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일과 은퇴	73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74
제2절 경제활동 참여	78
제3절 근속기간 및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100
제4절 소결	110

목 차

제6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경제상태	113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114
제2절 노후 생활비	118
제3절 주관적 경제상태	121
제4절 소결	126
제7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건강	128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129
제2절 건강 수준	132
제3절 건강 행태	138
제4절 소결	144
제8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여가·사회적 관계	145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145
제2절 여가자원 및 활용 방식	148
제3절 사회적 관계망과 단체 참여	167
제4절 소결	182
제9장 결론	185
참고문헌	188
Abstract	196

요 약

본 연구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중·고령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주거, 돌봄, 일과 은퇴, 소득과 소비, 건강, 여가·사회적 관계 상태의 차이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단순한 현황 분석을 넘어, 근거 기반 정책 설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 생산과 해석을 지향한다.

생애과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삶은 연령, 시대, 코호트라는 시간적 맥락 속에서 사회·경제·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누적적으로 받으며 형성된다. 교육, 노동 시장 진입, 결혼, 은퇴 등 주요 전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시기에 발생한 사회적 사건과 제도 환경은 해당 시기에 성장한 코호트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코호트는 단순한 출생연도의 구분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제도적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의미하며,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어느 코호트에 속하는지에 따라 생애후반기의 삶의 조건과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년기와 고령기는 이러한 코호트 간 이질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구분된 분석이 필요하다.

1930~1970년대 출생코호트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복지제도 확산을 단계적으로 경험한 세대로,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8.6%를 차지하며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고령화는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이후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배경이 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과 인적자본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여자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족 영역에서는 혼인과 출산의 배경으로서 사회경제제도적 환경의 차이가 코호트별 가족 형성과 중·고령기 혼인상태 및 가족 구조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혼인 지연과 비혼 증가로 중·고령기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남녀 기대수명 격차 축소로 여성의 사별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유배우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부양 인식 변화는

자녀 동거 가구의 감소와 부부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주거와 지역 분포에서도 코호트별 차이가 나타났다. 1930~40년대생은 주택 공급 확대기에 자가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였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반면, 이후 코호트는 수도권 일자리·교육·인프라 집중 속에서 40대 이후 거주지 고착화가 강화되고 지역 간 이동성이 약화 되면서 중·고령기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돌봄 영역에서는 출생코호트에 따라 돌봄 자원의 구성과 이용 양상이 뚜렷하게 달랐다. 1930년대생은 가족 의존적 돌봄의 마지막 세대로 자녀 돌봄 비중이 높았으며, 1940년대생은 가족돌봄의 약화와 공적 돌봄의 확산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였다. 1950년대생은 배우자 중심 돌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세대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돌봄체계가 가족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활동 영역 분석 결과,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중·고령기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필요와 함께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산업 및 직업 구조 역시 최근 코호트일수록 임금근로자와 전문·사무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확인되었다.

건강 영역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으나, 동일 연령대 비교 시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중년기에서 고령기로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하였으며, 흡연 감소, 규칙적 운동 실천, 건강검진 참여 확대 등 최근 코호트에서 건강행태가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행태의 개선은 코호트 간 건강 수준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 고령 코호트에서는 노년기에 자살 생각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어,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는 노후 생활비 원천 측면에서 세대 간 뚜렷한 전환이 관찰되었다. 과거 코호트가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 코호트는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 기반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주관적 경제상태 역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 효과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확충과 금융환경의 변화, 노후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코호트별로 상이하게 축적된 사회경제적 경험과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가·사회적 관계에서 중·고령기를 살펴보면 신체적 제약과 관계망 축소라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나지만, 각 코호트가 겪은 사회적·제도적 환경 차이는 누적적으로 여가 활용 방식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은 연령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코호트 간 비교 시 최근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여가시간이 짧아진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여가비용 지출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더 많았으며 또한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격차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가족, 친구, 동호회 활동은 증가하였으나 혼자 하는 활동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여가 활용 만족도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도는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일한 70대 구간에서 1940년대생보다 1930년대생의 고립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0대에서는 여자는 감소한 반면 남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자료 생산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자료 생산과 시계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출생코호트 접근을 통한 생애과정 이행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출생코호트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건강정책, 가족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체계에 대한 대응, 중·고령층의 근로생애 연장을 지원하는 고용정책 확대 그리고 노후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주요 용어: 중년기, 고령기, 코호트, 가족, 주거, 돌봄, 경제활동, 생활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중위연령은 2022년 현재 44.9세에서 2030년 49.7세, 2060년에는 60세를 초과한 61.5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 이러한 추세는 향후 사회·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력 부족, 연금·돌봄 재정 부담 증가, 건강·요양 수요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표 1-1> 고령화 관련 주요 통계

구분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60
고령인구비율 (65세+)	17.4	20.3	25.3	29.9	34.3	37.3	40.1	44.2
중위연령(세)	44.9	46.7	49.7	52.5	54.6	56.4	58.1	61.5

주: 1) 중위추계 기준이며,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 가정을 조합한 결과

2) 중위연령: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보도자료, 2023.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특히 2023년 현재 인구구성에서 50대가 가장 큰 비중(16.94%)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역시 14.87%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편입, 지속되는 초저출산, 기대수명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2024년 인구총조사 기준 내국인 중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약 687만 명, 2차 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는 약 920만 명으로, 이들이 202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며 고령 인구 비중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합계 출산율은 2000년 초, 1.3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4년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기대수명 역시 1970년 62.3세에서 2023년 83.5세로 크게 증가하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일본·스위스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86.4세로 남성(80.6세)보다 5.8년 길어 성별 구조 변화 또한 동반되고 있다. 이처럼 은퇴 이후 생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기 삶의 내용과 지원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전환 속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전통적인 생애 주기에서 기대되던 안정적 가족구성, 자녀 독립 이후 은퇴 생활이라는 단일 경로를 벗어나 더욱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베이비 붐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건강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기간이 길며 자산구조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정경희 외, 2013; 황남희 외, 2019; 안서연과 백학영, 2019). 이는 동일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출생코호트에 따라 삶의 궤적과 건강 및 경제상태가 상당히 다름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는 중·고령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거나 특정 시점의 실태 분석 대상으로만 보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어, 생애과정의 흐름에서 출생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특정 부문 및 특정 시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중년층과 고령층의 생애과정 이행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중년기에서 고령기로 이동하는 과정은 가족구성과 돌봄 형태, 주거 경로, 노동과 경제상태, 건강 및 여가와 사회적 관계 등 많은 영역에 걸쳐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시기이며, 그 양상은 출생한 시대·사회적 경험·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1930년대생은 전쟁과 빈곤을 겪었고, 1950년대생은 산업화·도시화를 거쳤으며, 1960년대생은 교육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정규 노동시장 진입 구조가 변화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동일한 60대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행태, 근로생애, 돌봄 자원, 경제적 기반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현재 중·고령층에 해당하는 1975년 이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50세 이후 생애후반기에 경험하는 가족구성과 돌봄 형태, 주거 경로, 노동과 경제상태, 건강 및 여가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세대별 생애 이행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 대응 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기준 50세 이상인 1975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코호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생코호트는 활용 자료의 특성과 표본 규모를 고려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그룹화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패널조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이다.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활용은 출생연도 끝자리 1~5년생, 6~0년생 단위로 분류하고 연령대 역시 0~4세, 5~9세 단위를 적용하였다. <표 1-2>는 출생코호트별로 45~49세부터 80~84세에 이르기까지 조사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예를 들어 1931~35년생 코호트는 1990년 조사 시점에 55~59세, 2000년 조사 시점에 65~69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동일 출생 세대가 생애후반기에 진입하는 시기별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조사를 비롯한 고령화패널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의 경우 표본조사 특성상 5세 단위 세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오차를 감안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1~0년생 기준 10년 단위 코호트 분류 및 10세 단위 연령구간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조사 시점이 설정한 출생코호트 구간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분석단위의 정합성을 위해 10세 단위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코호트 구간을 조정하였다.

<표 1-2> 출생코호트별 연령-자료 활용 연도

(단위: 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1931~1935년생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36~1940년생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41~1945년생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46~1950년생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51~1955년생	2000	2005	2010	2015	2020			
1956~1960년생	2005	2010	2015	2020				
1961~1965년생	2010	2015	2020					
1966~1970년생	2015	2020						
1971~1975년생	2020							

주: 각 셀의 숫자는 활용 자료인 조사 연도를 의미

분석의 초점은 각 코호트가 4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에 이르는 생애후반기 단계에서 가족·주거, 돌봄, 일과 은퇴, 경제상태, 건강, 여가·사회적 관계로 나뉜 각 영역에서 경험한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코호트란 특정 시기를 함께 경험한 집단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세대별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분석 단위이다. 엄밀한 코호트 분석에는 동일 개인을 반복 관찰하는 패널 자료가 필요하나, 장기간·대규모 패널 자료 확보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현대환 외, 2024).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횡단면 조사 자료로 개별 생애 경로를 직접 추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국 단위 전수 및 대규모 표본 조사라는 대표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가상 코호트 접근법(synthetic cohort approach)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주기, 표본 규모, 시계열 범위에 따른 분석 가능 연령대 및 코호트 구성의 제약이 존재하며, 일부 연령대·코호트 조합에서는 자료연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적 연구 필요에 대한 배경과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생애과정 이론 고찰과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의 생애과정 전반의 구조 재편에 관한 문헌 검토를 통해 중·고령기의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본 후, 출생연도에 기반한 코호트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출생코호트 사회·제도적 배경과 세대별 경험 특성을 살펴보고 이후 이어지는 실증분석에 대한 이론적·맥락적 기반을 제공한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가족·주거, 돌봄, 일과 은퇴, 경제상태, 건강, 여가·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한 자료원과 지표를 살펴보고, 출생코호트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제9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의 생산과 관리,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제 2 장

생애과정 및 코호트 선정에 대한 문헌고찰

제1절 생애과정과 중·고령기 특성

1.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생애과정이론은 인간의 삶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인간의 삶을 출생부터 죽음까지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개인의 삶이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단순히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와 시대적 변화가 생애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나이, 관계, 사회적 변화 등과 같은 요소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Elder, 1998).

이행(transition)은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과 같이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또는 시점을 의미하며, 개인이 특정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급격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며,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위(status) 혹은 상태(state)의 변화이다(George, 1993). 이행은 개별적 사건이지만, 연속된 이행들이 모여 생애경로를 형성하게 되는데(Elder, 2003), 이는 상호 연결되는 방식-시점, 순서, 기간(spread)-으로 이해될 수 있다(Pavalko, 1997). 궤적(trajjectory)은 개인이 특정 사건에서 겪는 일련의 과정과 방향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측면으로 다수의 이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Elder, 1994). 이러한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경험이 이후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누적적 이점(cumulative advantage)과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개념과 연결된다. 배열(sequence)은 단일 이행 이상이면서 전체 궤적 이하로 정의되기도 하고(Sackmann & Wiggins, 2003),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으로서 순서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규정되기도 한다(Pavalko, 1997). 그래서, 이행과 궤적 개념은 지위 이동의 관점에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문혜진, 2010).

Elder(1994)가 주장한 생애과정이론의 핵심 원칙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시간

과 공간(Time and place)은 개인의 고유한 발달 경로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내재되어 변형된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다른 시대에서 성장하면 서로 전혀 다른 생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삶의 타이밍(Timing in lives)은 개인의 삶에 주요한 사건 또는 전환의 타이밍을 의미하며, 특정 사건(event)의 영향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셋째, 연결된 삶(Linked lives)은 개인의 삶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의존적이며, 사회로부터의 영향은 가족과 같은 개인이 가진 관계망과 교차한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생애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넷째, 행위자(Human agency)는 개인이 역사와 사회적 환경의 기회와 제약 속에서 내리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애과정 관점은 사회 변화와 개인의 일생을 접목시킨 것으로, Mills(1959)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역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말했다. Cain(1964)은 Mills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체계화하여 연령지위(age status)와 생애과정(life course)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구체화하였다. 그는 사회가 연령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연령지위로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과정들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말하였으며, 생애과정을 ‘여러 문화 속에서 개인들이 점유하는, 노화의 결과로서 경과되는 연속적 지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Cain, 1964). 개인의 일생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과 사회 구조로서의 연령지위 체계에 대한 개념적 측면에 따르면, 생애과정 관점은 생애과정을 제도와 역사에 의해 내재된 단계화된 연령 구조로 인식하고, 맥락적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의 일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문혜진, 2010). 또한, 출생에서 죽음까지 ‘사회적 경로(social pathway)’에 초점을 두는 생애과정 관점은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일대기적 시간 하에 묘사하거나, 특정한 생애단계의 이행이나 기간, 참여와 지위 유형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Kruger, 2003).

Dannefer(2003)는 ‘현상으로서의 생애과정’과 ‘이론으로서의 생애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현상으로서의 생애과정은 생애과정을 구성체로서 파악하여 거시적 수준에서 생애과정 패턴을 분석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론으로서의 생애과정은 선행하는 경험이 이후 생애 성과를 설명한다는 것으로(Elder, 1998),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추적하고, 생애초반기에 경험한 조건과 사건으로부터 생애후반기의 성과 등이 예측되고 해석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 생애발달이론과 생애주기

인간발달학자인 Erickson(1950)의 생애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애과정을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총 여덟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표 2-1>). 1단계는 0~1세, 2단계는 1~3세, 3단계는 3~5세, 4단계는 5~12세, 5단계는 12~20세, 6단계는 20~24세, 7단계는 24세~65세, 8단계는 6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해당 고전 이론에 따르면, 출생부터 20세까지는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20세부터 65세까지는 두 단계, 65세 이상부터는 단 하나의 단계로만 구분하여 설명했다.

<표 2-1> 생애주기 모델

구분	Erickson(1950)	Havighurst(1953)
0~1세	신뢰 vs 불신 기본적 안정감 형성	유아기(0~5세) 보행, 언어 학습 부모 및 가족과 정서적 관계 형성
1~3세	자율성 vs 수치심 독립적 행동 시도	
3~5세	주도성 vs 죄책감 목표 추구 시작	
5~12세	근면성 vs 열등감 학습, 사회적 유능감	아동기(6~12세) 신체 기능 습득 동년배와의 교우관계 형성
12~20세	정체성 vs 역할 혼미 자아정체감 확립	청소년기(13~18세) 성역할과 성적체성 확립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결혼과 가정생활 준비
20~24세	친밀감 vs 고립감 관계 형성	성인초기(19~30세) 배우자 선택, 결혼생활, 자녀 양육 직업생활
24~65세	생산성 vs 침체감 사회 기여	중년기(30세~60세)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 중년기 변화 적응
65세 이상	자아통합 vs 절망 인생 회고	노년기(60세 이상) 체력과 건강 쇠퇴에 대한 적응 은퇴와 수입 감소에 대한 적응 배우자 사망에 대한 적응

출처: Erickson(1950), Havighurst(195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Havighurst(1953)의 발달과업 이론은 인간의 전 생애과정에 걸쳐 각 발달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과업을 중점으로 하여 총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유아기는 0~5세, 아동기는 6~12세, 청소년기는 13~18세, 성인초기는 19~30세, 중년기는 30~60세, 노년기는 60

세 이상으로 제시한다. 그는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이 각 생애 주기마다 특정 시기에 경험해야 할 과업으로서, 이를 성취해야 다음 과업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발달과업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후 Erickson과 Havighurst를 비롯해, 그동안 생애주기, 특히 중·고령층이 포함된 생애후반기를 구분하려는 다양한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애후반기 내부의 이질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단일한 노년기 구분만으로는 중·고령층의 다양한 삶의 경로와 욕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Neugarten(1974)은 노년기의 이질성을 강조하며 “Young-old(65-74세)”와 “Older-old(75세 이상)”로 구분하였으며, Specht와 Craig(1982)는 “Young-old(60-64세)”, “Middle-old(65-74세)”, “Old-old(7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Suzman 외(1995)는 “Oldest-old(85세 이상)”까지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Laslett(1987)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강조하며 “Third Age(50-74세)”를 제안하였으며, 이후 Gilleard와 Higgs(2016)가 “Fourth Age(75세 이상)”를 추가하여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Lynch와 Danely(2013)는 Erickson의 기존 모델에서 최근의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며, 7단계(24-65세)와 8단계(65세 이상) 사이를 초기 노년기와 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노년기의 양상을 다층적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Freedman(2008, 2011)은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 새로운 생애단계로서 “앙코르 단계(Encore stage of life)”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생애 주기상 중·고령기의 특성

가. 중년기

중년기는 인생 전반의 성취를 돌아보고,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생애전환기의 중심 단계로 볼 수 있다(김정하와 김혜연, 2025). 이 시기는 만성질환이 시작되며, 체력 저하, 신체 노화와 더불어 불안·우울 등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강소랑 외, 2019). 생애과정 연구에 따르면, 건강 궤적은 중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빈번한 건강 문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중년기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도훈과 Margot Jackson, 2015).

중년기는 직업·사회적 역할 부분에서 경제적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자녀 부양과 고령 부모 돌봄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이 크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그리고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라는 ‘이중과업’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으며, 노년 준비에 대한 불안, 경제적 책임,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부담의 혼재를 경험한다. 45~64세 중 12.5%는 자녀 및 부모 돌봄 부담과 노후준비 미흡을 동시에 느끼며, 4명 중 1명(약 27%)은 가족돌봄 자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2024). 자녀의 독립 지연과 부모 돌봄 기간의 연장 등이 중년기의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기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고용 안정성이 줄어들어 시기와 맞닥뜨려, 재취업, 직업 전환, 조기퇴직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함선유와 권현지, 2024). 이는 경제적 불안정감과 미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연령대별 빈곤 변화를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10%에 미치지 못했으나 5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이는 50대 이후 고령기로의 이행이 빈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승호 외, 2020). 자산 이외에도 ‘긴’ 세대로서 베이비붐세대의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부양비와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부양 부담을 알 수 있다(방하남 외, 2011). 이처럼 중년기는 은퇴 준비와 장기 재정 계획의 중요한 생애단계로, 이 시기의 소득과 자산 누적은 고령기로의 이행에 있어서 연금, 저축, 부채 등과 연관된 준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 고령기

고령기는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직업적·사회적 지위의 상실을 겪으면서 경제적 불안정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경험한다. 고령기의 은퇴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택, 2017). 또한, 은퇴,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 아동·활동의 제약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이 점차 줄어들며,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및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이은선, 2022). 85세 이상 초고령기의 경우 근력과 신체활동 능력이 40% 이상 저하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도현경과 임재영, 2015).

한편 고령기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만이 아니라, 평생 누적된 자산, 부채, 연금, 사회보장 참여, 이전의 노동 경력 등에 의해 형성된다(Vanhoutte & Nazroo, 2015). 한국 고령층의 경제상태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꽤 상당한 비율이 빈곤 및 소득 불안에 놓여 있는데, 생애과정 관점 연구들은 젊은 시절의 교육·직업 경험이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누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이현주와 정은희, 2016). 고령층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돌봄 의존성, 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 등으로 연결된다. 생애 동안의 자산 축적 여부와 사회보장 제도 접근성은 이러한 고령층의 취약성을 완화하거나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중·고령기 연령 범주

1.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층의 생애과정 이행 지연

우리 사회는 20세기 후반 이후 산업화, 인구 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과 같은 인구학적 변동으로 나타나며, 인구구조의 새로운 전환을 초래했다. 특히 2002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현재 고령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다(행정안전부, 2025).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개인의 생애과정 이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애과정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생애 단계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재조정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변금선과 최지원, 2025).

청년층은 성인으로의 이행이 점차 늦어지는 추세가 명확히 관찰된다. 이들은 고등 교육 진학 및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져 독립과 가족 형성이 지체되어 성인으로의 이행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변금선과 최지원, 2025).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졸업, 취업, 독립, 결혼, 출산 등 주요 성인 이행 지표들이 점차 더 늦은 연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과 최지원, 2025). 또한, 이러한 현상은 높은 대학 진학률(73.8%)과 교육 기간의 연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에 따라 첫 일자리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청년층이 “성인초기”라는 생애 단계에 더 오래 머무르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변금선과 최지원, 2025).



출처: “2024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24,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그림 2-1>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 현황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004년에 30.5세였으나 2024년에 33.9세로 상승하였고, 여자의 경우 2004년 27.5세에서 2024년 31.6세로 상승하였다. 코호트별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만혼화와 비혼의 증가는 대체로 1970년대생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생과 그 이후 출생코호트에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현대환 외, 2025). 향후 30년 뒤 남자의 60%, 여자의 50%가 비혼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장선영과 한지우, 2024).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첫째아의 경우 2004년에 28.8세였으나 2024년에 33.1세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4).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늦어지는 자녀들의 독립은 부모들의 은퇴를 늦추게 되는데, 생애과정에 있어 주요한 사건의 이행 지연은 결국 중년기와 고령기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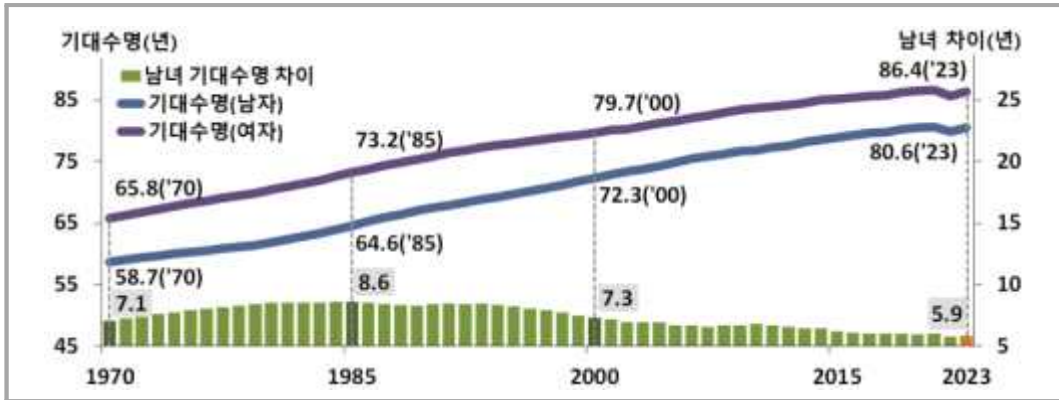
2.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후반기 연장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이른 은퇴와 긴 기대여명으로 인해 건강, 돌봄, 일, 노후준비 등과 관련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변금선과 최지원, 2025).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1970년 기준 남자는 58.7세, 여자는 65.8세였으나,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남자가 80.6세, 여자는 86.4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4). OECD 국가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 기준 70세에서 2023년 기준 81.1세로 증가하였다(OECD, 2024).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대수명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84.5세에서 2045년에는 87.9세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강승지, 2025.6.9.). 그러나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인 최빈사망연령도 함께 살펴보면, 2015-2019년 기준으로 남자가 85.6세, 여자가 90세로 기대수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를 보인다(우해봉 외, 2021).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존보다 길어진 생애과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길어진 생애후반기로 인해 개인의 생애 설계에 있어 65세 이후의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2> 최빈사망연령(세)

구분		1970-1974년	1975-1979년	1980-1984년	1985-1989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최빈사망연령	남자	67.5	68.7	73.0	75.6	76.2	78.3	80.1	82.2	84.3	85.6
	여자	81.0	81.2	81.3	82.1	83.1	83.9	85.3	87.2	88.8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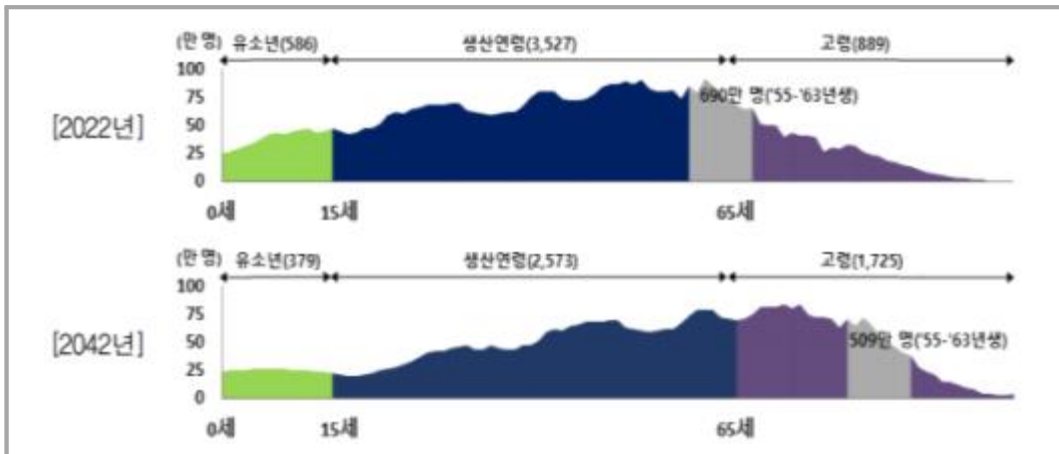
출처: “한국의 사망력 변천과 사망 불평등-진단과 과제,” 우해봉 외, 2021, p.135 재구성



출처: “2023년 생명표(전국 및 시도),”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그림 2-2> 기대수명 현황

2022년 기준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3,527만 명(70.5%)이나, 2042년에는 2,573만 명(55.0%)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2022년 대비 73.0%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이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 명이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4).



출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그림 2-3>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와 베이비붐세대(2022년, 2042년)

3. 중·고령기 연령 기준 논의

인구구조 변화가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사회에서 중·고령기의 연령 범주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년기와 고령기 사이의 과도기적 집단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신

중년은 정부 부처와 시기별로 사용 범위나 정책적 권장이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존의 중년층 개념을 확장하여 고령기 진입 이전 단계의 인구집단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신중년을 50~69세 연령층으로 정의하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고용노동부, 2017), 이는 50~60대 인구가 노동시장, 사회활동, 노후준비 측면에서 기존의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어느 범주에도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성혜영 외, 2018). 한편 언론에서는 정부보다 앞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조선일보는 2013년 기사에서 60~75세를 신중년으로 지칭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3.9.9.).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년기의 시작 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미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중년 개념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베이비붐세대의 생애주기 이동이 자리하고 있다.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이들을 단일한 ‘고령층’으로 포괄하기보다는 건강 상태, 경제활동 지속 여부, 사회참여 수준 등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중년은 중년기에서 고령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집단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인구학적 기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를 넘는 시점을 각각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구분하며, 이는 국가의 고령화 수준과 정책 대응을 가늠하는 국제적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 역시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애주기 연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고령기 연령 구분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준이 다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하는 반면,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보다 다양한 용어와 범위가 병행되는데, 서울특별시는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통해 ‘중장년층’을 4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는 「중장년 지원 조례」를 통해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2017년 노동부를 중심으로 ‘신중년(50~69세)’을 새로운 고용·복지 정책 범주로 제시하였다. 송민혜(2020)에 따르면, 조례에 표기되는 50+세대들에 대한 일반적인 연령 정의는 50세~64세로 명시되어 있으며, 중장년층, 신중년층, 장년층, 예비노년세대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생애후반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전환기 세대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공유한다.

이상의 논의는 중·고령기 연령 기준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생애과정에서 중년기에서 고령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고령기 진입 시점의 개인들은 건강, 경제활동, 소득과 자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에서 점차 상이한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 자체보다는 출생 시기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애 경험의 누

적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강소랑 외(2019)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50+ 생애전환기가 기존의 전통적 중년기와 구별되는 고유한 경험 세계를 갖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경제활동 변화, 가족구조 재편, 건강·돌봄 준비, 사회적 관계 재정립 등이 중첩되는 복합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기 인구를 연령 기준의 단일 집단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생애과정과 시대적 맥락이 결합된 중·고령기의 코호트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중·고령기 코호트 선정과 코호트별 특성

1. 코호트 선정과 코호트별 특성

가. 중·고령기 코호트(cohort) 접근 연구

생애과정으로 대표되는 시간에 따른 현상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세대별 변화와 시대적 변화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코호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기간(period), 연령(age), 코호트(cohort) 효과를 구분하려는 분석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 효과가 개인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성숙, 경험의 축적, 지위나 역할 변화 등 생애 주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코호트 효과는 출생연도가 유사한 집단이 공유하는 사회·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주목하는 개념이다(이승호 외, 2019).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사한 생애 단계에서 외환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며, 사회적 제약과 기회 또한 일정 부분 공유하게 된다(이지영과 백선아, 2024).

이러한 관점에서 코호트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 경험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박재홍, 2001; 조성남과 박숙미, 2002; 전상진, 2004). 그리고 이러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결합되어 특정 시점에서 관찰되는 기간 효과를 구성하게 된다.

국내에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중·고령층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출생코호트 관점을 통해 중·고령층 내부의 이질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안서연과 백학영, 2019; 이승호 외, 2019; 김세진과 남석인, 2020; 이승희, 2023; 이지은과 황규성, 2024). 이들 연구는 중·고령층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출생 시기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제도 경험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서연과 백학영(2019)은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베이비붐세대(1955~1963

년생)와 이전 세대(1945~1954년생)를 구분하여 예비노년기 시점에서의 경제상태를 비교하였다. 이지은과 황규성(2024)은 사회경제적 변동의 흐름을 기준으로 건국 세대(1930~1944년생), 산업화 세대(1945~1962년생), 민주화 세대(1963~1980년생), 정보화 세대(1981~1995년생)로 세대를 구분해 생애 노동 경로를 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 세대 구분 방식 외에도,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출생코호트 구분을 적용한 연구가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승호 외(2019)는 1940~1964년생을 5년 단위 출생코호트로 나누어 근로 생애를 분석하였으며, 이승희(2023)는 1935~1959년생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빈곤율의 코호트별 차이를 검토하였다. 김세진과 남석인(2020)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출생코호트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다차원적 빈곤 양상을 분석하였다.

나. 중·고령기 코호트 선정

본 연구는 세대 간 상이한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기준 50세 이상 중·고령기에 해당하는 1975년 이전 출생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코호트 구분은 분석 지표별 데이터 가용성과 통계적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 또는 10세 단위로 적용하였다.

가족·주거 및 일과 은퇴 관련 지표의 경우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1931년생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5세 단위 출생코호트를 구성하였다. 반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사회조사 및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조사 설계와 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가 1~0년인 10년 단위 출생코호트와 10세 단위 연령구간을 적용하였다. 연령구간(5세 간격)은 ‘0~4세’를 ‘연령대 초반’, ‘5~9세’를 ‘연령대 후반’으로 구분하고, 출생연도 구간(5세 단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1~5년생’을 ‘출생연도대 초반’, ‘6~0년생’을 ‘출생연도대 후반’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사회조사가 2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특정 출생코호트를 조사연도에 맞추어 산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령대와 실제 연령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51~60년생 코호트는 조사연도 기준 실제 연령이 42~51세로 계산되는데, 이는 통상적 구분인 ‘40대(40~49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연령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차이가 나타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40대’, ‘50대’ 등 일반적인 연령대 명칭으로 제시하였다.

다. 코호트별 인구학적 특성

1931~1970년 출생코호트는 현재 중·고령기에 해당하며,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 증가로 형성된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1차 베이비붐세대인 1955~1963년생이 포함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4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이들 출생코호트는 전체 인구의 38.6%를 차지하며, 이들의 고령화는 한

국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3> 코호트 및 성별 인구수, 성비

(단위: 명, %)

코호트	전체	비율	남자	여자	성비
1931-1940년생	1,313,428	2.6	427,796	885,632	48.3
1941-1950년생	3,361,071	6.7	1,470,921	1,890,150	77.8
1951-1960년생	6,353,663	12.7	3,068,102	3,285,561	93.4
1961-1970년생	8,278,780	16.6	4,136,176	4,142,604	99.8
전체	49,839,371	100.0	24,810,723	25,028,648	99.1

주: 내국인 기준

출처: “인구총조사”, 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1931~1970년대 출생코호트는 앞서 살펴본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섞여 있다. 1960년대 시작된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에 의해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표 2-4>). 이는 일반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더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낮은 40~49세 시점을 기준으로 코호트별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2-4> 코호트별 교육수준

(단위: %)

성별	코호트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계
남자	1931-1940년생	43.8	19.0	24.0	13.2	0.0	100.0
	1941-1950년생	21.8	23.3	37.1	17.8	0.0	100.0
	1951-1960년생	10.0	16.7	44.9	23.5	4.9	100.0
	1961-1970년생	3.0	6.3	45.4	38.2	7.1	100.0
여자	1931-1940년생	75.3	13.6	9.0	2.1	0.0	100.0
	1941-1950년생	45.9	26.5	21.7	5.9	0.0	100.0
	1951-1960년생	18.5	26.9	42.3	11.3	1.1	100.0
	1961-1970년생	4.4	9.6	55.4	27.2	3.4	100.0

주: 40~49세 기준

출처: “인구총조사”, 1980~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30년대생에서는 초졸 이하의 비중이 43.8%로 가장 높았지만, 1940년대생부터 고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40년대생의 고졸 비율은 37.1%, 1950년대생 44.9%, 1960년대생 45.4%로 최근 출생코호트의 고졸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비교하여 최근 출생코호트의 교육수준 향상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생의 초졸 이하 비중이 75.3%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40년생은 초졸 이하 비중이 절반 이하인 45.9%로 낮아졌다. 1950년대생부터는 고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950년대생 42.3%이며, 1960년대생은 남자보다 높은 55.4%이다.

2. 사회경제 변화와 코호트별 특성

가. 사회경제 주요 제도 변화

본 연구에서 구분한 출생코호트가 청년, 중장년, 고령기를 보낸 1950~2020년대에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발전을 경험했다(<표 2-5>). 1950년대에 한국의 성장률은 5.9%로, 전쟁에 따른 피해 복구가 핵심적인 과제였고,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확립 등과 같은 기초적인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시기를 가지며 초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시기로, 이에 따라 성장률은 8.8%로 급증해 산업화를 향한 구조적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산업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6%)에 도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후 1980년대 성장률은 9.0%로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외환위기 등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구조조정 정책이 주요 경제 이슈로 등장했다(김태완, 2020). 2000년대에는 성장률이 4.9%로 하락했고, 복지를 확대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어 저성장·고복지 체계를 위한 정책 방향이 시작되었다. 2010년대 성장률은 3.5%로 낮아졌으며, 장기적인 저성장이 뚜렷해진 시기이다. 2020년대부터는 2.0%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져 경제성장에도 핵심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김태완, 2020).

먼저 주거 측면에서 해방 이후~1960년대는 농촌 중심의 대가족과 세대 동거가 일반적이었고, 가족 내 돌봄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1972)과 「200만 호 건설계획」(1980년대 초) 등 대규모 주택정책이 시행되면서,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가족은 핵가족·소가족 형태로 단순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1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이 안정되자 정책의 초점은 양적 확충에서 질적 주거복지로 이동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의 형태와 관계 또한 변화하였다.

소득의 경우 1960년대에 「생활보호법(1962)」이 도입되면서 공공부조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90년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가 제정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권리 기반의 공공부조로 전환하게 되었다(강혜규 외, 200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1988)」는 1980년대에 도입된 후 1998년에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어 노후소득 보장의 실질적인 기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급여액이 상향되기도 하였다.

일자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1년에 노인인력은행이 도입되어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1997년에는 기존의 노인인력은행이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고령자의 고용지원체계가 공식화되었는데(오삼일 외, 2025),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에는 정년 시기를 60세로 상향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며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건강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의료보험법(1977)」이 제정되어 사회보험 체계가 도입되었고 1983년에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과 1985년에 건강검진 대상을 일반노인으로 확대하여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 형평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이건아 외, 2018), 1995년에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실시하여 노인층의 외래진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2002년에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대상 연령을 65세로 인하하였다.

돌봄 영역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유의미한 제도적 변화가 없었으나, 2007년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노인을 위해 가사와 신체활동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성 질병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했다. 한편 2006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힘쓰기 시작하였으며(유지은, 2009.5.21.), 2011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2026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5).

<표 2-5> 사회경제 주요 제도 변화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인구	베이비붐 인구폭발		가족계획-출산율 급감, 이촌향도-인구집중		저출산 인구 고령화		초저출산 인구 초고령화-인구감소		
경제성장률	5.9%	8.8%	10.6%	9.0%	7.4%	4.9%	3.5%	2.0%	
주요 경제정책	초등학교 의무교육 도입(1946)		경제발전 5개년 계획(1962~)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1~1996)		외환위기(1997)	글로벌 금융위기(2008)	-	
사회 보장 정책 발전 과정	소득	-	(1962) 생활 보호제도	-	(1988) 국민연금제도	(1999)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2008)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및 (2009) 지급 대상 확대	(2014) 기초연금법/ 급여액 상향	-
	일자리	-	-	-	(1981) 노인인력은행	(1995) 고용보험 (1997) 노인취업알선센터	(2004) 노인일자리사업	(2016) 정년 60세 의무화	(2021) 국민취업 지원 제도
	건강	-	-	의료보험 (1977)	(1983)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1985) 건강검진 대상 일반노인으로 확대	(1990) 방문건강관리사업 (1995)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70세)	(2002)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 연령 인하 (65세) (2006) 치매조기검진사업	(2011) 치매관리법 제정	-
	돌봄	-	-	-	-	-	(2007) 노인돌봄미 바우처사업 (2008) 장기요양보험제도	(2017) 치매 국가책임제	(2026) 지역사회통합 돌봄 시행

주: 1) 1950년대 경제성장률은 1954~1959년의 평균, 2020년대는 2000~2024년의 평균임

2)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함

출처: 1)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통계청, 2025.8.27.

2)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경제성장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1>에서 2025.11.21. 인출하여 각 연대별 평균값(예: 1960~1969년)으로 제시

3) 김세진(2019). 노인의 다치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0. 표 2-7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4)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0 표2-4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나. 코호트별 시대적 변화와 경험 특성

<표 2-6>은 출생코호트별로 경험한 시대적 변화와 경험 특성이다. 1930년대생은 일제강점기에 출생하여 한국전쟁을 성인기에 경험한 세대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환경 속에서 생애를 시작하였다. 2000년 이전에 이미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공적 복지제도가 충분히 갖춰지기 이전에 고령층이 되었고, 노후에 제도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세대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교육·고용·사회보장의 기초가 매우 제한된 시대를 거치며 생애 전반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누적해 온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1940년대생은 유아기에 해방을, 청년기에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1980~1990년대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중심기를 살아왔다.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막 시작될 때 청·장년층이었기 때문에 제도 진입 시점은 비교적 이르지만, 노인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에 노년기에 진입하여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세대이다. 즉, 제도 혜택과 제도 미성숙이 혼재된 전환기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생은 해방 이후 출생하여 한국전쟁 시기는 유아기에 해당하며, 청년·장년기를 산업화·고도성장기와 함께 보낸 세대다. 중장년기에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하며 고용 불안과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이중 부양 부담을 강하게 겪었고, 노년기에 접어들어 시점에서는 공적 노인복지가 확장되는 환경을 비교적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 제도 성숙기와 경제적 충격기가 교차하는 세대로서, 생애과정 전반에서 구조적 스트레스와 제도 혜택이 동시에 나타난다.

1960년대생은 도시화와 고등교육 대중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세대로, 청년기에는 민주화와 취업 호황기를 누리며 사회·경제 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맞벌이 확산, 사교육 부담 증가 등 가족·노동 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전형적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2000년대에 중장년층으로 진입하며 향후 고령사회 정책의 주요 수요자가 될 세대로, 교육·고용·가족·복지환경의 변화가 생애 전반에 걸쳐 축적된 집단이다.

1970년대 세대는 1990년대 중반 IMF 외환위기를 사회 진입기에 맞닥뜨리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성인기를 시작하였다. 대학 진학률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높아졌으며, 여성의 학력 수준이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용 유연화 속에서 안정적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졌고,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춰졌다. 이들은 재취업, 비정규직, 만혼, 무자녀 등 다층적 경로를 경험하며, 전통적 생애주기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양식을 형성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청년기와 중년기를 보내며 개인화와 자율성의 가치가 강화된 세대이기도 하다.

<표 2-6> 출생코호트별 시대적 변화와 경험 특성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1930년대 코호트	10대~20대	20대~30대	30대~40대	40대~50대	50대~60대	60대~70대	70대~80대	80대~90대
	- 일제강점기 출생 집단으로 한국전쟁 시 성인				- 2000년 이전 노인세대 진입으로 복지제도 취약집단			
1940년대 코호트	0~10대	10대~20대	20대~30대	30대~40대	40대~50대	50대~60대	60대~70대	70대~80대
	- 해방 이전 세대로 유아기 이후 해방을 경험하였으며, 한국전쟁 시 청년기 - 1980~1990년대 중장년 시기로 급격한 경제성장기				- 연금제도 시작 시점 청중년세대 - 노인복지제도 미성숙기에 노인이 된 세대			
1950년대 코호트	출생	0~10대	10대~20대	20대~30대	30대~40대	40대~50대	50대~60대	60대~70대
	- 해방 이후 세대로 한국전쟁 시 유아기 - 급격한 경제성장기에 청년세대 - 1990년대 말~2000년대 중장년 시기로 IMF를 경험				-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 부양 부담을 경험 - 노인복지정책 확대기에 노인이 된 세대			
1960년대 코호트	-	출생	0~10대	10대~20대	20대~30대	30대~40대	40대~50대	50대~60대
	-	도시화 및 고등교육 대중화를 경험 청년기에 민주화 및 취업 호황기를 경험				맞벌이 및 사교육 부담 증가 시작 샌드위치 세대		
1970년대 코호트	-	-	출생	0~10대	10대~20대	20대~30대	30대~40대	40대~50대
	-	-	베이비붐세대 이후 출산율 급락 시기에 태어난 세대 고등교육 진학을 증가로 인한 교육경쟁 심화			결혼 및 출산 지연 본격화 고도성장의 혜택을 받은 마지막 세대 2020년대에 중장년기에 진입하게 된 세대		

출처: 1)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통계청, 2025.8.27.

2) 김세진(2019).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0. 표 2-7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3)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0 표 2-4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제 3 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가족·주거

급속한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전환 속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전통적인 생애주기에서 기대되던 안정적 가족구성, 자녀 독립 이후 은퇴 생활이라는 단일 경로를 벗어나 더욱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1950년대생은 대가족 체제에서 성장해 은퇴 시점에는 단독가구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1960년대생은 핵가족이 보편화된 시기에 가정 형성을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부부 중심 가구 형태가 정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선택의 결과이자, 산업화·도시화·주거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의 누적 효과로서, 세대 간 가족·주거 양상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점의 횡단면 분석이나 단일 지표의 시계열 비교에 집중해, 세대별 사회경제적 맥락 차이와 그에 따른 생애과정 이행 패턴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가족 구성과 주거 경로는 생애후반기 삶의 질과 돌봄 체계 구성에 중대한 요소이나, 코호트 관점에서의 종합적 분석이 아직 미흡하다.

가구(家口)는 주거와 생계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구성 형태에 따라 친족가구·비친족가구·단독가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준우와 장민선, 2014). 「인구주택 총조사 규칙」에서는 가구를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하며 생활하는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세대(世帶)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는 공동체’로, 세대주·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와 구분되며, 범주 또한 가족보다 넓은 개념이다(장민선, 2016). 또한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혈연·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단위이며,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김세진, 2023).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민법상 정의에 기반하되, 분석 자료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은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가족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형성, 성장, 변화, 해체의 단계를 거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할 수 있다(박시내 외, 2013). 에디드 듀발(Duvall, 1987)에 따르면 가족은 결혼을 통한 형성, 출산 및 입양에 따른 확장, 자녀의 독립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축소를 거쳐 궁극적으로 해체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가치관 다변화, 경제적 요인 등으

로 전통적 가족생활 주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결혼·출산 시기의 지연, 이혼과 재혼의 증가,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확대는 기존의 규범적 가족 경로를 약화시키며, 중·고령기 가족 형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 및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며, 인구총조사 자료는 조사주기(매 5년) 특성에 맞춰 출생연도 끝자리 1~5년생, 6~0년생 단위로 분류하고 연령대 역시 0~4세, 5~9세 단위를 적용하였다. 반면 사회조사의 경우 표본조사 특성상 5세 단위 세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오차를 감안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1~0년생 기준 10년 단위 코호트 분류 및 10세 단위 연령구간을 적용하였다.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코호트 간 차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출생코호트별로 50세 이후 생애후반기에 경험하는 가족 구성과 주거 경로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세대별 생애 이행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코호트별 혼인·출산 이행의 차이를 통해 초기 가족 형성 구조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중·고령기 진입 이후 혼인 상태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세대 간 결혼·이혼 인식 차이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자녀 독립 이후 중·고령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둥지(empty nest)’ 단계의 가족 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1인 가구·부부 가구·자녀 동거 가구 구성 비율을 코호트별로 비교한다. 또한, 중·고령기의 주거 환경을 점유·소유형태, 거주유형, 거주지역으로 구분하고, 출생코호트별 주거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1> 부문별 작성 지표

구분	작성 지표	활용자료
가족 형성·구조	혼인 상태	인구총조사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자녀 출산	인구총조사
	가구 유형	
주거	점유 형태	
	주택 소유	
	거처 유형	
	거주 지역 변화	

제2절 가족 형성과 구조

1. 가족 형성

가족 형성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일반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통해 시작된다.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며, 출산은 가족의 규모와 관계 구조를 확장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혼인과 출산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에 그치지 않고, 해당 세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조건, 문화적 규범,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960년대 이전 출생코호트는 산업화 초기 단계, 농촌 중심 사회, 전후 경제 복구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전통적 가족관과 규범의 영향이 강하게 유지되어 조혼, 조출산 및 다자녀 출산이 일반적인 가족 형성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후 출생코호트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평등 의식 증대, 고용 및 주거 불안정성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혼인 연령이 지연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족 규모 축소에 그치지 않고, 부부·부모 역할의 재구조화, 돌봄 책임의 분산 또는 재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 지점으로 평가된다(박종서,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호트별 가족 형성 과정의 차이를 혼인율, 출산자녀수, 중·고령기 이후 혼인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 가족 형성 경로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중·고령기 가족 구조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가. 혼인 상태

<표 3-2>는 40대 후반까지의 연령 경과에 따른 코호트별 미혼율 변화를 보여준다. 남녀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전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상승하는 공통적인 추세가 관찰된다.

먼저 남자의 경우, 1950년대 초반생까지만 하더라도 30대 이전에 절반 이상이 혼인하였으며, 30대 초반 시점의 미혼율도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생부터 결혼 이행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30대 초반 미혼율이 13.9%로 상승하였다.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1960년대 초반생은 19.4%, 1960년대 후반생은 28.1%, 1970년대 초반생 41.3%로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대 초반생의 경우 40대 후반에서도 미혼율이 20.5%에 달해, 남성의 비혼·만혼 현상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 역시 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율이 상승 경향을 보이거나, 증가 폭은 남자보다 완만하다. 1960년대 초반생까지는 30대 초반 미혼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이후 출생코호트부터는 10%를 초과하며, 1970년대 초반생은 19.0%로 나타났다. 40대 후반 시점의 미혼율도 남자(20.5%)보다 낮은 9.8%로, 결혼 이행에 있어 성별 비대칭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박중서(2020)는 1970년대 출생코호트에서 혼인 행태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며, 이후 출생 세대에서 혼인 규범 약화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최선영(2020) 또한 외환위기 이후 ‘보편혼 규범’의 균열이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어, 혼인 연령 지연과 미혼 증가가 개인 의지의 변화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가치관 변화가 누적된 구조적 결과임을 시사한다. 특히 2차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1970년대 출생코호트는 교육 수준 향상, 여성 경제활동 증가, 성평등 의식 확산, 개인주의·자아실현 욕구 강화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성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혼인은 ‘필수적 경로’에서 ‘선택 가능한 경로’로 의미가 재정의된 세대라 할 수 있다.

<표 3-2> 출생코호트별·성별 미혼율

(단위: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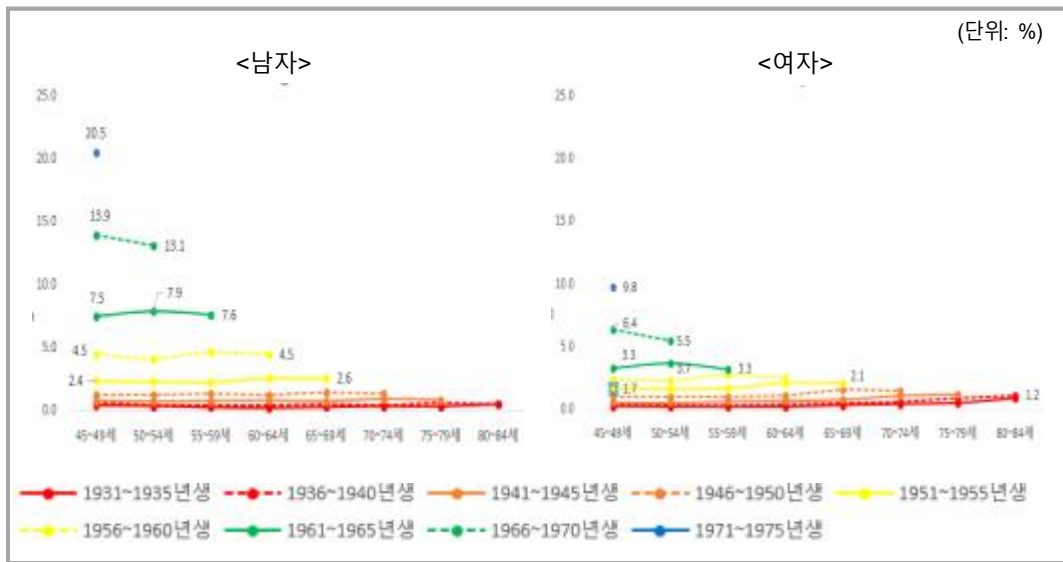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남자							
1931~1935년생	-	67.1	37.2	5.3	1.2	0.5	0.4
1936~1940년생	94.4	86.5	38.4	6.4	1.4	0.7	0.6
1941~1945년생	99.0	90.0	43.4	7.0	1.7	1.1	0.8
1946~1950년생	99.4	92.6	47.0	7.3	2.7	1.5	1.3
1951~1955년생	99.7	92.9	45.2	9.4	3.8	2.7	2.4
1956~1960년생	99.7	93.1	50.7	13.9	6.6	4.9	4.5
1961~1965년생	99.8	94.4	57.3	19.4	10.6	8.5	7.5
1966~1970년생	99.9	96.4	64.4	28.1	18.4	14.4	13.9
1971~1975년생	99.9	96.3	71.0	41.3	26.7	22.5	20.5
여자							
1931~1935년생	-	20.8	4.8	1.0	0.4	0.3	0.3
1936~1940년생	85.2	48.9	7.7	1.4	0.7	0.5	0.4
1941~1945년생	97.4	51.6	9.7	2.1	1.0	0.7	0.6
1946~1950년생	96.1	57.2	11.8	2.7	1.6	1.1	1.0
1951~1955년생	97.1	62.5	14.1	4.2	2.4	1.9	1.7
1956~1960년생	97.4	66.1	18.4	5.3	3.3	2.6	2.4
1961~1965년생	98.2	72.1	22.1	6.7	4.3	3.6	3.3
1966~1970년생	99.1	80.5	29.6	10.7	7.6	6.2	6.4
1971~1975년생	99.5	83.3	40.1	19.0	12.6	11.3	9.8

주 1) 15세 이상 내국인 대상으로 해당 연령 전체에서 미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2) 1966년 인구총조사 자료는 기준연도를 1965년으로 간주하여 연령을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55~2010년), 20% 표본(2015년·2020년), 국가데이터처.

이러한 변화는 중·고령기 혼인 상태에서도 뚜렷한 코호트별 차이를 만들어낸다. 중·고령기의 혼인 상태는 삶의 질, 사회적 관계망 유지, 노년기 돌봄체계의 유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50세 이후에는 이혼 및 사별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와의 동반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코호트 간뿐 아니라 성별 간 차이도 명확히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60대 이후에도 유배우 비율이 높게 유지되지만, 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별 경험으로 인해 1인 가구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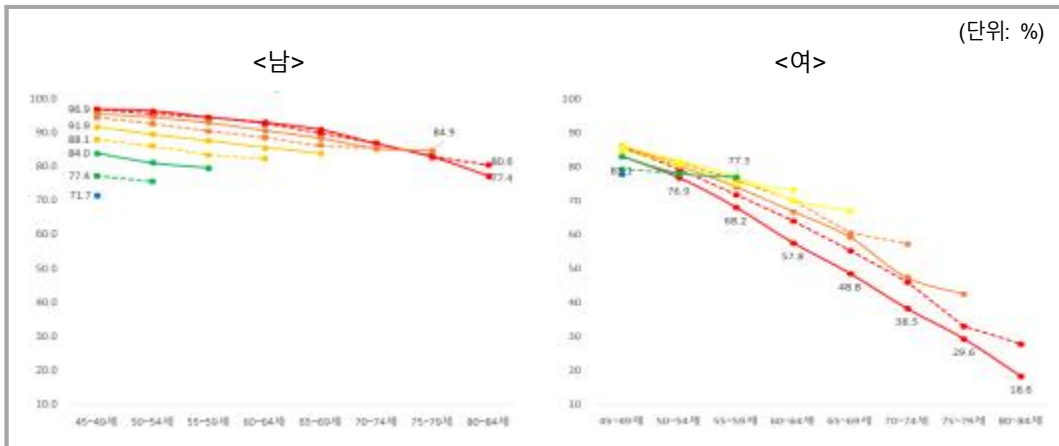
주: 15세 이상 내국인 대상으로 해당연령 전체에서 미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60~2010년), 인구총조사 표본(2015, 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1> 출생코호트별·성별 미혼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고령기 연령 경과에 따른 유배우·이혼·사별 비율을 성별 및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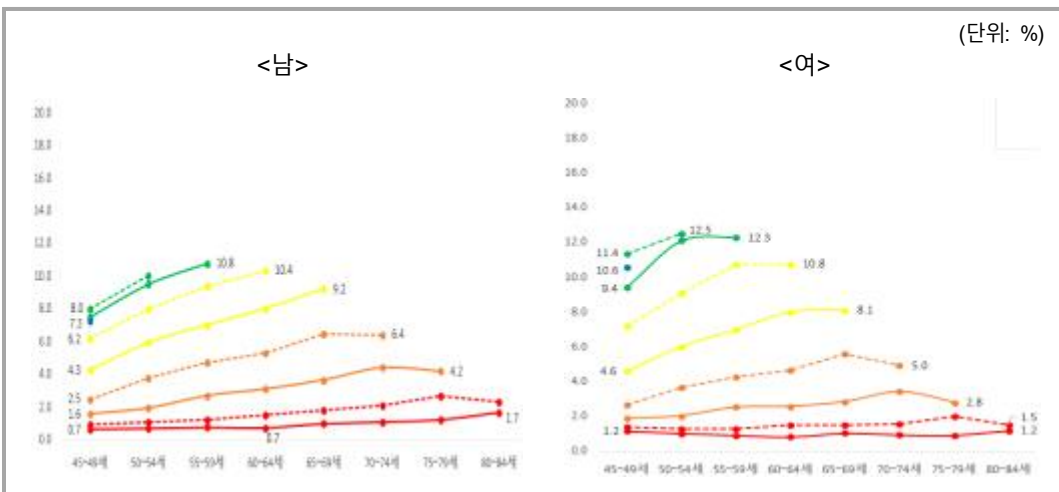
<그림 3-2>를 보면, 유배우 비율은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이며, 감소 속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빠르다. 예를 들어 40대 후반에는 성별 간 유배우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75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배우율을 유지하는 반면 여자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여자의 수명 우위로 인해 사별이 더 누적되는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동일 연령대 기준 유배우율의 코호트별 변화 방향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남자는 최근 코호트로 갈수록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이며, 여자도 40대 후반까지는 같은 방향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최근 코호트일수록 유배우율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사별 비율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크게 감소하면서 배우자 생존 기간이 늘어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60대 초반 여성의 유배우/사별 비율은 1930년대 초반생 57.8%/41.0%, 1940년대 초반생 67.0%/29.6%, 1950년대 후반생 73.4%/13.3%로 사별 감소가 유배우율 상승에 핵심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그림 3-4>).



주: 15세 이상 내국인 대상으로 해당연령 전체에서 유배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60~2010년), 인구총조사 표본(2015년·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2> 출생코호트별·성별 유배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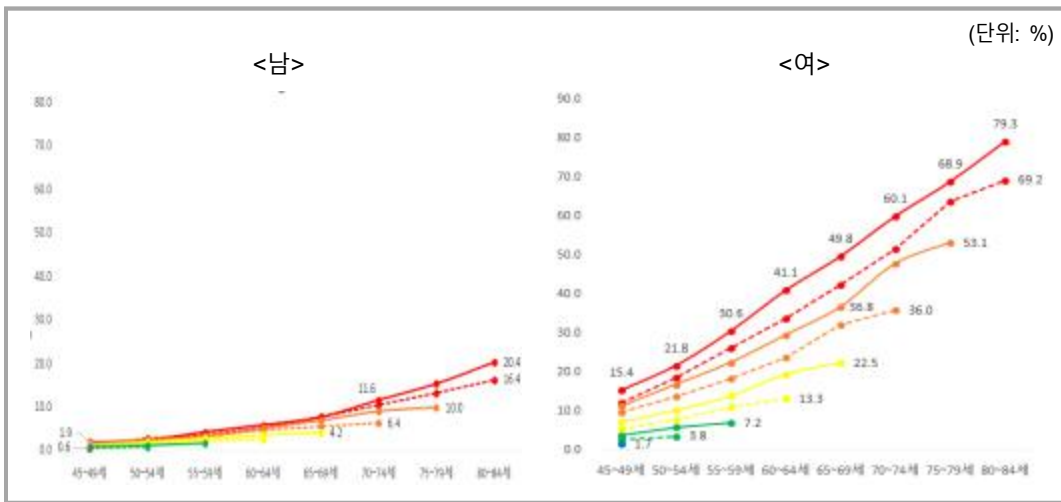


주: 15세 이상 내국인 대상으로 해당연령 전체에서 이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60~2010년), 인구총조사 표본(2015년·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3> 출생코호트별·성별 이혼 비율

한편, 이혼 비율은 <그림 3-3>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연령 증가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곡선형 패턴을 보이며, 동일 연령대에서 최근 코호트일수록 이혼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 여성의 이혼

비율은 1930년대 초반생 1.0% 수준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생은 12.5%로 크게 상승하였다. 남자 역시 0.7%에서 10.0%로 증가하였다. 또한 남자는 1940년대 초반생 이전 코호트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사별 비율 > 이혼 비율이었으나, 1940년대 후반생부터 40~50대 구간에서는 이혼 비율이 사별 비율을 상회한다. 여자는 1950년대 초반생까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별 비율 > 이혼 비율이었으나, 1950년대 후반생부터는 40~50대 구간에서 이혼이 사별보다 높은 비중을 보인다.



주: 15세 이상 내국인 대상으로 해당연령 전체에서 사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60~2010년), 인구총조사 표본(2015, 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4> 출생코호트별·성별 사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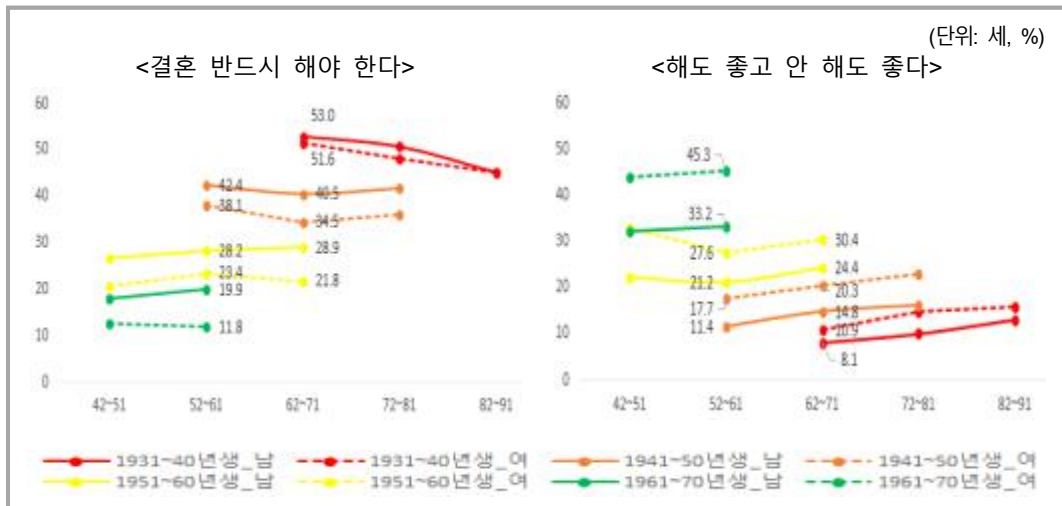
우해봉(2011)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 시계열 변화가 아니라 출생코호트 기반의 구조적 전환임을 강조한다. 종합하면, 최근 코호트에서의 혼인 안정성 약화와 이혼 증가는 단독 생활 고령자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이는 향후 고령기 주거 정책·돌봄 체계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코호트별 혼인 지속성과 이혼 구조 변화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혼인·이혼 행태와 함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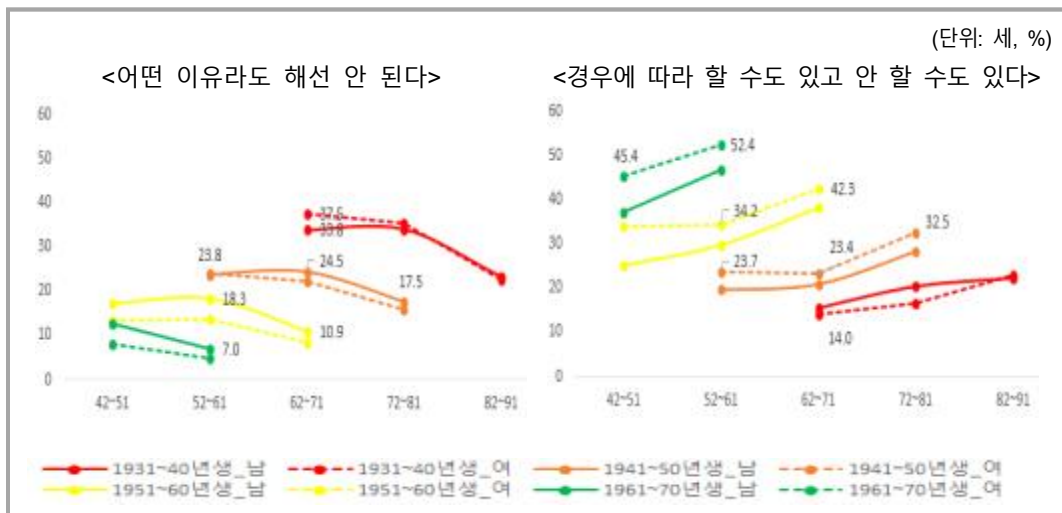
<그림 3-5>는 결혼을 필수적 규범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출생코호트 및 성별에 따라 연령 경과와 함께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동일 연령대 비교 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공통된 흐름을 보

인다. 40대 시점에서 1950년대생 여성은 20.7%가 결혼을 필수라고 응답했으나, 1960년대생 여성은 12.6%로 나타났다. 반대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적 결혼 인식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인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이러한 선택적 인식의 성별 격차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확장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결혼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당연한 경로로 인식하던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 여부를 개인의 삶의 선택지 중 하나로 수용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사회조사(2002년·2012년·2022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5> 출생코호트별·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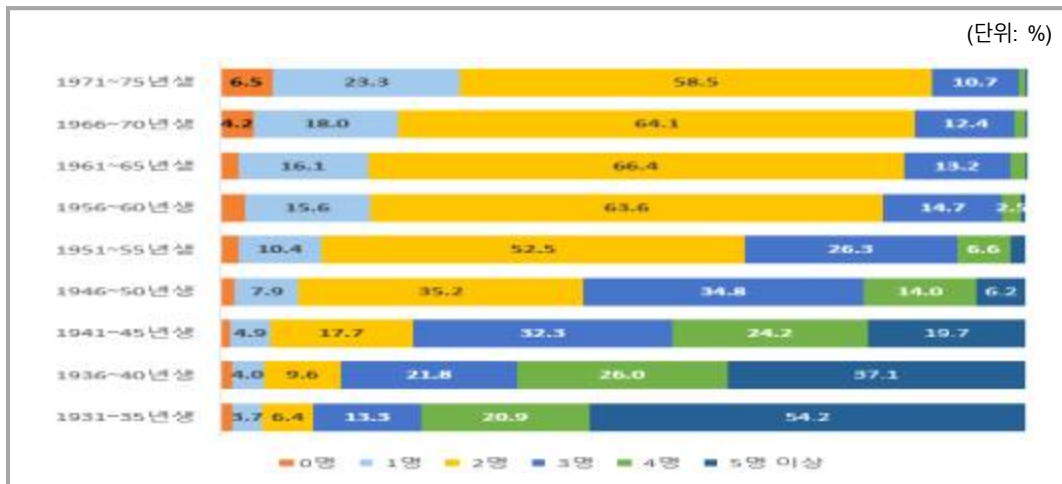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02년·2012년·2022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6> 출생코호트별·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역시 시대적 환경 변화와 출생코호트의 경험 차이가 반영되며, 코호트별·성별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3-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비허용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동일 연령대에서 최근 코호트일수록 감소한다. 반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허용 태도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1930년대생을 제외하면, 1940~60년대생 대부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절대 불가’ 응답이 더 낮고, ‘상황에 따라 가능’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에 대한 허용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 자녀 출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변화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에 대한 행동 양상 또한 출생코호트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3-7>은 출생코호트에 따라 기혼 여성의 출산 자녀 수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무자녀 및 1자녀 비중이 증가하고, 3명 이상 출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초반생은 3명 이상 출산 비율이 약 90%에 달했으나, 1970년대 초반생의 경우 3명 이상 출산 비율이 10%대 수준으로 감소하여 세대 간 큰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1950년대생 이후로 두 자녀 출산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두 자녀 가족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양상으로 정착한 점도 특징적이다.



주1) 해당 코호트의 45~49세 시점
 주2) 1995년 출산력 조사 항목 없으므로, 1946~50년생 50~54세 시점(2000년) 자료임
 주3) 1946~50년생, 1951~55년생, 1956~60년생 출산 자녀 수 미상 제외
 자료: 인구총조사 15% 표본(1980년), 10% 표본(1985년·1990년·2000~2010년), 20% 표본(2015년·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7> 출생코호트별·출산자녀수별 기혼 여자 비율

출산 수준 변화는 인식 차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TFR) 관점에서도 코호트 간 구조적 변동을 보여준다. 박종서 외(2020)에 따르면, 1960년대 출생코호트까지는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1.9~1.8 수준에서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 출생코호트부터는 합계출산율이 급격한 하락 곡선을 보이며, 이전 세대에 비해 단절적·이질적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기보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사업(‘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 확산,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주거·양육 비용 증가, 여성의 교육 수준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출산 행태 변화는 개인의 선택 변화를 넘어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정책적 영향이 반영된 인구학적 전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 구조

혼인과 출산 중심의 가족 형성 변화는 가족 규모와 구성 형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자녀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의 동거 형태와 가구 유형 역시 과거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3> 연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변화 추이(1995-2024)

(단위: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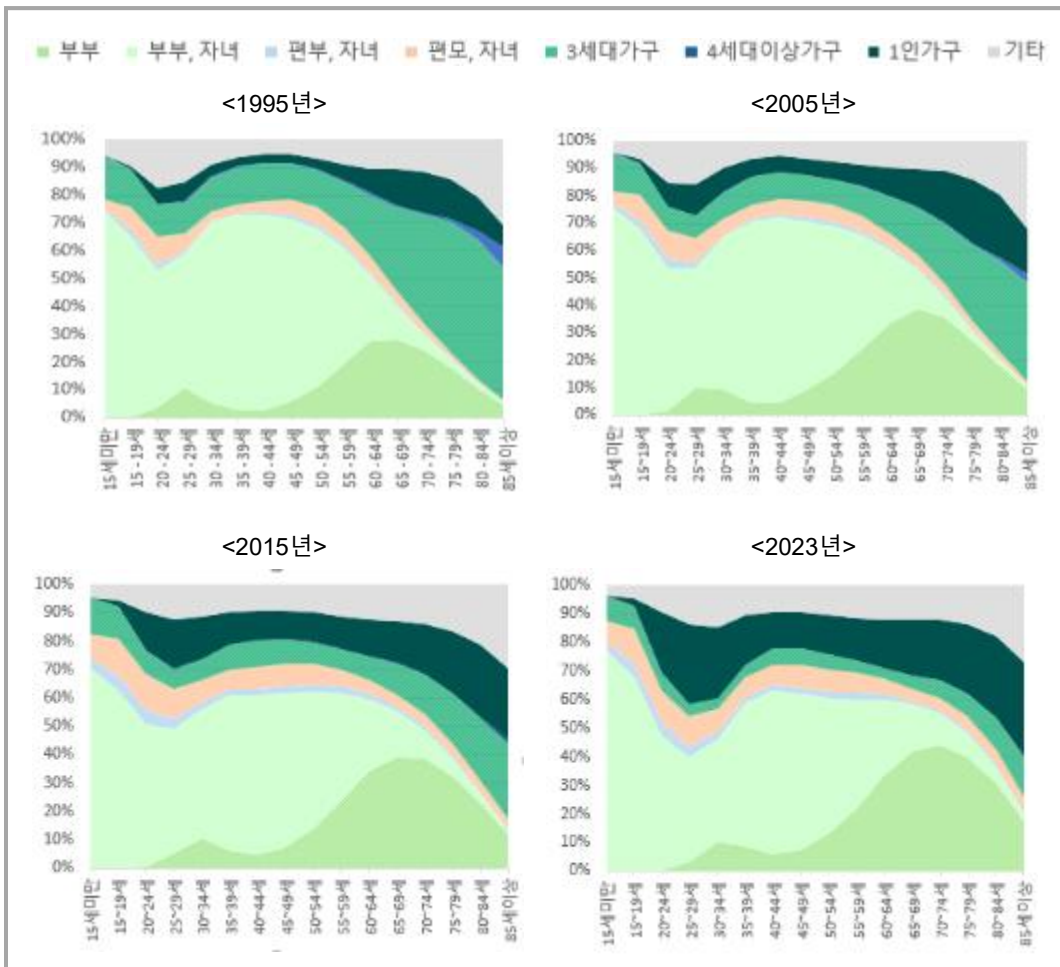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1995~2024년 증감
전체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350	22,294	72.0
50대	2,310	2,511	2,979	3,773	4,606	4,810	4,902	112.2
60대	1,430	1,820	2,111	2,364	2,827	3,787	4,538	217.4
70대	577	793	1,171	1,580	1,827	2,162	2,515	335.6
80대 이상	102	157	282	452	668	1,012	1,393	1,272.1

주: 일반가구 대상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24년), 국가데이터처.

<표 3-3>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1995년 12,958천 가구에서 2024년 22,294천 가구로 72.0% 증가하였다. 특히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보면 고령층 가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1995~2024년 증가율은 50대 112.2%, 60대 217.4%, 70대 335.6%, 80세 이상 1,272.1%로, 고령일수록 가구 수 증가 폭이 매우 크다. 이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1~2인 가구 확대, 중·고령층 단독·부부 가구 증가가 지속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박종서 외, 2020). 특히 80세 이상 가구는 12배 이상 증가하여 고령기

가구 구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가구 수 증가를 넘어 가구 유형 변화를 동반하였다. <그림 3-8>의 연령별 가구 유형 변화를 보면, 부부 가구 비율이 정점을 이루는 연령대가 과거 보다 늦춰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는 부부 가구 비율이 25~29세에서 가장 높았으나, 2015년 이후에는 30~34세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부+자녀 가구 비율이 그 이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자녀 독립 이후에는 ‘빈둥지(empty nest)’ 단계에 접어들며 60대 후반~70대 초반에 부부 가구 비율이 다시 최고점을 기록한다. 예컨대 60대 후반 부부 가구 비율은 1995년 28.4%에서 2023년 42.1%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대수명 연장, 건강 수준 향상, 아파트 중심의 독립 거주 문화 확산, 자녀 동거 규범 약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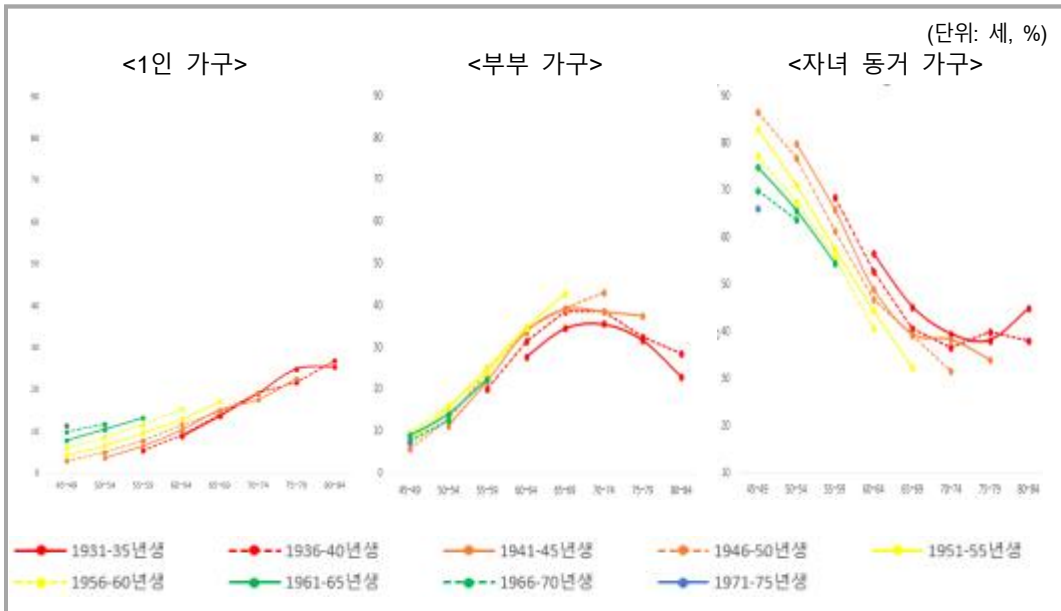


자료: 인구총조사(1995~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8> 연령대별 가구 유형 변화(1995년~2023년)

또 하나의 핵심 변화는 1인 가구의 급격한 확대이다. 비혼·만혼·이혼 증가, 가족 부양 규범 약화 등 혼인가족 행태의 변화 속에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보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50세 이후 생애후반기로 갈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지속 증가하며, 70대 초반 1인 가구 비율은 1995년 14.7% → 2023년 21.3%로 상승했다.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80대 초반 기준 50.3%(1995년) → 10.9%(2023년)로 크게 감소하여, 세대 간 동거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반하여 다음에서는 중·고령기 시점에서의 거주 형태를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4>, <그림 3-9>).



주: 자녀 동거 가구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배우자이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사람 + 가구주와의 관계가 부모·배우자의 부모인 사람을 합하여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1995~2020년 인구, 가구 전수, 국가데이터처.

<그림 3-9> 출생코호트별 가구 유형

첫째, 연령 증가에 따라 모든 코호트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상승하였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초반생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은 60대 초반 8.8%에서 80대 이후 25.5%로 증가하였다. 동일 연령대 비교에서도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40대 후반 1인 가구 비율은 1940년대 후반생 3.1%, 1950년대 후반생 6.1%, 1960년대 후반생 9.9%, 1970년대 초반생 11.4%로 증가하였다. 이는 독립적 생활 선호 증가와 가족 부양 규범 약화가 반영된 결과이며, 향후 중·고령 1인 가구의 지속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는 현재 경제활동·건강 측면에서 상대

적으로 활동적이지만, 노년기 진입 이후 돌봄 공백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집단이다.

둘째, 부부 가구는 자녀 독립 시점 이후 생애주기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인다. 60대 초반 부부 가구 비율은 1930년대 초반생 27.8%에서 1950년대 후반생 35.0%로 증가하였으며, 60대 후반 시점에서는 각각 34.6%(1930년대 초반생), 39.1%(1940년대 초반생), 42.9%(1950년대 초반생)로 최근 코호트일수록 부부 중심 거주가 강화되었다.

<표 3-4> 출생코호트별 가구 유형 비율

(단위: %)

코호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1인 가구								
1931~1935년생				8.8	13.7	19.1	24.9	25.5
1936~1940년생			5.5	9.2	14.1	19.4	21.7	27.0
1941~1945년생		3.8	6.6	10.4	15.2	17.7	22.7	
1946~1950년생	3.1	5.0	7.8	11.7	14.9	19.3		
1951~1955년생	4.4	6.7	9.7	12.9	17.2			
1956~1960년생	6.1	8.6	11.6	15.4				
1961~1965년생	7.8	10.5	13.3					
1966~1970년생	9.9	11.8						
1971~1975년생	11.4							
부부 가구								
1931~1935년생				27.8	34.6	35.6	31.8	23.0
1936~1940년생			20.0	31.5	38.7	38.6	32.6	28.6
1941~1945년생		11.3	21.9	33.7	39.1	38.5	37.5	
1946~1950년생	5.8	13.0	24.0	34.4	39.3	43.0		
1951~1955년생	7.4	15.7	25.3	34.7	42.9			
1956~1960년생	9.5	16.2	23.9	35.0				
1961~1965년생	8.9	14.1	22.4					
1966~1970년생	7.7	12.6						
1971~1975년생	7.5							
자녀 동거 가구								
1931~1935년생				56.5	45.2	39.4	38.1	44.8
1936~1940년생			68.4	52.7	40.6	36.5	40.0	38.1
1941~1945년생		80.0	65.8	49.0	39.5	38.3	34.0	
1946~1950년생	86.5	76.9	61.4	46.8	39.2	31.5		
1951~1955년생	83.0	71.0	57.5	44.5	32.3			
1956~1960년생	77.4	67.6	55.7	40.6				
1961~1965년생	74.9	65.7	54.4					
1966~1970년생	70.0	63.8						
1971~1975년생	66.2							

주: 자녀 동거 가구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배우자이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사람 + 가구주와의 관계가 부모·배우자의 부모인 사람을 합하여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는 건강 수명 연장, 주거 안정성 제고, 돌봄 서비스 확충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셋째, 생애후반기 자녀 동거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특정 코호트를 기점으로 세대 간 돌봄 방식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30년대 초반생은 80대 이후 자녀와의 재동거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1930년대 후반생 이후 코호트부터는 80대 이후에도 자녀 동거가 재확대되지 않고 1인 또는 부부 단위 거주가 지속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1940년대 후반생부터는 60대 후반 시점 부부 가구 비율이 자녀 동거 비율을 상회하면서 부부 중심 생활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출생코호트별로 1인 가구·부부 가구·자녀 동거 가구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녀 간 가구 유형의 분포와 변화 방향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남자의 경우, 60대 후반 이후 고령기에는 부부 가구 비중이 자녀 동거 가구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60대 후반 기준, 1930년대 초반생 남자는 부부 가구 44.7%, 자녀 동거 가구 43.8%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1950년대 초반생은 각각 46.3%, 31.5%로 격차가 확대되어 부부 중심 거주 형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3-5> 출생코호트별 1인 가구 비율

(단위: %)

코호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남자								
1931~1935년생				3.4	5.1	7.5	10.6	12.2
1936~1940년생			3.1	4.5	6.6	9.4	10.7	13.4
1941~1945년생		3.1	4.5	6.3	9.1	10.1	12.0	
1946~1950년생	2.9	4.4	6.3	8.8	10.9	12.9		
1951~1955년생	4.4	6.6	9.0	11.4	14.2			
1956~1960년생	6.6	9.2	11.9	14.7				
1961~1965년생	9.1	12.2	14.5					
1966~1970년생	12.5	14.3						
1971~1975년생	14.2							
여자								
1931~1935년생				13.2	20.2	27.2	33.8	32.6
1936~1940년생			7.7	13.3	20.1	27.0	29.3	35.6
1941~1945년생		4.6	8.6	14.0	20.4	23.9	30.8	
1946~1950년생	3.3	5.6	9.3	14.4	18.6	24.9		
1951~1955년생	4.4	6.7	10.4	14.4	20.1			
1956~1960년생	5.6	7.9	11.4	16.2				
1961~1965년생	6.4	8.7	12.1					
1966~1970년생	7.4	9.3						
1971~1975년생	8.5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반면 여자의 경우, 1930년대 초반생에서는 자녀 동거 가구가 가장 우세한 가구 유형이었다(부부 가구 27.0%, 자녀 동거 가구 46.2%). 그러나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부부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자녀 동거 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1950년대 초반생 여자는 부부 가구 39.8%, 자녀 동거 가구 33.1%로 나타나, 부부 중심 거주가 자녀 동거보다 더 높은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세대 내 연령 변화 측면에서 보면, 1930년대 초반생 남자는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이동해도 부부 가구 비율이 44.7%→46.0%로 큰 변화가 없으나, 자녀 동거 가구는 43.8%→36.8%로 감소하고, 1인 가구는 5.1%→12.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자는 같은 구간에서 부부 가구 비율이 27.0%→10.8%로 줄어든 반면, 자녀 동거 가구는 46.2%→49.1%로 증가하고, 1인 가구 역시 20.2%→32.6%로 상승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어 사별 이후 자녀와의 재동거 확률이 높아지는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6> 출생코호트별 부부 가구 비율

(단위: %)

코호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남자								
1931~1935년생				31.0	44.7	52.1	53.2	46.0
1936~1940년생			18.3	33.4	46.6	51.9	49.9	50.1
1941~1945년생		9.1	19.5	34.7	45.5	49.3	53.4	
1946~1950년생	4.2	10.8	21.5	34.9	44.0	52.2		
1951~1955년생	5.6	14.0	23.1	34.4	46.3			
1956~1960년생	7.4	14.1	20.7	33.0				
1961~1965년생	6.8	11.9	18.7					
1966~1970년생	6.1	10.5						
1971~1975년생	6.2							
여자								
1931~1935년생				25.2	27.0	24.1	18.6	10.8
1936~1940년생			21.6	29.8	32.2	28.5	20.7	15.2
1941~1945년생		13.5	24.1	32.7	33.7	29.6	25.4	
1946~1950년생	7.4	15.2	26.5	34.0	35.1	34.8		
1951~1955년생	9.2	17.5	27.5	35.0	39.8			
1956~1960년생	11.6	18.3	27.0	37.0				
1961~1965년생	11.0	16.4	26.0					
1966~1970년생	9.4	14.7						
1971~1975년생	8.7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마지막으로 40대 후반 시점 남성의 코호트별 변화를 보면, 1960년대 초반생 이전 코호트에서는 부부 가구 비율이 1인 가구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남성의 중·고령기 1인 가구 확대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혼인 연령 지연, 비혼 증가, 이혼 증가 등 혼인가족 형성 과정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7> 출생코호트별 자녀 동거 가구 비율

(단위: %)

코호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남자								
1931~1935년생				59.0	43.8	34.7	31.6	36.8
1936~1940년생			72.9	55.7	40.1	33.3	34.7	31.4
1941~1945년생		83.1	70.5	52.1	39.1	35.3	29.4	
1946~1950년생	88.0	79.5	65.4	48.9	38.2	28.6		
1951~1955년생	84.4	72.4	60.2	45.8	31.5			
1956~1960년생	78.0	68.2	57.6	42.4				
1961~1965년생	73.8	63.8	55.0					
1966~1970년생	65.4	60.1						
1971~1975년생	60.5							
여자								
1931~1935년생				54.4	46.2	42.6	42.1	49.1
1936~1940년생			64.2	50.1	41.0	38.9	43.7	42.3
1941~1945년생		76.9	61.3	46.3	39.8	40.8	37.5	
1946~1950년생	85.0	74.3	57.5	44.8	40.1	34.1		
1951~1955년생	81.6	69.7	55.0	43.4	33.1			
1956~1960년생	76.8	67.0	54.0	38.9				
1961~1965년생	75.9	67.5	53.8					
1966~1970년생	74.7	67.5						
1971~1975년생	72.0							

주: 자녀 동거 가구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배우자이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사람 + 가구주와의 관계가 부모·배우자의 부모인 사람을 합하여 계산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제3절 주거 경로의 변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도시화의 진전, 인구구조 변화, 주거 정책 도입과 금융·부동산 시장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이 중첩되며 구조적 전환을 경험해 왔다. 특히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였고, 임차 주택의 점유형태 역시 전세 위주에서 월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향후 자가·전세·월세 등 점유형태, 주거면적·거주유형(단독·연립·아파트), 보유 목적(거주·투자)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오강현 외, 2017).

중·고령층의 주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가 거주율은 약 70%로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연령 증가와 함께 이사율이 20대 23.9%, 30대 21.0%에서 60세 이상 7%대로 감소하는 등 주거 이동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경제활동 감소, 신체·건강 상태 변화 등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관계망 유지 필요성과 생활 편의 인프라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기 거주 성향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기의 주거 환경을 점유형태, 소유형태, 거주 유형, 거주지역으로 구분하고, 출생코호트별 주거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점유형태

주택 점유형태는 개인 또는 가구의 주거 안정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물론 자가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점유율이 높아야 주거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강미나, 2025). 본 연구에서는 1995~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전세·월세(보증금 유무 및 사글세 포함)로 점유형태를 구분하고, 출생코호트별 연령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먼저 <표 3-8>에서 확인되듯, 자가 거주 비율은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상승하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이는 경제활동이 안정되고 주택자산 축적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60대 이후 시점에서는 코호트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30년대생은 60대 이후 자가 거주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사별·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주거 형태 조정 및 일부 임차 이동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1940년대생 이후 코호트는 자가 거주 비율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세대가 아파트 공급 확대 시기와

자산시장 상승기에 진입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 구조적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60대 초반 기준 자가 거주 비율을 비교하면, 1930년대 초반생이 80.4%로 가장 높은 반면,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1950년대 후반생은 73.3%로 감소한다. 이는 주택구입 시기의 경기·금융 환경 차이, 생애주기 초기에 경험한 주거 비용 부담 증가, 전세 축소 및 월세 확대로 대표되는 임차 구조 변화 등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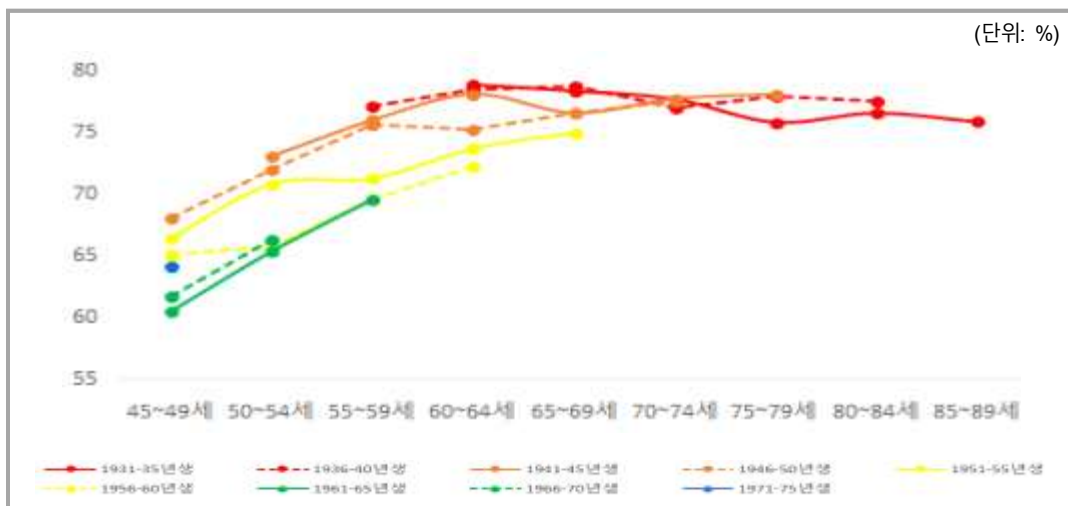
<표 3-8> 출생코호트별 자가 거주 비율

(단위: 세, %)

코호트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1931~1935년생				80.4	79.8	78.6	76.8	76.4	75.1
1936~1940년생			77.9	79.7	80.0	78.6	78.8	78.0	
1941~1945년생		73.4	76.7	79.1	78.2	78.8	78.9		
1946~1950년생	67.9	72.3	76.3	76.7	77.8	78.5			
1951~1955년생	66.4	71.2	72.3	74.8	76.0				
1956~1960년생	65.1	66.3	70.3	73.3					
1961~1965년생	60.3	65.4	70.2						
1966~1970년생	60.9	66.2							
1971~1975년생	63.0								

주: 일반가구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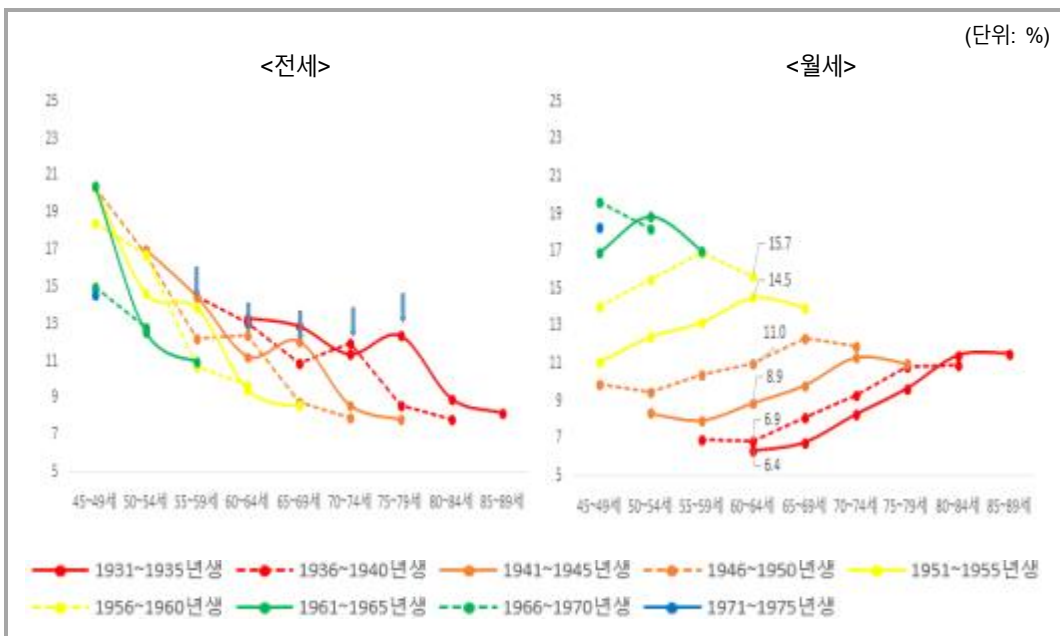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10년), 20% 표본(2015, 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10년), 20% 표본(2015, 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3-10> 출생코호트별 자가 거주 비율

임차 형태에서는 월세와 전세의 상반된 경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월세 거주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공통된 양상이 관찰된다(<그림 3-11>). 동일 연령대를 비교하더라도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월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월세 거주 비율은 1930년대 초반생이 6.4%였던 반면, 1950년대 후반생은 15.7%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월세 수요 증가뿐 아니라 저금리 기조와 전세 공급 축소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강화 등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누적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10년), 20% 표본(2015, 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청.

<그림 3-11> 출생코호트별 전세, 월세 거주 비율

반면 전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다만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장기간 유지된 임대 금융 구조와 결부되어 있어 시기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전후에는 주택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 수요 급증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전세 비중 감소 흐름과 달리 일시적으로 전세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그림 3-11>). 그러나 이후 시장·금융 여건 변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강화 영향이 누적되면서 전세 비율은 다시 감소하는 장기적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본 분석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세 비율은 상승하고 전세 비율은 감소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 다만 최근 출생코호트에서는 월세 비율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연령대 기준

으로 비교했을 때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낮고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연령효과(aging effect)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노희순 외(2018)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장기 패널 분석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해당 연구는 동일 연령대 비교 시 1954년 이전 출생 세대가 베이비붐세대(1955년 이후 출생) 및 이후 세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가 점유율을 유지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세대가 거처온 주거·경제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임을 제시한다. 실제로 1930~40년대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과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시기에 중년기를 맞이해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낮았던 반면, 1950~60년대생은 주택가격 급등,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금융여건 변화 등 불리한 시장·제도적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동일 연령대에서도 코호트 간 점유형태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주요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주택 소유

40대 후반 이후 중·고령기는 생애 주기상 주택 소유 구조가 안정되거나 재편되는 전환기로, 점유형태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점유형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반면, 주택 소유 여부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타 지역 주택 보유를 포함할 수 있어 자산 축적과 노후 대비 관점보다 포괄적인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가구 내 가구주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자가 거주 여부뿐 아니라 타 지역 소유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소유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1930년대생은 60대 후반 이후 연령 증가와 함께 주택 소유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은퇴 이후 소득 감소 국면에서 주택 처분을 통한 생활자금 확보, 임차 전환, 자녀 동거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기 주거 형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1950년대 초반생은 60대에 진입하면서 주택 소유 비율이 이전 세대와 달리 소폭 증가하는데, 이는 이 시기 주택가격 회복과 부동산 자산가치 재평가 국면을 경험하면서 노후 자산으로 주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초반생은 50대 후반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주택 소유 비율이 71.2%에서 75.1%로 약 4%p 증가하여, 1950년대생보다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지속, 부동산 시장 회복,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등이 강화된 시기와 중년기 생애 단계가 맞물리면서 주택 매입이 확대된 데 따른 구조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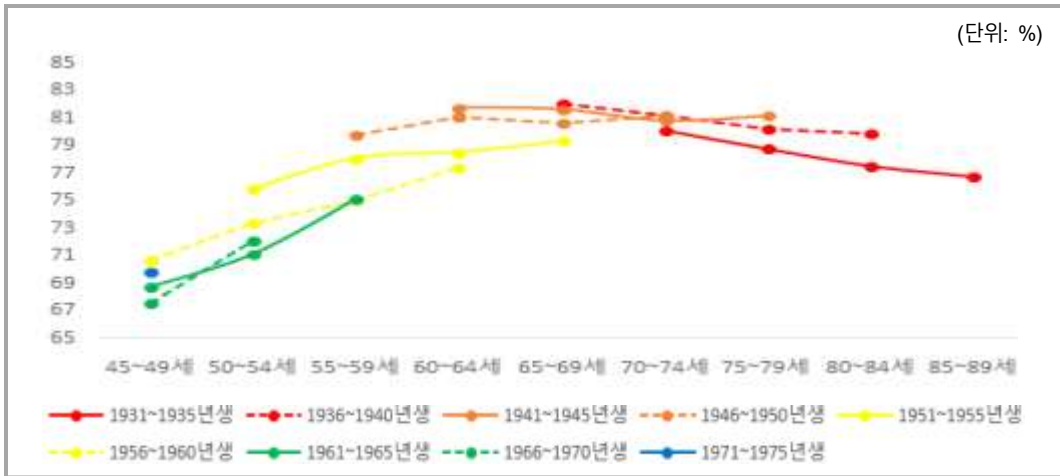
<표 3-9> 출생코호트별 주택 소유 비율

(단위: 세, %)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1931~1935년생						80.2	78.8	77.5	76.8
1936~1940년생					82.0	81.1	80.3	79.9	
1941~1945년생				81.7	81.6	80.8	81.2		
1946~1950년생			79.8	81.1	80.6	81.2			
1951~1955년생		75.9	78.1	78.5	79.3				
1956~1960년생	70.7	73.5	75.1	77.4					
1961~1965년생	68.8	71.2	75.1						
1966~1970년생	67.5	72.2							
1971~1975년생	69.9								

주: 해당 코호트가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인 일반가구원 대상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10년), 20% 표본(2015, 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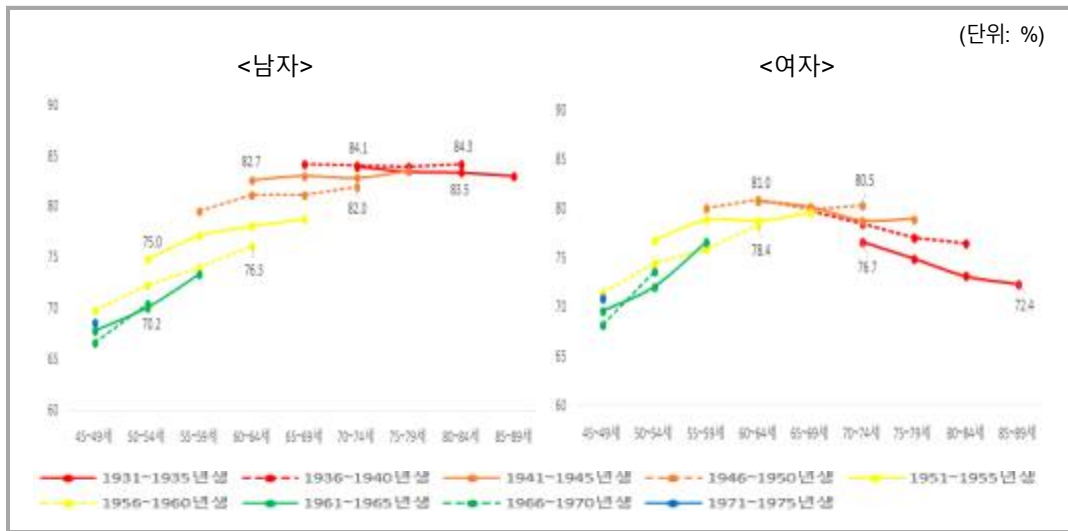
주: 해당 코호트가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인 일반가구원 대상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10년), 20% 표본(2015, 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3-12> 출생코호트별 주택 소유 비율

성별 비교 결과, 남자는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연령 증가와 함께 주택 소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70대 이후에도 80% 이상을 유지하는 안정적 구조가 나타난다. 반면 여자는 출생코호트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3-13>). 1930~40년대생 여성은 60대 이후 주택 소유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1950년대 초반생 여성은 60대에 소유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한다. 동일 연령대인 60대 초반 기준으로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1940년대 초반생(82.7%)과 1950년대 후반생(76.3%) 간 소유율 격차는 6.4%p로 나타나는 반면, 여자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주택 소유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같은 연령대 코호트 격차는 2.6%p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또한 70대 초반 여성에서는 1940년대생이 1930년대생보다 소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하락 흐름 속에

서도 일정 수준의 증가세가 확인된다. 이는 이전 세대와 달리 노년기까지 직접 주택을 보유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우자 사망 이후 단독 거주 지속, 상속 주택 유지, 이혼·비동거 확대 등으로 인한 독립 거주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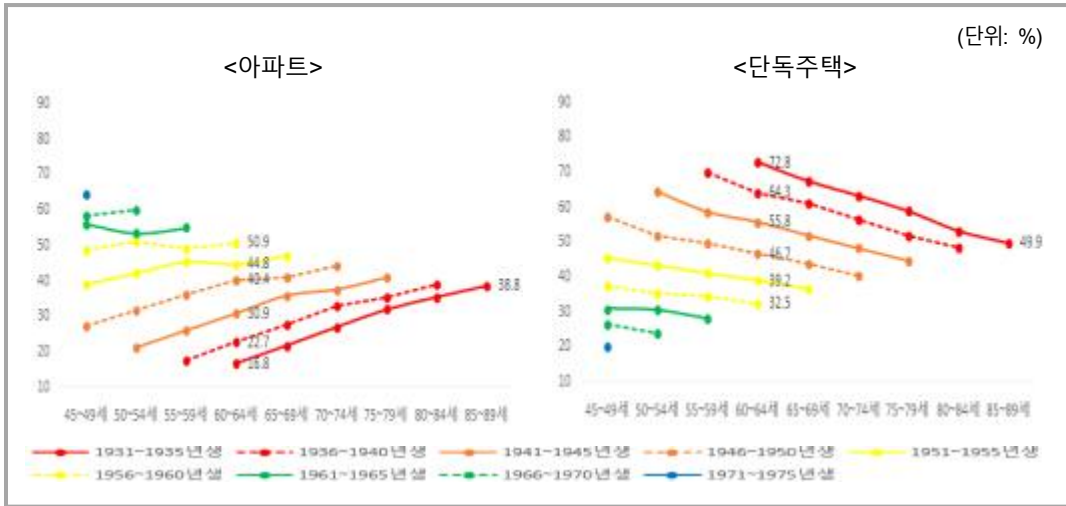
주: 해당 코호트가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인 일반가구원 대상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10년), 20% 표본(2015, 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3-13> 출생코호트별·성별 주택 소유 비율

3. 거처 유형

아파트가 제공하는 건설 효율성, 생활 편리성, 경제성, 사회적 상징성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거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주택 선호를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아파트가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봉인식과 홍정호, 2025). <그림 3-14>는 코호트별 연령 경과에 따른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은 상승하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감소하는 공통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0대 초반을 기준으로 보면, 1930년대 초반생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16.8%에 불과했으나, 이후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950년대 후반생은 50.9%에 이른다. 반면 동일 연령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1930년대생 72.8%에서 1950년대 후반생 32.5%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주거 구조 변화라기보다, 세대별로 경험한 주택 공급·정책 환경의 차이에 따라 코호트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 일반가구원 대상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95~2020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3-14> 출생코호트별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 비율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급은 1960년대 경제개발과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특히 1988~1992년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은 단독주택 중심의 기존 주거구조를 아파트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후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 축적·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코호트별 아파트 거주 비율의 차이는 단순한 연령 효과라기보다,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체계 정착, 주거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도시화 및 생활환경 변화, 부동산 시장의 자산화 흐름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950~60년대생은 아파트 대량 공급기와 자산가격 상승 국면을 중년기에 경험함으로써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는 세대 간 주거 형태 격차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거주 지역 변화

<그림 3-15>는 각 코호트가 40대에 도달했을 시점의 거주 지역 분포를 상위 비율(5~50%) 기준으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1930~40년대생은 서울뿐 아니라 권역별 중심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했으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수도권 중심의 집중도가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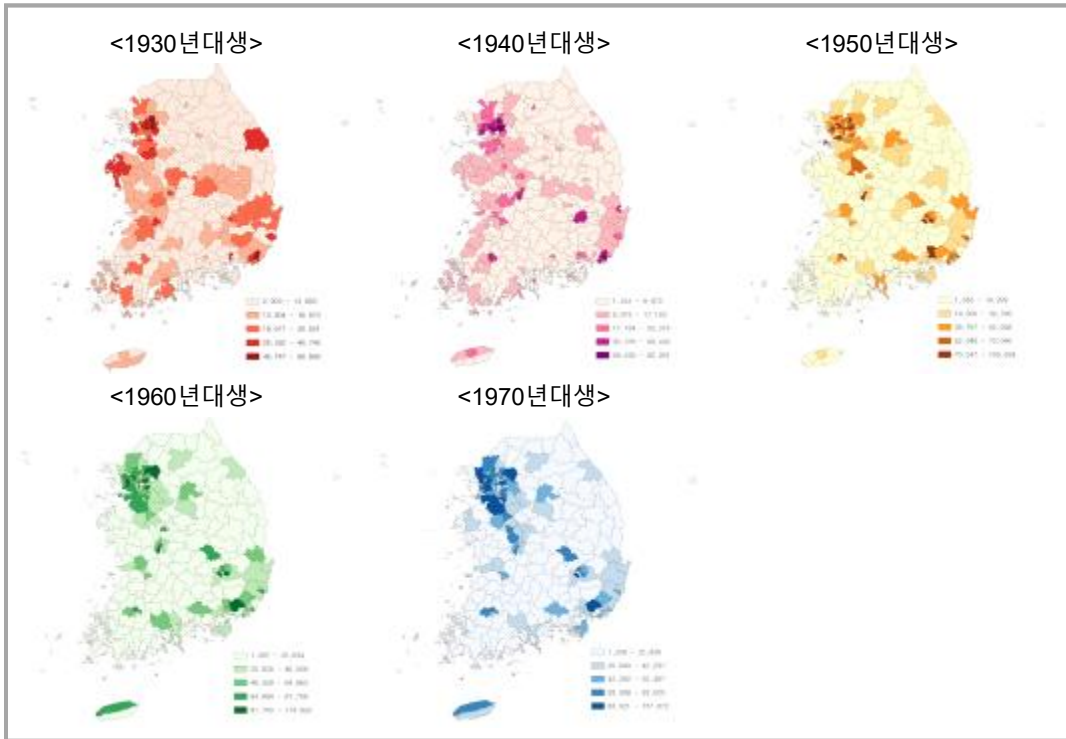
1930년대생의 40대 시점에는 서울 동대문·도봉·성동·성북, 부산 동래·부산진 등 전통

도심지가 인구 밀집 상위 지역을 구성하였다. 이 시기 강원권 ‘삼척군’이 상위 지역으로 나타나는 점도 특징적인데, 이는 1960~70년대 정부의 에너지 자립정책에 따라 삼척·태백·정선·영월을 중심으로 대규모 탄광 개발이 이루어졌고, 당시 석탄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 되면서 생산 인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석탄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도는 빠르게 약화되었다. 1940년대생의 40대에는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뿐 아니라 구로·관악 등 서남권까지 인구 집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아파트 대량 공급, 강남 개발, 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서울 내부 정주 체계가 다핵화되던 시기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 1950년생의 40대에는 서울 내부 특정 권역뿐 아니라 송파·노원·강서·양천, 인천 부평, 대구 달서, 경남 창원 등 광역시 외곽 신도심과 산업 기반 도시까지 인구 밀집 지역이 확장되었다. 이는 1980~90년대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국가 산업단지 육성, 신도시·택지 개발이 안정적 중산층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외곽 신도심으로의 분산을 촉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 코호트의 40대 시점에서는 분당·일산·중동 등 1기 신도시 그리고 수원·용인·고양·화성·남양주·부천, 충청권의 천안·청주 등이 인구 밀집 상위 지역을 구성한다. 이는 수도권 남부·동부의 대규모 택지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충청권 거점 도시 성장 등이 결합되어 형성된 구조적 변화이다.

<표 3-10> 40대 시점 코호트별 인구 상위 5% 지역

코호트	인구 상위 5% 지역	조사연도
1931~1940년생	동대문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관악구, 강남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1980년
1941~1950년생	강남구, 성동구, 송파구, 구로구, 도봉구, 동래구, 인천남구, 관악구, 서초구,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 부산진구	1990년
1951~1960년생	송파구, 노원구, 달서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양천구, 부평구, 창원시, 대구수성구, 인천서구, 안산시	2000년
1961~1970년생	대구달서구, 송파구, 노원구, 부평구, 남양주시, 김해시, 강남구, 양천구, 인천서구, 성남분당구, 대구수성구, 강서구, 인천남동구	2010년
1971~1980년생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화성시, 성남시, 청주시, 부천시, 남양주시, 천안시, 안산시, 전주시, 송파구, 김해시, 인천서구, 인천남구, 평택시, 대구달서구, 시흥시, 강서구, 인천남동구, 안양시, 김포시	2020년

주: 내국인 대상, 전체 시군구 지역 중 인구 수가 많은 상위 5% 지역을 내림차순으로 나열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80~2020년), 국가데이터처.



주: 각 코호트(내국인 대상)의 40대 시점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역 중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5%, 10%, 15%, 20%, 50% 구간을 구분하여 색의 농도로 표시함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80~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15> 40대 시점 코호트별 거주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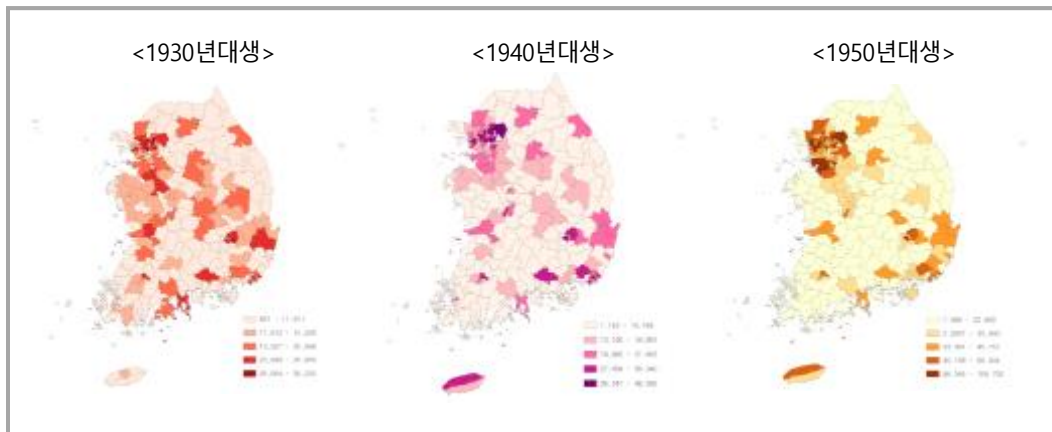
<그림 3-16>은 각 코호트가 60대에 이르렀을 때의 지역 분포를 상위 비율(5~50%) 기준으로 보여준다. 60대 시점 역시 최근 코호트일수록 수도권·광역권 중심 집중도가 강화되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1930년대생은 40대 시점부터 서울 동북부(동대문·도봉·성동·성북), 부산진·동래 등 대도시 중심지에 정주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60대에도 성북·은평·관악·송파, 인천 부평, 대구 수성, 부산진 등 도시 내부 거점을 유지하였다. 동시

<표 3-11> 60대 시점 코호트별 인구 상위 5% 지역

코호트	인구 상위 5% 지역	조사연도
1931~1940년생	성북구, 노원구, 부산진구, 은평구, 관악구, 송파구, 대구수성구, 동대문구, 동작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서대문구	2000년
1941~1950년생	송파구,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성북구, 강남구, 대구달서구, 남양주시, 부산진구, 인천부평구, 인천남구, 중랑구	2010년
1951~1960년생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송파구, 남양주시, 포항시, 전주시, 강서구, 대구달서구,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노원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천안시, 은평구, 강동구, 관악구, 인천서구	2020년

주: 내국인 대상, 전체 시군구 지역 중 인구 수가 많은 상위 5% 지역을 내림차순으로 나열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80~2020년), 국가데이터처.

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에도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 이후 세대와 달리 정주 공간이 넓게 퍼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1940년대생은 1930년대생보다 인구 분포의 집중도는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서울 내부와 광역 도시 중심의 패턴이 유지된다. 1950년대생이 60대에 도달한 시점에는 수원·고양·성남 등 수도권 외곽, 부산·대구·창원·포항 등 광역거점 및 제조업 기반 도시가 주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1980~2000년대에 구축된 주거·일자리·교통 기반이 구조적으로 정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 각 코호트(내국인 대상)의 60대 시점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역 중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5%, 10%, 15%, 20%, 50% 구간을 구분하여 색의 농도로 표시함
 자료: 인구총조사 전수(1980~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3-16> 60대 시점 코호트별 거주 지역 분포

각 코호트의 40대 상위 5% 지역이 60대에도 상위권에 남는 비율을 비교하면, 1930년대생 45.5%, 1940년대생 46.2%, 1950년대생 75.0%로 나타난다. 즉 최근 코호트일수록 동일 생활권 내에서의 지속 거주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해 보면, 1930~40년대생은 40대 이후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1970~90년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재편 등의 영향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며 지역 이동이 활발했다. 반면 1950년대생은 이미 30~40대에 아파트 중심 주거 구조 정착, 신도시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정착할 생활권을 확립하였고, 이후 60대에 이르기까지 동일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는 주택 시장 구조 고착화, 지역 기반 생활권 안정화, 고령기 이동성 감소 등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중·고령기 시점에 나타나는 가족 형성·구조 변화와 주택 점유·소유·거처 유형, 거주 지역 분포 등 가족·주거 경로의 특성을 코호트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코호트가 혼인·출산을 경험한 시기의 사회·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중·고령기 가족 구조와 관계 방식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코호트일수록 전통적 혼인·출산 규범과 다출산·대가족 체계를 기반으로 가족 경험을 형성한 반면, 최근 코호트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경험하며 핵가족화와 성 역할 경계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중·고령기 가족 구성이 1인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1970년대생의 높은 미혼율은 향후 중·고령기 1인 가구 증가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중·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졸혼 등 새로운 부부 관계 형태는 본 자료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혼인관계와 가구구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주거 측면에서는 점유 및 소유 구조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30~40년대생은 주택가격이 비교적 낮고 공급이 확대되던 시기에 중년기를 거치며 자가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반면, 1950~70년대생은 주택가격 급등, 전월세 전환 가속화, 금융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 경로가 변화하였다. 특히 최근 코호트일수록 동일 연령대 비교에서 자가 비율이 낮고 임차 비중이 높으며, 수도권 및 광역권 집중 경향이 강화되었다. 아파트 거주가 보편화되고 주택이 자산 및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환경에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강한 도시 정주 경향은 향후 주거·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돌봄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공적 돌봄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돌봄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25년 천만 노인시대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필요는 양적·질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다양한 돌봄 정책의 확대로 돌봄의 사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돌봄 제공의 주체와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충분한 공적 돌봄 서비스 양과 제한적 서비스 유형 등으로 여전히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가족 돌봄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의 중·고령층은 중·고령 집단 내에서도 생애과정 중 경험한 사회적 사건과 배경이 각기 상이하다. 이는 돌봄 형태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연령집단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집단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차승은 외(2022)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3차(2010년)와 8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노인(65~74세)의 장래 돌봄 기대유형을 코호트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36~45년생 코호트에 비해 1946~55년생 코호트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기대는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946~55년생 코호트에서는 딸 중심형 돌봄 기대가 나타나, 돌봄 주체에 대한 성별 역할 인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가구 구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베이비붐세대 이후의 노인들이 과거 세대 노인들이 상이하게 가족 의존보다는 제도적 돌봄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장래 돌봄 수요 예측과 정책 설계에 있어 코호트 차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한다. Rodrigues 외(2023)는 SHAR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을 활용하여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출생코호트와 성별에 따른 비공식 돌봄 제공 궤적을 추적하였다. 최근 출생코호트의 남자는 가구 외 돌봄 제공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여자의 코호트 궤적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내 돌봄 제공(주로 배우자 돌봄)의 비율 역시 최근 출생코호트의 모든 성별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부부 간 상호 돌봄의 중요성이 최근 코호트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돌봄 제공자와 돌봄의 부담은 코호트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돌봄에 대한 코호

트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본 장에서는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돌봄의 형태를 돌봄 제공자와 돌봄 지원망 수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돌봄 부담을 돌봄 제공시간의 변화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돌봄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을 수혜 받는 대상자의 코호트별 특성 차이를 검토하였다.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1. 분석 자료원 및 코호트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는 매년 약 1만 8천 가구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 주제는 2년 주기로 변경된다.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짝수년 사회조사의 가족 부문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98~2024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돌봄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대상자·가족·기관·요원을 응답자로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2025년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계열 경향성 및 코호트별 특성을 비교하기에는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하다. 또한, 중장년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포괄하고 있으나, 돌봄 관련 문항이 제시된 기간이 짧아 시계열 경향성 비교가 어렵다. 이에 앞선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자(1961년 이전 출생) 10,25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 2022년 9차 조사까지 발표되었다. 9차 조사까지의 기존 패널 표본 유지율은 77.2%이다. 9차 기본조사에 참여한 통합표본(기존+신규 패널)은 6,057명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25.3).

2006년부터 시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패널조사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변수들이 시계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수들은 응답 범위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1차 자료의 경우 돌봄의 제공 주체를 3번째 간병수발자와의 관계까지만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나, 2차~9차 자료에서는 5번째 간병수발자와의 관계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간병수발자의 1일 평균 수발시간 역시 1차 자료에서는 3번째 간병수발자의 평균 수발시간까지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2차 자료 이후의 조사내용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2차(2008년)~9차(2022년) 자료를 활용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9차의 출생코호트별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대생은 2008년 68~77세였으며, 2022년에는 82~91세이다. 1940년대생은 2008년 58~67세였으며, 2022년에는 72~81세이다. 1950년대생은 2008년 48~57세였으며, 2022년에는 62~71세이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52~61세의 경우 50대, 62~71세의 경우 60대, 72~81세의 경우 70대, 82~91세의 경우 80대로로 축약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코호트별 동일 연령대에서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 조사인 2022년을 기준으로 출생코호트별 동일 연령대에서의 비교가 가능한 2012년의 자료와 2022년의 자료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즉, 2012년 62~71세인 1940년대생과 2022년 동일 연령대인 1950년대생의 특성을 비교하며, 2012년 72~81세인 1930년대생과 2022년 동일 연령대인 1940년대생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2006년 패널 구축 당시 1961년생까지만 포괄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장의 분석은 다른 장과 다르게 1950년대생까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출생코호트별 사례 수를 살펴보면, 1930년대생은 2012년 1,875명, 2022년 1,029명이었으며, 1940년대생은 2012년 2,293명, 2022년 1,864명, 1950년대생은 2012년 2,387명, 2022년 2,196명이다. 마지막으로,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1> 출생코호트별 분석연도별 연령대: 돌봄

출생코호트	2012년	2022년
1931년생~1940년생	72~81세	82~91세
1941년생~1950년생	62~71세	72~81세
1951년생~1960년생	52~61세	62~71세

2. 주요 지표

사회조사에서는 부모 돌봄에 대한 견해에 대해 “귀하는 부모님의 노후를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묻고 있으며 응답 항목은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 ② 가족 ③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④ 정부, 사회 ⑤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 인식이 출생코호트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돌봄현황은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¹⁾)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1) 고령화연구패널에서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은 옷갈아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이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일상적인 집안일, 식사준비,

of Daily Living, 이하 IADL)에서 1개의 항목이라도 부분적인 도움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아래의 분석 내용들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차(2012년)와 9차(2022년) 조사의 대상자 중 ADL과 IADL에서 1개의 항목이라도 부분적인 도움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4-2> 돌봄 지표의 조작적 정의

구분	지표명	지표 정의	비고
돌봄 자원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	1순위 돌봄 제공자 기준으로 없음, 배우자, 자녀, 공적 제도권 내 돌봄, 사적 고용 간병인 응답 분포(%)	ADL, IADL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부분적 도움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
	돌봄 지원망 수	돌봄 제공자 1~5순위 응답 합산(명)	
돌봄 규모	돌봄 수혜 시간	각 간병수발자의 1개월간 수발 일수에 1일 평균 수발 시간을 곱하여 합산(시간)	

가.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돌봄 제공 주체에 대해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응답자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부터 다섯 번째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을 각각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② 배우자,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배우자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⑲ 자녀 리스트, ⑲~⑳ 형제자매 리스트, ㉑ 배우자의 형제자매, ㉒ 자녀의 배우자, ㉓ 손자녀, ㉔ 기타 다른 친인척, ㉕ 자원봉사자, ㉖ 공공기관에서 보내 준 간병인, ㉗ 개인 차원에서 고용한 간병인, ㉘ 기타, ㉙ 도와주는 사람 없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포함), 형제자매, 공공기관에서 보내 준 간병인, 개인 차원에서 고용한 간병인, 기타, 없음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돌봄 지원망 수가 평균 1명임을 고려하여 1순위 돌봄 제공자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돌봄 지원망 수

돌봄 지원망 수는 앞서 제시된 돌봄 제공 주체에서 응답한 1순위~5순위의 돌봄 제공자 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없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값에 응답한 응답자 수를 모두 더하여 산출하였다.

다. 돌봄 수혜 시간

돌봄 수혜 시간은 각 간병수발자의 1개월간 수발 일수와 1일 평균 수발 시간의 곱

빨래하기, 가까운 거리 외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하기, 물건구매, 금전관리, 전화걸고 받기, 정시에 정량의 약 챙겨먹기로 측정함

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즉, 5명까지 간병수발자가 있을 경우 5명의 간병 수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여기서의 돌봄 수혜 시간은 가족돌봄과 가족 외 사람(공공기관에서 보내 준 간병인, 개인 차원에서 고용한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에게서 제공받는 돌봄 시간이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의 돌봄 제공시간 파악을 위해 가족의 돌봄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즉, 5인의 총 돌봄시간 중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제2절 부모 돌봄 인식의 변화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족 중심의 사적 돌봄 체계에서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공적 돌봄 체계로 인식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1>을 보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89.9%에서 2008년 40.7%, 2018년 26.7%, 2024년 18.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8.1%에서 2024년 16.4%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사회 등 가족 외 주체를 선택한 응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47.4%(2008년), 53.9%(2018년), 65.4%(2024년)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부모 돌봄의 1차 책임 주체로 인식되던 한국 사회에서 돌봄 책임이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 및 사회로 분산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운태와 서용석,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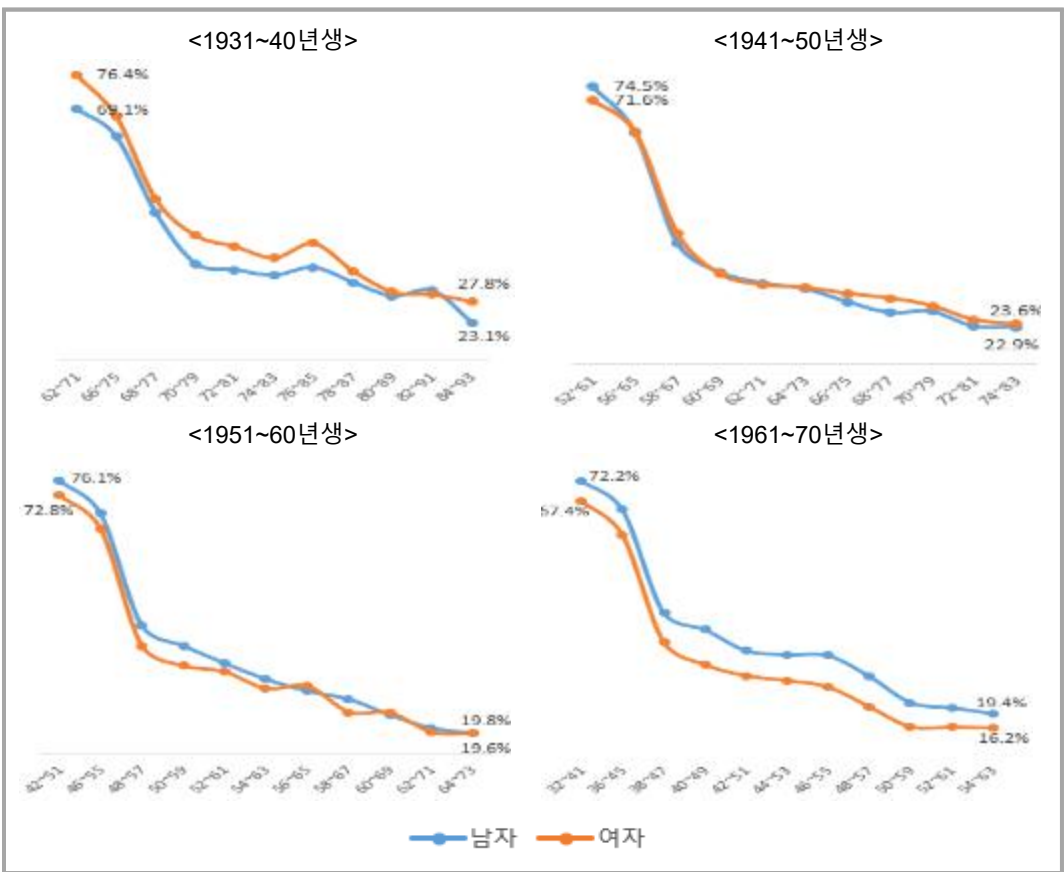
주: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2012~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사회, 기타 의견에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됨
 자료: 사회조사(1998~2024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4-1> 연도별 부모 돌봄에 대한 견해



<그림 4-2> 출생코호트별 가족 돌봄 견해 비율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을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하면(<그림 4-2>),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공통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핵가족화·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도시화에 따른 거주 분리 경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장기적으로 돌봄 규범을 약화시켜 왔다는 시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일 연령대에서 코호트별 변화를 살펴보면, 50대 기준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940년대생 73.1%, 1950년대생 34.3%, 1960년대생 18.6%로 나타나, 최근 코호트일수록 가족 내 돌봄 책임을 당연시하지 않는 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돌봄 인식의 약화가 일시적이 아닌 세대 간 누적적 전환 과정임을 뒷받침한다.



주: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2012~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사회, 기타 의견에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됨
 자료: 사회조사(1998~2024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4-3> 출생코호트별 부모 돌봄에 대한 견해_가족이 돌봐야 한다

성별 차이를 <그림 4-3>을 통해 보면,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가족 돌봄 책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가족 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던 성별 분업 규범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에서는

이러한 성별 격차가 점차 축소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1960년대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돌봄 책임을 낮게 지지했는데,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족구조 변화, 성평등 의식 확산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여성에게 ‘당연한 역할’로 부여되던 돌봄 규범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않으며, 해당 변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3절 돌봄 자원

1.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

가. 돌봄 제공자 없음

각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동일 연령대의 코호트별 비교 결과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이 70대인 시점에서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은 1930년대생 34.3%, 1940년대생 31.0%로 이전 출생코호트의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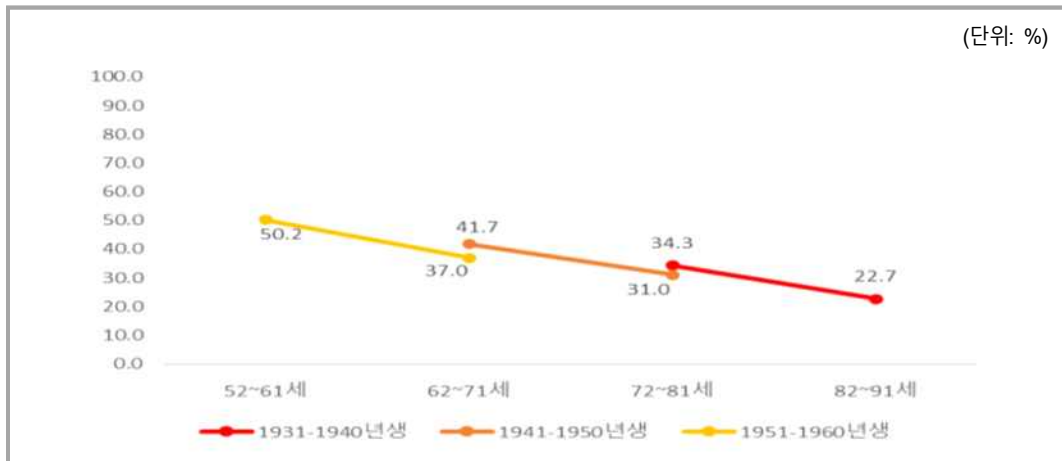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째, 제도적 관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은 1930년대생이 70대였던 시점이다. 즉, 제도 초기 단계로 돌봄의 사회적 기능이 정착되기 전이라 볼 수 있다. 반면,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이 70대와 60대를 보낸 2010년대 후반~2020년대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정착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등 국가 차원에서 돌봄에 대한 개입이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확대가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구조 및 사회문화의 변화 측면이다. 1930년대생은 다자녀 출산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 실제 2004년 노인실태조사에서의 65세 이상 자녀 동거율은 약 53%인 반면,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약 29%(정경희 외, 2014),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약 16%(이윤경 외, 2020)로 노인의 자녀 동거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돌봄 제공자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변화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할 경우 자녀들은 돌봄의 자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배우자 생존율의 증가이다. 과거에 비해 기대수명이 증가(79.6세('08)→83.5세('20))하면서 배우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게 되었다(국가통계포털 홈

페이지). 이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면서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최근 코호트에서는 낮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전 출생코호트는 돌봄을 주로 자녀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최근 출생코호트는 자녀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돌봄 제도가 확충되었으며, 기대수명 증가로 배우자 생존율도 높아지면서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돌봄 제공자가 전혀 없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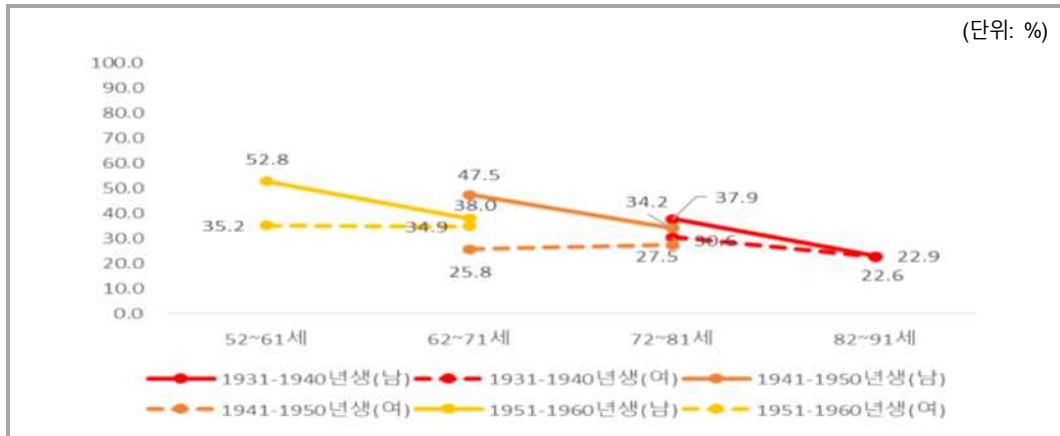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4>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 분포: 돌봄 제공자 없음

성별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의 성별 비교도 일관된 차이를 보인다. 1930년대생은 70대 시점에서 남자의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은 37.9%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30.6%로 더 낮았다. 즉, 동일 출생코호트 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80대에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은 남자 22.9%, 여자 22.6%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남자는 60대와 70대에는 배우자 의존도가 높지만, 80대에 들어서면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돌봄을 제공받을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자 역시도 배우자의 사망 이후 돌봄을 제공받을 대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았던 상황에서 자녀들도 고령화하면서 돌봄 제공 여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80세의 경우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남자와 여자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생이 60대일 때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은 남자 47.5%, 여자 25.8%로 남녀 간 차이가 21.7%p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들이 70대에 진입했을 때 남자는 34.2%, 여자는 27.5%로 그 차이가 6.7%p로 감소한다. 1940년대생과 1930년대생의 70대

시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1940년대생 중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1930년대생보다 낮다. 이는 돌봄정책의 확대에 따른 제도적 성과라 볼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5> 출생코호트별·성별 돌봄 제공자 분포: 돌봄 제공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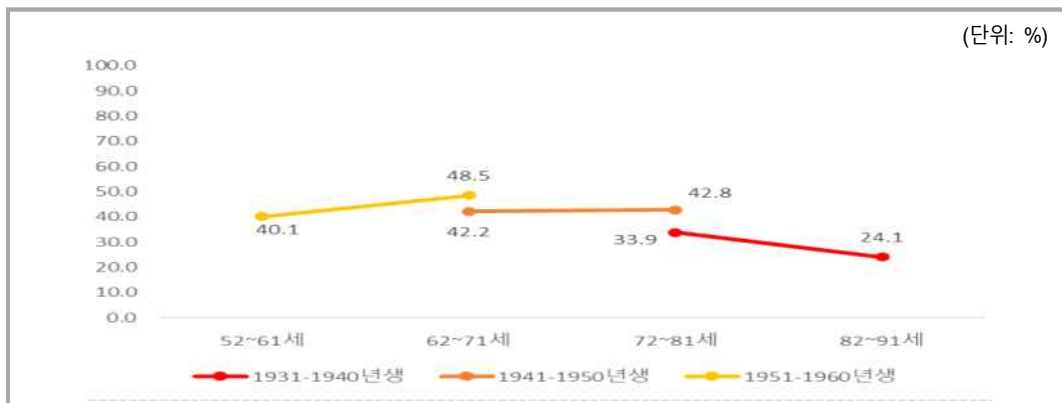
1950년대생이 50대일 때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은 남자 52.8%, 여자 35.2%로 남녀가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들이 60대에 진입했을 때에는 남자 38.0%, 여자 34.9%로 남자는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급감한 반면, 여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 1950년대생과 1940년대생의 60대 시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1950년대생의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낮은 반면, 여자는 1940년대생의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이 낮다. 이는 1950년대생 여자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코호트²⁾로 돌봄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녀의 수가 적어 돌봄 제공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여전히 돌봄 제공자로 기능하는 반면, 여자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돌봄 제공자: 배우자

각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배우자 돌봄의 비중이 중고령 구간에서 증가하다가, 초고령 구간에서 감소하는 역 U자형(∩형) 패턴을 보여준다. 즉, 60대에 배우자 돌봄의 비율(1950년대생 48.5%, 1940년대생 42.2%)이 가장 높지만, 70대(1940년대생 42.8%, 1930년대생 33.9%)는 유지 경향을 보이며, 80대(1930년대생 24.1%)는 배우자 돌봄 비중이 크게 감소한다.

2) 1950년대 출생 여자가 가입기인 1970~1980년대는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되던 시점으로 여자의 합계 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2명으로 급감함(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배우자 사망에 따른 혼인상태의 변화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와의 사별이 증가(최빈사망연령 남자 85.6세, 여자 90세(우혜봉, 2021))하면서 배우자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배우자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능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기존의 주돌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ADL/IADL 등 기능 상태가 악화되면서 돌봄 필요도 수준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 혼자 돌봄을 감당하기보다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자녀 등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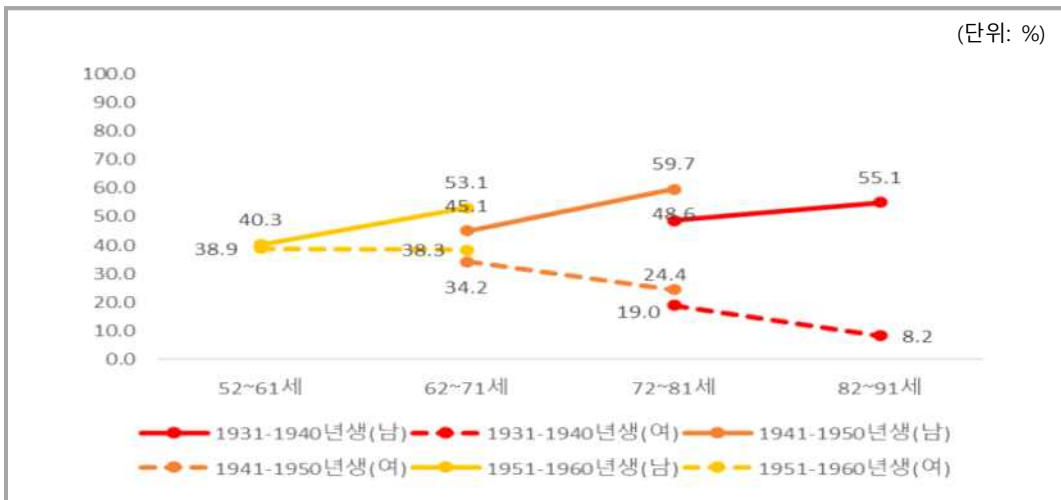
<그림 4-6>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 분포: 배우자

다음으로 동일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 증가에 따라 과거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에게 의존하던 돌봄형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4-7>과 같이 배우자의 돌봄 제공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는 초고령 연령대에서 절정에 이른다. 남자의 경우 60대(1950년대생 53.1%, 1940년대생 45.1%)에서 70대(1940년대생 59.7%, 1930년대생 48.6%)로 갈수록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60대(1950년대생 38.3%, 1940년대생 34.2%)에서 70대(1940년대생 24.4%, 1930년대생 19.0%)로 갈수록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이 낮다. 모든 코호트에서의 공통된 특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이 높으며, 남녀 모두 동일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비율이 높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배우자 돌봄 비율 격차는 다음의 이유로 해석 가능하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자는 80.5세인 반면, 여자는 86.5세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더 높다. 1960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약 25.4세, 여자는 21.6세, 1980년 남자의 초혼

연령은 약 27.8세, 여자는 24.8세(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지표)로 남자가 평균 3세 정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기대수명이 여자보다 짧고, 혼인 시 연령이 높은 남자의 경우 사망 시까지 배우자인 여자의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 사망 연령이 높으며, 독거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남자 19.6% 여자 43.2%), 초고령 연령대에서 배우자로부터의 돌봄 비율은 급격히 낮아 수밖에 없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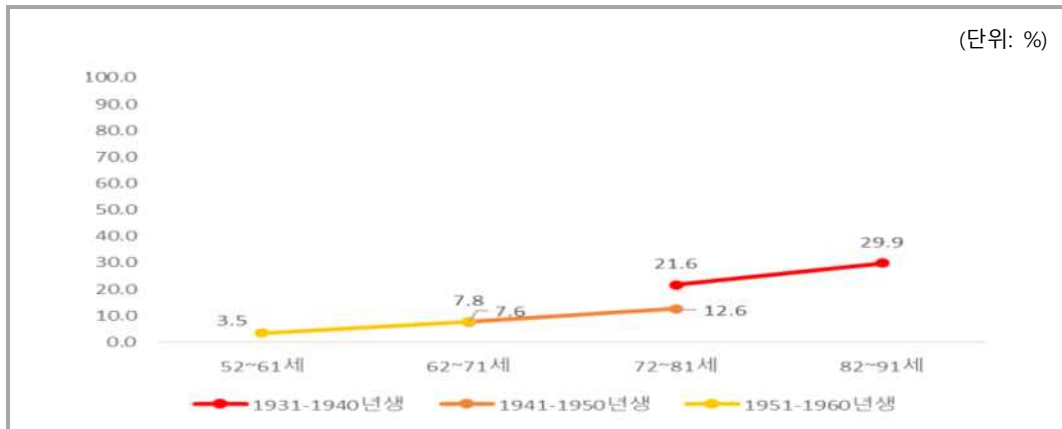
<그림 4-7> 출생코호트별·성별 돌봄 제공자 분포: 배우자

다. 돌봄 제공자: 자녀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가 자녀인 경우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 돌봄 비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1950년대생이 50대일 때의 자녀 돌봄 수혜 비율은 3.5%였으나, 60대일 때에는 7.8%로 증가하였으며, 1940년대생이 60대일 때의 자녀 돌봄 수혜 비율은 7.6%였으나, 70대일 때에는 12.6%로 증가하였다. 또한, 1930년대생이 70대일 때의 자녀 돌봄 수혜 비율은 21.6%였으나, 80대일 때는 29.9%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에 따라 기능 상태가 악화되고, 타인으로부터의 돌봄 필요도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배우자 돌봄 비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후기 고령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하거나 배우자 역시 기능 상태가 악화되면서 돌봄 역량이 저하됨에 따라 배우자 중심의 돌봄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70대 이후 배우자의 돌봄 비율이 감소하는 하락 구간과 자녀의 돌봄 비율이 급증하는 구간이 일치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70대 이후에는 배우자라는 돌봄자원이 자녀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8>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 분포: 자녀

코호트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이전 출생코호트일수록 자녀 돌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70대 시점에서 1940년대생은 자녀 돌봄 수혜 비율이 12.6%인 것에 비해 1930년대생은 21.6%로 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1930년대생이 70대인 2010년대 초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 단계로, 여전히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돌봄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940년대생이 70대인 2020년 초반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고 그 외 다양한 돌봄정책이 확대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기에 1930년대생에 비해 자녀의 돌봄 제공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0대 시점에서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은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자녀의 돌봄 제공 비율도 높지 않다. 이는 부부 단독가구의 증가로 자녀 돌봄보다는 배우자의 돌봄을 수혜 받는 비율이 높은 앞선 그림과 연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돌봄 제공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는 배우자의 그림과 같이 초·고령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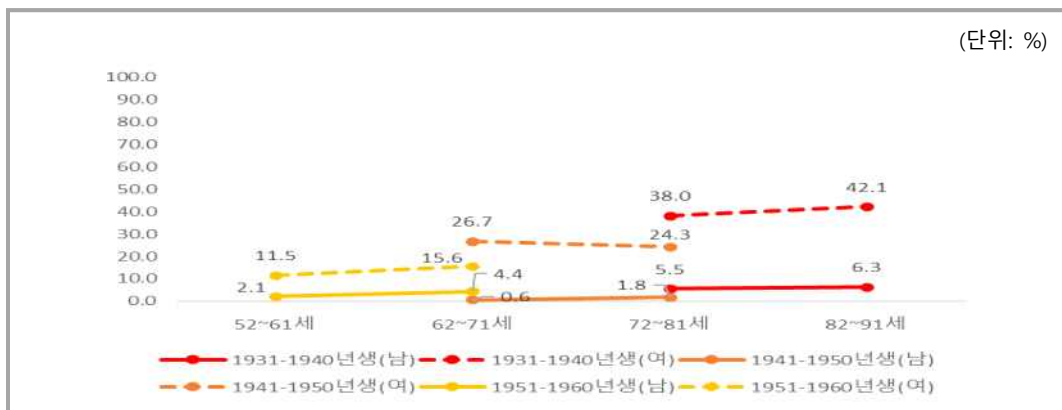
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 돌봄 비중이 높다. 즉, 1950년대생이 50대일 때, 자녀 돌봄의 비율은 11.5%였으나, 60대일 때에는 15.6%로 증가하였으며, 1930년대생 여자 역시 이들이 70대일 때에는 자녀 돌봄 수혜 비율이 38.0%였으나, 80대에서는 42.1%로 증가하였다. 반면, 1940년대생 여자는 60대일 때 26.7%가 자녀의 돌봄을 받았으나, 70대일 때에는 24.3%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남자는 전 구간에서 자녀의 돌봄 제공 비율이 낮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그 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1950년대생 남자가 50대일 때 자녀 돌봄 비율은 2.1%이지만, 60대일 때에는 4.4%이며, 1940년대생 남자가 60대일 때 자녀 돌봄 비율은 0.6%이지만, 70대일 때에는 1.8%이며, 1930년대생 남자가 70대일 때 자녀 돌봄 비율은 5.5%이지만, 80대일 때에는 6.3%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초고령기로 진입할수록 크게 발생하며, 1930년대생이 80대인 시점에서 여자는 자녀 돌봄의 비율이 42.1%로 매우 높지만, 남자는 6.3%로 낮다. 이는 앞선 배우자 돌봄 경향과 연결되는 결과이다. 즉, 80대 이상의 초고령기 여자는 독거노인 비율이 남자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여자의 돌봄 자원은 배우자에서 자녀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에 비해 배우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로의 돌봄 지원 전환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동일 시점에서의 출생코호트와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는 최근 코호트에서 자녀의 돌봄 제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50년대생 여자가 60대일 때 자녀 돌봄 제공 비율은 15.6%인 반면, 1940년대생 여자는 26.7%이며, 1940년대생 여자가 70대일 때 자녀 돌봄 제공 비율은 24.3%인 반면, 1930년대생 여자는 38.0%로 두 경우 모두 10%p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 배우자의 돌봄 제공 비율이 높다는 앞선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배우자 사망 시점이 늦어지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배우자라는 돌봄 자원이 자녀라는 돌봄 자원으로 대체되는 시점이 지연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 규범과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자녀 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자의 경우 1940년대생의 자녀 돌봄 비율이 타 출생코호트에 비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1940년대생 남자의 경우 앞선 배우자 <그림 4-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배우자의 돌봄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타 코호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배우자가 주 돌봄자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구조가 가장 강한 코호트의 특성을 가지며, 자녀가 주 돌봄자가 된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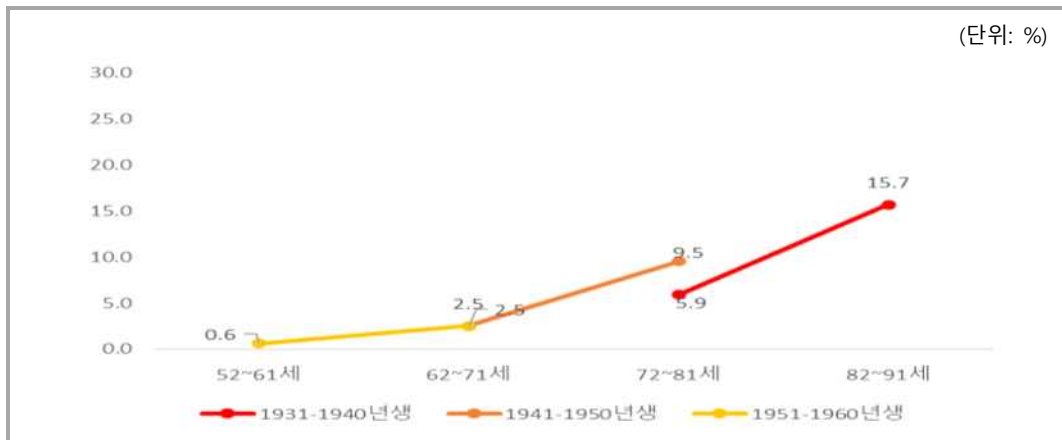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9> 출생코호트별·성별 돌봄 제공자 분포: 자녀

라. 돌봄 제공자: 공적 제도권 내 돌봄

각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가 공적 제도권 내 돌봄인 경우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공적 돌봄 비중이 높다. 1950년대생이 50대일 때의 공적 돌봄 수혜 비율은 0.6%였으나, 60대일 때에는 2.5%로 증가하였으며, 1940년대생이 60대일 때의 공적 돌봄 수혜 비율은 2.5%였으나, 70대일 때에는 9.5%로 증가하였다. 또한, 1930년대생이 70대일 때의 공적 돌봄 수혜 비율은 5.9%였으나, 80대일 때에는 15.7%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에 따라 기능 상태가 악화되고, 타인으로부터의 돌봄 필요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배우자 돌봄의 한계에 따른 공적 돌봄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성숙에 따른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이 이용 가능하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60대 초반의 경우 65세 미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중증도의 기능 상태 악화자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에서의 공적 제도권 내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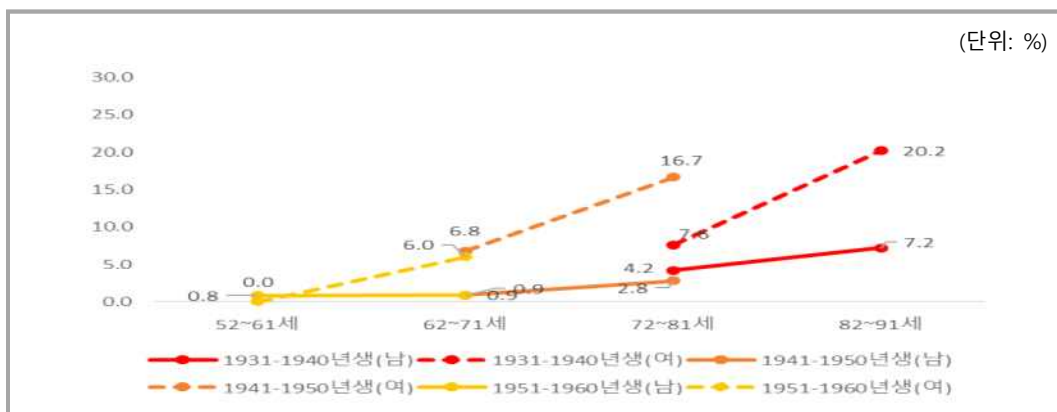
<그림 4-10>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 분포: 공적 제도권 내 돌봄

출생코호트별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적 돌봄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70대 시점에서 1930년대생은 공적 돌봄 수혜 비율이 5.9%인 것에 비해 1940년대생은 9.5%로 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자녀 돌봄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1930년대생이 70대인 2010년대 초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기로 제도적 성숙 전이기에, 여전히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돌봄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1940년대생이 70대인 2020년 초반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

고 그 외 다양한 돌봄정책이 확대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기에 1930년대생에 비해 공적 돌봄 제공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0대 시점에서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은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이는 앞선 자녀의 돌봄 제공 비율 과도 유사한 경향이다. 이는 부부 단독가구의 증가로 자녀 돌봄보다는 배우자에 돌봄을 수혜 받는 비율이 높은 앞선 그림과 연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60대의 일부만이 대상으로 포괄되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공적 제도권 내 돌봄 제공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여자와 남자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한다. 다만 상승 비율은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같은 연령대의 동일 출생코호트에서 여자가 남자의 약 2~3배 수준으로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대의 경우 1940년대생(남 0.9%, 여 6.8%)과 1950년대생(남 0.9%, 여 6.0%)은 해당 시점에서의 출생코호트별 차이보다는 성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70대의 경우 1930년대생은 남자 4.2%, 여자 7.6%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1.7배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1940년대생은 남자 2.8%, 여자 16.7%로 여자가 약 6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자의 공적 돌봄 비율이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여자의 공적 돌봄 비율보다 낮은 이유는 앞서 계속적으로 언급된 것과 같이 남자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높으며, 여자는 독거비율이 높기에 배우자의 대체 자원으로서 공적 돌봄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1> 출생코호트별·성별 돌봄 제공자 분포: 공적 제도권 내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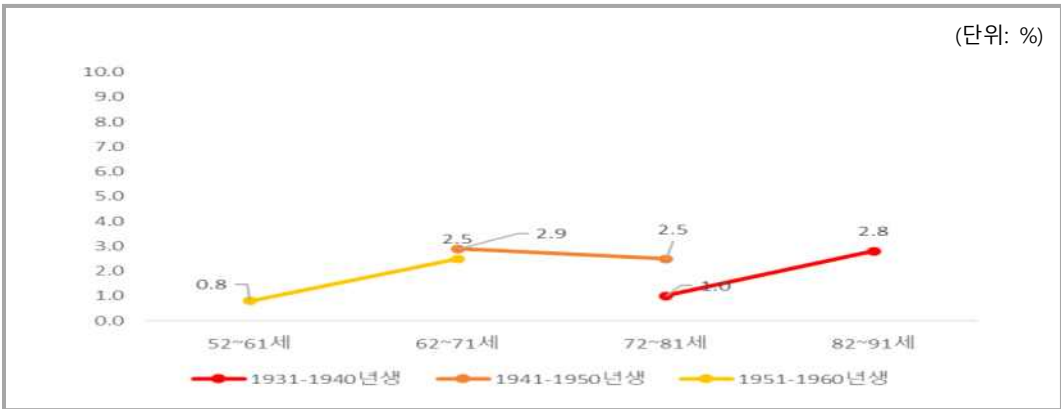
최근 코호트에서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나 70대 시점에서의 여자의 경우 1940년대생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발전과 제도에 대한 해당 출생코호트의 수용성 증가, 자녀 수의 감소와 부부 단독가구의 증가로 비공식 자원이 감소하면서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마. 돌봄 제공자: 사적 고용 간병인

각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가 사적 고용 간병인인 경우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적 고용 간병인의 활용은 연령대별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1950년대생이 50대일 때에는 0.8%였으나, 60대일 때에는 2.5%로 증가한 반면, 1940년대생은 60대일때 2.9%였으나, 70대에서는 2.5%로 오히려 감소한다. 또한, 1930년대생이 70대일 때에는 1.0%였으나, 80대에서는 2.8%로 증가한다. 이는 제도의 발전과 제도가 갖는 한계에 따른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1940년대생의 사적 고용 간병인 돌봄이 감소한 이유는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어 사적 고용 간병인을 활용하였으나, 70대에 진입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적 고용 간병에서 공적 서비스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생이 80대인 시점에서의 비율 증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양의 부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기능 상태의 악화로 1일 3~4시간만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외에 추가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여 돌봄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적 제한점이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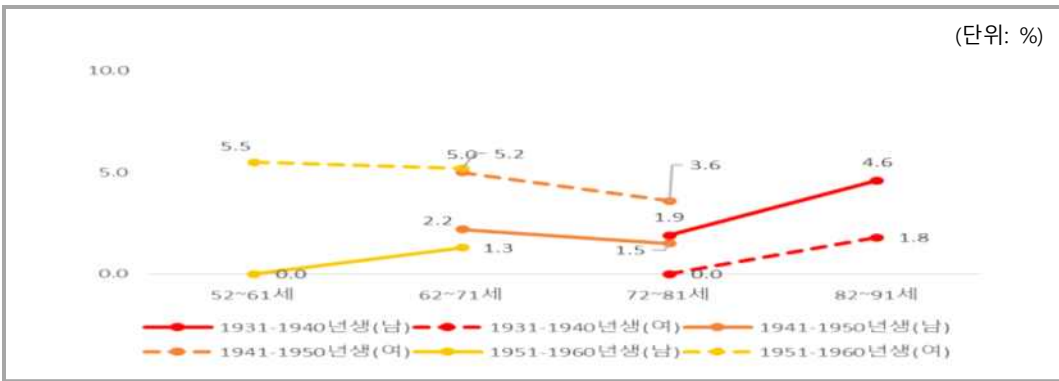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2> 출생코호트별 돌봄 제공자 분포: 사적 고용 간병인

사적 고용 간병인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도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동일 시점에서의 출생코호트별 및 성별 차이 역시 일관된 경향성이 없었다.

여자는 초기 노인 집단인 195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1930년대생은 70대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을 활용한 비율이 0.0%였으나, 80대에는 1.8%로 증가한다. 남자는 1950년대생과 1930년대생은 증가 경향을 보이나, 1940년대생은 감소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자는 남자의 낮은 돌봄역량으로 배우자에 의한 돌봄에 기대하기보다는 사적 돌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요양대상자로 진입되는 시점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부족에 대해 사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70대 이후부터의 사적 간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기능 상태 악화 등 배우자 지원 부족에 따른 사적 간병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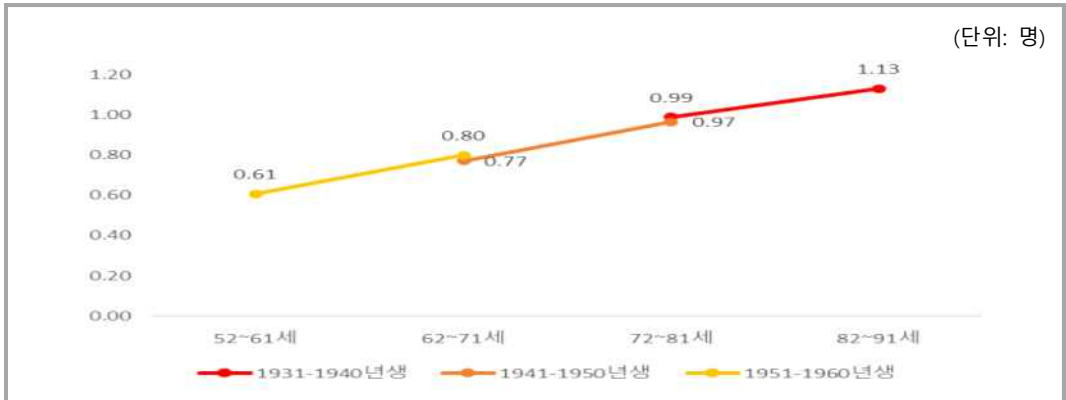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3> 출생코호트별·성별 돌봄 제공자 분포: 사적 고용 간병인

2. 돌봄 지원망 규모

코호트별 동일 연령대 내 돌봄 지원망 수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지원망 수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50대 0.61명, 60대 0.77~0.80명, 70대 0.97~0.99명, 80대 1.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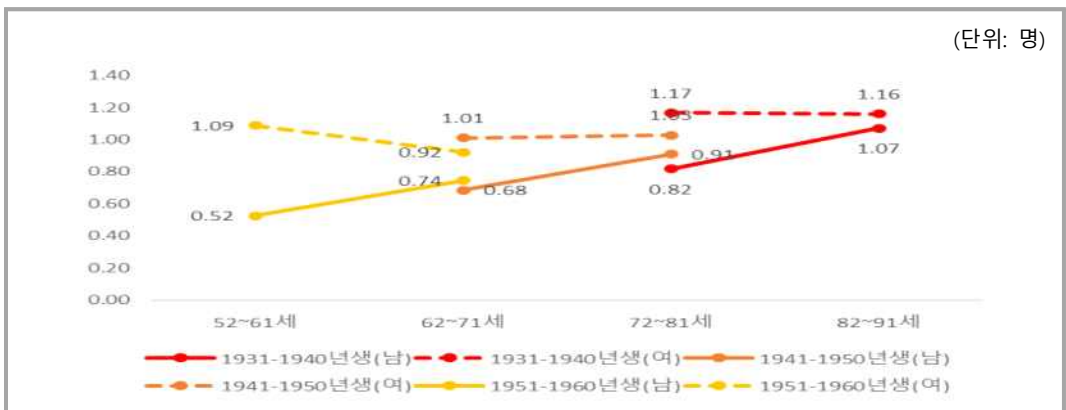
코호트별 분포를 살펴보면, 1940년대생은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동일 연령대(60대: 1940년대생 0.77명, 1950년대생 0.80명 / 70대: 1940년대생 0.97명, 1930년대생 0.99명)에서의 돌봄 지원망 수가 적다. 1940년대생은 1930년대생에 비해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전통적 가족돌봄 체계의 축소를 최전선에서 경험한 세대로 1930년대생에 비해 돌봄 지원망의 규모가 적을 수 있다. 또한, 1950년대생과의 비교 시에도 1940년대생의 돌봄 지원망 규모가 적는데, 이는 1940년대생이 60대인 시점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 초기인 상황으로 공식적 서비스의 진입 시점이 1950년대생에 비해 늦을 수 있어 가족 외의 공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돌봄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4> 출생코호트별 돌봄 지원망 규모

<그림 4-15>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동일 연령대 내에서 여자의 돌봄 지원망 수가 남자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동일 연령대 내 성별 비교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1930년대생은 70대에서 여자의 돌봄 지원망 수가 1.17명으로, 남자 0.91명에 비해 많았다. 즉, 동일 출생코호트 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돌봄 지원망 수가 더 많았다. 다만, 80대 돌봄 지원망 수는 남자 1.07명, 여자 1.16명으로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남녀 간의 돌봄 지원망 규모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거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족 외 주변의 다차원적 관계망을 통해 돌봄을 지원받았으나, 최근 돌봄 정책의 확대에 따라 남녀 모두 공적 제도권 내 돌봄 제도 이용이 증가하면서 여자는 과거 여러 사람에게 받던 돌봄 제공자가 소규모로 집중되고, 남자는 주로 배우자에 의존하면서 제한되었던 돌봄 지원망의 규모가 확대되는 형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5> 출생코호트별·성별 돌봄 지원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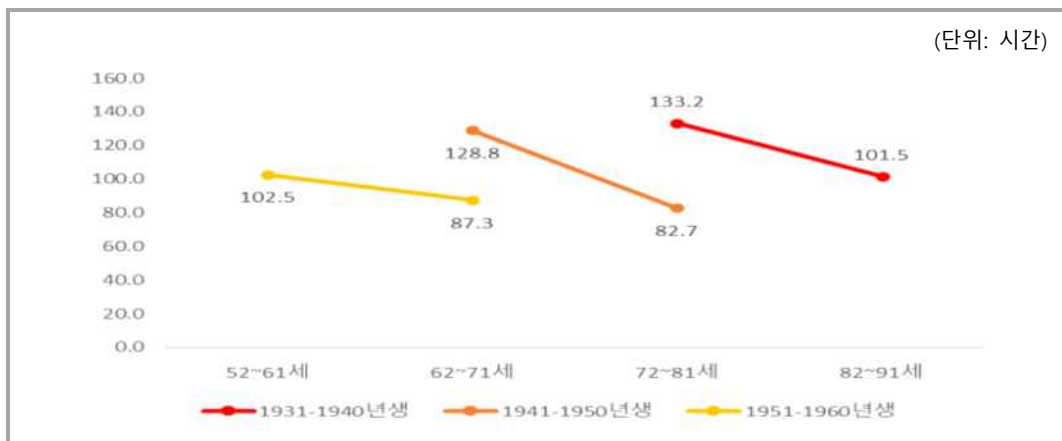
동일 연령대에서의 출생코호트별 및 성별 특성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돌봄 지원망 규모가 큰 반면, 여자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돌봄 지원망 규모가 더 적다. 이 역시도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공적 돌봄제도의 확대에 따라 돌봄 지원망 규모의 수렴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돌봄 규모

가. 돌봄 수혜 시간(1개월간 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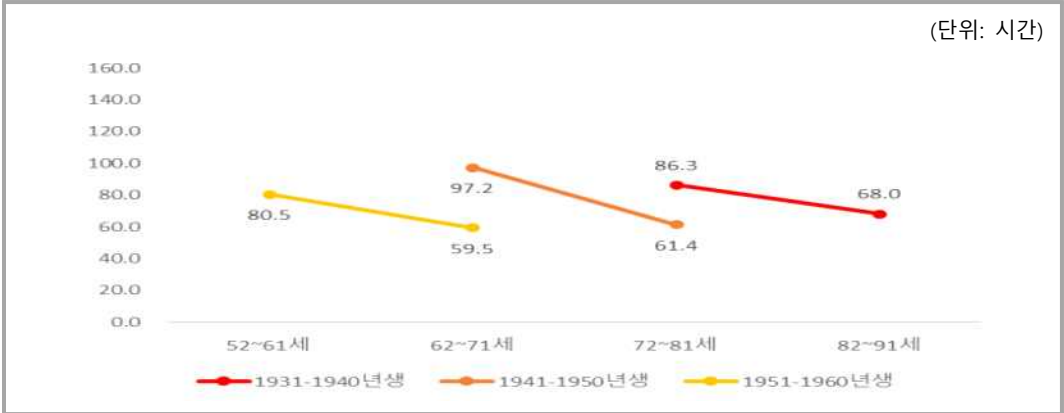
코호트별 동일 연령대 내 총 돌봄 수혜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일 코호트 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 수혜 시간이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즉, 기능 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은 사망 및 시설·요양병원 입소(원) 등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돌봄제도의 확대로 요양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고난이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조사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의 돌봄 수혜 시간이 감소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코호트별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의 변화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의 감소가 총 돌봄 시간의 감소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가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과거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가족들의 일상적 돌봄이 돌봄 시간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녀와의 비동거 가구가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적 돌봄이 확대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의 집중적 돌봄이 제공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6> 출생코호트별 총 돌봄 수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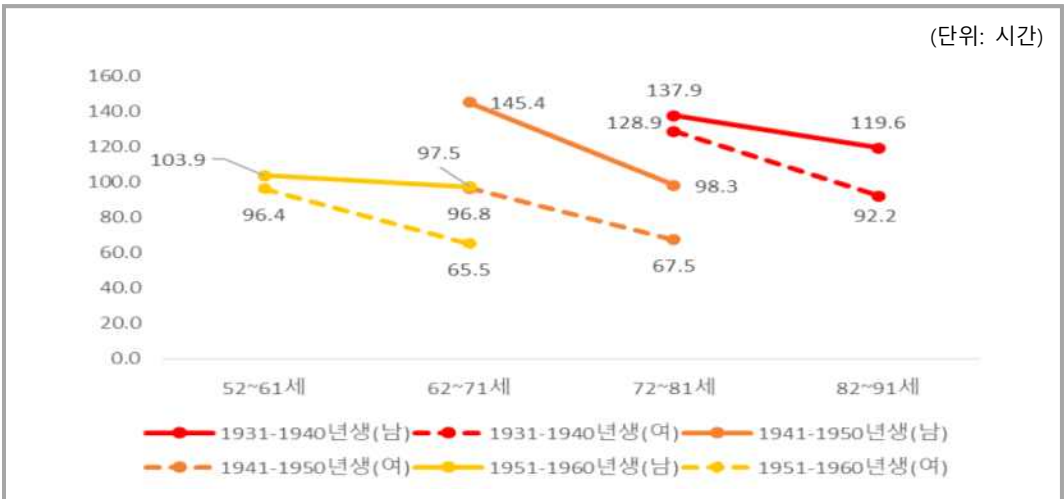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7> 출생코호트별 가족 돌봄 수혜 시간

나. 성별 돌봄 수혜 시간

성별 돌봄 수혜 시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총 돌봄 수혜 시간이 많다. 출생코호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0년대생과 1950년대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에 비해 여자의 돌봄시간이 적었다. 반면, 1940년대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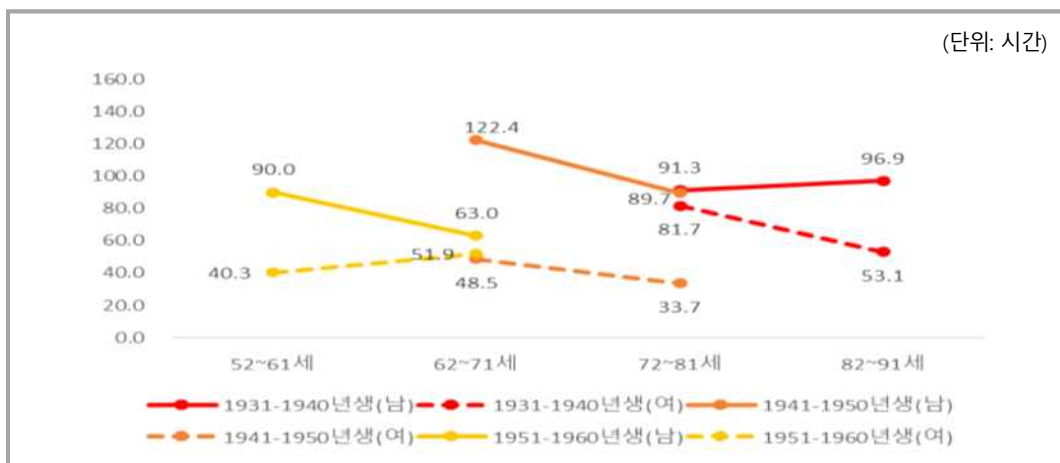
<그림 4-18> 출생코호트별·성별 총 돌봄 수혜 시간

가족 돌봄 수혜 시간에서도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이 많았다. 1930년대생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돌봄 시간이 많은 반면, 여자는 적은

경향을 보였다. 1930년대생은 여전히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나 남자는 앞서 현재 돌봄 제공자 현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높지만, 여자는 자녀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1930년대생이 80대인 현 시점에서 이들 자녀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해당 집단에 대한 가족의 돌봄 수혜 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공적 제도에 의존할 확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1950년대생의 경우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돌봄 시간이 적은 반면, 여자는 많은 경향을 보였다. 65세 이후 돌봄 정책의 대상이 되면서 남자는 가족 돌봄 시간을 공적 돌봄으로 대체하며, 여자는 자녀의 돌봄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예상된다.

1940년대생은 성별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의 차이가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크다. 앞서 돌봄 제공자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는 배우자 중심 돌봄으로 60대까지는 가족 돌봄을 충분히 받았으나, 이후 배우자 사망 및 자녀 돌봄 축소로 돌봄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여자는 본인이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만, 배우자로부터의 돌봄 수혜는 제한적임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2년·2022년),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9> 출생코호트별·성별 가족 돌봄 수혜 시간

동일 연령대에서의 출생코호트별 총 돌봄 시간 특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총 돌봄 시간의 경우 70대에서 가장 돌봄 수혜 시간이 적은 집단은 1940년대생 중 여자(67.5시간)이며, 돌봄 수혜 시간이 가장 많은 집단은 1930년대생 중 남자(137.9시간)이다. 이러한 경향은 60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최근 코호트의 여자가 돌봄 수혜 시간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 돌봄 시간의 특성과 연결된다. 70대에서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1940년대생 중 여자(33.7시간)이며, 1930년대생 중 남자(91.3시간)

의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이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 코호트인 1940년대생 남자와 1930년대생 남자의 가족돌봄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배우자 중심의 돌봄이 유지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최근 코호트에서의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이 확연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자는 배우자보다는 자녀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높지만, 가구구조의 변화로 자녀로부터의 돌봄 받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1일 3~4시간의 일정한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 돌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60대에서는 70대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가족 돌봄 수혜 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1940년대생 중 여자(48.5시간)이지만, 1950년대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40년대생 남자는 가족 돌봄 시간이 122.4시간인 반면, 1950년대생 남자는 63.0시간으로 최근 코호트에서 가족 돌봄 시간이 1/2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돌봄 시간과 가족 돌봄 시간을 비교해 보면, 여자는 가족 외의 돌봄시간이 남자에 비해 많으며, 남자는 돌봄시간의 상당 비율을 가족에게서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나, 기능 상태의 중증 비율이 높지 않아 공적 제도권 내에서의 돌봄 이용 문턱이 높은 1940년대생의 60대 시점에서의 남자는 배우자로부터의 돌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 돌봄 수혜시간 역시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1930년대생부터 1960년대생까지의 출생코호트를 중심으로, 노년기 돌봄 자원의 변화와 돌봄 수혜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돌봄에 대한 인식, 돌봄 제공자의 유형, 성별 간 차이, 공적·사적 돌봄 자원의 활용 양상 등에서 뚜렷한 코호트 및 연령별 차이가 동시에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 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 제공자가 없는 비율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낮았으나, 동일 연령대 내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갈수록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적 돌봄자원이 확충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의 비교에서 보듯, 제도 정착 이전 출생코호트는 자녀나 배우자 부재 시 돌봄 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공적 제도권 돌봄, 사적 고용 간병인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배우자 돌봄의 비중은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60대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감소하는 ‘역U자형’(∩형)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배우자 사망과 배우자의 기능 저하, 돌봄 당사자의 기능 상태 악화에 따른 돌봄의 난이도 증가 등이 동반되면서, 배우자 중심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성

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 돌봄 의존도가 높아, 배우자의 사망이 증가하는 연령대 이후에서는 돌봄 부재에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 반대로 여자는 배우자의 사망 후 자녀나 공적 제도에 돌봄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돌봄 의존도는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높았으나, 출생코호트가 최근일수록 그 비율이 낮았다. 즉, 1930년대생은 가족주의 가치가 강했던 시기에 성인 자녀를 주요 돌봄 자원으로 활용하였지만, 1950년대생 이후에는 부부 단독가구 증가와 가족 내 돌봄 역량 약화로 자녀 돌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배우자 생존기간이 늘어난 점, 공적 돌봄제도의 확산 등과 맞물려 돌봄 자원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적 제도권 돌봄의 확대가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공적 돌봄 이용률이 높았으며, 특히 여자의 이용 비율이 남자보다 현저히 높았다. 여자의 경우 독거 비율이 높고 배우자 자원이 부족한 반면, 남자는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 공적 돌봄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공적 돌봄의 수용성이 높고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성숙과 돌봄의 사회화가 진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적 고용 간병인 활용은 일정한 양상이 없으며 연령·코호트별로 달랐다.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접근성이 낮아 사적 간병 의존이 높았으나, 제도 성숙 이후에는 공적 돌봄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초고령기(80대 이후)에서는 공적 서비스의 시간·범위 한계로 인해 사적 간병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돌봄 지원망의 규모를 살펴보면, 돌봄 지원망 수는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많았지만, 코호트별로는 1940년대생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였다. 이는 가족 규모 축소와 전통적 돌봄체계의 약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돌봄 지원망이 남자보다 크지만, 최근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감소하였다. 이는 공적 돌봄의 확대에 의해 남자의 돌봄 접근성이 개선되고, 여자는 과거 다원적 비공식 관계망이 제도적 서비스로 대체된 결과로 해석된다.

총 돌봄 수혜 시간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능 저하로 인한 사망·시설입소 등의 표본 이탈 효과와 공적 돌봄의 확대에 따른 ‘집중적 단시간 돌봄’ 구조의 확산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호트별로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총 돌봄 시간이 적은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자녀 돌봄 감소와 가족 외 돌봄의 비중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총 돌봄 수혜 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남자가 배우자 중심의 가족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혜 받는 반면, 여자는 배우자 사망 후 자녀 또는 제도 돌봄으로 전환되어 가족으로부터 받는 돌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1940년대생 여자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은 돌봄 수혜 시간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 의존적 돌봄 구조의 약화와 공적 돌봄 활용이 병행되는 과도기적 세

대의 특성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노년기 돌봄체계는 가족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1930년대생은 가족 의존적 돌봄의 마지막 세대로, 자녀 돌봄의 비중이 높았다. 동일 연령대에서 비교해도 다른 코호트에 비해 공적 제도의 이용률은 낮았으나, 노화에 따른 기능 상태 악화로 지속적으로 공적 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1940년대생은 가족 돌봄의 약화와 공적 돌봄의 확산이 공존하는 과도기 세대이며, 1930년대생에 비해 공적 돌봄의 이용이 높다. 1950년대생은 배우자 중심의 돌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세대로 변화하고 있다.

제 5 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일과 은퇴

생애과정 관점에서, 개인의 과거 노동시장 경험은 이후의 노동 생애 이행 및 궤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근로생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이행(transition)과 궤적(trajecory)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³⁾ 근로생애 분석은 특정 연령이나 시점에서의 고용 변화보다는 직업의 배열(sequence of jobs)과 특성(예: 노동시장 진입구조, 직업의 수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이승호 외, 2020, p.149). 이러한 생애과정 관점에서 보면, 은퇴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파트타임, 자영업과 같은 가교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이승호 외, 2019, p.2).

근로생애를 노동시장 내 이행과 이행의 경로(궤적)로 유형화하여 분석할 때, 이러한 근로생애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세대를 구분하게 되는데, 최근의 연구는 대체로 코호트에 주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과거에는 노동시장 진입, 이행, 퇴직 등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면서 연령대에 따른 세대 구분이 자주 활용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연령, 코호트, 기간 효과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출생코호트에 따른 세대 구분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이승호 외, 2019, p.6). 특정 출생코호트들은 그 시대에 공통된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므로, 경제성장의 단계나 크고 작은 경기변동 같은 거시경제의 환경, 노동시장 상황 등이 서로 다른 세대 경험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이다(이지은과 황균성, 2024, p.26). 다만, 출생코호트 집단 간에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할 때는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 및 사회문화 환경 차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방하남 외, 2010, p.15).

중·고령층의 노동 생애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5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노동기간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이전 세대에 비해 50대 후반까지도 높은 노동시장 참여 추이를 보이며, 60~64년생 코호트는 50대 후반에도 청·장년기의 고용률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고용률이 증

3) 이행은 한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Dewilde, 2003), 궤적은 다수의 이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됨(문혜진, 2010)

가하였다(이승호 외, 2019). 50대 초의 취업상태를 50대 말까지 유지하는 고령자가 약 78%이며, 60대에는 비취업 상태 비중이 높아짐에도 취업상태 유지 비율이 약 32%에 이르고 있다(이승호 외, 2020). 둘째, 장년기, 고령기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단선적 은퇴(풀타임 노동-노동시장 퇴장)의 감소와 은퇴 후 다시 일하는 ‘부분 은퇴’, ‘점진적 은퇴’ 증가 등 다양한 은퇴 경로의 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전통적인 은퇴 경로(정년 유지 후 노령연금 수급 시기쯤 은퇴) 외에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에게서 다양한 은퇴 시점이 확인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재진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남이 보고되었다(이승호 외, 2020). 특히, 청·장년기(15~50세)에 불안정 근로생애를 경험한 집단일수록 중·고령기에 점진적 은퇴, 가교 일자리를 경험하는 유형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이승호 외, 2019). 셋째,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근로생애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된다.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근속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주된 일자리(또는 커리어 직장)를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증가한 추이를 보였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50대 후반 이후 노동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방하남 외, 2010; 이승호 외, 2019; 이아영 외, 2023). 한편, 좀 더 최근 출생코호트까지 살펴본 연구에서 노동 생애의 불안정 이동 유형을 보면, 민주화 세대(63~80년대생)의 경우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사이에서의 이동이 주요한 형태였다면, 정보화 세대(81~95년생)에서는 미취업과 취업상태 간의 이동이 파악되는 등 세대별로 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경제활동 관련 가장 긴 시계열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별로 생애후반기 연령대인 중·고령기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1. 분석 자료원 및 코호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이고도 기본적인 조사자료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기본조사 이외에도 여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근로형태별)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집계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처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는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의 미시자료(micro-data)를 198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계 자료가 아닌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출

생코호트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으나 중·고령기 경제활동 참여 현황 파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항목들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층 부가조사 미시자료를 추가로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조사 자료는 1985년부터 5년 단위로 하여 2025년까지 총 9개의 조사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고령층 부가조사는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최근까지 총 5개의 조사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기본조사의 연도별 미시자료는 매월 조사된 12개월의 자료가 취합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 본 분석 시점 기준 1~6월의 미시자료만 제공되고 있었기에, 6개월분의 자료만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표 5-1> 일과 은퇴 자료원별 분석연도

자료명	분석연도	비고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	1985~2025 (5년 단위)	- 2025년은 6개월 자료만 활용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2005~2025 (5년 단위)	- 2005년부터 조사 시작 - 매년 5월에 실시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 미시자료에서는 응답자의 출생연도와 만 연령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료 활용의 유의 사항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연령을 5세 별로 층화하여 가중값을 산정하여 제공하므로 1세 단위로 집계·분석하거나, 출생연도 항목을 이용하여 출생연도별로 집계·분석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출생연도 변수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조사 연도에서 만 연령을 차감하여 역으로 출생연도를 산출함으로써 출생코호트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만 연령을 ‘연 나이’ 개념으로 가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5세 단위의 연령 그룹은 연령의 끝자리를 0~4세, 5~9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분석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조사 연도 끝자리가 0, 5로 끝남에 따라, 0~4세 및 5~9세 연령 그룹의 출생연도는 ○1~○5년생, ○6~○0년생으로 매칭된다. 예를 들어, 2025년 자료에서 만 연령이 45~49세인 그룹은 출생연도가 1976~1980년생인 코호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조사 미시자료의 활용 시작 시점인 1985년에 50대 초반이었던 1930년대생부터 2020년에 50대에 진입한 1960년대 후반생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과 실질적 은퇴 연령을 고려하여 40대 중반부터 70대 후반까지의 연령에서 출생코호트 그룹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2>는 조사 연도 시점의 주요 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 관련 변화 내용을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경제위기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1940년대생은 40대 후반~50대 후반의 중장년기에 1997년 외환 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며, 1950년대생은 30대 후반~40대 후반에 위

환위기를 경험하고, 50대 이후 장년층에 이르러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여파와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경험한 세대로 나타난다.

<표 5-2> 출생코호트별 연도별 주요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2025년
주요 경제적 여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화, 위기극복 - 외환위기(1997) • 산업구조 제조업 비중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화, 위기극복 - 카드대란(2003) • 금융위기(2008) • 산업구조 서비스업 비중 확대/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진입, 저성장 • 가계부채 문제 • 산업구조 서비스업 비중 확대/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진입, 저성장 - 코로나19 팬데믹 • 고물가, 가계부채 • 산업구조 서비스업 비중 확대/정점
노동시장 관련 주요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공급, 정규직 중심 구조에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 고용보험 도입(1995)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확산, 고용 안정성 낮아짐 • 노동시장 양극화 • 주5일 근무제(2003) • 노인일자리사업 도입(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 다변화, 고용 안정성 낮음 • 60세 정년 의무화 도입(2013), 시행(2016) • 주 52시간 근무제 (2018, 300인 이상) • 최저임금 인상 (2017~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 다변화, 고용 안정성 낮음 •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 연령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2013, 만 61세) • 기초연금 도입 (2014) 	
연령대	1990년 기준	2000년 기준	2010년 기준	2020년 기준
1931-35년생	55~59세	65~69세	75~79세	85~89세
1936-40년생	50~54세	60~64세	70~74세	80~84세
1941-45년생	45~49세	55~59세	65~69세	75~79세
1946-50년생	40~44세	50~54세	60~64세	70~74세
1951-55년생	35~39세	45~49세	55~59세	65~69세
1956-60년생	30~34세	40~44세	50~54세	60~64세
1961-65년생	25~29세	35~39세	45~49세	55~59세
1966-70년생	20~24세	30~34세	40~44세	50~54세

주: 이지은과 황규성(2024); 본 보고서의 2장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2. 주요 지표

출생코호트별로 생애후반기 연령대인 중·고령기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표 5-3>). 첫째로는 기본조사

자료의 경제활동 상태 등 주로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여 출생코호트별 중·고령기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생애후반기에 어느 정도의 중·고령층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로 어느 시점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시작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중·고령기에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분포, 산업 및 직업 분포가 출생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둘째로 노동시장 진입 후 중·고령기까지 쌓아온 근로 경험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중·고령기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추이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중·고령층 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며, 해당 지표 산출을 위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표 5-3> 주요 지표 및 지표별 분석자료

구분	지표	분석자료	
중·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현황	경제활동참여율(성별) + 고용률	기본조사	
	종사상지위 분포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성별)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성별)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성별)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성별)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성별)		
장래 근로희망 비율 및 이유 분포(성별)	부가조사		
근속기간 및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특성	근속기간(성별)	기본조사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근속 현황	55~64세 기준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인 비율(성별)	부가조사
		55~64세 기준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일 때 근속연수(성별)	
		55~64세 기준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일 때 근속연수(성별)	
	55~64세 기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성별)		
	60~64세 기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분포(성별)		
	60~64세 취업 일자리의 경력 연관성(성별)		

주: 기본조사는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의미

제2절 경제활동 참여

1. 경제활동 상태

출생코호트별 중·고령기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가장 대표적 항목인 ‘경제활동 상태’ 변수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 추이를 <표 5-4>와 <표 5-5> 및 <그림 5-1>, <그림 5-2>에 제시하였다. 출생코호트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율은 해당 출생코호트 및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실업자”의 비율로 산출하였으며,⁴⁾ 고용률은 해당 출생코호트 및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가 중·고령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25년 조사 기준(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55~64세 대상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에서의 퇴직연령이 평균 49.2세로 나타나고 있어,⁵⁾ 근로생애 측면에서 직업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중후반 연령부터 분석 대상 연령 그룹에 포함하였다.

우선, <표 5-4>에서 출생코호트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를 보면, 동일 연령대에서 비교 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65세 이후 연령대에서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난다. 65~69세 연령에서 1930년대생과 1940년대 초반생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2~43% 수준을 보였으나, 1940년대 후반생에서는 45.8%, 1950년대 초반생에서는 50.4%, 1950년대 후반생에서는 54.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이는 70대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생애 후반기, 특히 65세 이후 고령기에 과거보다 더 많은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애후반기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경제적 요인으로는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고용 불안정성 증대는 충분한 노후소득 준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부모 세대 부양과 함께 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에 따른 이중 부양 또한 충분한 노후소득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한 ‘경제활동 상태’ 변수는 기본조사의 각 연도별 자료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다만, 2000년을 전후로 실업 상태 판단을 위한 구직기간 기준이 1주에서 4주로 변화되었음을 유의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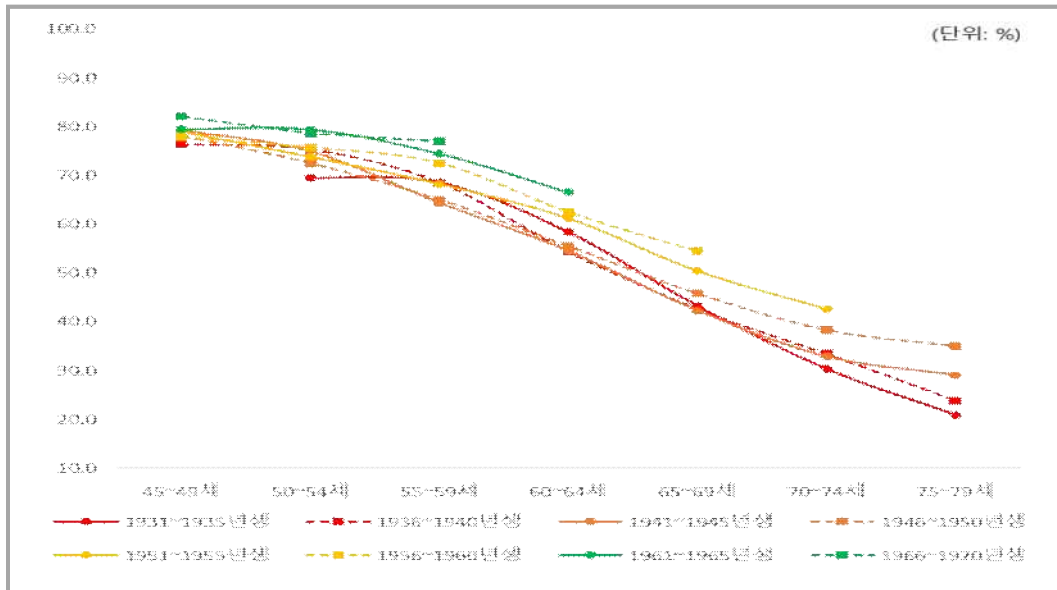
5) 55~79세 대상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이 평균 52.9세임. 통계청 보도자료(2025.08.06.)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0&act=view&list_no=437914&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

<표 5-4> 출생코호트별·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출생코호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1931-35년생	-	69.5	68.7	58.4	43.3	30.3	20.9
1936-40년생	76.4	75.3	68.5	54.3	42.6	33.4	23.9
1941-45년생	79.3	74.9	64.4	54.5	42.3	32.9	29.1
1946-50년생	78.1	72.5	65.1	55.5	45.8	38.4	35.1
1951-55년생	79.0	73.8	68.3	61.2	50.4	42.6	-
1956-60년생	77.9	75.8	72.6	62.5	54.5	-	-
1961-65년생	79.5	79.4	74.5	66.6	-	-	-
1966-70년생	82.1	78.6	77.1	-	-	-	-

주: 굵은 색으로 표기한 수치는 1995년, 음영색으로 표기한 수치는 2000년대에 해당하는 값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 국가데이터처, 1985~2025(5년 단위, 2025년은 1~6월분), 국가데이터처 MDIS 다운로드



주: 본 보고서의 <표 5-4>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 출생코호트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이는 결과적으로 중·고령기에도 계속 근로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도록 작용했을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60세 정년 의무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4년 도입되어 크게 확대되어 온 노인일자리 사업도 65세 이후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제도적 요인 이외에도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하는 즐거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따라 생애후반기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해 온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반적인 추이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한 양상이지만, 65세 이전 연령대에서 일부 출생코호트의 경우,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율은 감소하는 추이(연령 효과)가 관찰되지만, 일부 출생코호트의 경우, 특정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여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이 관찰되는 시점을 보면, 대체로 외환위기 등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어느 정도 기간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54세 연령대에서 1940년대생은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감소하였는데, 1940년대 초반생은 해당 연령대의 시점이 1995년, 1940년대 후반생은 2000년이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생은 55~59세에서 60~64세로 넘어갈 때, 1940년대 초반생은 50~54세에서 55~59세로 넘어갈 때,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 시점 또한 1995년과 2000년에 대응한다.

다음으로 <표 5-5>는 출생코호트별,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경제활동참여율보다는 소폭 낮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동일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고용률은 증가해 온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증가 폭은 65세 이후 연령대에서 더 크게 관찰된다. 65~69세 연령에서 1930년대생과 1940년대 초반생의 고용률은 41~42% 수준을 보였으나, 1940년대 후반생에서는 44.6%, 1950년대 초반생에서는 48.6%, 1950년대 후반생에서는 52.8%로 증가하여 1930년대생과 비교 시 10%p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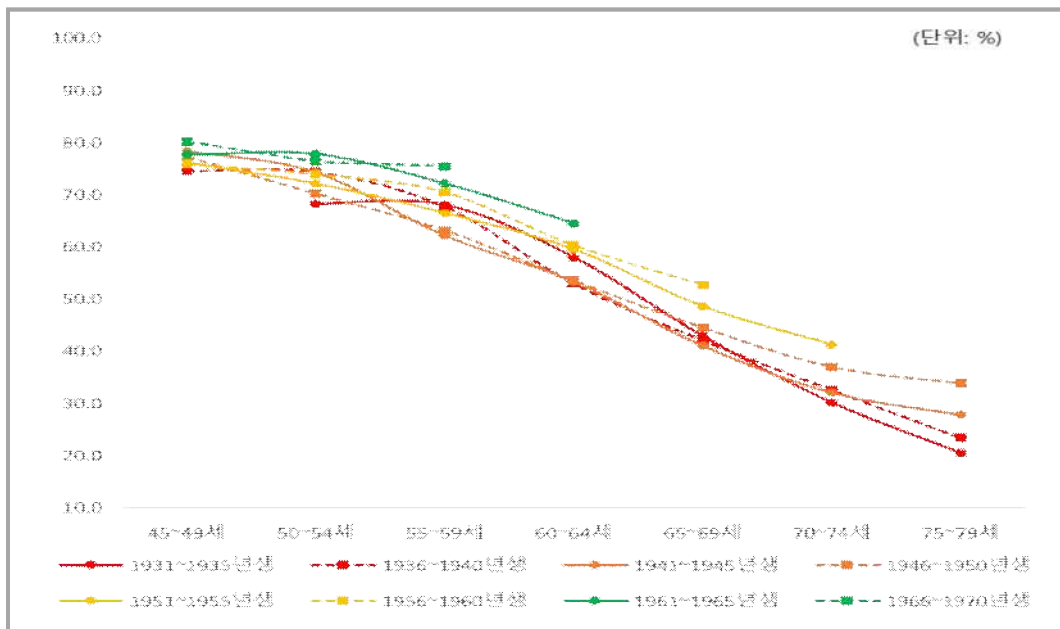
<표 5-5> 출생코호트별·연령별 고용률

(단위: %)

출생코호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1931-35년생	-	68.2	68.0	58.0	42.9	30.2	20.6
1936-40년생	74.7	74.5	67.8	53.0	42.2	32.7	23.4
1941-45년생	78.4	74.3	62.2	53.4	41.1	32.1	27.8
1946-50년생	77.3	70.2	63.2	53.7	44.6	37.1	33.9
1951-55년생	76.1	72.1	66.5	59.6	48.6	41.3	-
1956-60년생	75.9	74.1	70.6	60.4	52.8	-	-
1961-65년생	77.7	77.9	72.2	64.5	-	-	-
1966-70년생	80.3	76.4	75.5	-	-	-	-

주: 굵은 색으로 표기한 수치는 1995년, 음영색으로 표기한 수치는 2000년대에 해당하는 값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출생코호트별 차이 이외에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이와, 특정 시점의 영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간 효과의 영향도 경제활동참여율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적 위기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2010년대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의 추이를 볼 때, 1990년 이후 최근 시점의 기간에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주: 본 보고서의 <표 5-5>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2> 출생코호트별 고용률 추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출생코호트의 경우, 성별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그에 따라 가족 형성 시점 이후 출산·육아로 인해 여자가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단절 그리고 전반적인 성별 교육수준 차이 등으로 인해, 중·고령기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이 유사한 추이를 보였기에, 성별 구분에서는 경제활동참여율만 제시하였다. <표 5-6>을 보면, 남자의 경우, 45~49세, 50~54세에서는 출생코호트별 경제활동참여율 변화가 크지 않아 코호트의 차이보다는 특정 시점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되며, 55세 이후 연령대부터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한 양상이 관찰된다. 이와 달리, 여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50~54세를 보면, 1930년대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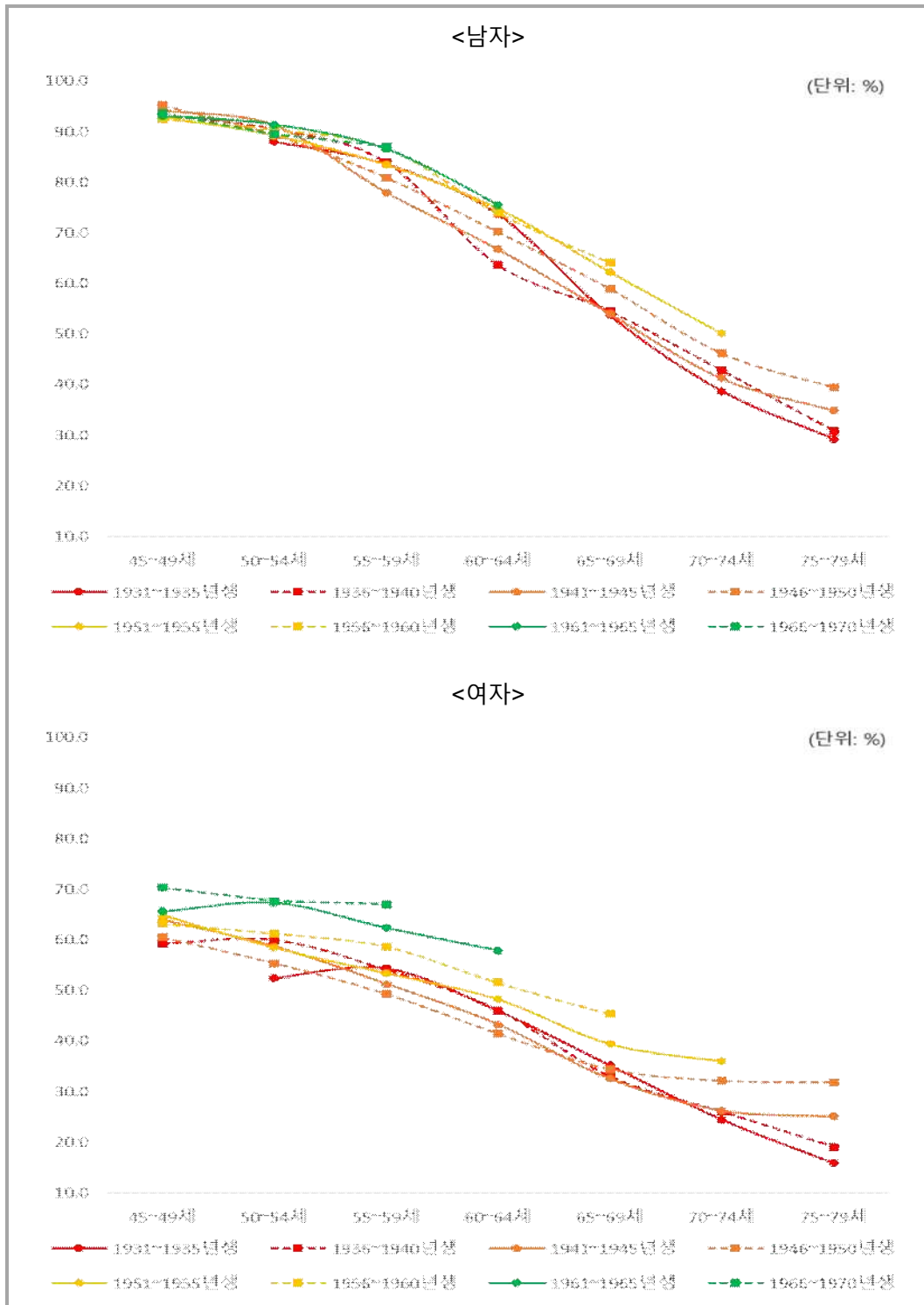
1940년대생 여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0% 이하로 나타나지만,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계속 증가하여 1960년대생에서는 약 67.5% 내외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그림 5-1>에서 60세 이전 연령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진 추이가 남자보다는 여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로 나타난 결과임을 시사한다. 한편,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경제활동참여율의 절대적 수준 자체는 여전히 남자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출생코호트별·성별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출생코호트	남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1931-35년생	-	88.0	83.6	73.7	53.6	38.7	29.2
1936-40년생	93.2	90.5	83.9	63.6	54.5	42.8	30.9
1941-45년생	94.1	91.2	78.0	66.8	54.0	41.2	34.9
1946-50년생	95.2	89.4	80.9	70.2	58.9	46.2	39.4
1951-55년생	92.8	89.2	83.4	74.8	62.2	50.1	-
1956-60년생	92.4	90.4	86.7	73.9	64.2	-	-
1961-65년생	93.1	91.4	86.6	75.5	-	-	-
1966-70년생	93.6	89.5	87.1	-	-	-	-
출생코호트	여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1931-35년생	-	52.4	54.4	46.0	35.2	24.5	15.9
1936-40년생	59.2	60.0	54.1	46.1	33.0	26.0	19.1
1941-45년생	63.9	58.7	51.3	43.3	32.6	26.3	25.1
1946-50년생	60.6	55.4	49.4	41.5	34.4	32.2	31.8
1951-55년생	64.9	58.4	53.4	48.3	39.5	36.1	-
1956-60년생	63.2	61.3	58.7	51.5	45.4	-	-
1961-65년생	65.6	67.4	62.4	57.8	-	-	-
1966-70년생	70.4	67.7	67.0	-	-	-	-

주: 굵은 색으로 표기한 수치는 1995년, 음영색으로 표기한 수치는 2000년대에 해당하는 값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본 보고서의 <표 5-6>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3> 출생코호트별·성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2.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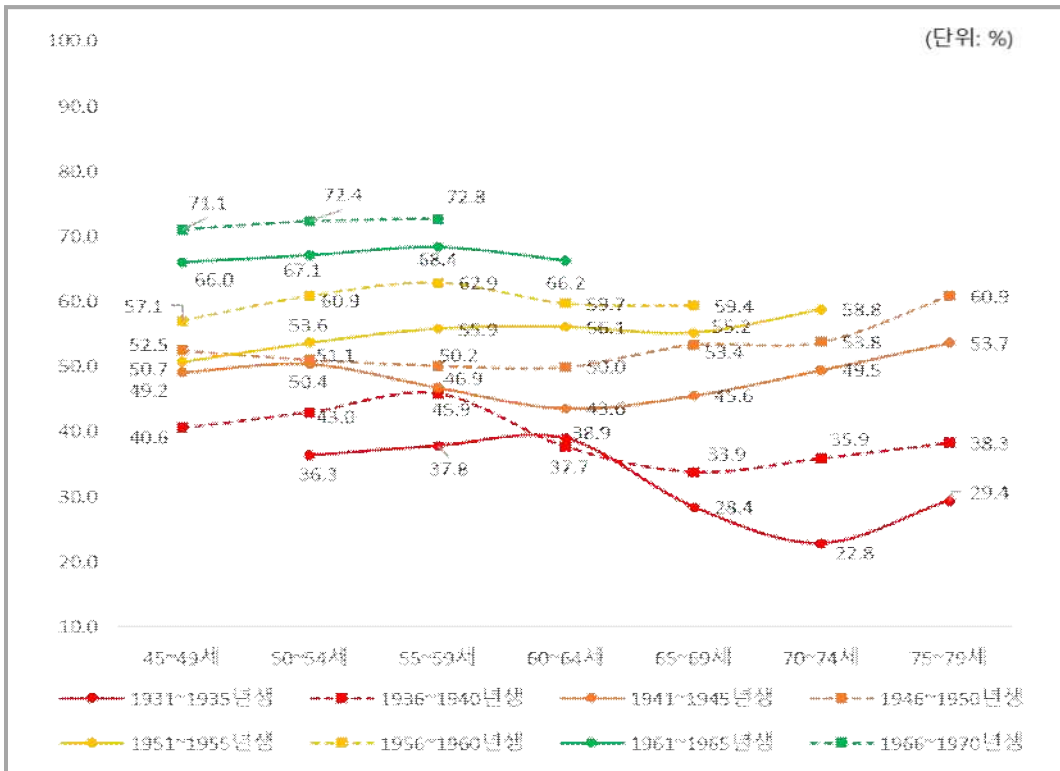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임금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며,⁶⁾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그림 5-4>는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을 산출하여 나타낸 것으로,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비율의 지속적 상승 추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감소(특히, 농업),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에도 서비스업 부문(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확대·발전, 임금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요인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65세 이후 연령대에서 출생코호트별 임금근로자 비율 증가는 더욱 확연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65~69세에서 1930년대 초반생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28.4%, 1930년대 후반생은 33.9% 정도였으나, 1940년대 초반생은 45.6%로 약 12%p 증가하였고,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이후 살펴볼 산업 분포 변화에서도 확인되듯 65세 이후 연령대에서 농업 종사자가 상당히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1930년대 후반생이 2005년에 65~69세였으며, 1940년대 초반생은 2010년에 65~69세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면, 2004년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된 노인일자리 사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코호트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임금근로자 비율 변화는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930년대생의 경우,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 이후 임금근로자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70대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1940년대 초반생 이후의 출생코호트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임금근로자 감소 추이가 이전 출생코호트만큼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그림 5-5>는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성별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경제활동참여율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임금근로자 비율도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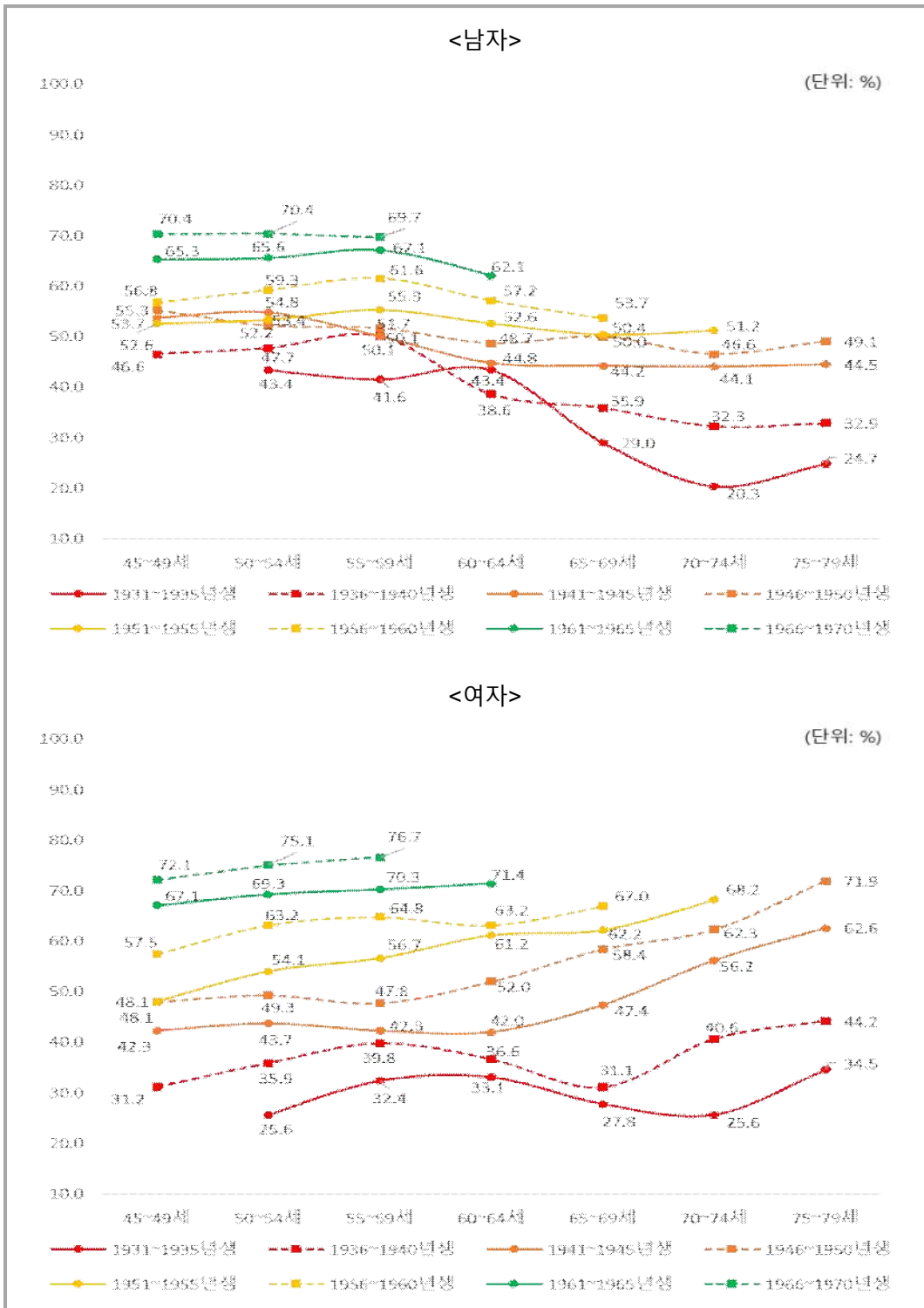
6)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자로 정의된다.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으로 정의됨(국가데이터처, MDIS, 통계설명 참조)

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전반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진 경향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0세 이후 연령대에서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1940년대 후반생을 포함한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65~69세 연령에서 1950년대생 남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50.4%, 53.7%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62.2%, 67%이다. 또한, 60세 이전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보면, 1950년대 후반생 및 1960년대생에서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여자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고령기, 특히, 60대 이후에 임금근로자 비율이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분포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점, 비임금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남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4> 출생코호트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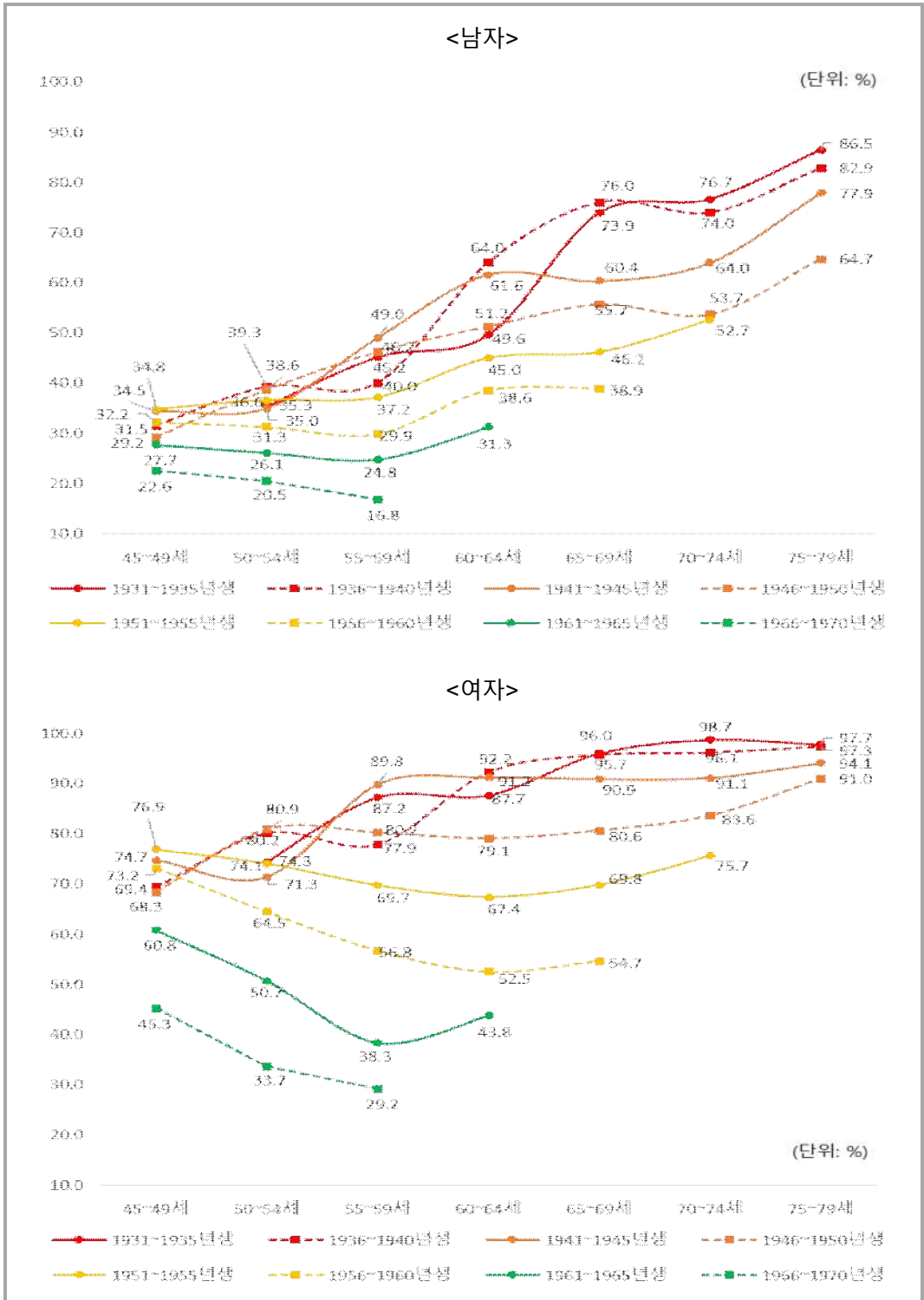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5> 출생코호트별·성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그림 5-6>과 <그림 5-7>은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의 종사상지위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이는 앞서 종사상지위 분포에 성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이는 대체로 남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을 밝힌다. 우선, <그림 5-6>은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성별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임시·일용직 비율이 낮아졌는데, 여자의 경우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임시·일용직 비율의 감소 폭이 확연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60~64세를 기준으로 보면, 1930년대생 여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율이 87.7%(초반생), 92.2%(후반생) 정도였으나, 1940년대 후반생은 79.1%, 1950년대 초반생은 67.4%, 1950년대 후반생은 52.5%, 1960년대 초반생은 43.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동일 연령대(60~64세)에서 남자도 1940년대생 이후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임시·일용직 비율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낮아 감소 폭은 여자만큼 크지 않다. 남자의 경우, 대부분의 출생코호트에서 50대 중반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일용직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년기에도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다 보니 연령에 따른 변화가 다소 완만하게 나타난다. 한편, 남녀 모두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 특정 연령대에 임시·일용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1930년대 초반생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율이 60~64세, 65~69세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1930년대 후반생의 경우 60세 전후, 1940년대 초반생의 경우 55세 전후, 1940년대 후반생의 경우 50세 전후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각 출생코호트별 해당 연령대의 자료 시점을 확인하면, 1995년과 2000년으로 나타나, 외환위기의 영향이 반영된 기간 효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그림 5-7>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원 無)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을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성별로 산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녀 모두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남자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연령 효과)가 분석 대상 출생코호트 대부분에서 관찰되며, 일부 연령대에서는 기간 효과로 인한 추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여자의 경우 대부분의 출생코호트에서 50대 이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90% 내외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추이와 연계해 보면, 1930년대생 및 1940년대생(+1950년대 초반생까지도) 여자의 경우, 중·고령기 취업자의 과반이 비임금근로자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나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율도 높아서, 노동시장 참여 구조에 있어 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6> 출생코호트별·성별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7> 출생코호트별·성별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

3.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 변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추이를 선형 그림으로 그리기보다는, 각각의 출생코호트가 특정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전체적인 종사 산업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고자, 막대그림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연령대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을 쌓은 연령대로 고려되는 45~49세를 시작으로 하여,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평균적인 퇴직 이후 연령인 55~59세, 고령층 시작 시점인 65~69세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에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기에, 산업 구분은 최근 시점(11차 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범주화하여 적용하였다. 과거 조사 연도 자료의 경우, 11차 산업 대분류 코드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였고, 이전 차수의 분류 코드만 가능한 경우 최대한 11차 분류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산업 분류>	
1. 농림어업:	농업/임업/어업(A),
2. 광업제조업:	광업(B), 제조업(C)
3. 건설업:	건설업(F)
4. 도소매/음식숙박업:	도소매업(G), 음식숙박업(I)
5.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6.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 등: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앞서 경제활동참여율과 종사상지위 분포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여, 출생코호트별, 특정 연령대별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도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우선, <그림 5-8>에서 남자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보면, 대체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1차 산업(농림어업)의 비율은 많이 감소하고, 2차(제조업) 및 3차 산업(서비스업)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55~59세를 기준을 보면, 1940년대 초반생 남자 취업자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비율이 20.9%였으나, 1950년대 초반생은 10.1%, 1960년대 초반생은 5.7%로 계속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광업·제조업 종사 비율은 1940년대 초반생 13%에서 1950년대 초반생 14.3%, 1960년대 초반생 20.8%로, 상대적으로 1960년대생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건설업 종사 비율도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소폭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 부분을 보면, 남자 취업자의 경우, 대체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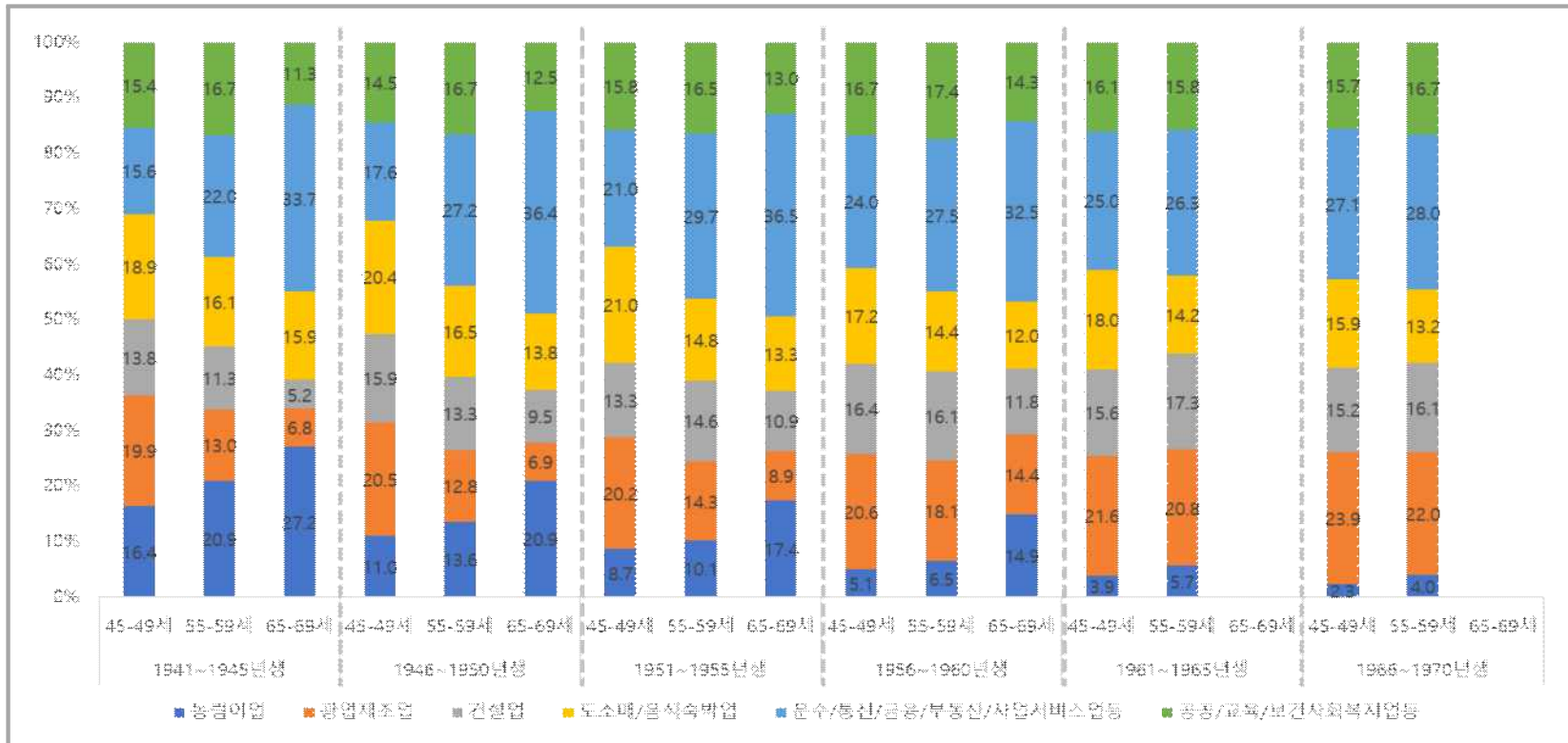
소 감소한 추이를 보이며,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은 1950년대 초반생까지는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출생코호트별로 연령에 따른 종사 산업 분포 변화를 보면, 중·고령기 남자 취업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림어업,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등의 산업에서 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광업·제조업의 경우, 1950년대 초반생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종사 비율이 확연히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났으나, 1950년대 후반생 이후부터는 과거 출생코호트처럼 급격한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림 5-9>에서 여자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를 보면, 대체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1차 산업(농림어업)의 비율은 많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의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55~59세를 기준을 보면, 1940년대 초반생 여자 취업자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비율이 32%였으나, 1950년대 초반생은 11.9%, 1960년대 초반생은 5.4%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반면,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의 종사 비율은 1940년대 초반생은 15.6%였으나, 1950년대 초반생은 27.7%, 1960년대 초반생은 35.0%로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 취업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1950년대생까지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해당 업종 종사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생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출생코호트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중·고령기 여자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 변화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림어업,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의 산업에서 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광업·제조업의 경우, 1950년대생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종사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나, 1960년대생에서는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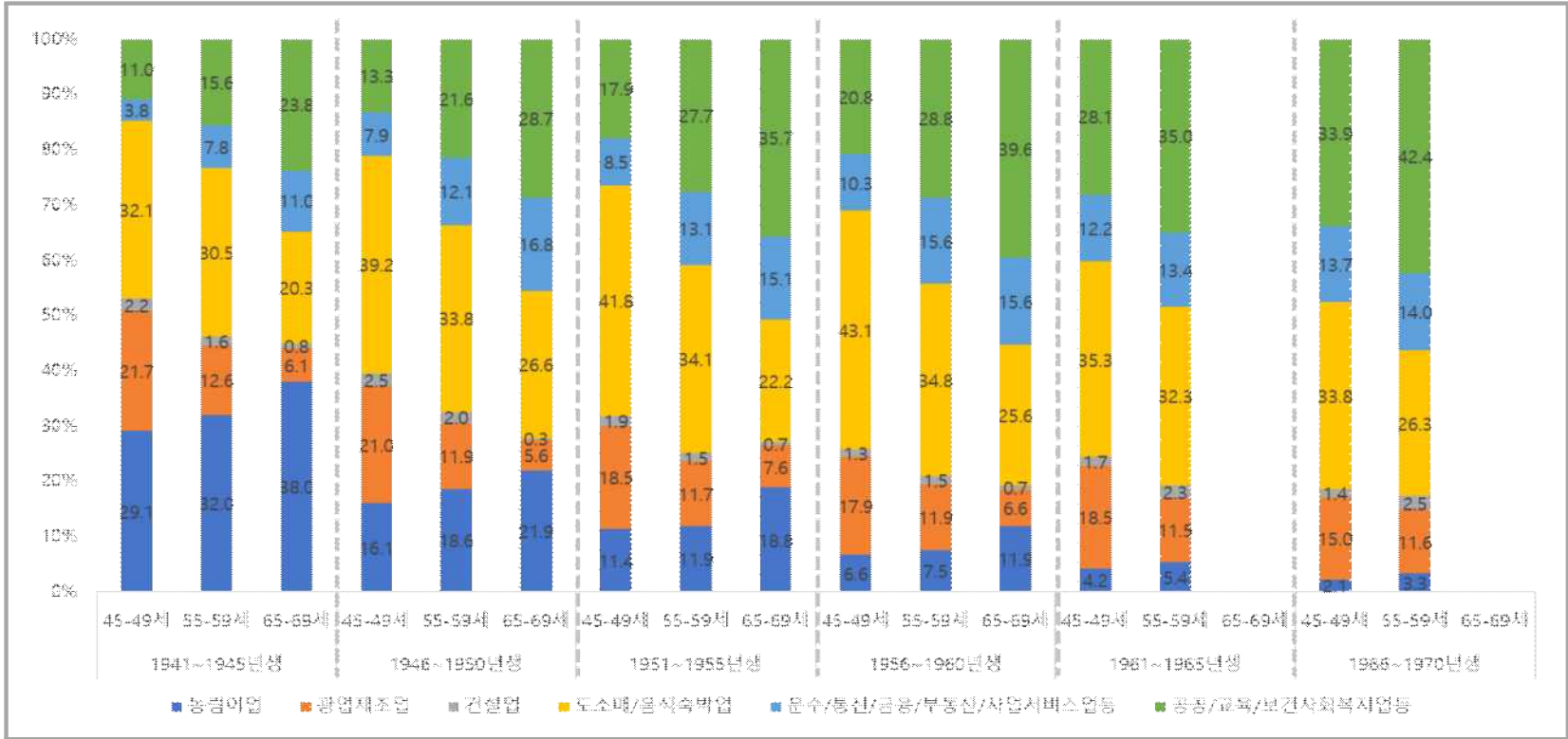
정리하면,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대체로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화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중점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의 분포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50대 중반 이후 중·고령기 남자 취업자의 경우, 1940년대생은 농림어업과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1960년대생은 광업·제조업과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중반 이후 여자 취업자 경우, 1940년대생은 농림어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을 중심으로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생 여자 취업자를 보면, 50대 중반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종사 비율보다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의 종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 '농림어업'은 농업/임업/어업(A), '광업제조업'은 광업(B), 제조업(C), '건설업'은 건설업(F),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도소매업(G), 음식숙박업(I),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등'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은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의미함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8> 출생코호트별·성별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 - 남자



주: '농림어업'은 농업/임업/어업(A), '광업제조업'은 광업(B), 제조업(C), '건설업'은 건설업(F),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도소매업(G), 음식숙박업(I),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등'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은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복지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의미함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9> 출생코호트별·성별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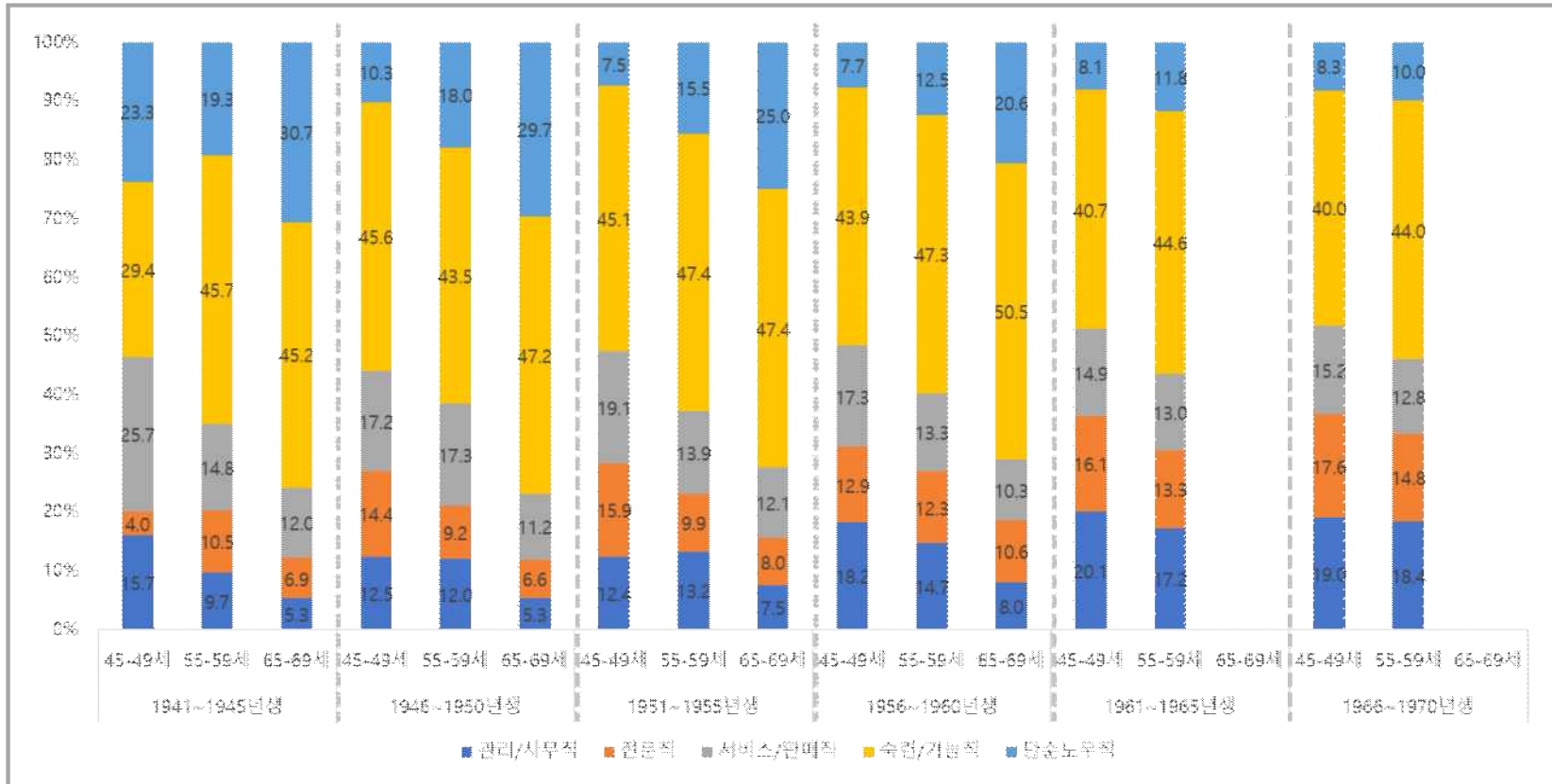
4.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 또한 앞서 산업 분포 분석과 유사하게 출생코호트별, 특정 연령대별 취업자의 종사 직업 비율을 산출하여 막대그림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산업 분포 분석에서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국 표준직업분류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에 계속하여 개정되었기에, 최근 시점(8차 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직업 구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직업 분류>

1. **관리/사무직**: 관리자(1), 사무종사자(3)
2. **전문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서비스/판매직**: 서비스종사자(4), 판매 종사자(5)
4. **숙련/기능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5.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종사자(9)

우선, <그림 5-10>에서 출생코호트별, 특정 연령대별, 중·고령기 남자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를 보면, 대체로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숙련/기능직의 종사 비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관리/사무직과 전문직 종사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5~59세를 기준으로 보면, 1940년대 초반생의 관리/사무직 종사 비율은 9.7% 정도였으나, 1950년대 초반생은 13.2%, 1960년대 초반생은 17.2%로 증가하였다. 전문직의 경우, 1950년대 초반생까지는 9~10%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50년대 후반생은 12.3%, 1960년대 초반생은 13.3%, 1960년대 후반생은 14.8%로 증가하였다. 한편, 단순노무직의 종사 비율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확연히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1940년대 초반생의 경우, 65~69세에서 숙련/기능직(45.2%) 다음으로 단순노무직(30.7%)의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숙련/기능직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1960년대생의 경우 아직 자료에서 65~69세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중·고령기 남자 취업자의 경우, 과거 숙련/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주로 종사하였던 형태에서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은 감소하고, 관리/사무직과 전문직의 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된 측면과 산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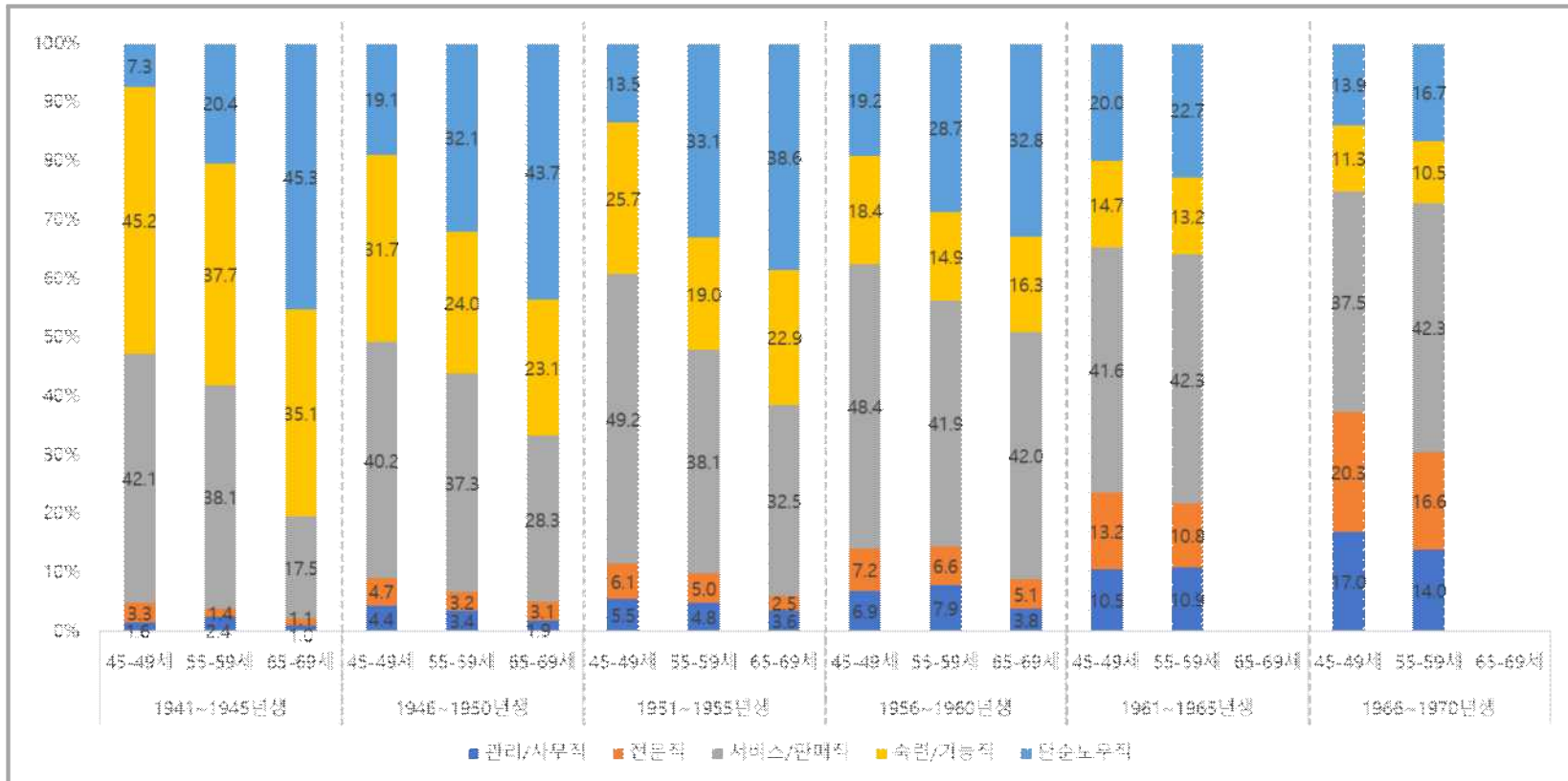


주: 1) '관리/사무직'은 관리자(1), 사무종사자(3), '전문직'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4), 판매 종사자(5), '숙련/기능직'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단순노무직'은 단순노무종사자(9)를 의미

2) 1990년 자료 취업자 중 직업이 0으로 코딩된 경우가 있어, 합산한 값이 100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0> 출생코호트별·성별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 - 남자



주: 1) '관리/사무직'은 관리자(1), 사무종사자(3), '전문직'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4), 판매 종사자(5), '숙련/기능직'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단순노무직'은 단순노무종사자(9)를 의미함

2) 1990년 자료 취업자 중 직업이 0으로 코딩된 경우가 있어, 합산한 값이 100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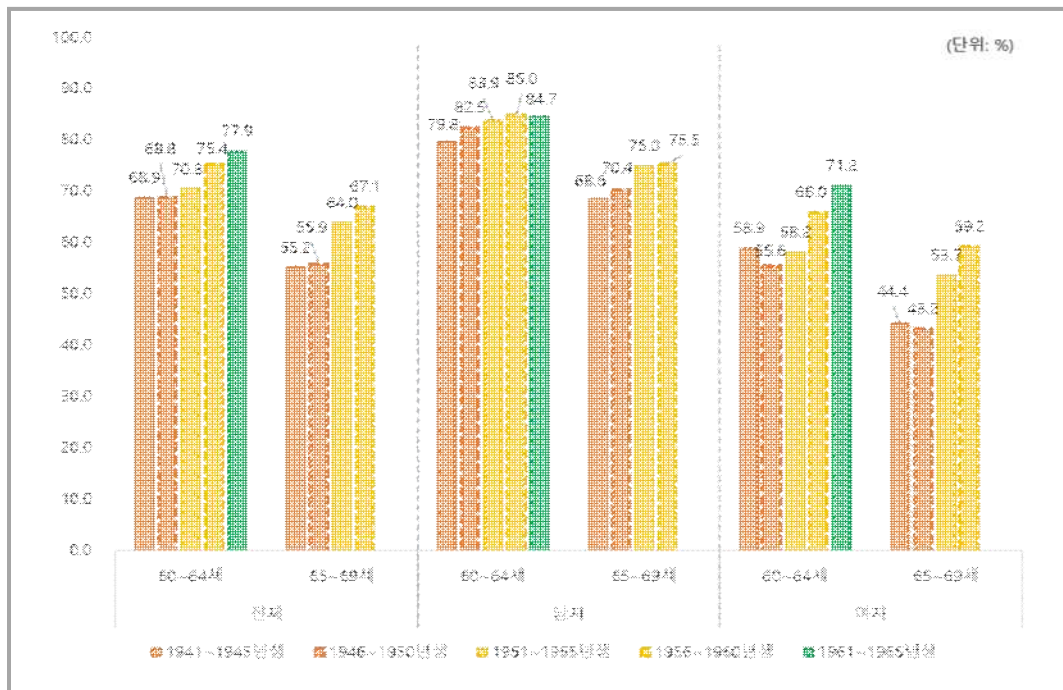
<그림 5-11> 출생코호트별·성별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 - 여자

다음으로 <그림 5-11>은 출생코호트별 중·고령기 여자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이며, 남자 취업자와는 종사 직업 분포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여자 취업자의 경우 대체로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서비스/판매직의 종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고령기 남자 취업자와 유사하게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특히 1960년대 생에서 관리/사무직과 전문직 종사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55~59세를 기준으로 보면, 1940년대 초반생 여자 취업자의 관리/사무직 종사 비율은 2.4%로 매우 낮았으나, 1950년대 초반생은 4.8%, 1960년대 초반생은 10.9%로 증가하였다. 전문직의 경우에도 1950년대 초반생까지는 중·고령기 여자 취업자의 5% 이하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50년대 후반생은 6.6%, 1960년대 초반생은 10.8%, 1960년대 후반생은 16.6%로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자의 교육수준이 과거 출생코호트에 비해 더욱 크게 향상된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단순노무직의 종사 비율은 남자 취업자와 유사하게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확연히 감소한 추세를 보이는데, 1940년대 초반생의 경우, 65~69세에서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서비스/판매직 종사 비율의 상대적 증가와 함께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1960년대생의 경우 65~69세 시점의 직업 분포를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중·고령기 여자 취업자를 보면, 과거 숙련/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주로 종사하였던 형태에서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은 감소하고, 서비스/판매직, 관리/사무직과 전문직의 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된 측면과 함께 여자 취업자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의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부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해된다.

5. 장래 근로 희망 여부 및 이유

출생코호트별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65세 이후 연령대에서도 과거에 비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2>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 조사의 장래 근로 희망 여부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출생코호트별로 60세 이후 연령에 이르렀을 때 장래에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응답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성별 구분 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0~64세에 이르렀을 때, 1940년대생은 약 69%가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1950년대 후반생은 75.4%, 1960년대 초반생은 약 78%가 계속 일하길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65~69세에 이르렀을 때의 응답 또한 1950년대생에서 장래 지속적으로 일하길 원한다는 응답이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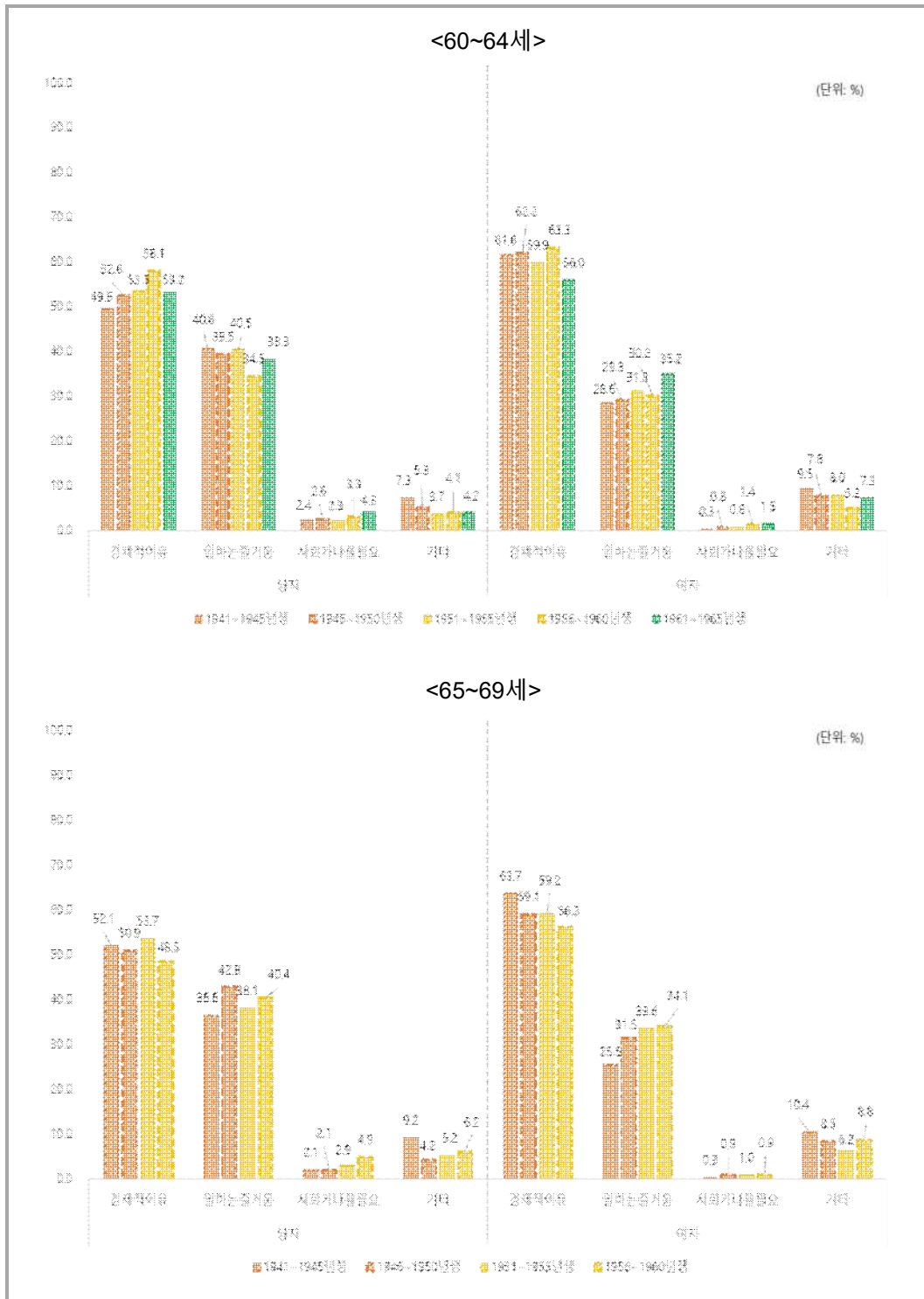
년대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특히 여자 중·고령층 응답자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2> 출생코호트별·성별 장래 근로 희망 비율

<그림 5-13>은 장래 계속하여 근로하길 원한다고 응답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을 원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항목의 응답을 출생코호트별,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60~64세, 65~69세 연령대에 이른 고령층의 응답 내용을 보면, 남녀 모두 ‘경제적 이유(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로 일하길 원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만, 60~64세 응답자와 65~69세 응답자를 비교해 보면, 1940년대생보다 1950년대생에서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때문에 계속 근로하길 원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고령층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이러한 추이가 더 명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3> 출생코호트별·성별 장래 근로 희망 이유 분포

제3절 근속기간 및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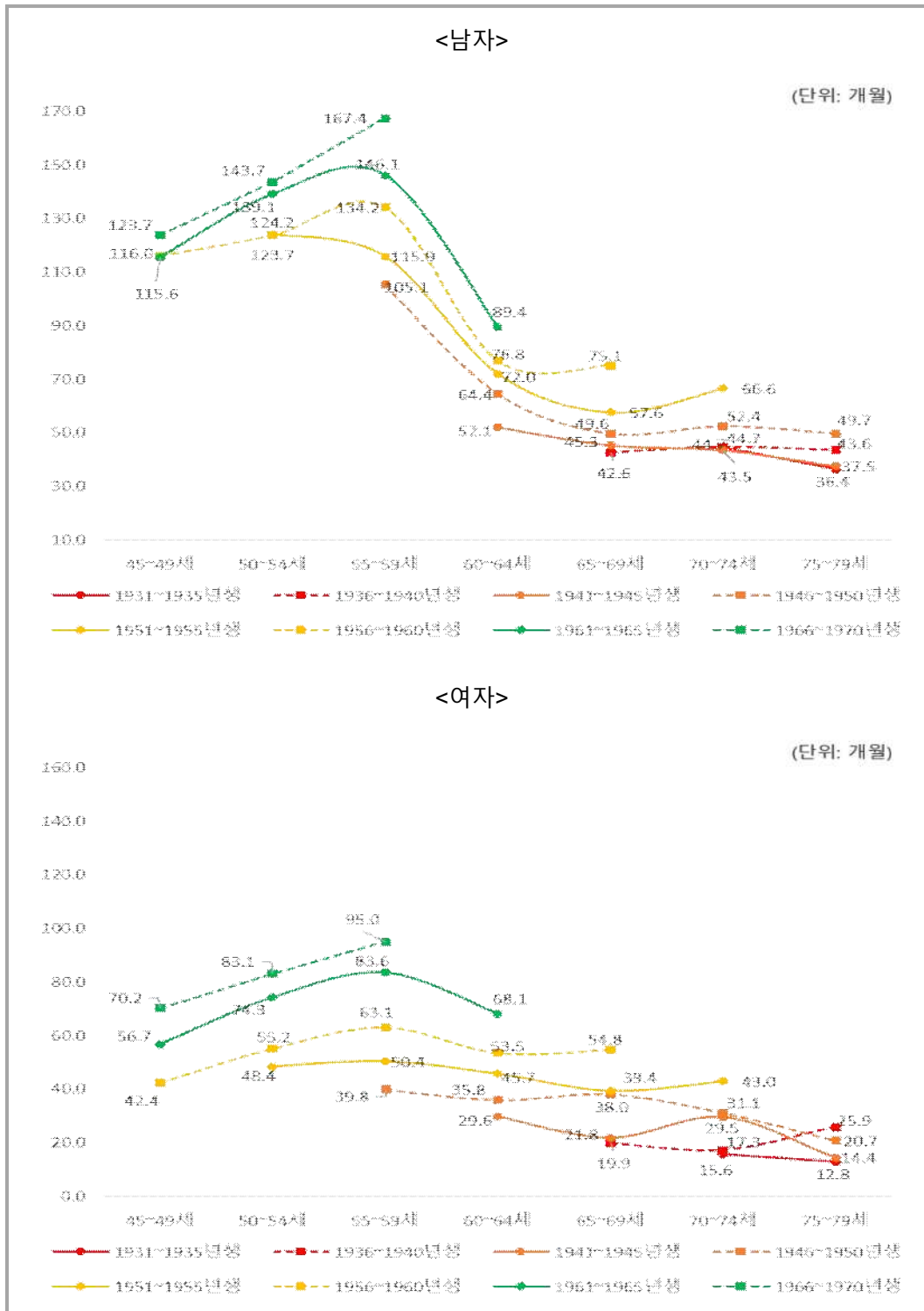
생애 관점에서 보면, 청년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누적된 과거의 근로 경험은 이후 중·고령기까지를 포괄한 개인의 근로생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근로생애를 추적할 수 있는 패널자료가 아닌 반복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기에, 출생코호트별로 누적된 근로 경험 궤적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에서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근속기간,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특성 등의 항목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근속기간

앞서 경제활동참여율,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종사 산업 및 직업 분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조사 시점 당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개월 수) 추이 또한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⁷⁾ 근속기간 변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의 시작 시점을 조사한 항목과 조사 시점 변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직장 시작 시점 정보는 5년 단위 조사자료 활용 시 2005년부터만 활용할 수 있어, 일부 연령대에서 관련 수치를 산출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그림 5-14>에서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중·고령기 남자 취업자의 근속기간 평균 추이를 보면, 대체로 동일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5~59세를 기준으로 보면, 1950년대 초반생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16개월로 채 10년이 되지 않지만, 1950년대 후반생은 약 134개월, 1960년대 초반생은 약 146개월로 점차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생부터 55~59세에 평균 근속기간이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3년 입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근속기간을 산출할 수 있었던 출생코호트 대부분에서 60세 전후로 평균 근속기간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 또한 확인된다. 이는 임금피크제, 계속고용 등의 형태로 60세 전후로 동일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도 있는 반면,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더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근로자 등 다양한 경우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7) 실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근속기간 추이 변화는 남자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자료: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4> 출생코호트별·성별 임근근로자의 근속기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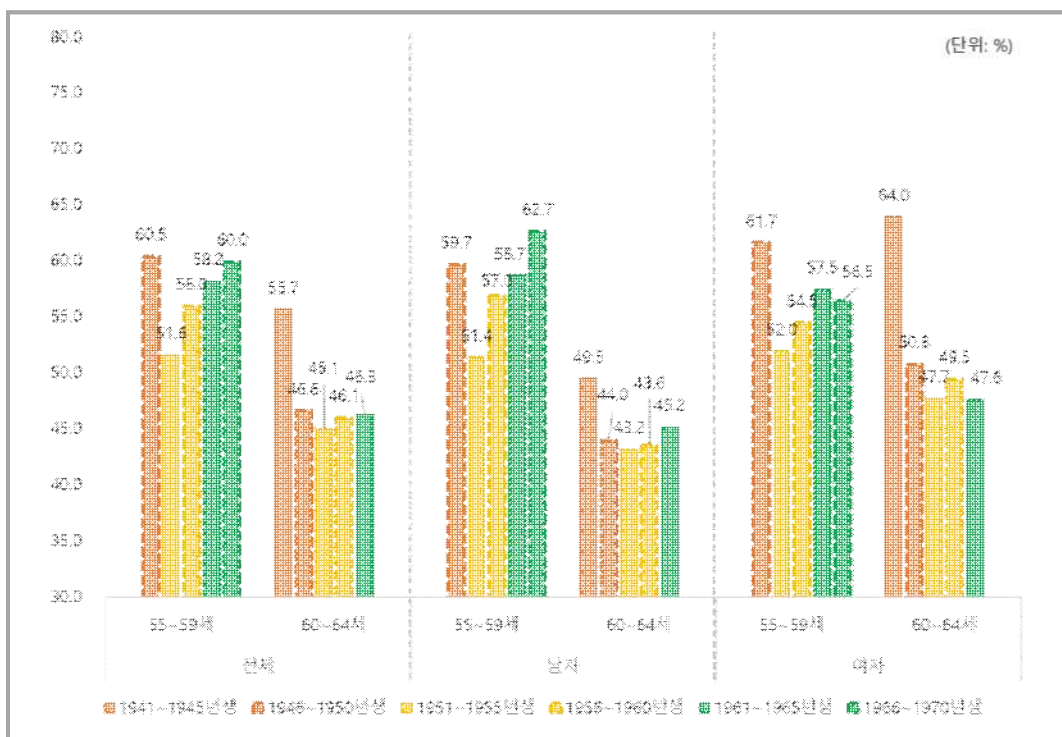
한편, <그림 5-14>에서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중·고령기 여자 취업자의 근속기간 평균 추이를 보면, 대체로 동일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평균 근속기간이 길어진 모습을 보이지만,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남자와 비교할 때 상당히 짧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5~59세를 기준으로 보면, 1950년대 초반생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50개월로 채 5년이 되지 않았으며, 1950년대 후반생은 약 63개월, 1960년대 초반생은 약 84개월, 1960년대 후반생은 약 95개월로 길어졌지만, 여전히 10년이 채 되지 않은 근속기간을 보인다. 다만, 1960년대생 중장년층 여자 취업자의 경우, 과거 출생코호트에 비해 55~59세에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이 가장 길었다가 60세 이후 감소하는 역 U자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1950년대 초반생 이전의 출생코호트를 보면, 50대 중반 이후 연령대에서 남자 취업자에 비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아(<그림 5-6> 참조), 연령에 따른 평균 근속기간의 변화 추이가 상당히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근속 현황

5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한지 아닌지와 함께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 대한 근속연수를 조사하고 있다. 우선, <그림 5-15>는 출생코호트별, 특정 연령대별, 성별로 응답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같은 사람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55~59세 기준으로는 1940년대 후반생 이후 1950년대 초반생에서 응답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같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60~64세를 기준으로 보면, 1940년대 초반생 이후 1940년대 후반생에서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같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한 후, 다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아주 완만하게 증가한 추이를 보인다. 55~59세, 60~64세 각각의 연령대에서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하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변화한 출생코호트별로 각각의 연령대에 대응하는 시점을 확인해 보면 2005년과 2010년으로 나타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기간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5~59세 연령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같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은 2013년 입법되어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림 5-15>에서 성별로 구분한 응답 결과를 보면, 55~59세 연령대에서 남자 응답자와 여자 응답자 모두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5~59세 남자 응답자의 경우, 2010년 이후 시점에 해당하는 1950년대 후반생부터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같다는 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1960년대 후반생에서는 해당 응답 비율(62.7%)이 1940년대 후반생(5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55~59세 여자 응답자의 경우,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유사하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60~64세 연령대의 경우, 남자 응답자는 1950년대 초반생 이후부터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가 있는 반면, 여자 응답자의 경우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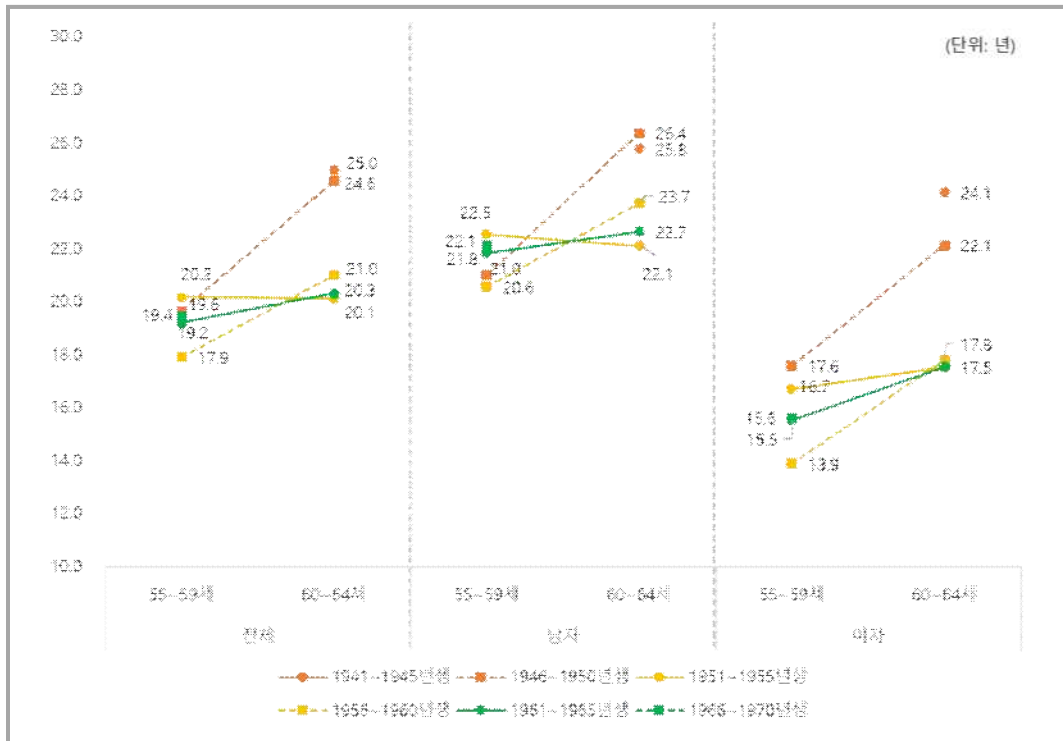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5> 출생코호트별·성별 현 일자리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일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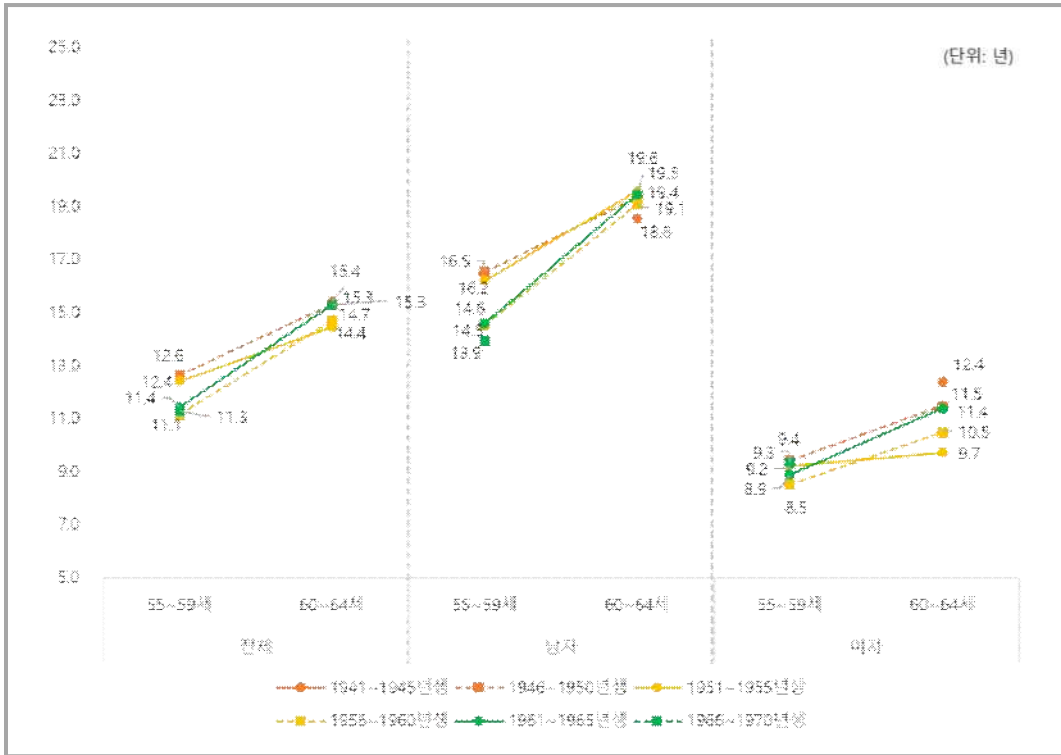
<그림 5-16>과 <그림 5-17>은 고령층 부가조사에 기반하여, 응답 시점에서의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출생코호트별, 특정 연령대별, 성별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를 산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16>과 <그림 5-17>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한 경우,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연수가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6>에서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인 경우의 결과를 보면, 55~59세 연령대에서는 출생코호트별로

뚜렷한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으며, 60~64세 연령대에서는 1940년대생에 비해 195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진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 한편, <그림 5-17>에서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는 조사 시점에서 취업자로 현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가 아닌 경우와 과거 일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결과이다. 이들 응답자의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연수 추이를 보면, 55~59세 연령대에서는 1950년대 초반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1950년대 후반생 이후, 특히 1960년대생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가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한 산출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자 응답자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를 앞서 <그림 5-15>의 결과와 종합하면, 55~59세를 기준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중·고령층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지속하여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는 평균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6> 출생코호트별·성별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인 경우 근속연수 평균



주: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는 현 일자리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가 동일하지 않은 취업자와 과거 일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 시점 당시 일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포함한 결과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5년 단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7> 출생코호트별·성별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인 경우 근속연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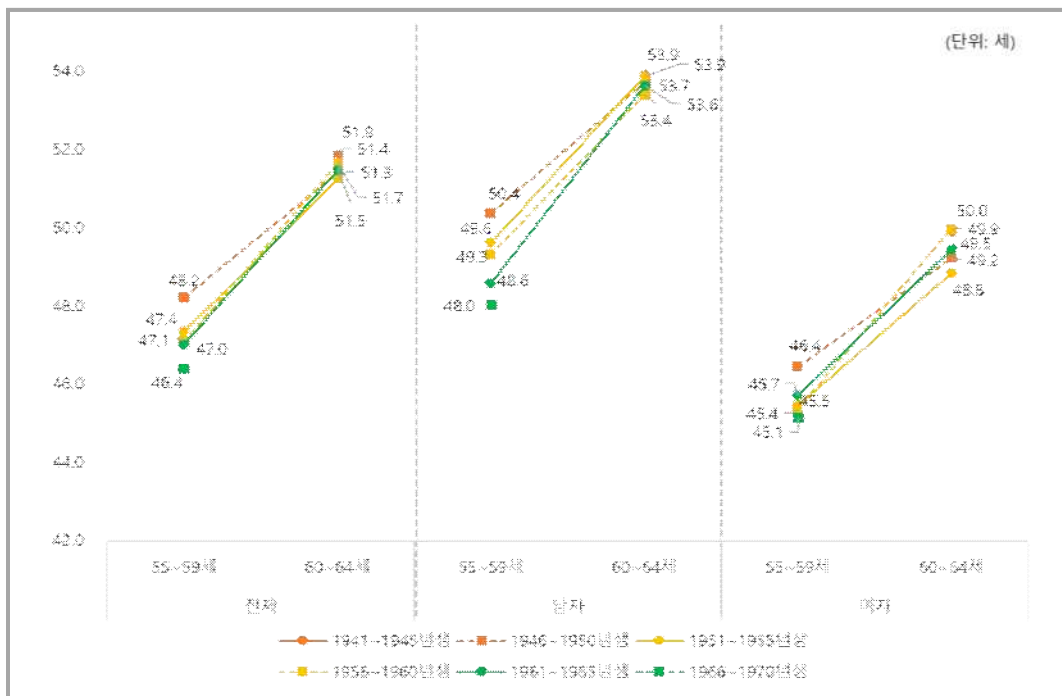
3.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퇴직연령 및 이유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조사 시점 당시 근로하고 있는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가 아닌 경우, 과거 일한 경험이 있지만 조사 시점 당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을 조사하고 있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는 개인별로 편차가 클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에 특정한 조건(예: 40세 이상 등)을 부여하지 않고 산출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5-18>은 출생코호트별, 특정 연령대별, 성별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당시 퇴직연령에 대한 응답 추이를 보여준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 55~59세 연령대에서는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그 연령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 당시 55~59세 연령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이 1940년 후반생에서 48.2

세로 나타났으며, 1950년대 초반생은 47.4세, 1950년대 후반생은 47.1세, 1960년대 초반생은 47세, 1960년 후반생은 46.4세로 계속하여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응답 당시 연령이 60~64세인 경우에는 출생코호트별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이 약 51.5세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1940년대 초반생 51.9세, 1940년대 후반생 51.4세, 1950년대 초반생 51.3세, 1950년대 후반생 51.7세, 1960년대 초반생 51.5세). 대체로 60~64세 응답자의 경우,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그 연령이 55~59세 응답자보다는 많지만, 여전히 법적 정년인 60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보면, 55~59세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나타난 추이가 중·고령층 남자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55~59세 남자 응답자의 경우, 1940년대 후반생에서는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그만둔 경우, 그때의 연령이 평균 약 50.4세로 나타났으나, 이후 최근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0년대 후반생에서는 약 48세로 낮아졌다. 반면, 여자 중·고령층의 경우, 55~59세 응답자에게서도 남자와 같은 뚜렷한 변화 추이는 관찰되지 않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적인 연령이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는 현 일자리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가 동일하지 않은 취업자와 과거 일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 시점 당시 일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포함한 결과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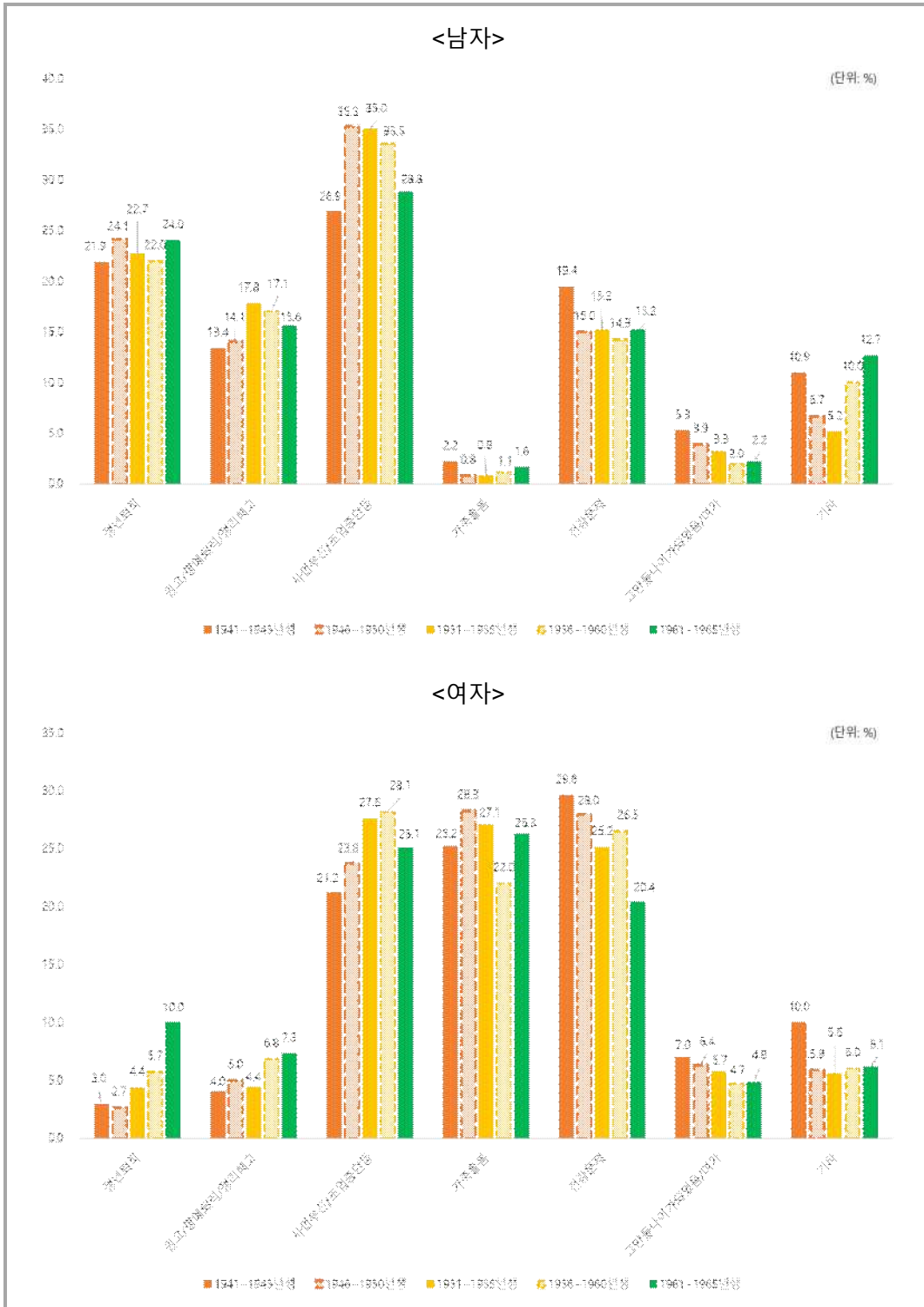
<그림 5-18> 출생코호트별·성별 '현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인 경우 그만둔 연령 평균

<그림 5-15>에서 <그림 5-18>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55~64세 중·고령층의 근로 경험은 다소 이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정년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지속하여 근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여전히 상당수의 중·고령층이 55~59세에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근속연수와 경력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발생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벌어지고, 대기업 및 정규직 중심의 고용 체계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의 필요성 하에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온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그림 5-19>는 법적 정년 연령을 고려하여, 각 출생코호트가 60~64세가 된 시점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남녀에 따라 그만둔 이유의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64세 남자 응답자의 경우,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는 ‘정년퇴직’, ‘건강 문제’, ‘권고/명예퇴직/정리해고’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자 응답자의 경우, ‘사업부진/조업중단 등’과 함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사유가 ‘가족 돌봄’, ‘건강 문제’로 나타난다.

출생코호트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60~64세에 이른 남자의 경우, 1940년대 후반생을 제외하고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사업부진/조업중단 등’, ‘권고/명예퇴직/정리해고’의 이유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다만,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의 응답 비율을 보면, 1940년대 초반생은 약 26.9% 정도였으나, 1940년대 후반생에서는 35.3%로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들 출생코호트가 60~64세 이른 시점이 2005년과 2010년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년퇴직’으로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은 출생코호트별로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1960년대 초반생에서 약 24%로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60~64세에 이른 여자 응답자의 경우, 출생코호트별로 응답 비율의 변화 추이가 다소 일정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의 이유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한 모습을, ‘건강 문제’로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가족 돌봄’의 이유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은 1950년대생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1960년대 초반생에서는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 1950년대 후반생과 1960년대 초반생의 60~64세 시점이 2020년과 2025년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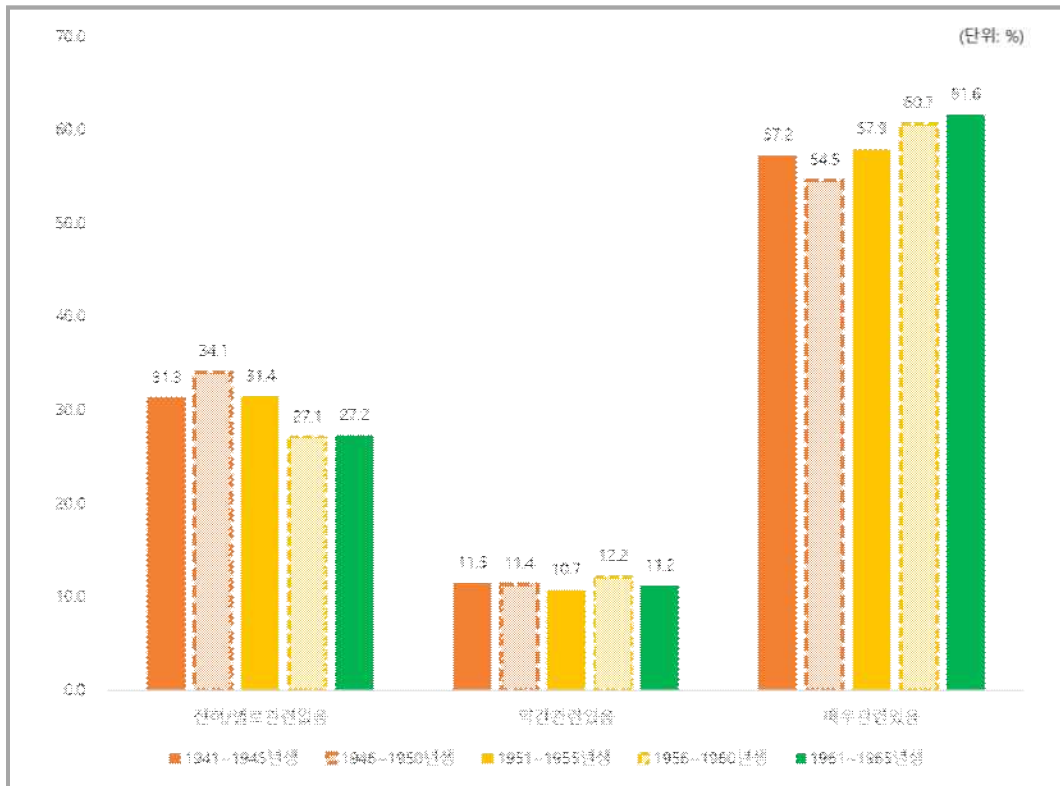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19> 출생코호트별·성별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분포: 60~64세 응답자

4. 60~64세 취업일자리의 경력 연관성

<그림 5-20>은 출생코호트별로 60~64세의 연령대에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과의 연관성 정도를 묻는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낸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전혀 관련 없음 또는 별로 관련 없음’의 응답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매우 관련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간 취업을 경험한 일자리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경험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과의 연관성 정도를 분석해 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남녀 모두 <그림 5-20>의 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주: 60-64세에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의 응답임

자료: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20> 출생코호트별 60~64세 취업 경험자의 생애 주된 경력(일)과의 연관성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생애후반기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1985~2025년에 40대 후반부터 이후 중·고령기 연령대에 이르는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출생코호트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일과 은퇴’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생애후반기의 경제활동참여율, 종사상지위, 산업 및 직업 분포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는 근로생애의 측면에서 중·고령기까지 누적된 근로 경험의 변화 양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근속기간,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관련한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참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변수인 경제활동참여율을 보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경제활동참여율(+고용률)은 증가한 추이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60대 이후 연령대에서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노후 준비 부족 상태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제위기, 고용 불안정성 증대, 이중 부양 부담 등의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에도 정년 의무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50대에서의 경제활동참여율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소폭 높아진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증가한 모습이 관찰된다. 임금근로자 비율의 지속적 상승 추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감소(특히, 농업 종사자 감소),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에도 서비스업 부문의 확대·발전, 임금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요인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65세 이후 연령대에서 출생코호트별 임금근로자 비율 증가는 더욱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 분포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성별로 종사상지위 분포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1930년대생 및 1940년대생(+1950년대 초반생까지도) 여자의 경우, 중·고령기 취업자의 과반이 비임금근로자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나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 참여 구조에 있어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의 종사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화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중점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의 분포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50대 중반 이후 중·고령기 남자 취업자

의 경우, 1940년대생은 ‘농림어업’과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1960년대생에서는 ‘광업·제조업’과 ‘운수/통신/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중반 이후 여자 취업자 경우, 1940년대생은 ‘농림어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을 중심으로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생 여자 취업자를 보면, 50대 중반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종사 비율보다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업등’의 종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취업자의 종사 직업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관리/사무직’과 ‘전문직’ 종사 비율의 증가 추이가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중·고령기 남녀 취업자 모두 과거 출생코호트에서는 ‘숙련/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주로 종사하였으나,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은 감소하고, ‘관리/사무직’과 ‘전문직’의 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향 속에서도 남자 취업자의 경우, ‘숙련/기능직’ 종사 비율이 최근 출생코호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자 중·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의 종사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직업 분포의 변화 추세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된 점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여자 취업자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의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근속기간 및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평균적인 근속기간은 길어진 경향을 보이지만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와 관련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55~64세 중·고령층의 근로 경험이 다소 이분화된 양상임을 시사한다. 즉, 정년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지속하여 근로하는 중·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여전히 상당수의 중·고령층이 55~59세에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근속연수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이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가로, 각 출생코호트별로 60~64세 연령의 응답자 기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그 이유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녀 모두 ‘사업부진/조업중단등’으로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다음 순서로 남자의 경우 ‘정년퇴직’, ‘권고/명예퇴직/정리해고’가 나타나지만, 여자의 경우 ‘가족 돌봄’, ‘건강 문제’가 나타난다.

종합하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양적 및 질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여자에게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선 건강 및 돌봄과 달리 경제활동은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출생코호트별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와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1950년대 초반생~1950년대

후반생)의 충격이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다 오래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경제활동 현황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동시에 근로생애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근속 증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그만둔 연령 평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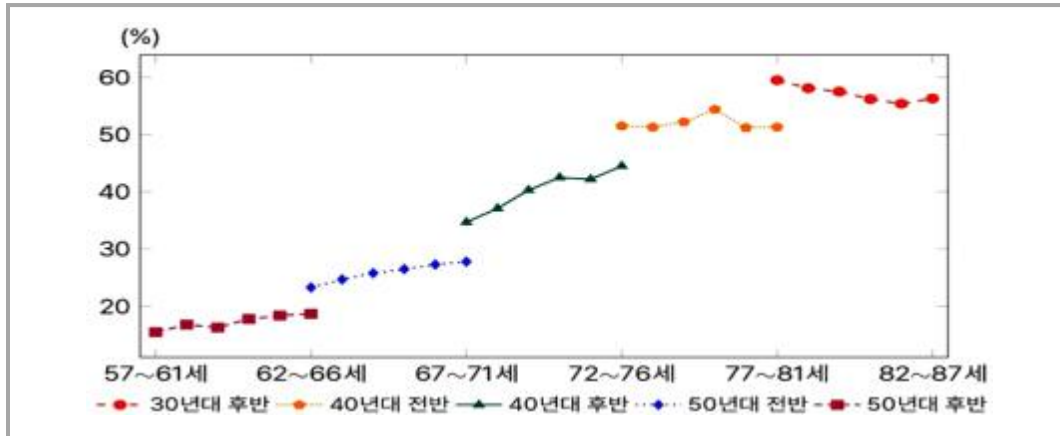
제 6 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경제상태

고령기는 생애 주기상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며, 근로생애기간 동안 준비한 노후대책에 따라 경제 상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고령기 경제 상태는 객관적인 지표인 빈곤율로 살펴보는 것이 보편적이지만(이승희, 2023; 이주미, 2025), 소득만으로는 노후의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기존 소득 중심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산, 소비 등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참여, 건강, 대인관계 등 노년기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소와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현주 외, 2012; 황남희 외, 2015; 남상호, 2016; 윤석명 외, 2017; 김세진 외, 2020; 이승희, 2023; 이주미 외,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기 경제상태 관련 연구는 여전히 객관적 지표와 연관되어 주로 이루어지며,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 등으로 코호트적 접근으로 경제상태를 파악하고자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주관적 측면의 경제상태 관련 연구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관적 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호트적 접근은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고령기 경제상태에 대해 코호트 관점에서 살펴본 이승희(2023)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희(2023)는 베이비붐세대의 단계적인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층 내부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1930년대 후반생부터 1950년대 후반생(1935~1959년생)을 대상으로 출생코호트별 빈곤율을 비교하였다(<그림 6-1>). 그 결과 1950년 이전 출생코호트와 1950년 이후 출생코호트 간 빈곤율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950년대 이후 출생 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약 50% 수준인 반면,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30% 이하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이후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 효과보다, 기존 고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지닌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른 소득 증가, 즉 출생코호트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노후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이승희(2023), p.51, [그림 4-2] 고령층 세대별 빈곤율(2016~21년)의 b) 세대 간 빈곤율 차이.

<그림 6-1> 출생코호트별 빈곤율

기존 고령층인 1930년대 출생코호트는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및 안착 시기상 제도적 수혜 범위에서 소외되어, 1950년대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노후준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중·고령기 경제 상태 분석 시 단순 연령 효과(Age effect)뿐만 아니라 출생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반드시 병행 검토해야 한다(이승희, 2023; 김세진 외, 2020).

이에 본 연구진은 출생코호트별 경제상태의 종단적 추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대표적 미시 데이터는 2016년 이후의 시계열만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코호트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코호트별 경제상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그간 정량적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던 소득 및 소비 인식에 관한 기초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중·고령층의 실질적 경제 복지 수준을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1. 분석 자료원 및 코호트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 및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 자료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경제상태 관련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검토하였으나 최근 행정자료 연계 등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코호트 비교 분석의 전제인 시계열 안정성 면에서의 한계로 인해,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원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실의 소득 분포를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소득 및 비소비지출 행정자료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자료 보완 전후 일정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다(통계청, 2020a; 황남희 외, 2021에서 재인용).⁸⁾

주관적 경제상태 문항 관련 가장 최근 공개된 사회조사 자료는 2023년이며, 이를 기준으로 10년 간격인 2013년, 2003년 자료를 사용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43~52세의 경우 40대, 53~62세의 경우 50대, 63~72세의 경우 60대, 73~82세의 경우 70대, 83~92세의 경우 80대로 축약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표 6-1> 출생코호트별 분석연도별 연령대: 경제상태

출생코호트	2003년	2013년	2023년
1931-1940년생	63~72세	73~82세	83~92세
1941-1950년생	53~62세	63~72세	73~82세
1951-1960년생	43~52세	53~62세	63~72세
1961-1970년생	33~42세	43~52세	53~62세

주: 노후준비 관련 문항은 2002년, 주관적 경제상태 관련 문항은 2003년 자료 분석

2. 주요 지표

본 장에서는 중·고령기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비 마련 방법을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득 및 소비 만족도를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코호트별로 비교·검토 하였다.

가. 생활비 마련 방법

인구총조사에서는 2005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문항은 복수응답(최대 2개)으로 구성되며, 조사 시점에 따라 세부 항목이 일부 변경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 간 비교를 위해 응답 항목을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6-2>).

8) 이원진 외(2019, pp.155-156)의 분석에 따르면, 행정자료 보완으로 2016년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 응답 항목

응답항목	2005	2010	2015	2020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	●	●	● 본인의 일, 직업 배우자의 일, 직업
예금, 적금	●	●	●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주식, 펀드, 채권 등	●	●	●	
공적연금	● 국민·공무원· 교직원연금	● 국민·공무원· 사학·군인연금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개인연금 (은행, 보험 등)	●	●	●	●
부동산	●	●	●	● 부동산 등 실물자산 (매도 및 임대 수입 등)
함께 사는 자녀	●	●	●	● 자녀의 도움
따로 사는 자녀	●	●	●	
친척·인척	●	●	●	
부모의 도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초연금 등)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보조	●	●	●	
기타	●	●	●	●

나. 소득 만족도

소득 만족도 문항은 1999년에 신설되었으며, 설문지의 구체화, 선택지 문구의 수정 등을 거쳐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본인 소득 유무와 소득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의 틀은 유지되어 코호트별 비교 분석 지표로 선정하였다. 2023년 기준 소득 만족도 문항은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이며,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1. 있다’, ‘2. 없다’로 응답 받으며, 1로 응답한 경우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로 만족 수준을 조사한다(p.622 -623).

<표 6-3> 현재 소득 유무 및 소득 만족도 조사문항

구분	2003년	2013년	2023년
현재소득 유무 질문	귀하는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소득 만족도 선택지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조사 대상	가구원	가구원	가구원

출처: “사회조사표”,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다.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역시 1999년 신설된 이후 설문 내용 보완, 선택지 문구 수정을 거쳤으나 소비생활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의 틀은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와 취미 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를 질문하여,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로 소비생활 만족 수준을 파악한다(p.624).

<표 6-4> 소비생활 만족도 조사문항

구분	2003년	2013년	2023년
소비생활 만족도 질문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소비생활 만족도 선택지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조사 대상	가구원	가구원	가구원

출처: “사회조사표”,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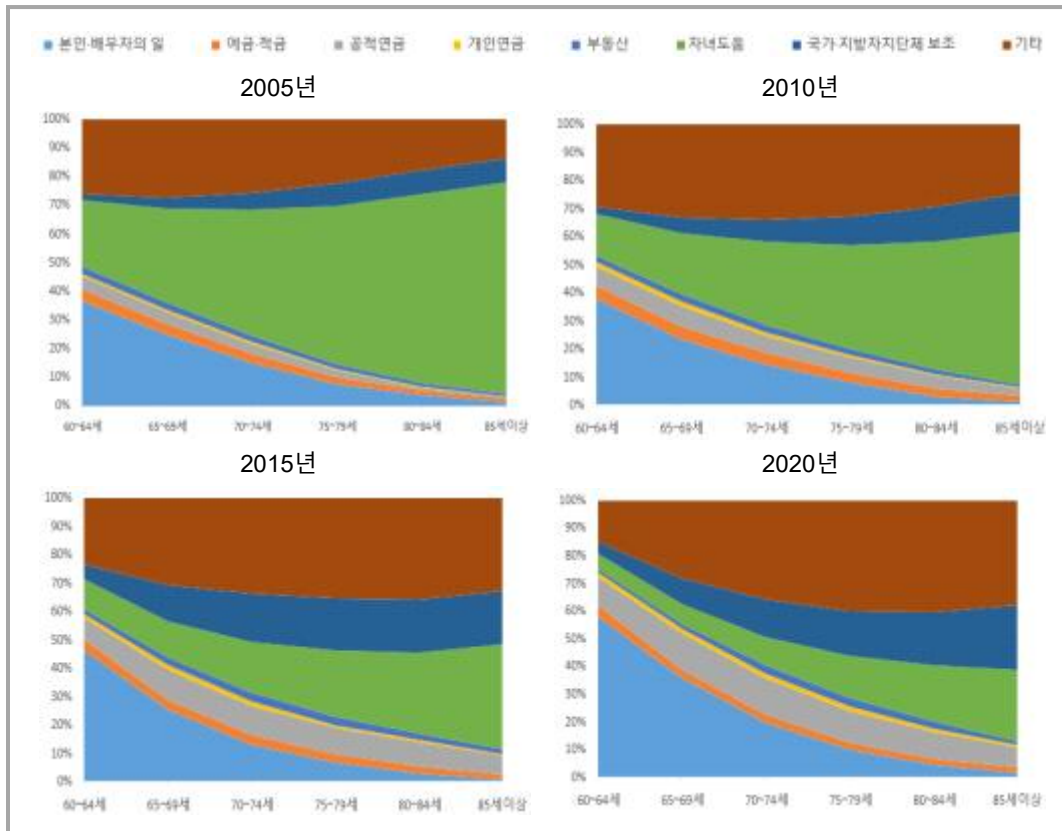
제2절 노후 생활비

노후준비는 중·고령기의 경제상태를 단순히 측정하는 지표를 넘어, 개인이 생애 동안 축적해 온 경제적 자원, 제도적 기회 등이 노년기에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분석하는 것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적 맥락과 복지체계의 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생활비 마련 방법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과 생활비 부담이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노부모와 자녀의 동거율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생활비 조달 방식의 독립성 강화와 소득 원천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의존 방식은 약화되고, 공적연금·노년기 일자리·복지 서비스 등 제도 기반 자원이 노후 생활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은 ‘부모 부양은 가족의 의무’라는 과거 규범이 약화되고,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2>를 보면, 연령 증가에 따른 자녀 도움 비율 상승이라는 전통적 패턴은 존재하지만 그 폭이 과거 대비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60대 초반 23.3%에서 80대 초반 66.1%로 연령 증가에 따라 자녀 의존 비율이 42.8%p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같은 연령 비교 시 5.6% → 20.3%로 14.7%p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과거에 비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계열 비교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관찰된다. 70대 초반 기준 자녀 도움 비율은 2005년 43.7%에서 2020년 1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반대로 공적연금 및 국가·지자체 현물·현금 보조와 같은 공적 이전 소득 활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적연금 의존 비율은 3.5%(2005년) → 13.1%(2020년)로, 국가·지자체 지원 비율은 6.0% → 13.3%로 확대되었다. 이는 고령층 생활비 마련 방식이 자녀에게 기대던 패턴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나 제도의 도움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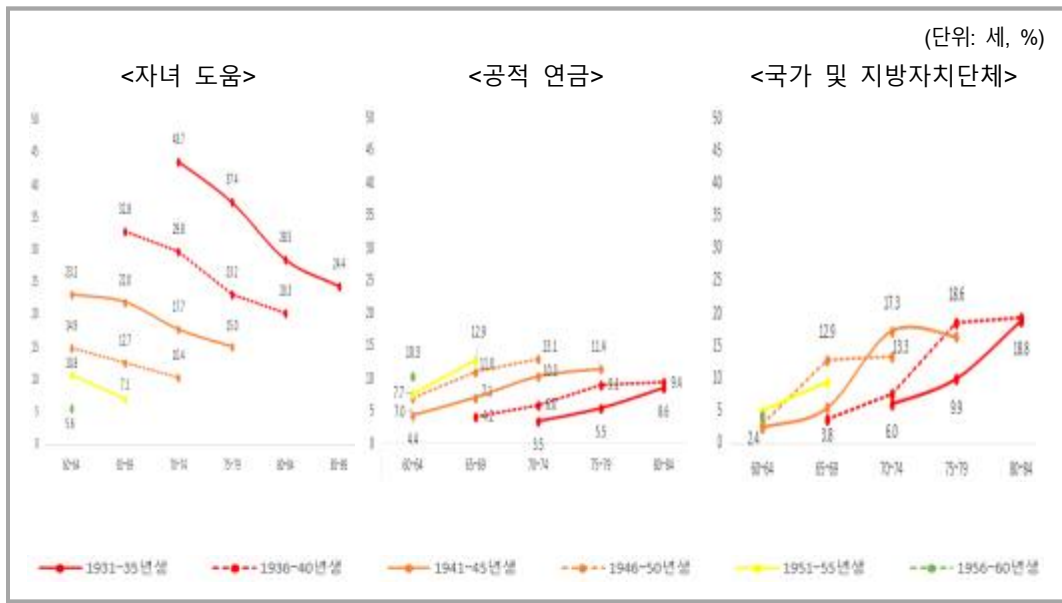
주 1) 60세 이상 인구
 2)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포함 외국인 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3) 본인 및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2005, 2010년)
 자료: 인구총조사 60세 이상 고령자 10% 표본(2005년·2010년), 고령자 20% 표본(2015년·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6-2> 생활비 마련 방법(단일수단)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출생코호트별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림 6-3>을 보면, 70대 초반 동일 연령대 기준 자녀 도움 비율은 1930년대 초반생 43.7%, 1940년대 후반생 10.4%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공적연금 의존 비율은 3.5% → 13.1%로 증가하여, 최근 코호트일수록 가족 부양보다 공적 소득 기반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 확대 및 기초연금 도입 등 제도 확충이 가져온 기간 효과(period effect)와 가족 부양 규범 약화라는 세대별 가치관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40년대 후반생에서 다소 낮게 나타난 현상은 연금제도 정착에 따라 소득원이 다변화되고 국가 직접 지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5년 지역 확대, 1999년 전국민 확대, 이어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2014년 기초연금 전환 과정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확충되었다. 이 변화 과정에서 1940년대생은 경제 활동기와 은퇴기가

제도 정착기와 중첩되어 공적연금 기반 노후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한 최초의 세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일 연령대 비교 시 해당 코호트의 공적연금 활용 비율은 1930년대생 대비 10%p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자녀 도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주 1) 공적 연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비 원천 단일 수단으로 응답한 비율임
 2) 자녀 도움은 단일수단 중 함께 사는 자녀 + 따로 사는 자녀 + 복합수단 중 함께/따로 사는 자녀 (2005, 2010, 2015년)와 단일수단 중 자녀 도움(2020년)의 응답 합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인구총조사 60세 이상 고령자 10% 표본(2005년·2010년), 고령자 20% 표본(2015년·2020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6-3> 출생코호트별 생활비 마련 방법

<표 6-5>를 통해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남성의 경우 1940년대 초반생부터 70대 이후 공적연금 의존 비율이 자녀 도움 비율을 상회하며,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이러한 전환 지점이 60대부터 나타나는 등 전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여성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적연금 활용 비율이 확대되며, 1950년대 초반생은 60대 후반, 1950년대 후반생은 60대 초반 시점부터 공적연금이 자녀 도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70대 초반 기준 1930년대 초반생 여성의 자녀 도움 비율은 51.6%, 공적연금 비율은 2.3%로 49%p 이상 격차가 있었으나, 1940년대 후반생은 각각 14.3%와 11.3%로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여성 고령층에서도 공적 소득 기반의 확대가 세대 교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5> 출생코호트별·성별 생활비 마련 방법_자녀도움 vs 공적연금

(단위: %)

코호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자녀도움	공적연금	자녀도움	공적연금	자녀도움	공적연금	자녀도움	공적연금	자녀도움	공적연금
남자										
1931~1935년생					32.4	5.1	27.5	7.5	19.8	11.7
1936~1940년생			23.1	5.4	21.9	7.6	16.5	11.2	14.6	12.4
1941~1945년생	15.0	5.1	14.2	8.8	11.1	12.2	9.8	14.2		
1946~1950년생	8.1	7.7	6.8	12.2	5.9	15.1				
1951~1955년생	5.2	7.6	3.9	13.3						
1956~1960년생	2.7	10.1								
여자										
1931~1935년생					51.6	2.3	43.4	4.2	32.9	7.0
1936~1940년생			40.6	3.2	35.9	4.8	27.7	7.7	23.8	9.4
1941~1945년생	30.6	3.8	28.8	5.7	23.1	8.6	18.9	9.4		
1946~1950년생	21.2	6.3	18.2	9.9	14.3	11.3				
1951~1955년생	16.2	7.9	10.2	12.4						
1956~1960년생	8.4	10.6								

주 1) 공적연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비 원천 단일 수단으로 응답한 비율임
 2) 자녀 도움은 단일수단 중 함께 사는 자녀 + 따로 사는 자녀 + 복합수단 중 함께/따로 사는 자녀 (2005, 2010, 2015년)와 단일수단 중 자녀 도움(2020년)의 응답 합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인구총조사 60세 이상 고령자 10% 표본(2005년·2010년), 고령자 20% 표본(2015년·2020년), 국가데이터처.

제3절 주관적 경제상태

1.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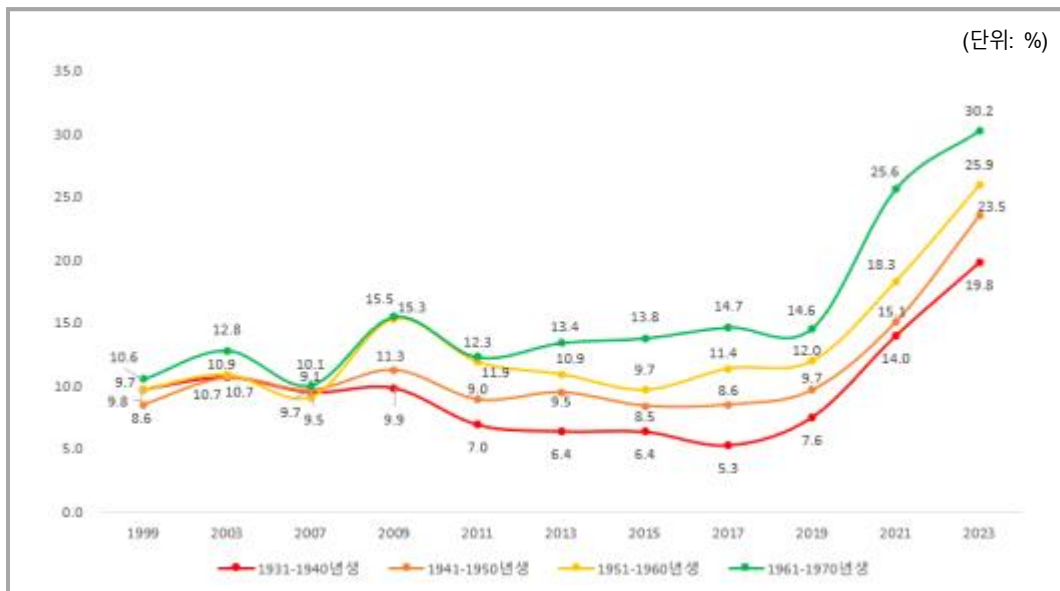
현재 소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2023년 소득 만족도가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응답하며,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소득만족률로 보았다. <그림 6-4>과 같이 2003~2023년 사회조사 자료를 격년으로 비교한 결과, 특히 2021년과 2023년에 소득만족률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고용불안이 확산되면서 직장을 유지하고 소득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5>의 소득 만족도 분포에서도 만족 비율의 증가는 주로 ‘불만

족' 응답 비중이 크게 감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50년대생의 소득만족률은 2003년과 2013년 모두 10.9%였으나 2023년에는 25.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40년대생은 2003년 10.7%에서 2013년 9.5%로 소폭 감소한 뒤, 2023년에는 23.5%로 크게 상승하였다. 소득 만족도 분포에서 불만족 응답 비율을 보면, 1950년대생은 2003년과 2013년 51.7%에서 2023년에는 36.7%로 크게 감소했으며, 1940년대생도 같은 기간 52.2%에서 54.5%로 소폭 상승한 후 2023년 42.3%로 하락하였다.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하면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소득만족률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50대 연령층을 예로 들면, 1960년대생의 소득만족률이 30.2%로 1950년대생(10.9%) 및 1940년대생(10.7%)보다 약 19%p 높다. 성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소득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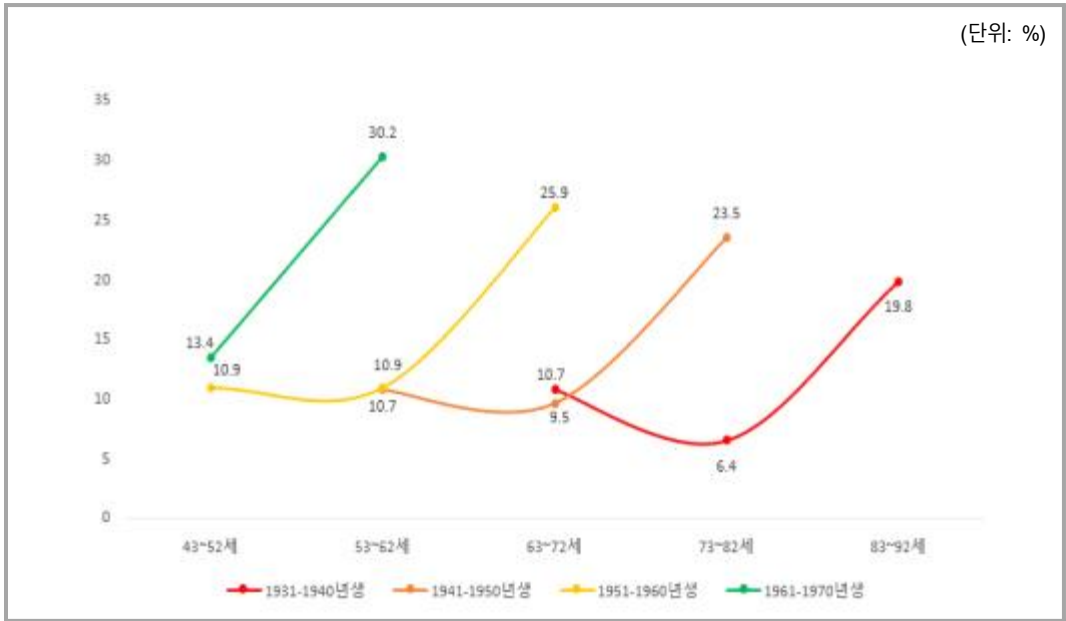
다만 2003~2023년 동안 나타난 소득 만족도의 변화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수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분석 기간에 포함된 이러한 특수한 시기 효과로 인해 연령별 및 출생코호트별 차이를 정교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출생코호트인 1960년대생의 경우 소득만족률이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크게 높은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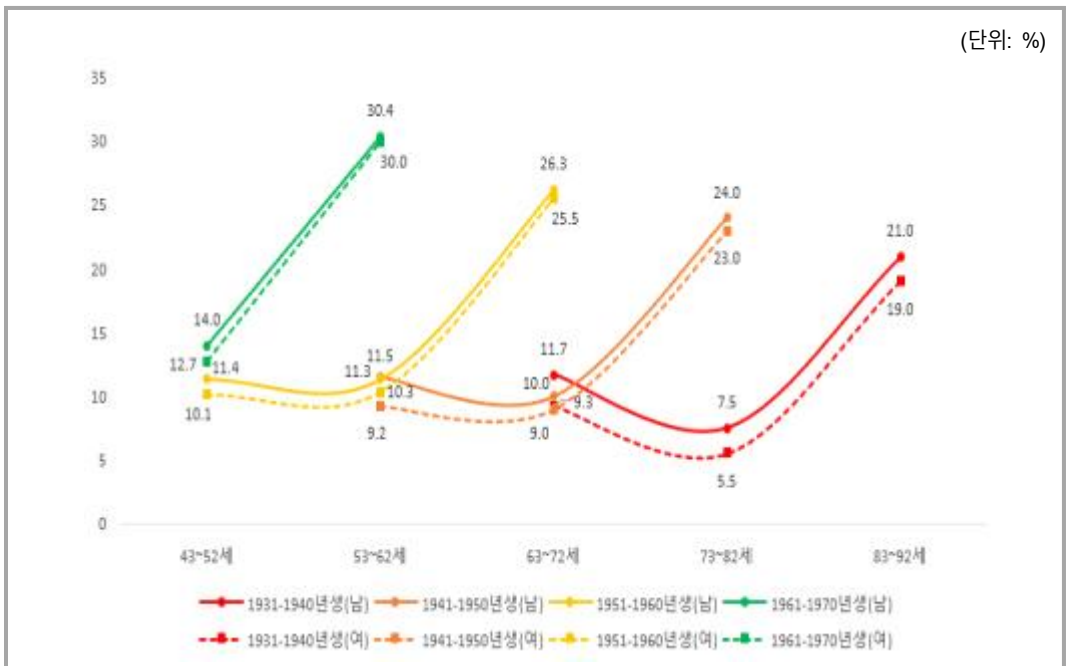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6-4> 출생코호트별 소득만족률: 1999-2023년, 격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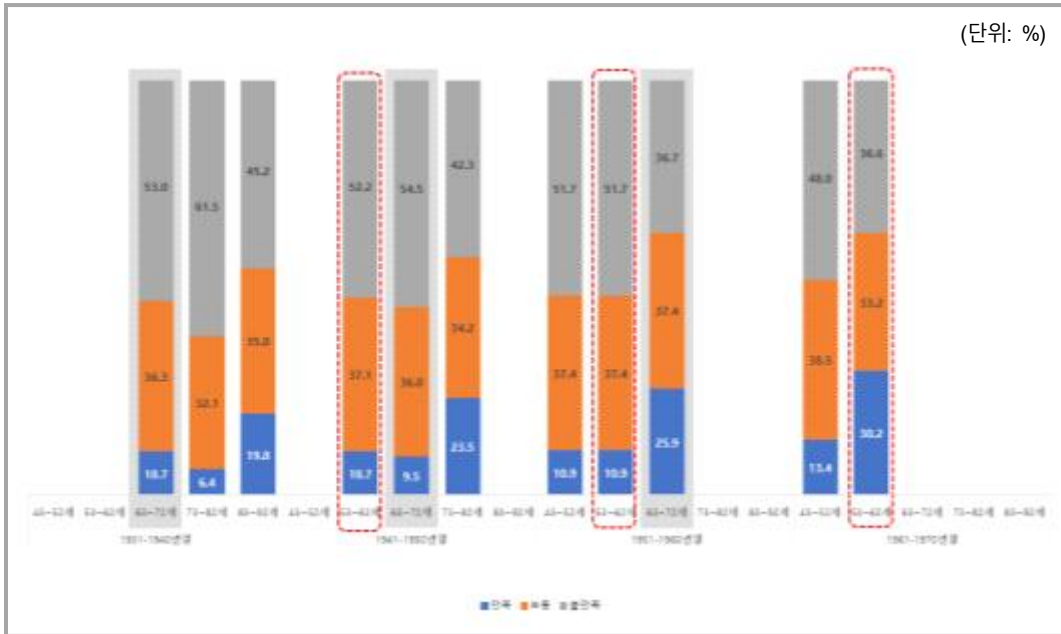
주: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6-5> 출생코호트별 소득만족률: 2003-2023년, 격년



주: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6-6> 출생코호트별·성별 소득만족률: 2003-2023년, 10년 단위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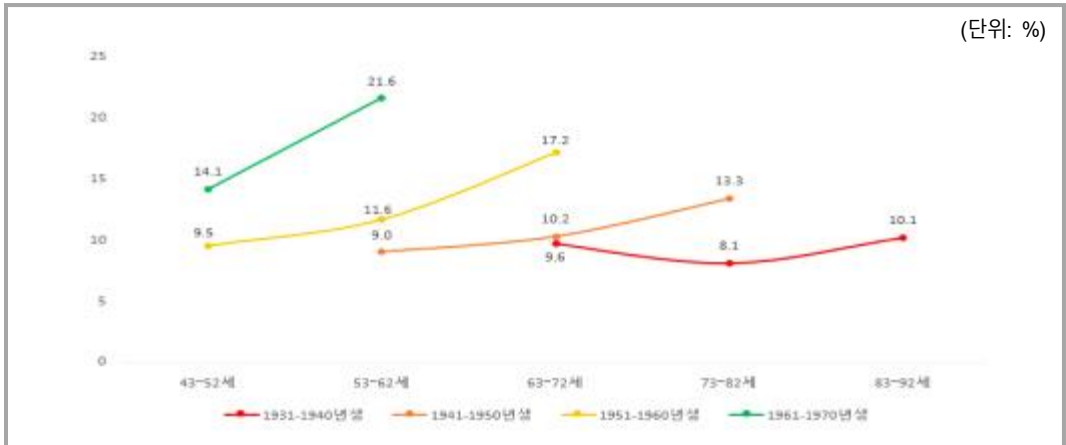
<그림 6-7> 출생코호트별 소득 만족도 분포

2. 소비생활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소비생활은 의식주, 여가,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며, 소득 질문과는 달리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득은 구매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파악하지만, 소비는 실제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소비는 경제상태를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다(이승희, 2023, p.24).

1930~1960년대생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만족(‘매우 만족’ + ‘만족’)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10%대 이하의 낮은 수준이지만, 연령 간 차이가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생활 만족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80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이러한 패턴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50년대생의 경우, 중년기인 40대에서 소비생활 만족률이 9.5%였으나 50대에는 11.6%, 고령기에 해당하는 60대에는 17.2%로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하면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소비생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다. 50대를 기준으로 보면, 1960년대생의 소비생활 만족률은 21.6%로 1950년대생(11.6%)보다 약 10%p, 1940년대생(9.0%)보다 약 12%p 높아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소비생활에 더 많이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출생코호트 간 차이도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6-8> 출생코호트별 소비생활 만족률

이러한 소비생활 만족도의 변화는 단순한 연령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앞서 소득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조사 시점에서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소비생활 만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생활 만족도의 절대 수준이 낮고, 2023년 증가 폭도 소득 만족도에 비해 작았는데, 이는 <그림 6-10>에서 보이듯 2023년에 불만족 응답이 감소하는 동시에 ‘만족’과 함께 ‘보통’ 응답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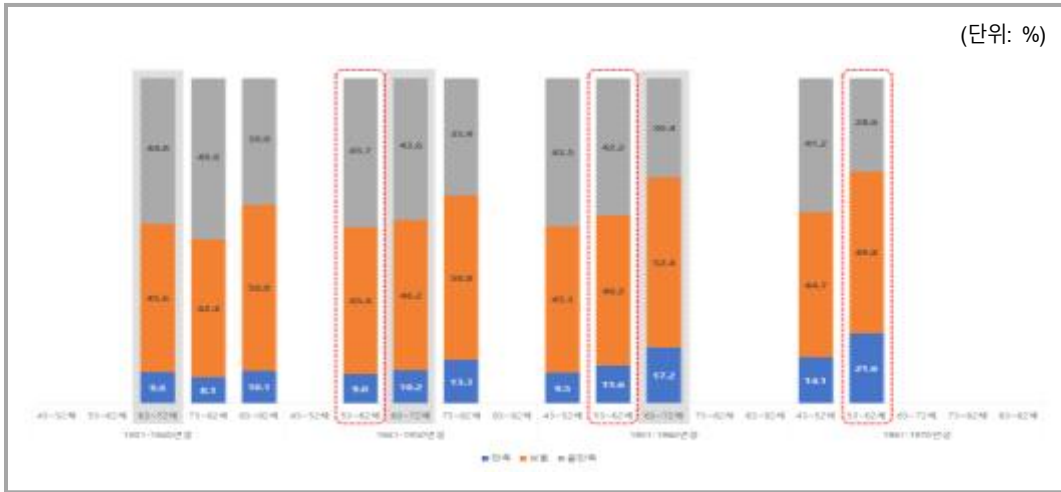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6-9> 출생코호트별·성별 소비생활 만족률

한편 소비는 소득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물질적 웰빙을 측정한다는 점

에서(권규호, 2017; 이승희, 2023), 소득 만족도보다 소비생활 만족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작은 부분을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희(2023)에 의하면 2021년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고령층의 소비수준이 증가하여, 고령층의 물질적 삶의 수준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주관적 소비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p.37).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6-10> 출생코호트별 소비생활 만족도 분포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와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1930~1970년대 출생코호트의 생애후반기 경제상태를 생활비 원천과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생활비 마련 방법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가족 부양보다 공적 소득 기반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1930년대생은 가족 중심 부양 규범 아래 성장하고 공적연금 제도 확립 이전에 고령기에 진입한 세대로, 자녀 도움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1940년대 후반생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제도 정착기와 은퇴기가 맞물린 전환 코호트로, 공적연금 기반 노후 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세대이다. 이후 1950년대생은 핵가족화·자녀독립 보편화·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확대를 경험하며 노후 자립 규범이 강화된 세대로, 동일 연령대에서 자녀 도움 비율은 낮고 공적연금 활용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코호트별 차이는 가족 부양 가치관 변화와 제도 환경

확충 및 주거·노동·교육 경험 변화가 누적된 결과이며, 향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관적 경제상태(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3년 응답에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는 공통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절대적 만족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불만족 응답이 줄고 만족 응답은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소득 만족도는 1950년대생이 2003년·2013년 10.9%에서 2023년 25.9%로, 1940년대생은 같은 기간 10.7%→9.5%→23.5%로 상승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긍정 평가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1960년대생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코호트 간 차이도 확인된다.

종합하면,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적 소득에 기반하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며,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 효과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확충과 금융환경의 변화, 노후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코호트별로 상이하게 축적된 사회경제적 경험과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고령층에서도 공적 소득 기반의 확대가 세대 교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주로 남자의 경제활동과 소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구조에서 벗어나, 남자와 여자 모두가 노후준비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의 약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교육수준 향상 등 장기적인 구조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관적 경제상태 역시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생애후반기 경제상태가 코호트 특성과 시대적 충격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 7 장

중 · 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건강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생애후반기 건강 변화는 연령 효과(age effect)와 기간 효과(period effect),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령 효과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수준이 변화하는 것이며 기간 효과는 역사적 사건, 특정 시기에 실시된 보건의료 정책 등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코호트 효과는 출생 시기에 따라 세대별로 경험하는 다양한 요인(사회경제적 환경, 아동기 영양상태 등)이 건강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출생 시기에 따른 건강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국내에서 연령 효과와 구분하여 출생코호트별 노화 차이를 고찰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보정하면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건강수준이 이전 노인세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2차 대전 전·중·말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 각각의 65-70세 건강수준을 비교한 스위스 연구에서 세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행태를 보정하였을 때 자가 보고 만성질환 수, 활동제한, 우울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세대 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Henchoz et al., 2019). 캐나다 코호트연구에서도 1935-1944년 출생자, 1945-1954년 출생자, 1955-1964년 출생자, 1965-1974년 출생자 간 주관적 건강수준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수준이 이전 세대 및 이후 세대와 차이가 없었다. 저자들은 베이비붐세대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고 흡연을 덜 하지만 비만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년기 보건의료를 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Badley et al., 2015). 1994년부터 2007년까지 Health Survey for England (HSE) 자료를 분석한 Rice 외(2010)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1950-1954년 출생코호트)의 정신질환 유병률(4.7%)이 1935-1939년 출생코호트의 정신질환 유병률(2.5%)보다 높은 것은 코호트 효과지만 1950-1954년 출생코호트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 비만 증가는 시기 효과(period effect)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영국의 베이비붐세대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국가의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만성질환 개수는 적었으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고 우울감이 높았다(김미혜 외, 2014) 한은정 외(2024)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건강노화코호트조사(KLHAC)의 2021~2022년 기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현재 노인세대(1954년 이전

생)와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비교하였는데 보통 이상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이 2차 베이비붐세대(94.2%), 1차 베이비붐세대(93.1%), 노인세대(82.0%) 순이었으며 노인세대에 비해 1·2차 베이비붐세대에서 흡연과 음주 비율이 높았고 신체활동량이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 노인세대의 평균 연령이 75.0세, 1차 베이비붐세대의 평균 연령이 62.0세, 2차 베이비붐세대의 평균 연령이 50.2세로 각 세대의 동일 연령에서 건강수준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세대별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차이의 상당수는 연령 효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여기서는 출생코호트별로 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 질문은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의 건강수준이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좋아졌는가?’,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의 건강행태가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좋아졌는가?’이다.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출생코호트별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를 사용하였다. 사회조사는 전국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며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회조사는 방대한 주제를 다루며, 격년으로 조사문항을 달리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건강 관련 문항은 짝수 연도에 조사된다. 2014년 이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2014년과 2024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24년이며 코호트의 10년 동안의 변화를 2014년과 비교하였다. 출생코호트별 및 분석연도별 응답자의 연령은 <표 7-1>과 같다. 1930년대생(1931~1940년)은 2014년 기준으로 74~83세이며 10년 후인 2024년에는 84~93세에 해당된다. 1940년대생은 같은 기간 64~73세에서 74~83세가 된다. 즉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은 분석기간 중 이미 고령기에 해당되며, 1940년생의 경우 전기노인에서 후기노인으로 이행을 경험하는 코호트이다. 1950년대생은 분석기간 중 54~63세에서 64~73세로 고령기로 이행하며, 1960년생은 44~53세에서 54~63세로 아직 중년기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이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44~53세의 경우 40대, 54~63세의 경우 50대, 64~73세의 경우 60대, 74~83세의 경우 70대, 84~93세의 경우 80대로 축약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표 7-1> 출생코호트별 분석연도별 연령대: 건강

출생코호트	2014년	2024년
1931년생~1940년생	74~83세	84~93세
1941년생~1950년생	64~73세	74~83세
1951년생~1960년생	54~63세	64~73세
1961년생~1970년생	44~53세	54~63세

지표는 크게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건강수준은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률로, 건강행태는 현재 흡연율, 주 3회 이상 음주율, 아침식사 실천율, 규칙적 운동 실천율, 정기적 건강검진율로 구성한다.

건강수준과 관련된 주관적 건강평가를 위해 2014년 사회조사에서는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2024년 사회조사에서는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분석연도 모두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양호한 주관적 건강 평가율(%)을 응답자 중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로 나누어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를 선택지로 제시하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이 성인이므로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제외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거나 느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스트레스 인지율(%)로 정의하였다. 자살 생각 조사 문항은 2014년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선택지: 있다, 없다)’에서 2024년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에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선택지: 있다, 없다)’로 변경이 있었다. 자살 생각률(%)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은퇴로 인한 시간적 여유는 신체활동을 촉진하나, 관절염,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발생이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중년은 30.0%, 노년은 27.2%로 중년과 노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운동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달랐다. 중년에는 노동 여부가 가장 높은 관련 요인이었고 노인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관련 요인이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전소연과 이석구의 연구(2023)에서 전기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40.8%, 후기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29.2%로 후기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았다.

건강행태에서 흡연은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피운다’, 와 ‘피우지 않는다’를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현재 흡연율(%)로 정의하였다. 음주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습니까? 마신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선택지로 ‘있다’와 ‘없다’를 제시하고 ‘있다’를 선택한 경우 음주 빈도에 대해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을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지난 1년간 주 3~4회 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을 주 3회 이상 음주율로 정의하였다. 사회조사에서는 건강 관리를 조사하기 위해 ‘귀하는 평소 다음 각 항목의 활동을 실천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아침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 검진의 실천을 조사하며, 선택지로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를 제시하였다. 아침식사 실천율(%)을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규칙적 운동 실천율(%)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기적 건강검진율(%)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표 7-2>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지표 정의

구분	지표명	지표 정의	비고	
건강 수준	양호한 주관적 건강 평가율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거나 좋은 편 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스트 레스 인지율	(가정생활)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거 나 느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직장생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거 나 느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대다수가 은퇴한 1930년대 생 출생코호트 분석 제외
		(전반적인 일상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 이 느끼거나 느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살 생각률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의 비율(%)	2024년 ‘구체적인 자살 방 법 생각으로 문항 변경	
건강 행태	현재 흡연율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 율(%)		
	주 3회 이상 음주율	지난 1년간 주 3~4회 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		
	아침식사 실천율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규칙적 운동 실천율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 율(%)		
	정기적 건강검진율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응답한 사 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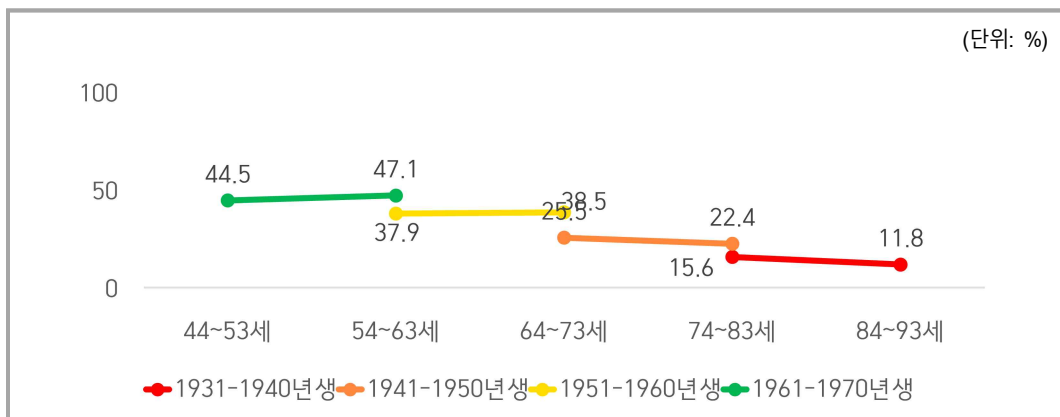
제2절 건강 수준

1.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

건강은 질병이 없고 신체가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것이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아우르고 실제 유병상태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영희, 배화옥, 김운신, 2006; 최요한, 2018).

2014년과 2024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출생코호트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은 <그림 7-1>과 같다.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은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떠한지를 물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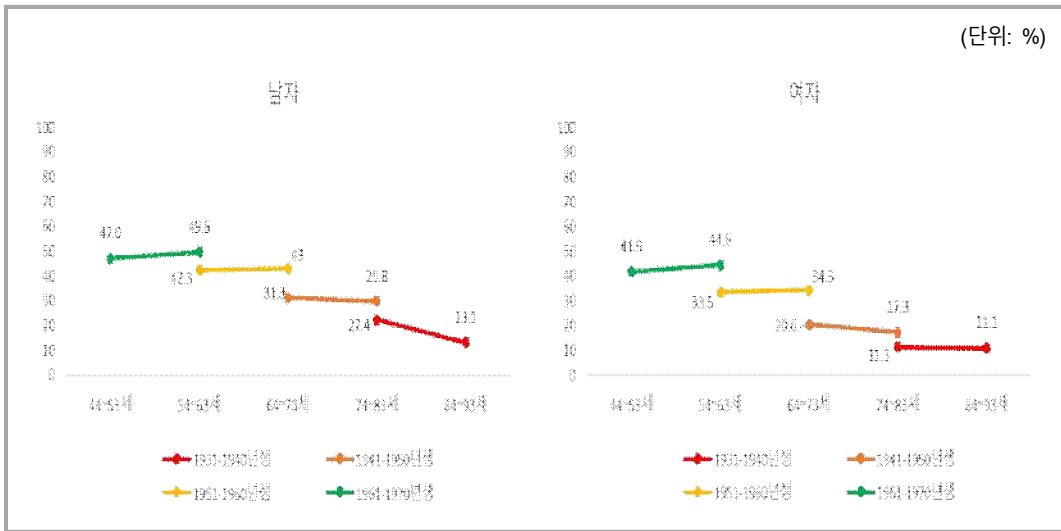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수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주관적 건강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은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노년기에 증가하게 되는데 1930년대생은 70대에 15.6%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평가하였으나 10년 후인 80대에는 11.8%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40년대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아직 고령기에 들어서지 않은 1950년대생은 50대에 37.9%가 자신의 건강을 좋다고 평가하였고 10년 후인 60대에는 38.5%가 좋다고 평가하여 차이가 별로 없었고, 1960년대생은 40대에는 44.5%, 50대에는 47.1%가 건강이 좋다고 평가하여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이 2.6%p 증가하였다. 즉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여 건강수준이 좋아지는 코호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1> 출생코호트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노년기에 들어선 1930년대, 1940년대에 출생한 여자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이 동일 연령의 남자보다 낮았다. 1930년대 출생한 남자의 경우 70대에서는 22.4%가 건강이 좋다고 평가하였으나 10년 후에는 13.1%만이 좋다고 평가하여 여자보다 평균 수명보다 6~8년 짧은 남자의 평균 수명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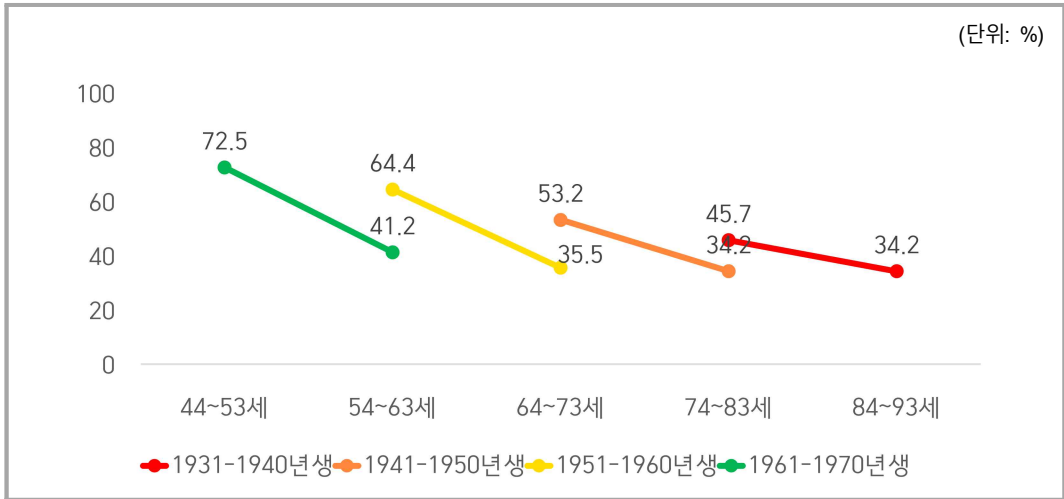
<그림 7-2> 출생코호트별·성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평가율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g, 2013). 2014년과 2024년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2주일 동안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로 나누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는지를 물었고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중 하나의 선택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거나 느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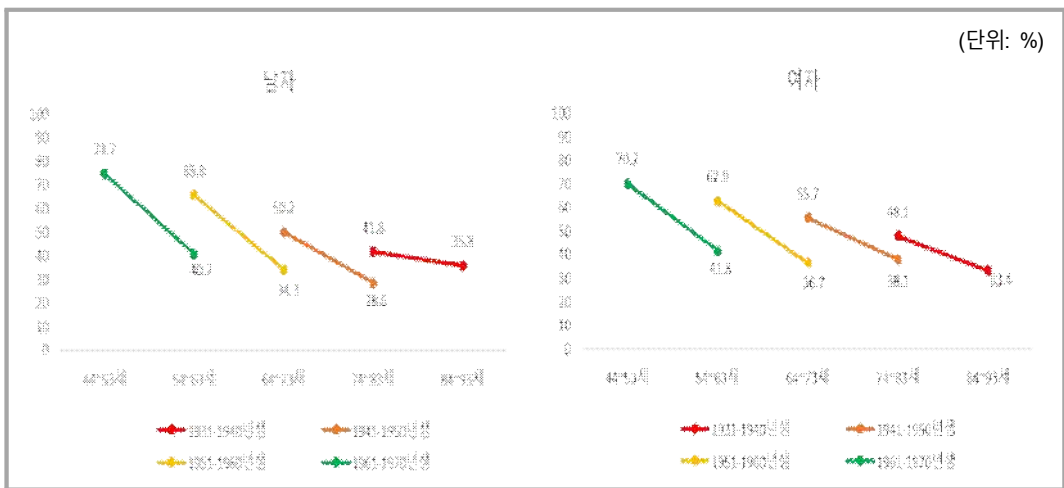
출생코호트별 스트레스 인지율(전반적인 일상생활)은 <그림 7-3>과 같다. 노년기가 되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부양했던 자녀가 독립하게 되므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10년 후 스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하였으며 중년기에 있는 1960년대생과 중년기와 노년기로 넘어가는 1950년대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감소

폭이 1930년대생의 감소 폭보다 컸다. 1930년대생은 70대에 45.7%가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꼈으나 10년 후인 80대에는 34.2%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건강수준 향상, 국민소득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3> 출생코호트별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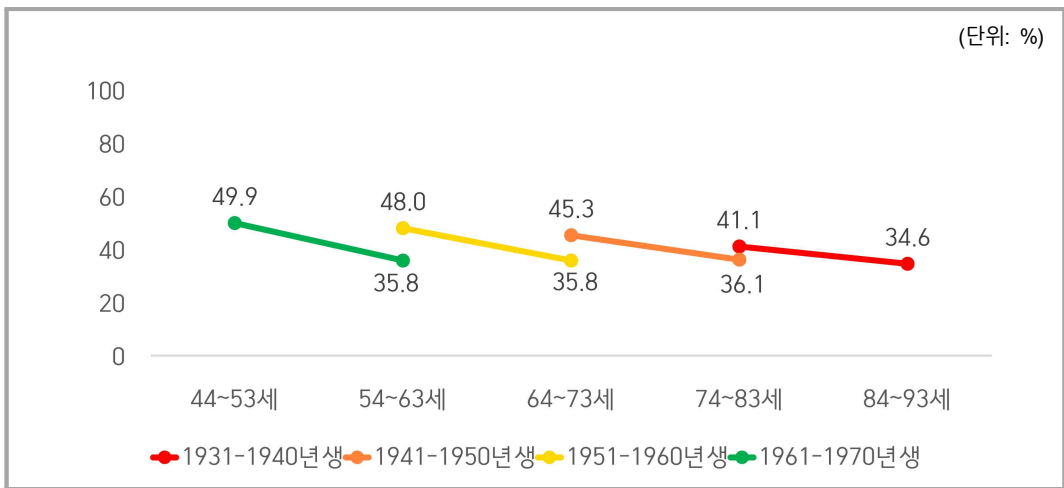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4> 출생코호트별·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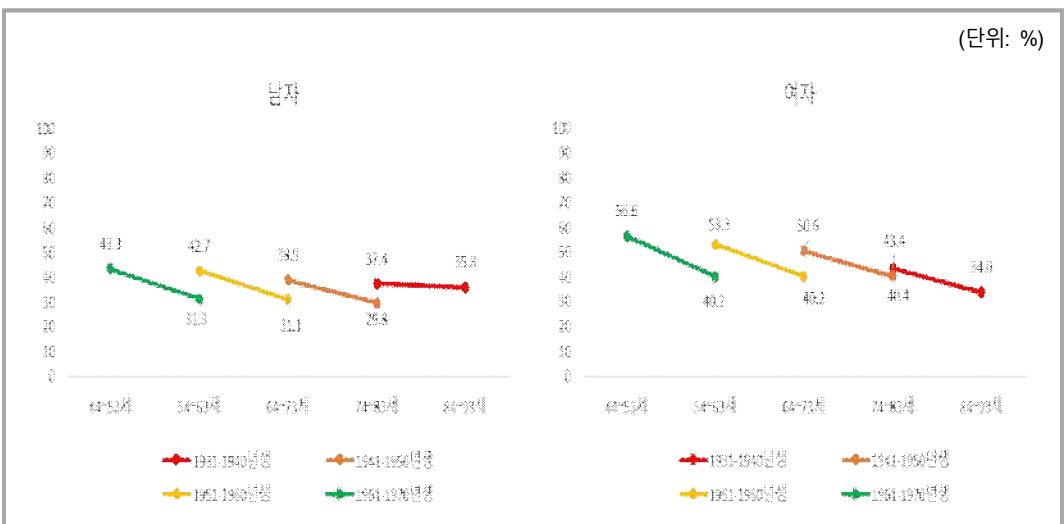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서 “은퇴”를 겪게 되고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전반적인 일상생활)은 차

이가 크지 않았으며 1930년대생의 경우 70대 남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전반적인 일상생활)이 41.8%에서 10년 후 35.8%로 6%p 감소한 데 비해 여자는 48.1%에서 33.4%로 14.7%p 감소하여 감소 폭이 컸다.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남자와 여자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의 스트레스 수준이 이전 코호트의 스트레스 수준보다 낮았다. 그런데 80대를 제외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가정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동일 연령대에서 출생코호트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1960년대생 남자의 경우 유일하게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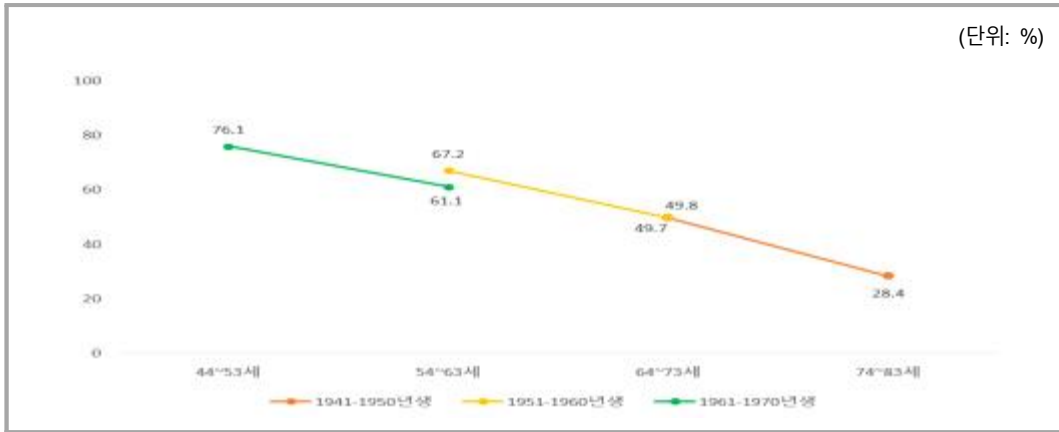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5> 출생코호트별 스트레스 인지율: 가정생활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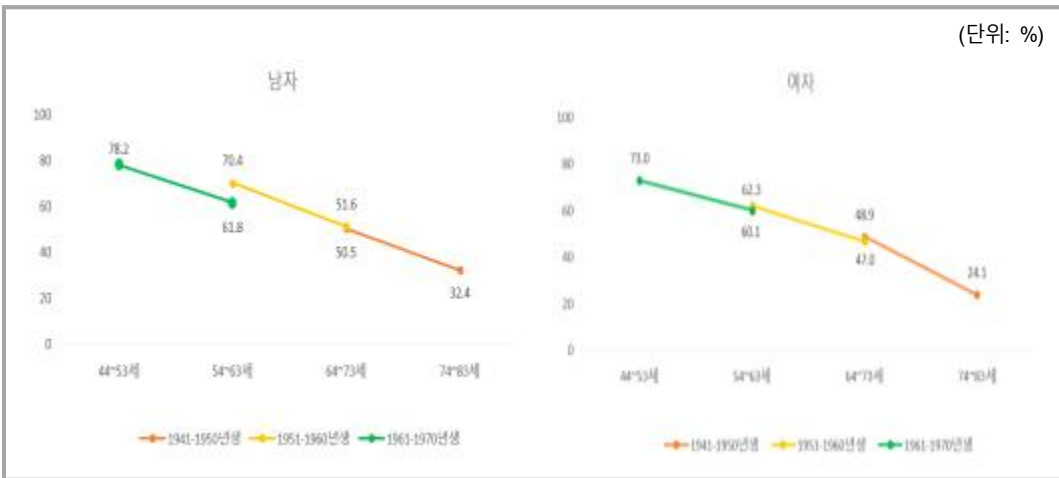
<그림 7-6> 출생코호트별·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가정생활



주: 고령에 직장생활을 하는 표본수의 제한으로 1930년대 출생코호트에 대해서는 직장생활 스트레스 인지율을 산출하지 않았음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7> 출생코호트별 스트레스 인지율: 직장생활



주: 고령에 직장생활을 하는 표본수의 제한으로 1930년대 출생코호트에 대해서는 직장생활 스트레스 인지율을 산출하지 않았음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8> 출생코호트별·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직장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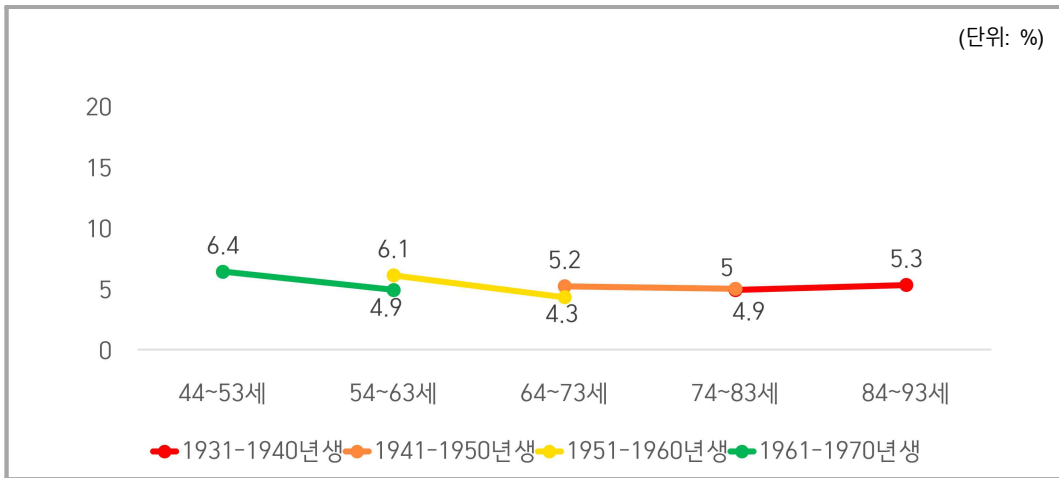
3. 자살 생각

자살을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나 자살 생각은 심리적 불안정성, 부정적인 정신 건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자살 생각률은 중요한 보건학적 지표이다.

사회조사에서 자살 생각률을 평가하는 질문에 변화가 있었다. 2014년 조사에서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 없다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2024년 조사에서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에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어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생각해 본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설문 문항이 변경되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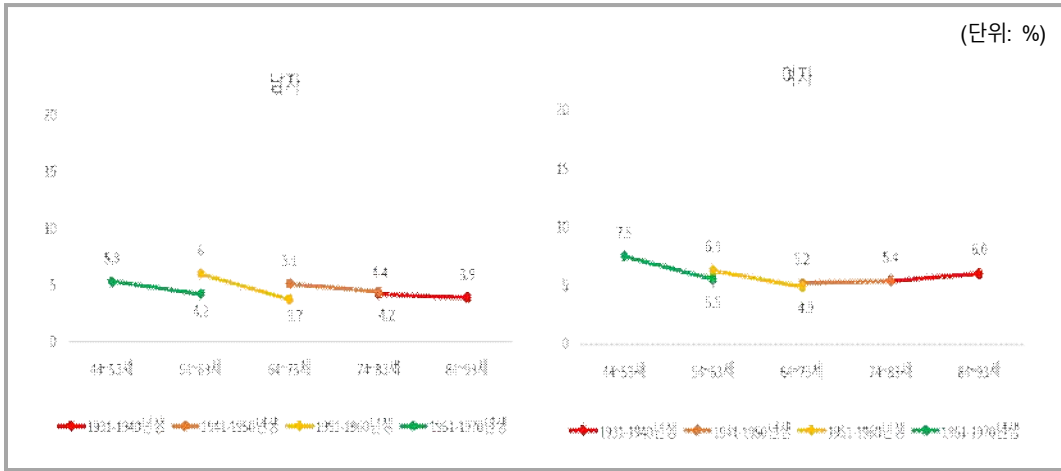
2014년과 2024년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자살 생각률은 <그림 7-9>와 같다. 1930년대생은 70대에 4.9%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10년 후인 80대에는 5.3%가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에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남자는 4.2%에서 3.9%로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5.4%에서 6.0%로 증가하였는데 2024년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본 것으로 자살 생각의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고려하면 1930년대생 여자 노인에서 자살 생각률이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40년대생 여자는 60대에 5.2%에서 10년 후 5.4%로 자살 생각률이 증가하였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9> 출생코호트별 자살 생각률

남자는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이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자살 생각률이 낮았고 여자는 1960년대생이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자살 생각률이 낮았다. 자살은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자살 생각률의 변화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퇴직·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노년기에는 질병 등 건강문제, 기능 저하로 인한 좌절감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10> 출생코호트별·성별 자살 생각률

제3절 건강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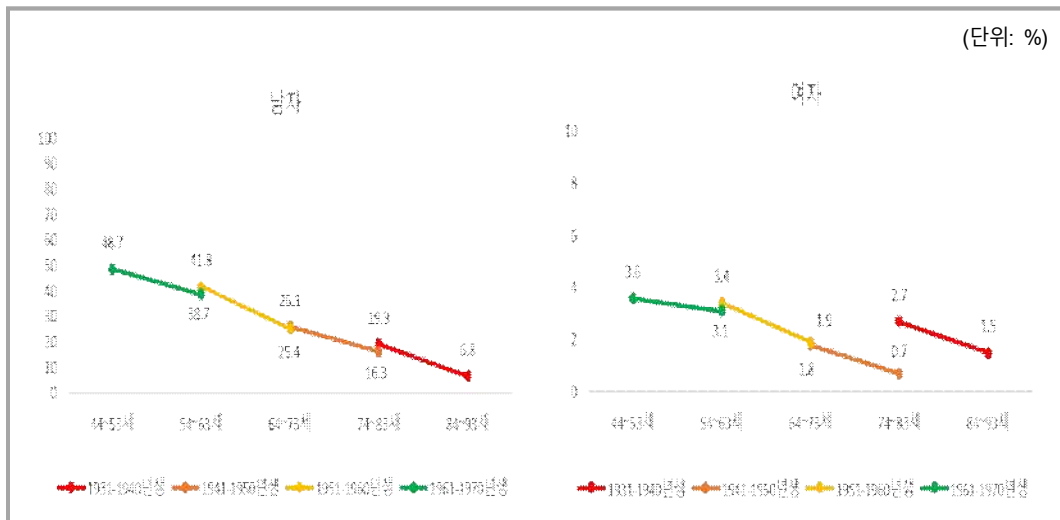
노년기로의 생애 이행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흡연, 음주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 연구패널의 1-6차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과거 흡연자의 흡연 양상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 Son의 연구(2021)에서 금연 등 흡연량이 급격히 감소한 그룹이 66.8%, 흡연량이 다소 감소한 그룹이 19.8%, 흡연량이 증가한 그룹이 13.4%였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젊은 성인보다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ierce et al., 1989).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문제음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음주는 초기 알코올 중독 또는 현재는 음주로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음주 수준이다. 2018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생애주기별 문제음주가 있는 비율은 청년 25.4%, 중년 22.1%, 노년 5.4%로 노인에서 문제음주 비율이 낮았으나(정준수, 2020), 전라북도 지역사회 재가노인 4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노인 중 75.5%가 음주를 하였고 이들 중 24.6%가 문제음주자였다(윤명숙과 조혜정, 2007).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를 분석한 임진섭 외(2024)의 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음주량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들은 음주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자아 존중감 향상 등으로 노인이 음주를 지속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1. 흡연

흡연은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0년대부터 흡연율을 낮추고자 담배가격 인상, 간접흡연 규제, 금연상담 등 포괄적인 흡연규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중년기·노년기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과 음주율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4년과 2024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그림 7-11>과 같다.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남자는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흡연율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흡연율이 약간 낮게 나타나 흡연규제 정책의 효과를 시사한다. 여자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 때 흡연율이 감소하였으나 동일 연령대에서 출생코호트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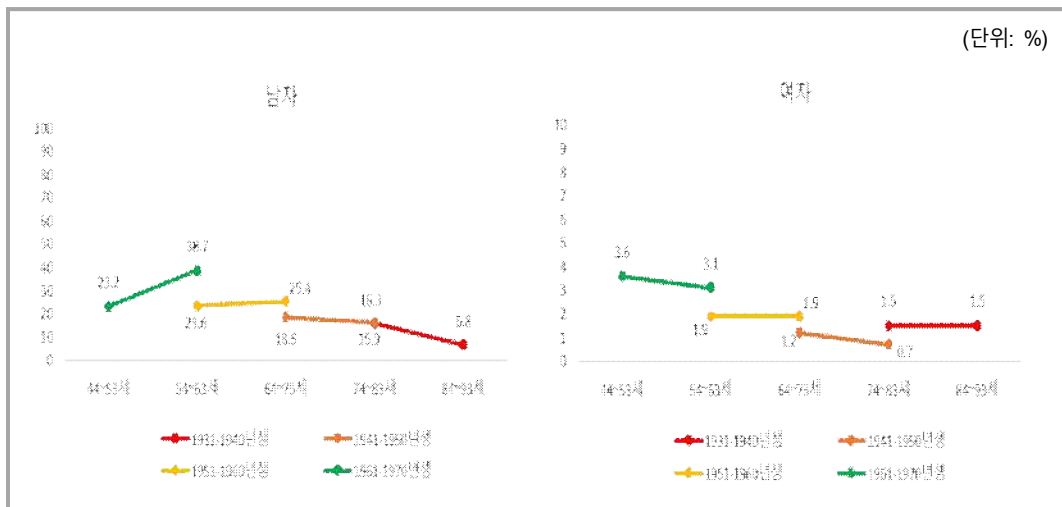
<그림 7-11> 출생코호트별·성별 흡연율

2. 음주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음주 빈도를 월 1회 이상,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로 나누어 선택지로 제시한다. 주 3회 이상 음주율은 주 3~4회 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1회 음주량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간 질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주고 음주운전, 폭력 등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중년·노년기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과 음주율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그림 7-12>). 남자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서 주 3회 음주율이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일정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남자는 1930년대 출생코호트의 주 3회 이상 음주율이 70대 15.9%에서 10년 후인 80대에 6.8%로 감소하였으나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은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고 1960년대생은 40대 23.2%에서 50대 38.7%로 주 3회 음주율이 증가하였다. 여자는 주 3회 음주율이 4% 이하로 남자와 차이가 크고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남자는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주 3회 이상 음주율이 높았고 여자는 동일 연령대에서 출생코호트별 차이가 일관되지 않았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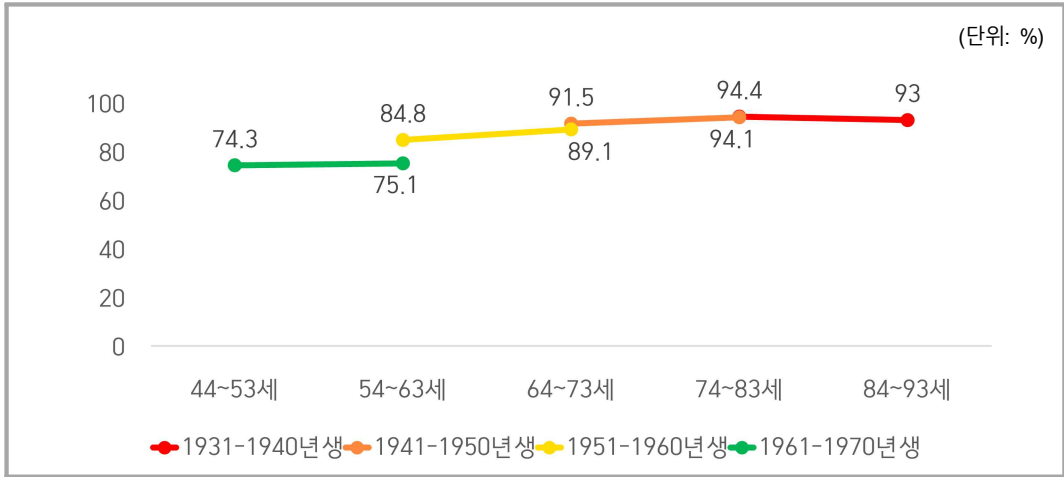
<그림 7-12> 출생코호트별·성별 주 3회 이상 음주율

3. 아침식사 실천

과거에는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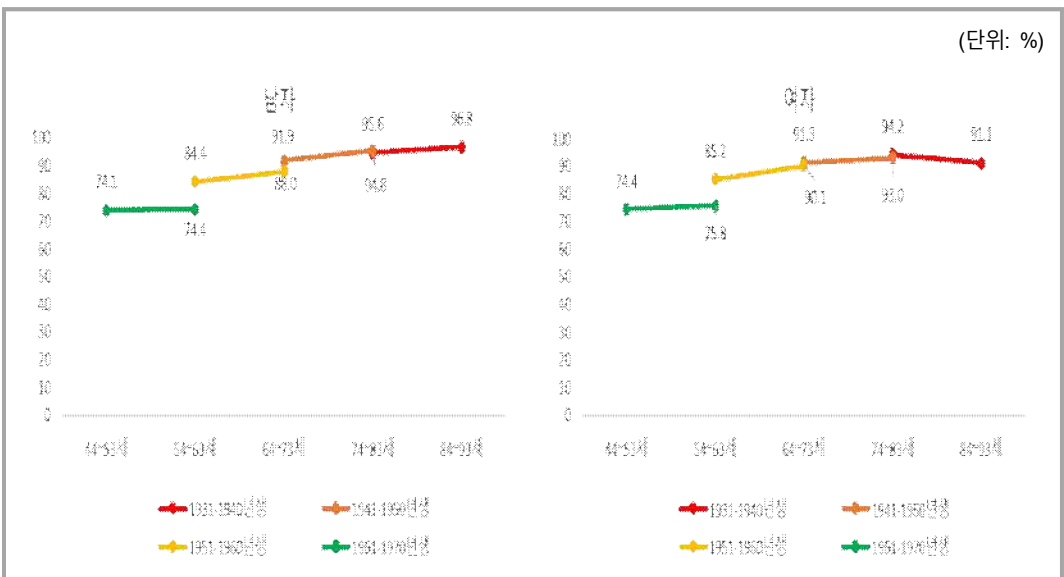
출생코호트별로 아침식사 실천율을 산출한 결과는 <그림 7-13>과 같다. 각 출생코호트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침식사 실천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30년대 코호

트의 74~83세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94.4%에서 10년 후 93.0%로 비슷하였으며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1940년대생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50대 84.8%에서 10년 후 89.1%로 다소 증가하였다. 1960년대생의 50대 아침식사 실천율은 75.1%로 1950년대생의 84.8%보다 뚜렷하게 낮아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13> 출생코호트별 아침식사 실천율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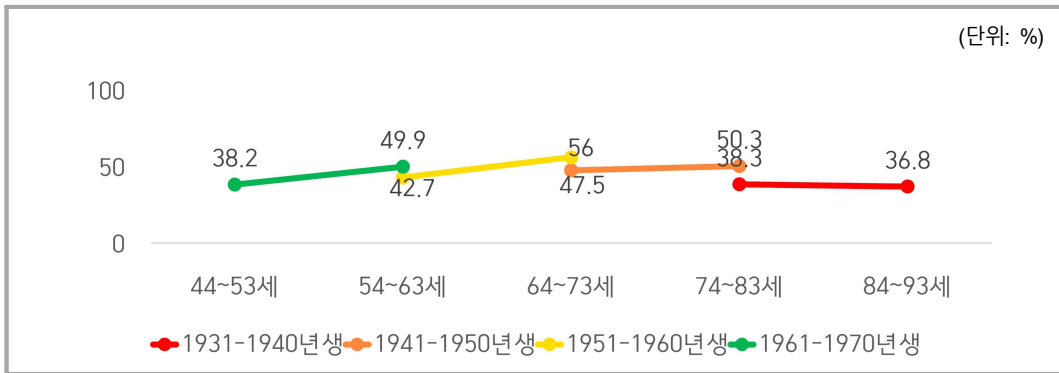
<그림 7-14> 출생코호트별·성별 아침식사 실천율

4. 규칙적 운동 실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은퇴를 경험하고 은퇴 후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관절염 등 질병 발생으로 신체활동 실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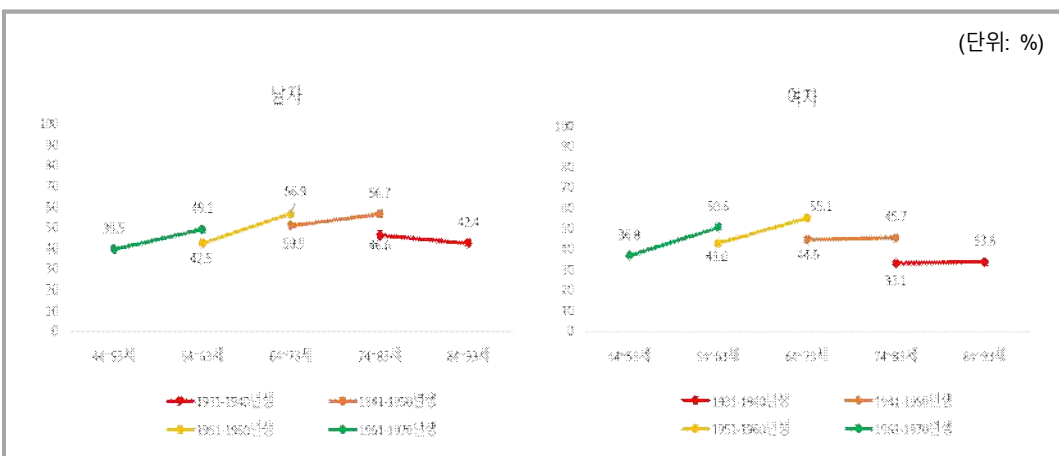
<그림 7-15>와 같이 40대에서 70대 초반까지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후기 노년기로 이행하면서 운동 실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60년대생 50대의 실천율은 49.9%로 1950년대생의 42.7%보다 높았고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최근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규칙적 운동 실천이 증가하였다. 여자 노인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남자 노인보다 낮았으나 남녀 모두 최근 코호트에서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15> 출생코호트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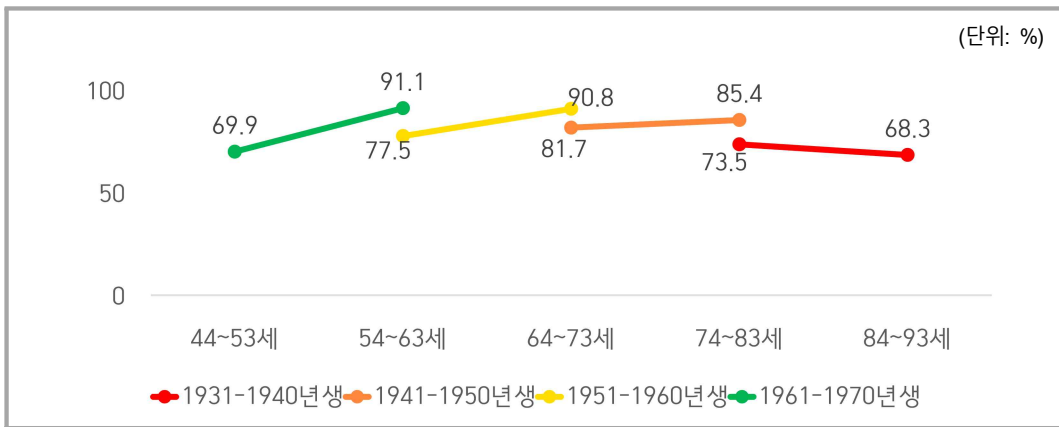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16> 출생코호트별·성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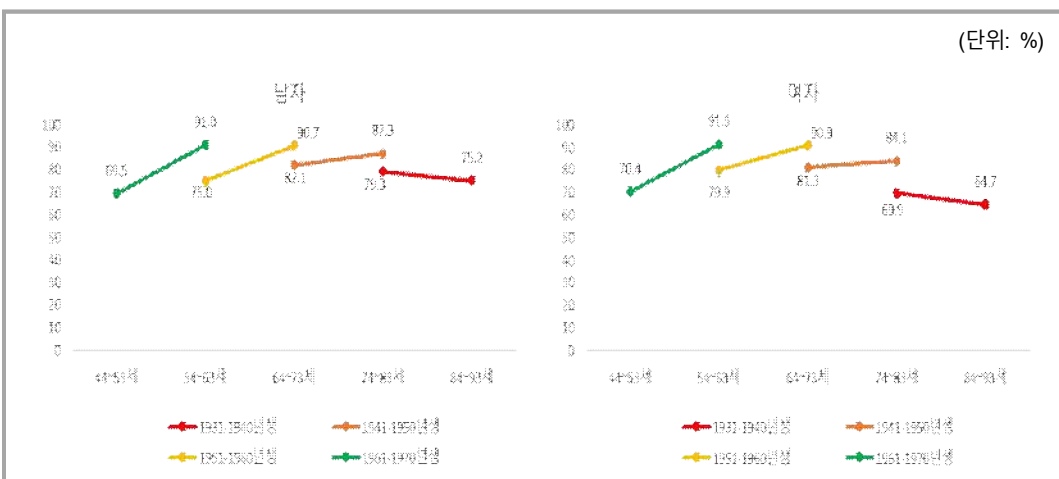
5. 건강검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본인부담 비용이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70대까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참여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80 대에는 감소하는데, 후기 노년기에 경험하는 만성질환, 노쇠, 활동제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50년대생의 64~73세 정기적인 건강검진 참여율은 90.8%로 1940년대생의 81.7%보다 높았고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최근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동일 연령대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80대를 기준으로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참여율이 낮았으나 변화 추세는 비슷하였다.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17> 출생코호트별 정기적 건강검진 참여율



자료: 사회조사(2014년·2024년),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7-18> 출생코호트별·성별 정기적 건강검진 참여율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2014년과 2024년 사회조사를 사용하여 1930~1960년대생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분석하였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쇠퇴하게 되는데, 노화의 속도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중년기보다 노년기에서 건강수준이 빠르게 변화한다.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이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년기와 비교하여 노년기에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다는 서연숙(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다양하고 출생코호트별로 태아기부터 현재까지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코호트 효과가 나타난다. 출생 시기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 유아·아동기 영양상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습득하는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최근 출생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양호하고 전반적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수명이 향상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남자의 기대수명은 58.7세였으나 2000년 72.3세로, 2020년 80.5세로 증가하였다. 여자 또한 1970년 65.8세에서 2000년 79.7세로, 2020년 86.5세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생은 일제 강점기에 유아·아동기를 보낸 1930년대생 1940년대생, 6.25 전쟁을 겪은 1950년대생보다 인생의 출발점부터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유전, 건강행태, 보건의료 체계, 환경 등이다.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실천 등 건강행태는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유전과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건강행태는 건강증진 정책, 건강행태에 대한 규범(norm), 질병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 시기에 실시되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코호트 효과와 함께 시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간접흡연 규제 등 건강증진 정책이 최근에 강화되었으며 규칙적 운동 실천 등 건강증진 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호트에서 이전 코호트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율과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시점의 시기 효과 또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 8 장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분석: 여가·사회적 관계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질적 수준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사회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나항진, 2004). 여가활동은 은퇴 이후의 자율성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신체·정신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황남희, 2014), 사회적 관계망은 고립 위험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박명숙 외, 2024).

이에 본 장에서는 1931~1970년 출생자에 대한 네 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50세 이후 중·고령기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일 코호트에서의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와 동일 연령대에서 서로 다른 코호트 간 차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회·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중·고령기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중·고령기 여가 및 사회관계 지원 정책 마련에 데이터 기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분석 자료원 및 지표

중·고령기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 변화를 코호트별로 비교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1931년부터 1970년 사이 출생한 인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출생연도에 따라 1931~1940년생, 1941~1950년생, 1951~1960년생, 1961~1970년생 등 네 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였으며, 설명의 편의상 각각 1930년대생, 1940년대생, 1950년대생, 1960년대생으로 표기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한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이다. 「사회조사」는 전국 만 13세 이상 약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중·고령기의 사회적 관계 및 여가활동을 비교·분석하는 데 적합한 대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인 2023년 자료를 중심으로, 코호트별 변화 비교를 위해 10년 간격의 2013년, 2003년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다만

조사연도별로 일부 문항 변경이 존재하여, 모든 지표에 대해 동일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만 15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여가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이며, 여가시간·여가비용 등 사회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여가자원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제공한다.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자료와 비교를 위한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활용 후보 자료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를 검토하였으나 KLoSA는 조사설계상 1962년 이후 출생자가 포함되지 않고, 노인실태조사는 만 65세 이상만 조사하여 50~64세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두 자료는 본 연구의 코호트 범위를 충족하지 않아 최종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코호트별 비교가 가능한 연령대는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데이터의 표본크기를 감안해서 사회조사는 43~52세에서 83~92세까지 비교하였으며, 국민여가활동조사는 44~53세에서 74~83세까지 비교하였고 초고령층(84~93세)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8-1> 사회조사의 출생코호트의 조사연도별 연령대

(단위: 세)

코호트	2003년	2013년	2023년
1931~1940년생	63~72	73~82	83~92
1941~1950년생	53~62	63~72	73~82
1951~1960년생	43~52	53~62	63~72
1961~1970년생	33~42	43~52	53~62

<표 8-2> 사회조사의 출생코호트별 연령과 분석자료 연도

(단위: 년)

코호트	43~52세	53~62세	63~72세	73~82세	83~92세
1931~1940년생			2003	2013	2023
1941~1950년생		2003	2013	2023	
1951~1960년생	2003	2013	2023		
1961~1970년생	2013	2023			

<표 8-3>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출생코호트의 조사연도별 연령대

(단위: 세)

코호트	2014년	2024년
1931~1940년생	74~83	84~93
1941~1950년생	64~73	74~83
1951~1960년생	54~63	64~73
1961~1970년생	44~53	54~63

<표 8-4>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출생코호트별 연령과 분석자료 연도

(단위: 년)

코호트	44~53세	54~63세	64~73세	74~83세
1931~1940년생				2014
1941~1950년생			2014	2024
1951~1960년생		2014	2024	
1961~1970년생	2014	2024		

본 장에서 분석한 지표는 여가 부문과 사회적 관계 부문으로 구성된다. 여가 부문에서는 여가자원(여가시간·여가비용), 여가활용 방식(활동 유형·함께하는 사람), 적극적 여가활동(독서·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레저시설 이용·국내 관광·해외 여행), 여가활용 만족도 등을 통해 중·고령기의 여가 구조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집안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대화 상대 유무), 사회적 고립도, 단체 참여(친목·사교, 종교, 취미·스포츠·여가활동 단체),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간관계 만족도를 중심으로 코호트별 사회적 지지 및 참여 구조를 비교하였다.

<표 8-5> 부문별 작성지표

구분	작성 지표	활용자료	
여가	여가자원	여가시간 (평일/ 휴일) 여가비용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용 방식	여가활용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사회조사
	적극적 여가활동	독서	사회조사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국내 관광 해외 여행	
여가활용 만족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	집안일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화 상대가 있는 사람	사회조사
	사회적 고립도		
	단체 참여	전체 단체 참여자	
		친목·사교 단체 참여자	
		종교 단체 참여자	
		취미·스포츠·여가활동 단체 참여자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간관계 만족도			

제2절 여가자원 및 활용 방식

1. 여가자원

가. 여가시간

코호트별 여가시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07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조사가 되었고,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4년 조사자료이며 10년 간격의 2014년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가시간은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 항목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1930년대생부터 1960년대생까지의 평일·휴일 여가시간을 비교하였다.

동 조사에서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⁹⁾’을 의미하고 있으며 평일과 휴일의 구분 그리고 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여가시간의 코호트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8-1>에서 평일 여가시간은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960년대생은 44~53세 3.3시간에서 54~63세 3.6시간으로 증가했고, 1950년대생 또한 54~63세 3.7시간에서 64~73세 4.4시간으로 증가했으며, 1940년대생은 64~73세 4.7시간에서 74~83세 5.3시간으로 증가했으며, 1930년대생은 74~83세 구간에서 5.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후 일 중심 생활이 완화되며 여가 비중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연령효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연령대를 비교할 때 최근 코호트보다 이전 코호트에서 여가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즉 54~63세, 64~73세, 74~83세 구간에서 각 1950년대생이 1960년대생보다, 1940년대생이 1950년대생보다, 1930년대생이 1940년대생보다 여가시간이 약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대별 노동·가족 역할 부담 차이 등 코호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휴일 여가시간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흐름은 나타나지만, 증가 폭은 평일에 비해 작았다. 또한 동일 연령대 비교 결과도 평일과 유사하게 최근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시간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평일·휴일 간 여가시간 격차가 축소되며, 휴일 증가폭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9) 직업상의 일, 출퇴근 시간,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식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자유로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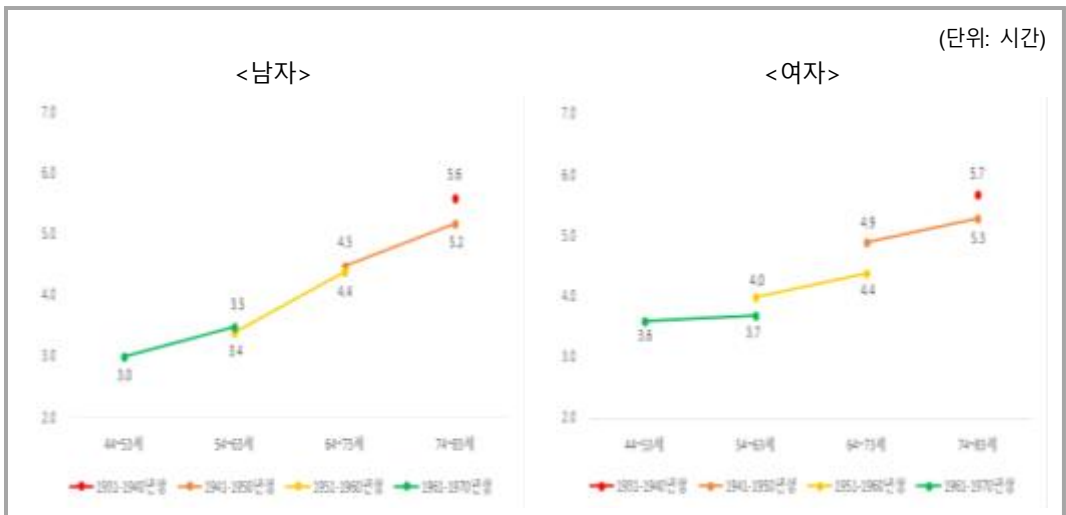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4년·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8-1> 출생코호트별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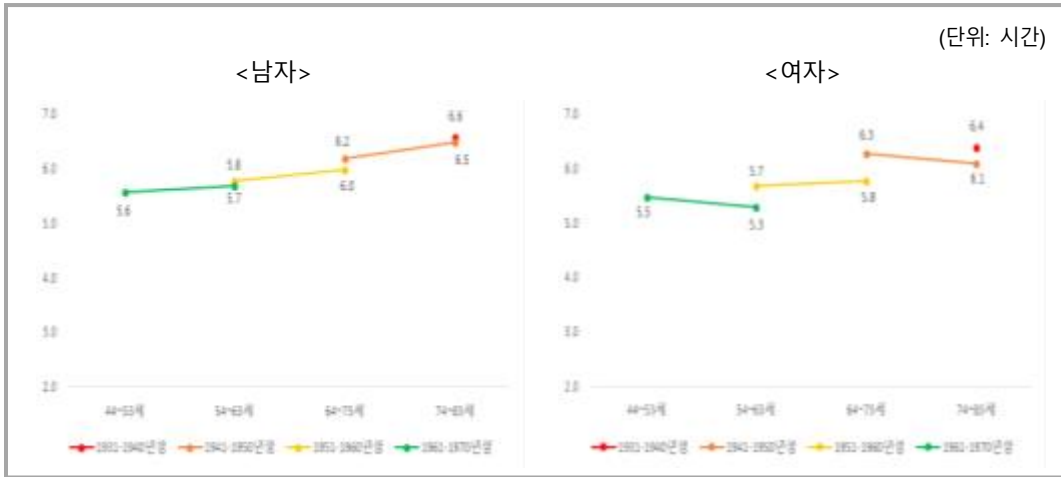
여가시간을 성별로 나누어 볼 때 평일 여가시간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다만 60대 후반 이후에는 남자의 은퇴 증가로 여가시간이 확대되며 남녀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휴일 여가시간은 남녀의 흐름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남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한 반면, 여자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생 여자는 44~53세 5.5시간에서 54~63세 5.3시간으로 감소하였다. 1940년대생도 64~73세 6.3시간에서 74~83세 6.1시간으로 줄었다.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4년·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8-2> 출생코호트별 성별 평일 여가시간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4년·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8-3> 출생코호트별 성별 휴일 여가시간

이러한 감소는 중·고령기 여자의 가족돌봄 부담이 여가시간을 제약한다는 선행연구(한경혜, 2019; 노혜진, 2021)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70대 여자의 손자녀 돌봄 등 가족 돌봄 부담은 여가시간 감소와 정신적 스트레스, 생활 만족도 저하를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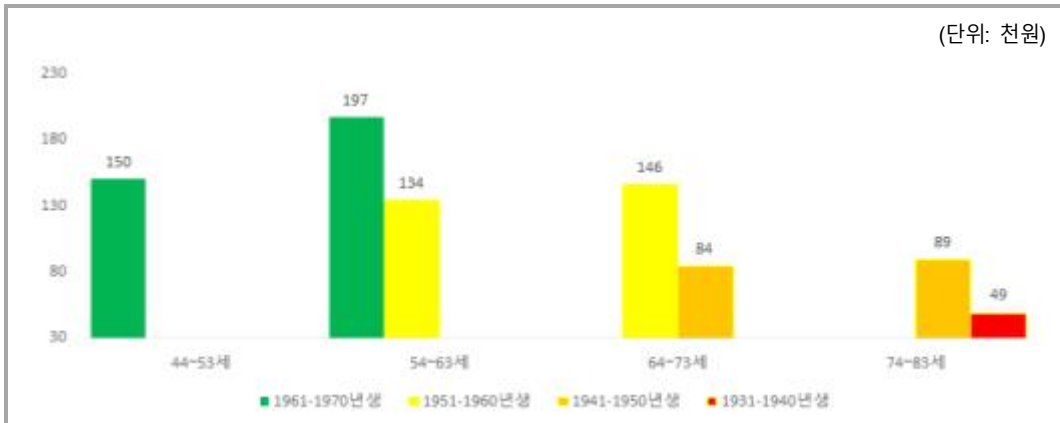
나. 여가비용

여가비용 분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4, 2024)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가비용은 ‘지난 1년 동안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개인이 여가생활에 투입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가비용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54~63세 구간에서는 1960년대생이 1950년대생보다 약 6만 원 더 많이 지출하였고, 64~73세 구간에서는 1950년대생이 1940년대생보다 약 6만 원, 74~83세 구간에서는 1940년대생이 1930년대생보다 약 4만 원 더 지출하였다. 이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경제력과 소비 성향,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세대 간 차이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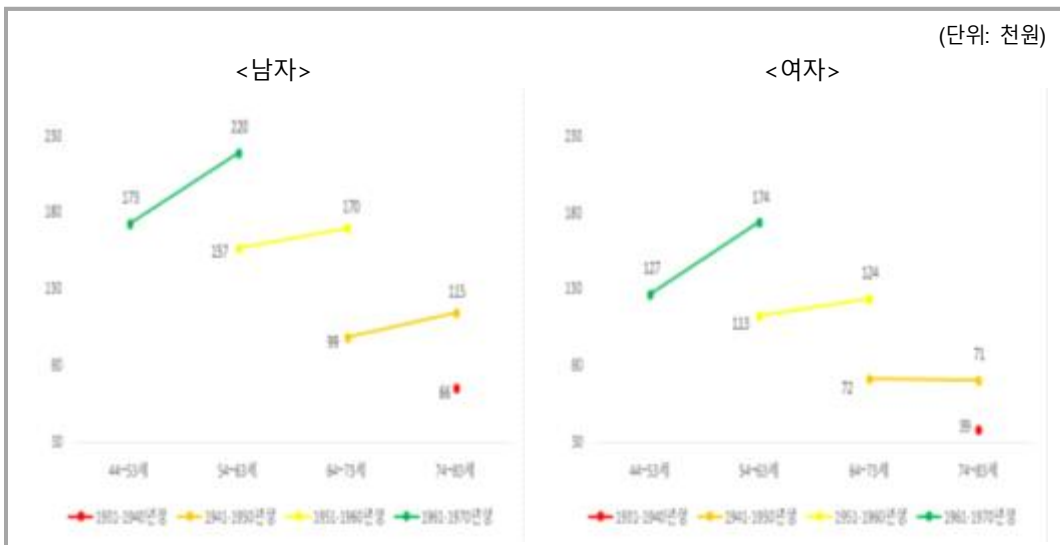
여가비용 지출은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출생한 코호트(1950년대·1960년대 출생)는 1930년대·1940년대 출생코호트에 비해 여가비용에 보다 높은 지출 의향을 보였고 이는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근 세대가 여가활동 참여에 더 적극적이고, 이에 따른 여가비용 지출도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강은나 등, 2015).

또한 여가비용이 명목금액으로 조사된 자료임을 감안할 때 2014~2024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약 21%임을 감안한다면 실질 여가비용 지출은 1960년대생(31.3% 증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활동적 여가에 대한 투자 증가가 최근 코호트에서 더욱 뚜렷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이들의 고령층 진입으로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4년·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8-4> 출생코호트별 월 평균 여가 비용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4년·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8-5> 출생코호트별·성별 월 평균 여가 비용

여가비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두 집단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가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은 동일하다.

다만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비용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60년대생 54~63세 구간에서 남자는 22만 원, 여자는 17.4만 원으로 남자가 4.6만 원을 더 지출하였고, 1950년대생 64~73세 구간에서 남자는 17만 원, 여자는 12.4만 원으로 남자가 4.6만 원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 여가비용 대비 여자 여가비용의 비율로 볼 때 30년대생은(74~83세 구간) 약 60%로 낮게 나타났지만 1950년대생은(64~73세 구간) 약 73%, 1960년대생(54~63세 구간)은 약 80%로 나타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가비용 지출의 성별 격차는 완만히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맞벌이 가구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여가활용 방식

가. 여가활용

코호트별 여가활용 현황은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가활용 항목은 사회조사의 ‘여가’ 부문에서 홀수년에 조사되는 항목으로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조사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2023년,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가활용 항목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선택지가 변경되어 왔다. 2023년 조사의 선택지는 11개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 조사에서는 14개의 선택지로 조사되었으나 2023년 기준 선택지로 통합하여 코호트별 자료를 산출하였다. 즉 2013년의 ‘창작적 취미’, ‘자기개발’ 선택지는 2023년의 ‘취미, 자기개발활동’으로 통합하였고, ‘봉사 활동’, ‘종교 활동’, ‘사교 관련 일, 친가 방문, 동창회 모임 등’ 선택지는 ‘사회 활동(봉사 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11개의 선택지로 조정하여 집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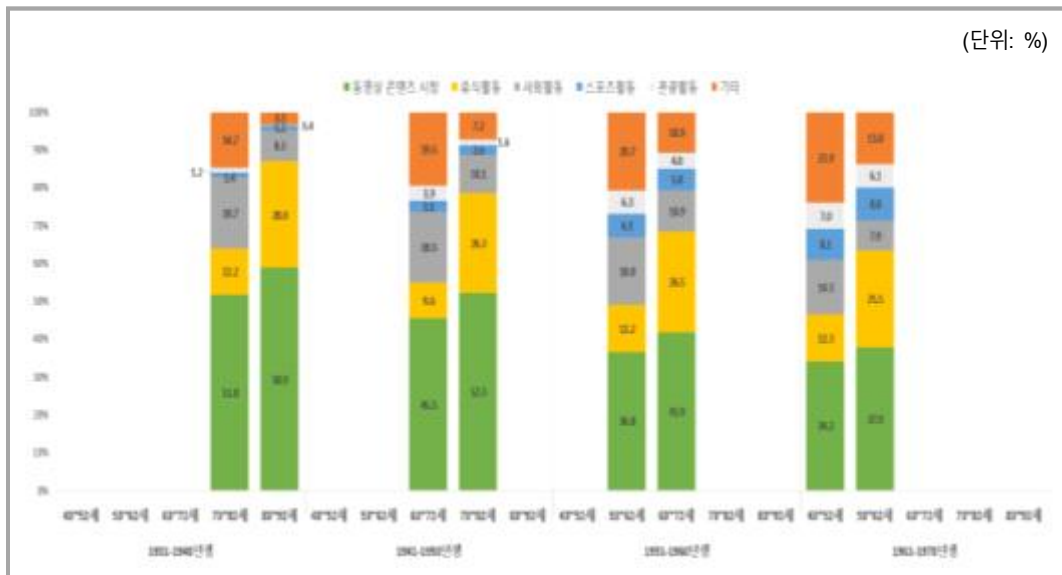
또한 선택지의 실제 분석 범주는 중·고령기의 상대적 비율이 큰 6개 범주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즉 ‘동영상콘텐츠 시청(TV 시청 포함)’, ‘휴식활동’, ‘사회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기타(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경기 관람, 컴퓨터게임·인터넷 검색, 취미·자기개발 활동 등)’ 등 6개 범주로 산출하였다. 또한 여가활용 항목은 2017년부터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확보와 여가 시간이 더 긴 주말(휴일 포함) 여가활용에 대해 산출하였고, 주된 응답(복수 응답 중에서 1순위 응답)에 대해 집계하였다. 한편, 사회조사의 지표분석 시 연령대 표시는 설명의 편의상 40대(43~52세), 50대(53~62세), 60대(63~72세), 70대(73~82세), 80대(83~92세)로 축약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동영상콘텐츠 시청’과 ‘휴식활동’은 증가하고 기타활동(문화예술 관람, 취미·자기개발 활동 등)은 감소 경향을 보인다.

개별 코호트별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1930년대생은 70대에 동영상콘텐츠 시청이 51.8%, 휴식활동 12.2%였으나 80대에는 동영상콘텐츠 시청이 58.9%, 휴식활동이 28.0%로 증가하였고, 반면 사회활동과 기타에서는 각 18.7%에서 8.3%로, 14.7%에서 3.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생은 60대에 동영상콘텐츠 시청이 45.5%, 휴식활동 9.6%였으나 70대에는 각 52.3%, 26.3%로 증가하였고 반면, 사회활동은 18.5%에서 10.1%로 기타는 19.5%에서 7.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생 또한 50대에 동영상콘텐츠 시청이 36.8%, 휴식활동 12.2%였으나 60대에는 각 41.9%, 26.5%로 증가하였고 반면, 사회활동은 18.0%에서 10.9%로, 기타는 20.7%에서 1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생 역시 40대에는 동영상콘텐츠 시청이 34.2%, 휴식활동 12.3%였으나 50대에는 각 37.9%, 25.5%로 증가하였고 반면 사회활동은 14.5%에서 7.9%로, 기타는 23.9%에서 1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령대의 코호트 간 비교를 볼 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동영상콘텐츠 시청, 휴식활동은 증가하고, 사회활동과 기타 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중·고령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에 비해 사회적 교류보다 영상 중심의 개인형 여가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고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개인 여가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 휴식과 개인적 즐거움 추구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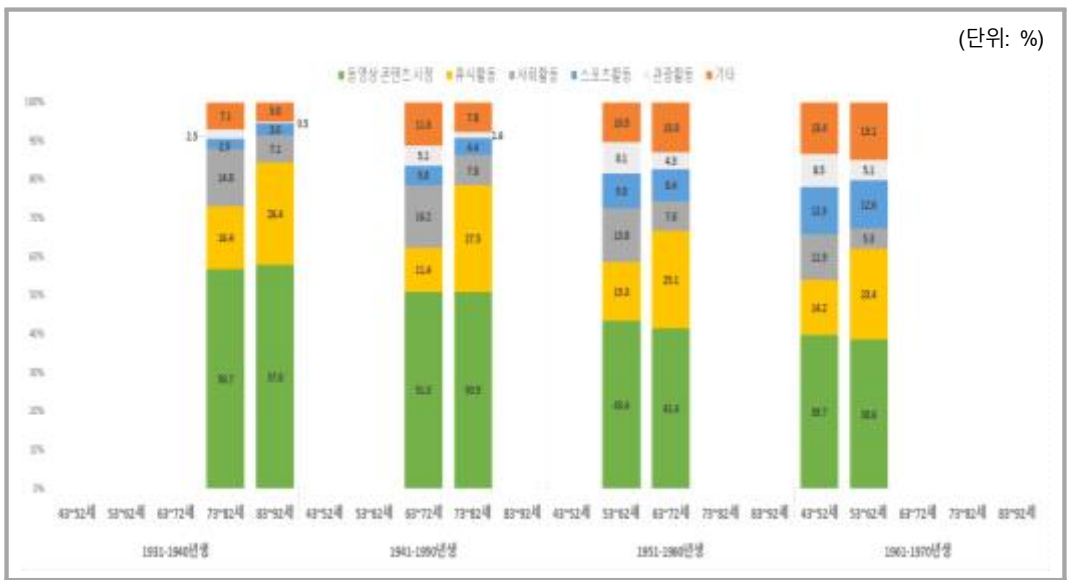
<그림 8-6> 출생코호트별 주말 여가활동(전체)

주말 여가활용의 성별 비교를 볼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자, 여자 모두에서 동영상콘텐츠 시청과 휴식활동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사회활동이나 기타 활동이 감소하는 양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녀 간에는 활동 구성의 폭과 변화 속도에서 다소 상이한 특징이 나타난다. 남자의 여가활동이 점차 단순화되는 반면, 여자의 여가활동 구성의 다양성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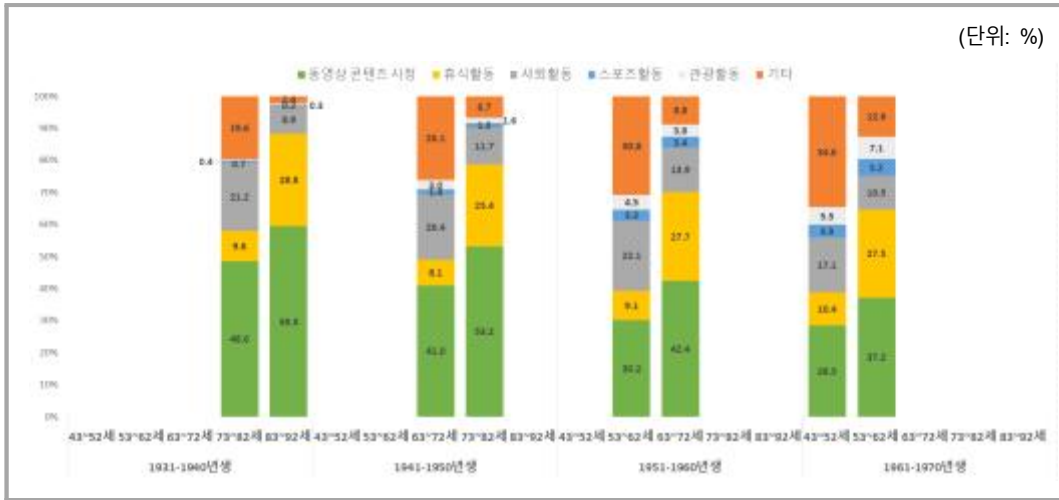
예를 들면, 동일 코호트 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때 여자는 사회활동과 기타 활동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1960년대생은 40대에서 사회활동과 기타 활동이 여자는 각각 17.1%, 34.6%인 반면 남자는 11.9%, 13.4%로 나타났고 1950년대생은 50대에서 여자는 각각 22.1%, 30.8%인 반면 남자는 13.8%, 10.5%로 나타났다. 또한 1940년대생은 60대에서 여자는 각각 20.4%, 26.1%인 반면 남자는 16.2%, 11.3%로 나타났다. 1930년대생 또한 70대에서 여자는 각각 21.2%, 19.6%인 반면 남자는 14.8%, 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는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주된 여가활동이 TV 시청, 영상 시청, 휴식과 같이 단순하고 개인 중심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반해 여자는 가사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여가활동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7> 출생코호트별 주말 여가활동(남자)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8> 출생코호트별 주말 여가활동(여자)

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은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여가활동 항목과 동일하게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조사자료이며 비교 시계열인 2013년 자료를 같이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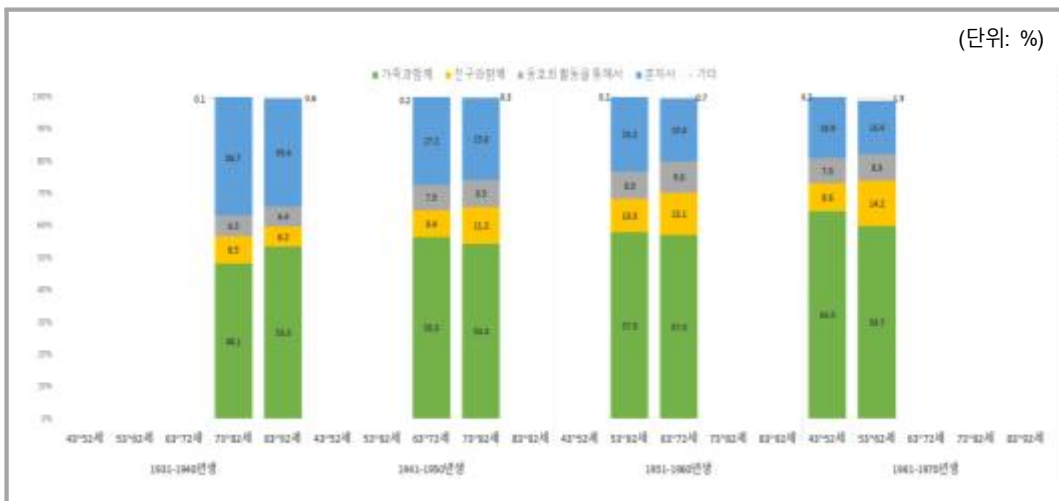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항목의 선택지는 2013년 조사에서는 5개(‘가족’, ‘친구(연인 포함)’,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 ‘기타’) 선택지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 조사부터는 ‘직장동료’ 선택지가 추가되어 6개의 선택지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동료’로 응답한 사람들을 ‘기타’로 포함하여 자료를 산출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항목은 2007년부터 주말(휴일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확보와 여가시간이 더 긴 ‘주말(휴일 포함)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해 산출하였음도 밝힌다.

주말(휴일 포함)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코호트별 분석결과 연령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혼자서’가 증가하고 ‘가족과 함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코호트별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930년대생은 70대에서 80대가 되면서 ‘가족’은 48.1%에서 53.3%로 증가한 반면 ‘혼자서’와 ‘친구’는 각 36.7%, 8.5%에서 33.4%, 6.2%로 감소하였다. 1940년대생은 60대에서 70대가 되면서 ‘가족’과 ‘혼자서’는 각 56.3%, 27.2%에서 54.4%, 25.6%로 감소한 반면, ‘친구’와 ‘동호회’는 각 8.4%, 7.9%에서 11.2%, 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생 또한 50대에서 60대로 오면서 ‘가족’과 ‘혼자서’는 각 57.8%, 23.2%에서 57.0%, 19.6%로 감소한 반면, ‘친구’와 ‘동호회’는 각 10.3%, 8.5%에서 13.1%, 9.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생 또

한 40대에서 50대로 가면서 ‘가족’과 ‘혼자서’는 각 64.5%, 18.9%에서 59.7%, 16.4%로 감소한 반면, ‘친구’와 ‘동호회’는 각 8.6%, 7.8%에서 14.2%,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 연령대의 코호트 간 비교를 볼 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이전 코호트에 비해 ‘가족’, ‘친구’, ‘동호회’는 증가한 반면 ‘혼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이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가족과 친구, 단체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혼자서 하는 활동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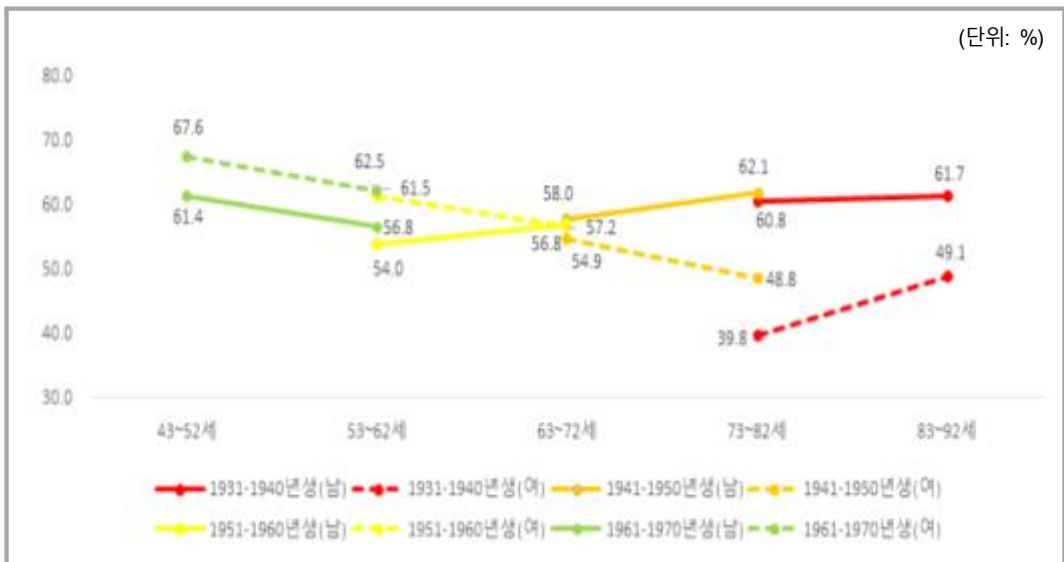
<그림 8-9> 출생코호트별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중·고령기의 주말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의 분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과 ‘혼자서’ 두 선택지에 대해서 코호트별로 성별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과 함께 주말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1940년대생에서는 60대에서 남자와 여자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70대로 진입하면서 남자는 58.0%에서 62.1%로 증가한 반면 여자는 54.9%에서 48.8%로 감소하여 성별 격차가 확대되었다. 1950년대생에서는 성별 역전 현상이 확인된다. 즉 50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지만 60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지는 전환점이 나타났다. 반면에 1960년대생은 전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 비율이 높고 남녀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세대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또한 1930년대생은 70대와 80대로 되면서 남자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한 반면, 여자는 70대에 39.8%로 낮았으나 80대에는 49.1%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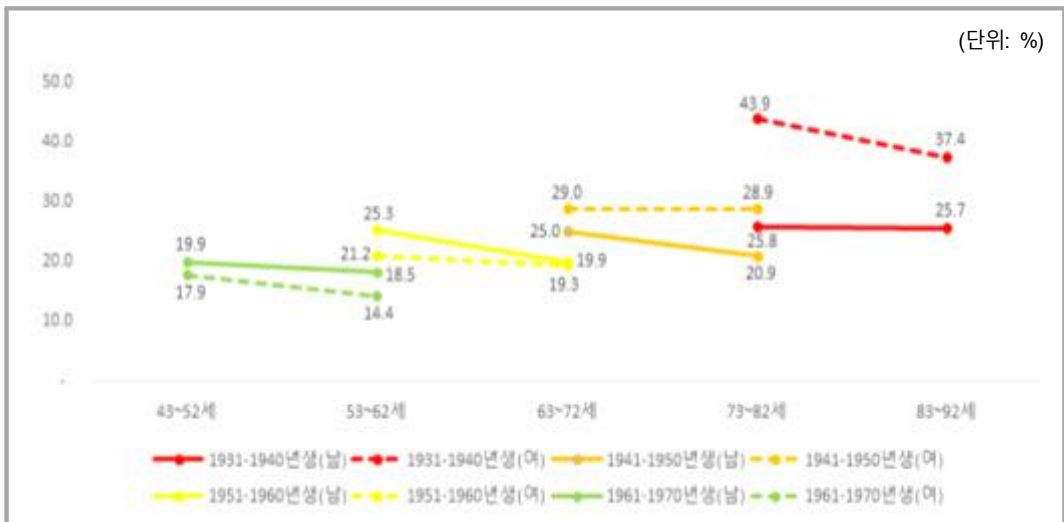
다음으로 혼자서 주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코호트별 성별 패턴이 크게 달랐다.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는 여자가 혼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특히 1930년대생 여자는 70대에 43.9%, 80대에 37.4%로 동년 남자(25%대 중 후반)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에서는 중년기부터 일관되게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높았다. 예를 들어 1960년대생의 40대에 남자는 19.9%, 여자는 17.9%였고 50대에는 남자 18.5%, 여자 14.4%로 남자가 2~4%p 더 높았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에서 남자는 중년기부터 개인 중심의 여가 선호 경향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0> 출생코호트별·성별 가족과 함께 주말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1> 출생코호트별·성별 혼자서 주말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

3. 적극적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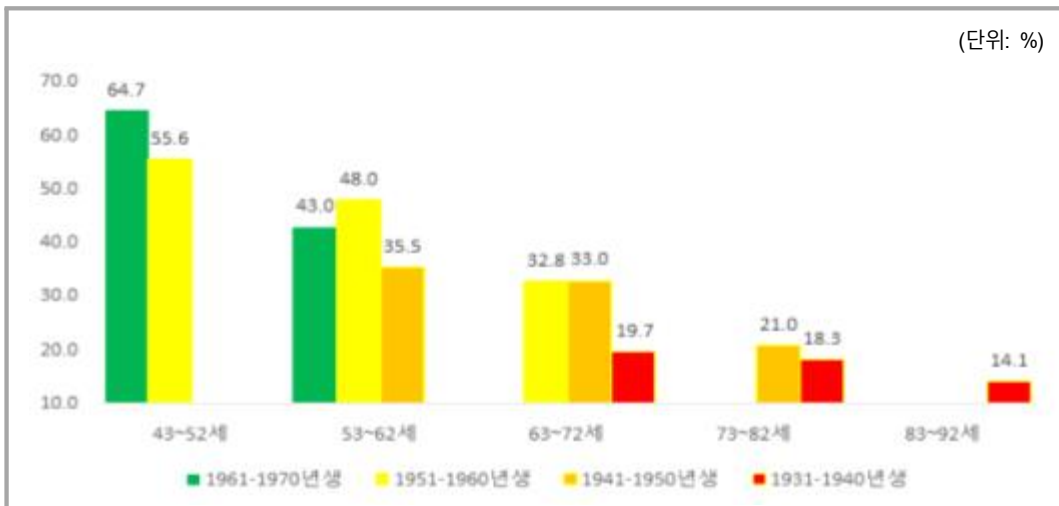
적극적 여가활동 분석을 위해 사회조사 ‘여가’ 부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조사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10년 간격의 2013년, 200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3년에는 여가 부분의 조사를 하지 않아 인접한 2004년 자료를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비교 연령대에서 1세의 차이가 나지만 비교의 편의상 2003년 자료 기준의 연령대로 표시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가. 독서

적극적 여가활동 분석의 첫 번째 지표로, 독서는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책은 전자책(e-book)을 포함하며 교과서 및 참고서는 제외하여 조사되었다. 독서는 개인의 인지적 자극과 정신적 여유를 동시에 반영하는 적극적 여가 유형으로 여가의 질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코호트별 독서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인다. 이는 고령기의 신체적 제약, 시력 저하 등 연령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체로 독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의 향상과 e-book 등 디지털 콘텐츠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코호트 특성의 차이로 해석된다. 특히 60년대생은 40대에 64.7%, 50대에 43.0%로 높은 독서율을 보이는데 이는 이전 코호트보다 높은 교육 수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 접근성을 가진 세대 특성의 영향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사회조사(2004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2> 출생코호트별 독서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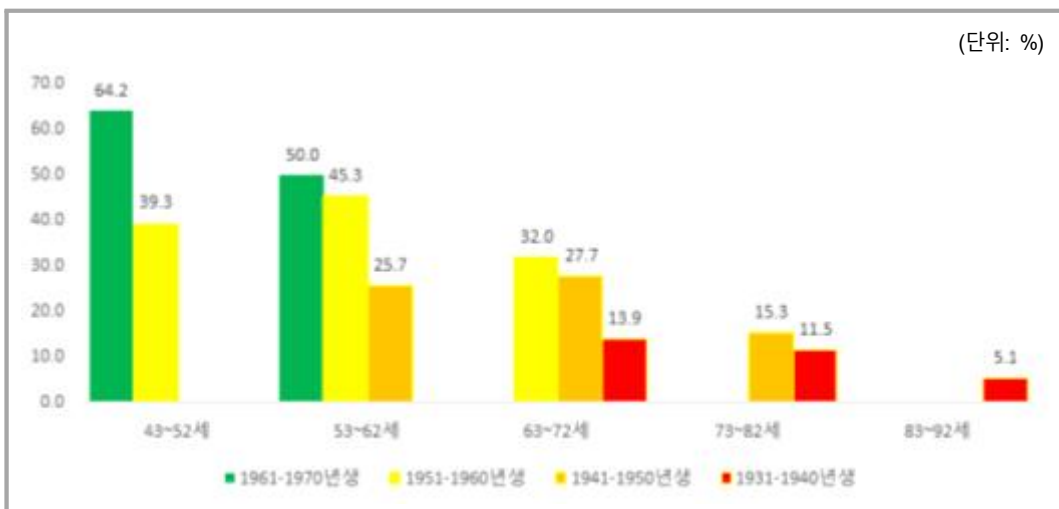
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인구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화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음악회·연주회·콘서트 관람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21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변화 반영을 위해 ‘온라인 관람’에 대한 선택 항목을 한시적으로 추가했으나, 2023년에는 삭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련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1960년대생은 40대 64.2%, 50대 50.0%로 가장 높은 관람률을 유지하며, 문화활동이 일상화된 세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1950년대생은 40대 39.3%, 50대 45.3%, 60대 32.0%로 50대에 제일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노년기에 들어서며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안정기와 사회활동의 활발함이 결합된 시기에서 문화소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1940년대생은 50대 25.7%, 60대 27.7%, 70대 15.3%로 감소하였으며, 1930년대생은 60~80대에 10% 내외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코호트 간의 이러한 차이는 소득 수준, 문화 접근성, 여가시간 격차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04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3> 출생코호트별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인구 비율

한편,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2021년 사회조사 전체(13세 이상)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비율은 2019년(66.2%)에 비해 약 1/3 수준인 2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영화관·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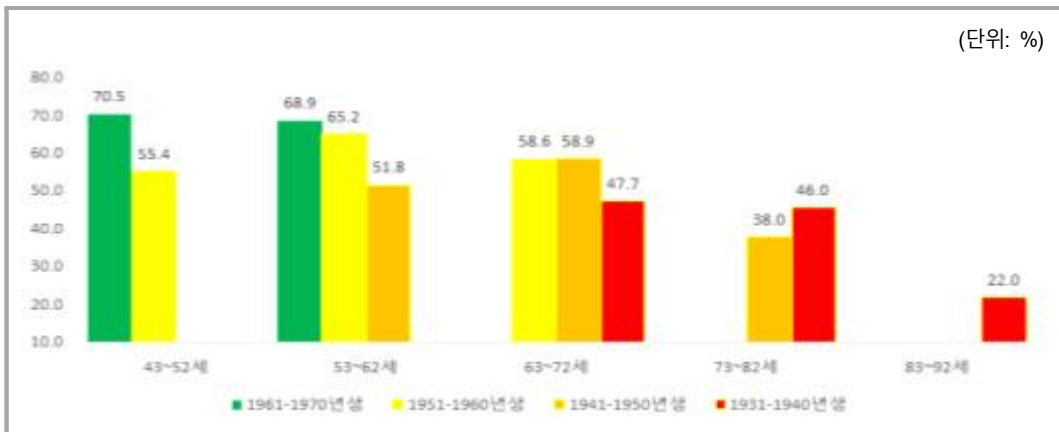
장 등의 운영 제한 등으로 인해 전 세대에서 관람 경험이 급감하였다. 이후 2023년에는 제한이 해제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령층 코호트에서는 여전히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2023년 자료를 활용한 산출값(1960년대생 50대, 1950년대생 60대, 1940년대생 70대, 1930년대생 80대)에 해당하는 값들은 팬데믹 영향과 연령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레저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관광명소, 해수욕장, 산림욕장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로 다양한 야외·체험형 시설을 방문한 경험을 의미하며, 적극적 여가활동 중에서도 체험적·외부 활동적 성격이 강한 지표이다.

레저시설 이용 비율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코호트별로 볼 때 1960년대생은 40대 70.5%, 50대 68.9%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며, 1950년대생은 40대 55.4%, 50대 65.2%, 60대 58.6%로 50대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완만히 감소하였다. 1940년대생은 50대 51.8%, 60대 58.9%, 70대 38.0%로 70대 이후 감소 폭이 크며, 1930년대생은 60대 47.7%, 70대 46.0%, 80대 22.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호트 간 차이를 볼 때 40대에서는 1960년대생이 1950년대생보다 약 15%p 이상 높고, 50대에서는 1950년대생이 1940년대생보다 약 1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최근 코호트일수록 레저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04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4> 출생코호트별 레저시설 이용 인구 비율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레저시설 이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2021년 사회조사 전체(13세 이상)의 레저시설 이용 비율은 43.5%로 2019년(73.4%)에 비해 큰 폭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2023년에는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령층에서는 회복 속도가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3년 자료를 활용한 산출값(1960년대생 50대, 1950년대생 60대, 1940년대생 70대, 1930년대생 80대)들은 팬데믹 영향과 연령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국내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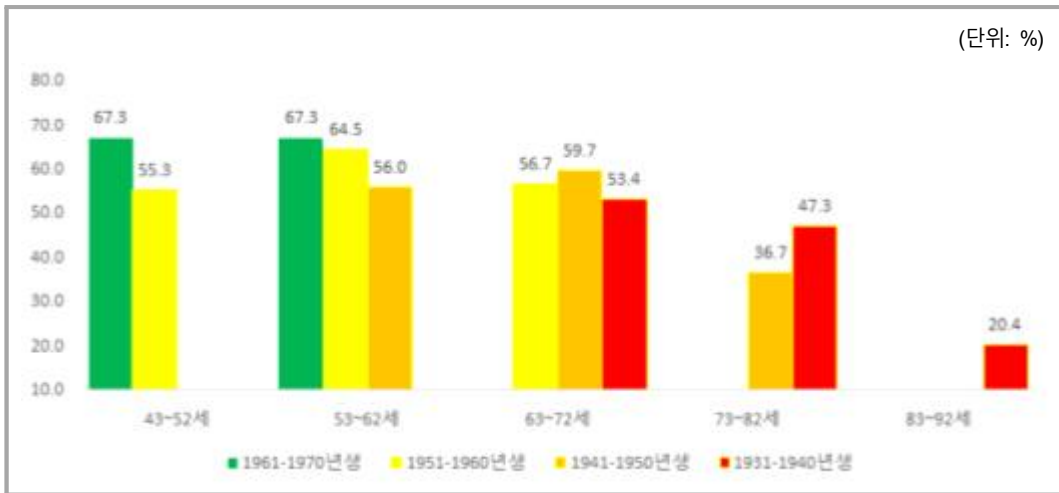
국내 관광 여행자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비율로 숙박 및 당일 여행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동 지표는 개인의 이동성과 여가 접근성, 경제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적극적 여가활동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1960년대생은 40대와 50대에서 모두 67%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1950년대생은 40대 55.3%에서 50대 64.5%로 증가한 뒤, 60대 56.7%로 소폭 감소하였다. 1940년대생은 50대 56.0%, 60대 59.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대 36.7%로 급감하였다. 1930년대생은 60대 53.4%, 70대 47.3%로 나타났고, 80대에 20.4%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하락은 건강 제약과 이동성 감소 등 연령효과에 더해, 여행비용 부담 및 교통 접근성의 차이 등 세대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코호트 간 차이를 볼 때 40대 구간에서는 1960년대생이 1950년대생보다 약 12%p 높고, 50대에서는 1950년대생이 1940년대생보다 약 8%p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최근 코호트일수록 국내 관광 여행자 비율은 상승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그간의 교통 인프라 확충, 소득 향상, 여가문화 확산 등 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국내 관광 참여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 관광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던 1980~1990년대에 중·장년기를 경험한 1950~1960년대생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국내 여행 참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세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세대적 경험은 향후 고령기에도 비교적 높은 관광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 여행에도 충격을 주었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사회조사 전체(13세 이상) 결과값은 39.8%로 2019년(69.2%)에 비해 약 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2023년에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고령층에서는 회복 속도가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관광 여행자 비율에서도 2023년 자료를 활용한 산출값(1960년대생 50대, 1950년대생 60대, 1940년대생 70대, 1930년대생 80대)들은 팬데믹 영향과 연령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사회조사(2004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5> 출생코호트별 국내 관광 여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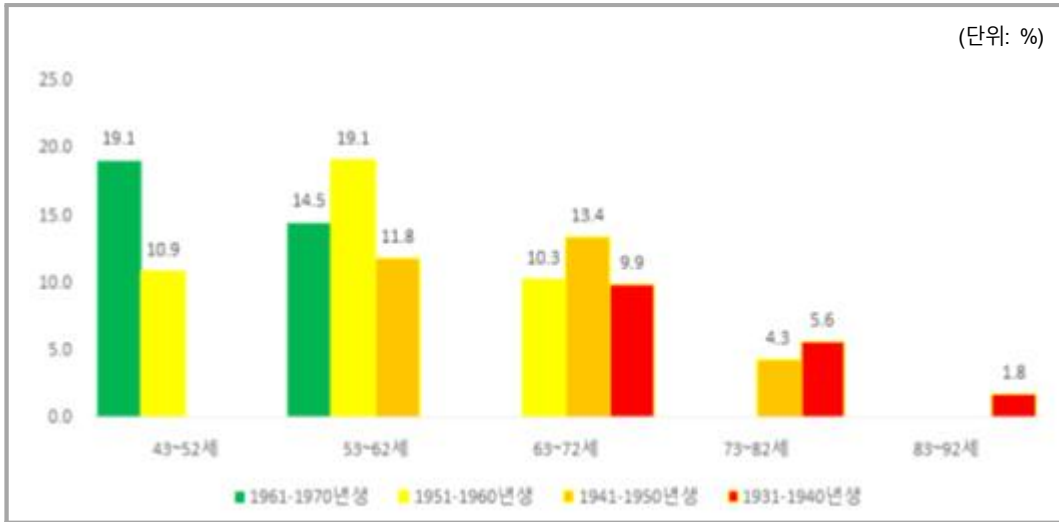
마. 해외 여행

해외 여행자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해외 이동성과 경제적 여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최근 코호트일수록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1960년대생은 40대 19.1%, 50대 14.5%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해당 세대가 해외 여행이 보다 자유로워진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며 해외 여행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함께 확장된 영향을 받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950년대생은 40대 10.9%에서 50대 19.1%로 상승하였으나, 60대에서는 10.3%로 감소하였다. 1940년대생은 50대 11.8%, 60대 13.4%로 완만히 증가한 뒤 70대 4.3%로 급감하였고, 1930년대생은 60대 9.9%, 70대 5.6%, 80대 1.8%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해외 여행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다. 2021년 사회조사 기준 해외 여행자 비율은 1.1%로 2019년(30.4%) 대비 급감하였으며, 2023년에도 15.1%로 회복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코호트별 값(1960년대생 50대, 1950년대생 60대, 1940년대생 70대, 1930년대생 80대)은 고령기 연령 효과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회복 속도 차이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종합하면, 해외 여행은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개방성이 누적될수록 증가하며, 최근 코호트일수록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50~1960년대생은 해외여행이 점차 보편화되던 사회적 환경을 경험한 세대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향후 고령기에도 일정 수준의 국제 이동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사회조사(2004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6> 출생코호트별 해외 여행자 비율

4. 여가활용 만족도

코호트별 여가활용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가활용 만족도는 사회조사의 ‘여가’ 부문에서 홀수년에 조사되는 항목이며,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조사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2023년,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서 적극적 여가활동 지표와 같이 2004년에도 여가 만족도 항목의 조사는 있었지만 선택지가 ‘만족/ 불만족’ 2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3년과 2023년에 사용된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세분화된 선택지와의 차이로 시계열 분석 시 일관된 비교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2013년, 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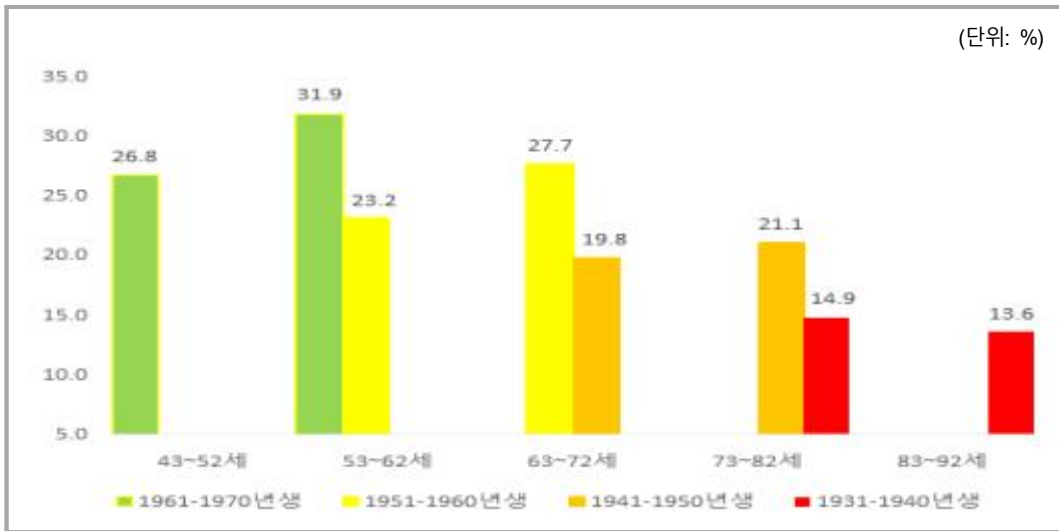
또한 여가활용 만족도는 ‘평소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만족+만족’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하는 현상은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제약, 사회 관계 축소, 경제적 부담 등이 여가활용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나는 연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코호트의 10년 전과 비교 시에는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1930년대생은 70대에서 80대로 가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간 비교를 볼 때 50대에서는 1960년대생이 1950년대생보다 약 8%p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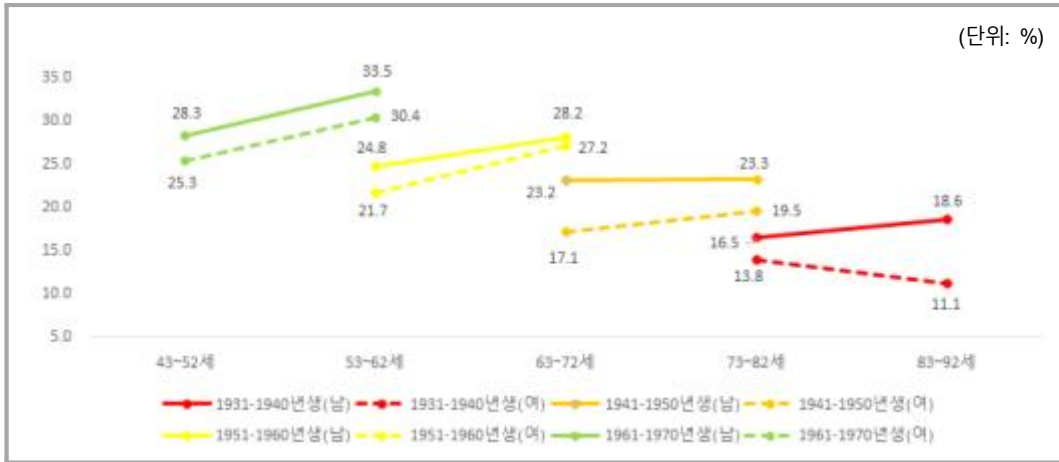
게 나타났고 60대에서는 1950년대생이 1940년대생보다 약 8%p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대에서는 1940년대생이 1930년대생보다 약 6%p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여가활동 인식에 영향을 미친 코호트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7> 출생코호트별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를 성별로 볼 때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코호트는 성장 과정과 사회적 경험의 차이가 반영되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30년대생은 전체 코호트 중 여가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고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가를 ‘노동의 여유’로 경험했던 세대적 배경과 여자의 낮은 교육과 사회참여 경험 등이 반영되어, 80대에서 여자의 만족도가 감소하며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940년대생 남자는 일관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여자의 만족도가 70대에 들어서면서 상승해 성별 차이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화·도시화 시기를 성장 배경으로 남자 중심의 사회활동 네트워크가 유지되지만, 자녀 독립 이후에는 여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만족도가 회복되는 양상으로 생각된다. 1950년대생은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코호트로 50대, 60대 모두 남녀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특히 60대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한다. 이는 동 코호트가 고도성장기와 교육 확대로 여가 접근성, 문화시설 이용 경험, 사회활동 기반 등이 남녀 모두에게 확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생은 여가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코호트로 주5일 근무제, 취향 기반 여가문화 확산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남녀 모두 4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8> 출생코호트별·성별 여가활동 만족도

한편 여가활동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회조사의 ‘주관적 만족도’ 항목을 활용하였다. 주관적 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만족+만족’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산출하였고 여가활동 만족도와 동일한 시계열 작성을 위해 2013년, 2023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출생코호트별로 여가 만족 여부에 따라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코호트와 연령구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먼저 여가활동 만족 집단은 모든 코호트에서 50% 이상의 주관적 만족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1960년대생은 40대에 60.6%, 50대에 67.6%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여가활동이 전반적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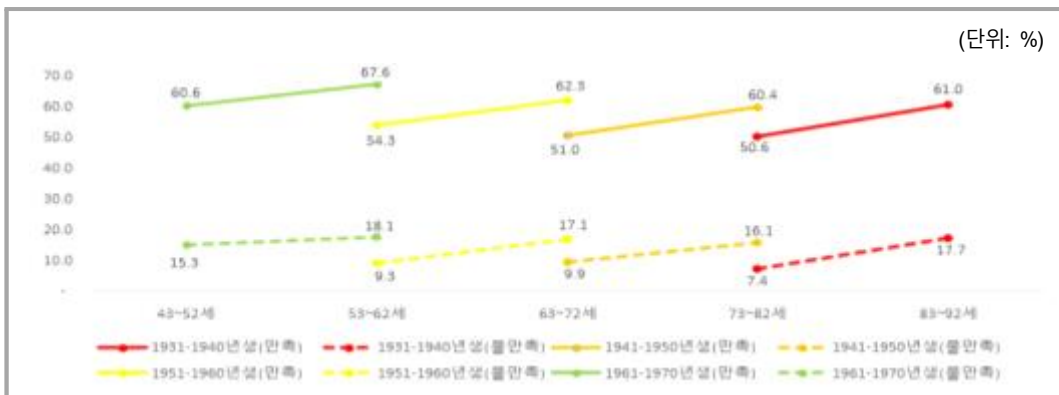
반면 여가활동 불만족 집단은 모든 코호트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수준(7~18%)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1950년대생은 동일 연령대에서 여가활동 만족 집단이 54.3~62.3%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여가활동 불만족 집단은 9.3~17.1% 수준에 그쳤다. 특히 1960년대생의 경우에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 불만족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15.3%→18.1% 수준에 불과해, 여가활동 만족 여부가 전반적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 여부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20>의 ‘여가활동 만족·불만족 그룹의 주관적 만족도 차이’ 그래프에서는 코호트별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네 개 코호트 모두에서 여가활동 만족 그룹과 불만족 그룹의 주관적 만족도 차이는 40%p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가활동의 질이 중·고령기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1960년대생은 40대에서 45.3%p, 50대에서는 49.5%p의 격차를 보이며 네 개 코호트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여가활용이 삶의 주관적 만족도의 필수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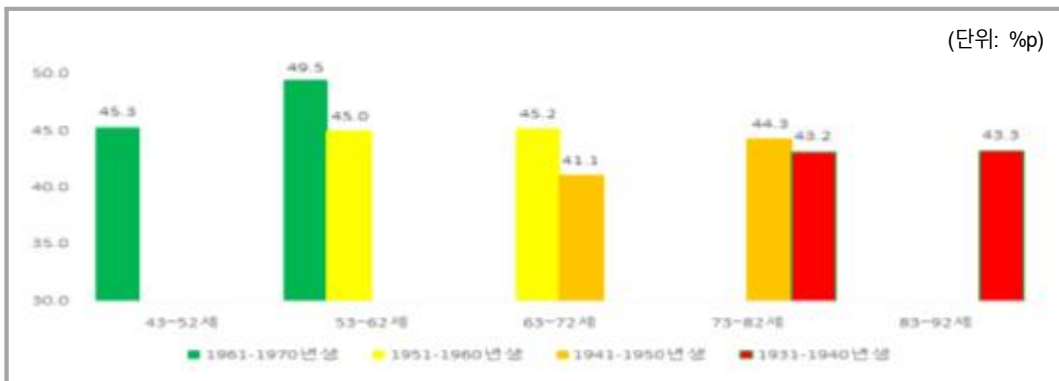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개별 코호트의 주관적 만족도 변화를 볼 때, 여가활용 만족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주관적 만족도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기대수준 조정과 정서적 안정으로 인한 긍정적 연령효과가 불만족 집단보다 만족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는 중·고령기 전반에서 삶의 주관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며,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이는 향후 고령층에 진입할 베이비붐 후세대와 1960년대생 코호트의 여가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임을 예측하게 하며, 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19> 출생코호트별 여가활용 만족·불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 주관적 만족도 차이=(여가활용 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여가활용 불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

<그림 8-20> 출생코호트별 여가활용 만족·불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 차이

제3절 사회적 관계망과 단체 참여

1.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고립도

가.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한 개인과 가족 및 가족 외 사회 구성원 간의 구조적·기능적 관계 체계를 의미하며(임소현 외, 2021) Barnes(1954)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강태석, 2017).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강태석, 2017; 장수지, 2008; Antonucci, 1985) 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적인 측면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는 개인의 관계를 유형, 크기, 접촉 빈도, 근접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의 내용에 초점을 두며 주로 사회적 지지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지선, 2012; 장영희, 2013).

본 연구에서 코호트별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분의 사회적 관계망 항목에서 조사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분은 ‘여가’ 부문과 동일하게 홀수년에 조사됨에 따라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자료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항목은 2009년에 신설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자료와, 10년 간격의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항목은 특정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으로 산출하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가사 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 복지 단체의 활동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항목으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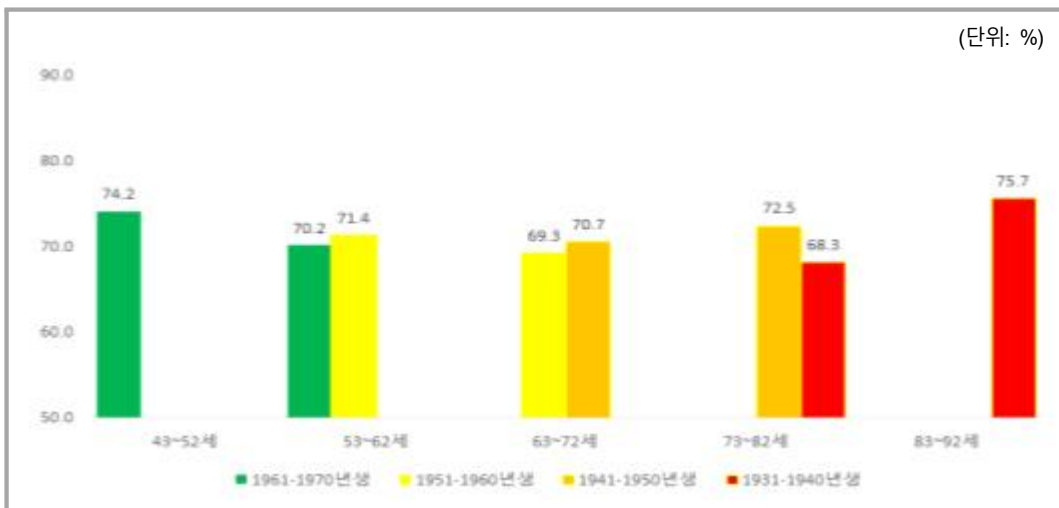
1) 집안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코호트별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코호트에서 약 68~7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코호트별로 살펴볼 때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은 6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70% 안팎의 비율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세대는 가족·이웃 중심의 생활환경을 경험한 시기가 길었고, 성인기 전반에 걸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 고령기에 이르러서도 관계망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40대에서 60대에 걸쳐 완만한 감소를 보인다. 1960년대생은 40대 74.2%에서 50대 70.2%, 1950년대생은 50대 71.4%에서 60대 69.3%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절대 수준은 70% 전후로 여전히 높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관계망이 조금씩 축소되는 흐름이 관찰되는 점은 이전 코호트와 차별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주거 이동이 잦아지고 가족 규모가 줄어드는 등, 관계 형성과 유지 방식이 개인화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세대적 경험과도 일정 부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고령층 시기인 83~92세에서 나타나는 높은 비율과 관련하여 사회조사는 표본틀 구성 시 조사하기 어려운 섬 지역과 기숙시설·특수사회시설(요양원 등)을 제외하고 조사(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시설에 입소한 초고령층은 표본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조사에서 관측되는 초고령층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비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추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80대 후반의 높은 수치는 관계망 강화뿐 아니라 표본 구성의 특성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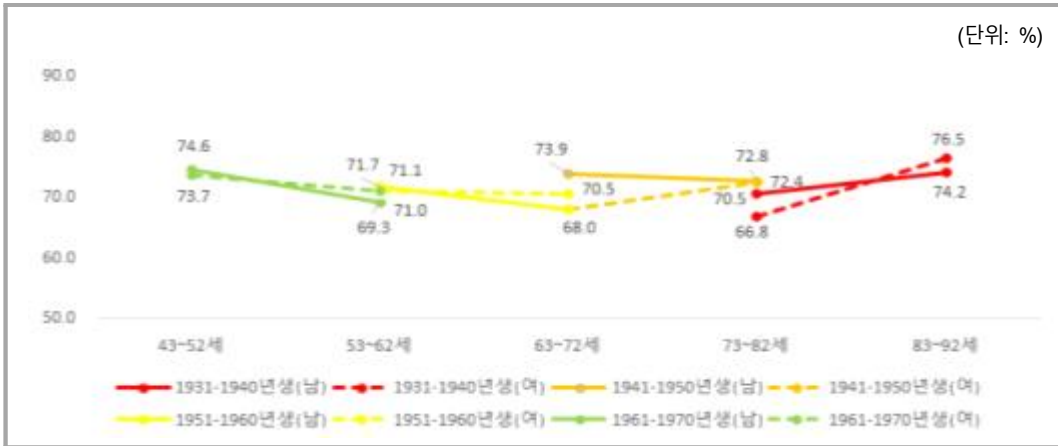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1> 출생코호트별 집안일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는 남녀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일부 연령대에서 남자가 약간 높거나 1930년대생의 80대와 같이 여자의 비율이 소폭 높은 사례도 나타난다. 그러나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1960년대생의 50대와 1950년대생의 60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자의 사회적 접촉과 관계 참여가 확대된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2> 출생코호트별·성별 집안일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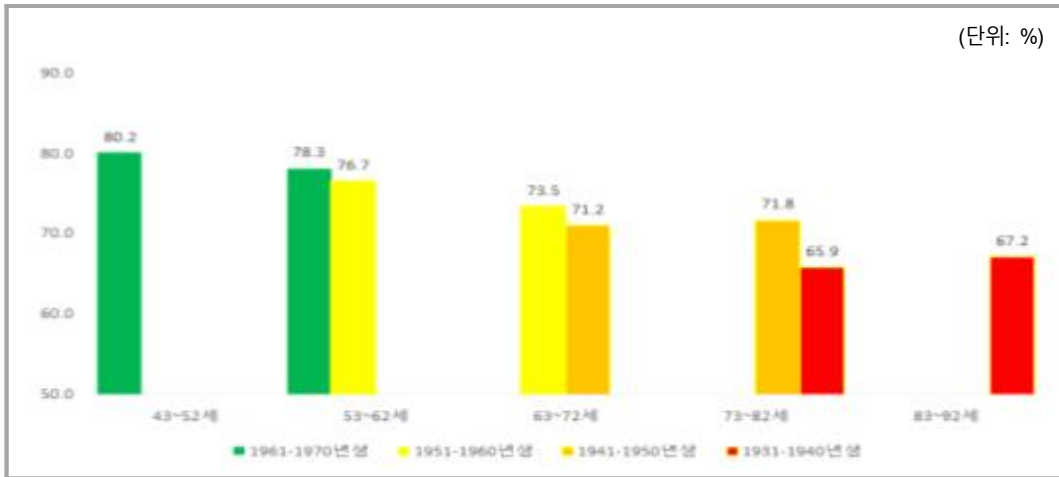
2) 대화 상대가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코호트별로 보면, 1960년대생은 40대 80.2%에서 50대 78.3%로 소폭 감소했지만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1950년대생은 50대 76.7%에서 60대 73.5%로 연령 증가에 따라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생의 경우 60대 71.2%, 70대 71.8%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1930년대생 또한 70대 65.9%, 80대 67.2%로 상승폭은 미미하다. 또한 코호트 간의 비교를 보면 50대, 60대, 70대 모두 최근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대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생은 40대에 남자 77.4%, 여자 83.0%, 1950년대생은 50대에 남자 73.7%, 여자 79.7%로 각각 5~6%p 차이가 확인된다. 이는 여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친구·이웃·가족 간 정서적 교류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는 반면 남자는 직장 중심의 관계가 퇴직 후 급격히 축소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1940년대생에서도 60대에 남자 69.4%, 여자 72.7%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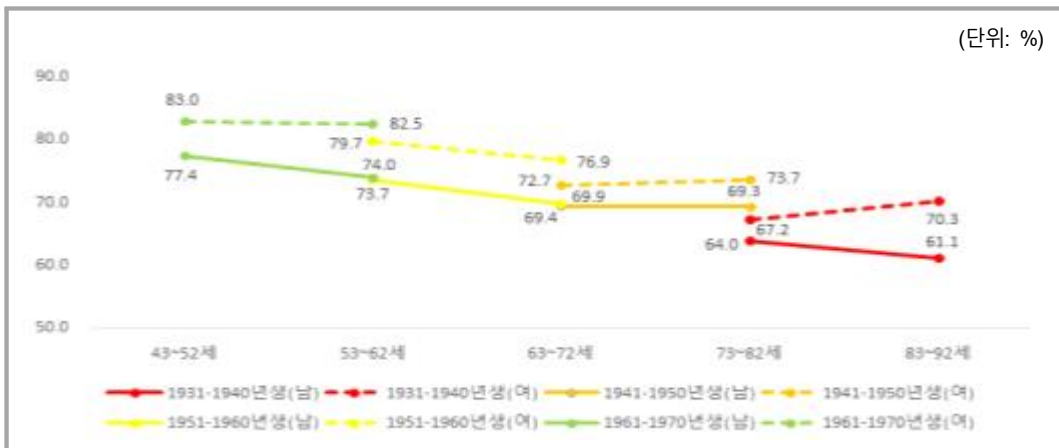
1930년대생은 남자는 70대(64.0%)에서 80대(61.1%)로 가면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70대(67.2%)에서 80대(70.3%)로 갈 때 오히려 상승하게 되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후기 고령기에 여자에 비해 남자의 관계망 단절 위험이 커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0년대생 여자의 초고령층(83~92세) 구간에서 상승은 전술한 사회조사의 표본 설계상의 한계도 일정 부분 작용하여 ‘도움 받을 사람 있음’ 비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추정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3> 출생코호트별 대화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사회조사(2013, 2023), 국가데이터처.

<그림 8-24> 출생코호트별·성별 대화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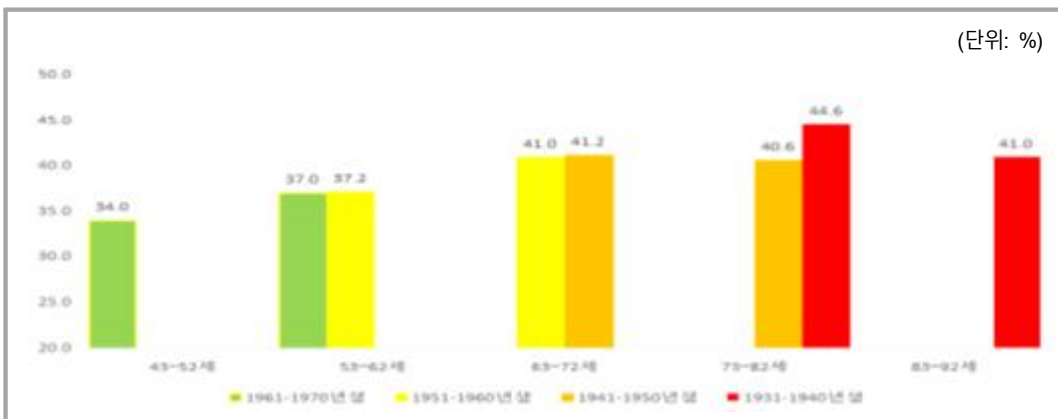
나.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고립도는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국민 삶의 질, 2023)되며, 앞서 살펴본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사회조사에서 사회적 관계망 항목이 2009년에 신설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항목과 동일하게 2023년 자료와, 10년 간격의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도 지표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특히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회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국민 삶의 질, 2023).

사회적 고립도 산출 결과를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생은 40대 34.0%에서 50대 37.0%로 중년기에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50년대생 역시 50대 37.2%에서 60대 41.0%로 상승하여, 두 코호트 모두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이는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직장과 주거 이동, 생활권이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기 쉽지 않은 측면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940년대생은 60대 41.2%, 70대 40.6%로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폭이 매우 작았고, 1930년대생은 70대 44.6%에서 80대 41.0%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1950년, 1960년대생과 대비된다. 또한 코호트 간 비교 시 동일한 70대 구간에서 1940년대생보다 1930년대생의 고립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더 큰 상승 폭을 보이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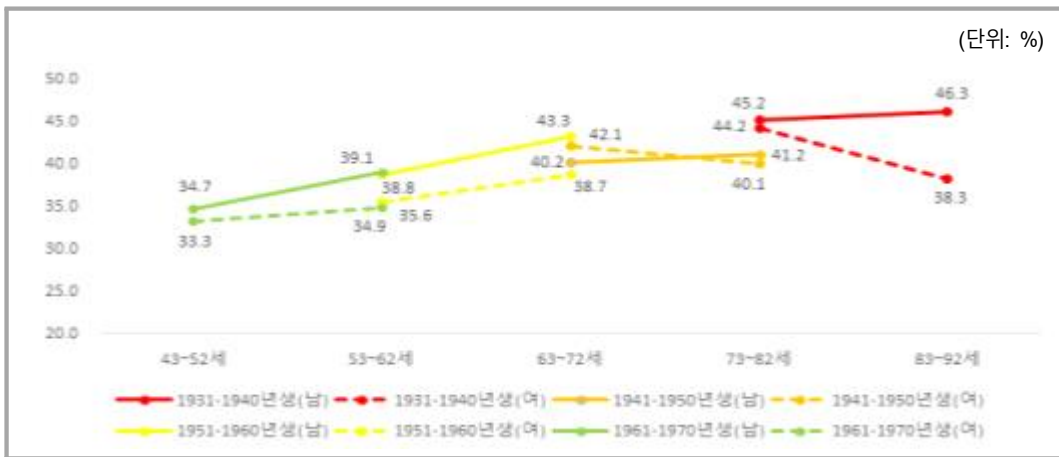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5> 출생코호트별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고립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고립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1960년대생은 40대보다 50대에 격차가 더 커지고, 1950년대생 또한 50대에 남자(38.8%)가 여자(35.6%)보다 더 크고, 60대에서는 남자(43.3%), 여자(38.7%)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1940년대생은 60대에는 남자

40.2%, 여자 42.1%로 여자가 소폭 크지만 70대에 들어와서는 남자는 41.2%로 상승하지만 여자는 40.1%로 감소함에 따라 남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1930년대생은 70대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80대에 들어서 남자는 46.3%로 약간 증가하고 여자는 38.3%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남녀 격차가 크게 나타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과거 세대일수록 여자는 친족·이웃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 남자는 배우자 중심의 관계망 의존도가 높아 연령 증가 시 고립도가 높게 나타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인다.



자료: 사회조사(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6> 출생코호트별·성별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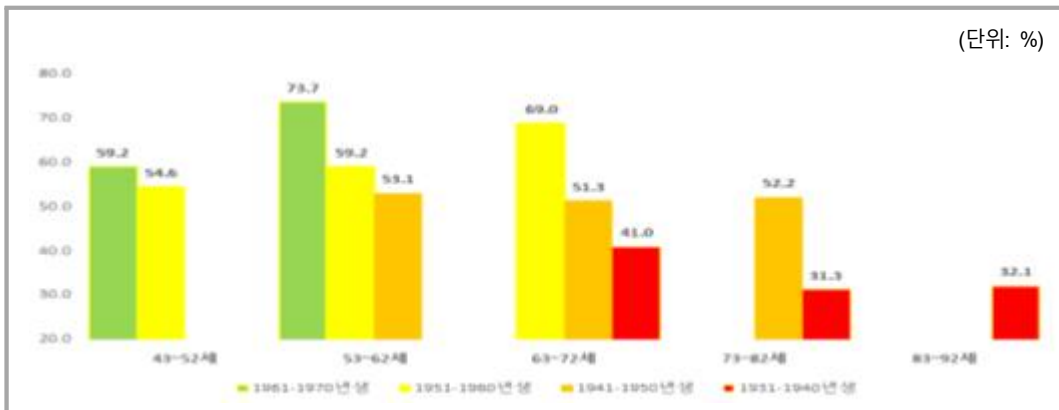
2. 단체 참여

중·고령기 단체 참여 분석을 위해 사회조사의 ‘사회 참여’ 부문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조사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10년 간격의 2013년, 200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체 참여’ 조사 항목은 1999년 ‘사회단체 참여도’ 항목으로 신설되어 2003년부터 ‘단체 참여’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선택지 예시의 수정·삭제·보완이 있어 왔고, 2023년 조사에서는 ‘친목·사교단체’, ‘취미·스포츠·여가활동 단체’, ‘종교단체’, ‘시민 사회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등 9개의 선택지로 조사 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기존의 단체별 3순위 제한 응답에서 참여한 모든 단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문항 구성이 변경되었다. 또한 개별 단체 참여 분석과 관련해서는 중·고령기에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친목·사교 단체’, ‘취미·스포츠·여가활동 단체’, ‘종교 단체’ 등 3개 단체참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전체 단체 참여자

전체 단체 참여자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친목·사교, 취미·스포츠·여가활동, 종교단체 등의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하나 이상 단체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사회활동으로서 단체 참여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형성이 궁극적으로 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진석, 2013) 따라서 단체 참여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실제 사회활동으로 확장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코호트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60년대생은 40대 59.2%, 50대 73.7%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1950년대생도 40대 54.6%, 50대 59.2%, 60대 69.0%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직장 내 모임, 취미·운동 동호회, 종교·지역 모임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를 경험한 세대로, 중·장년기로 갈수록 단체 활동이 더욱 늘어나는 흐름과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1940년대생은 50대 53.1%, 60대 51.3%, 70대 52.2%로 연령대별 변화가 거의 없고,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1930년대생은 60대 41.0%에서 70대 31.3%로 크게 감소했다가 80대에도 32.1%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1930년대생의 경우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동이 불편해지거나 함께 활동하던 연령대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단체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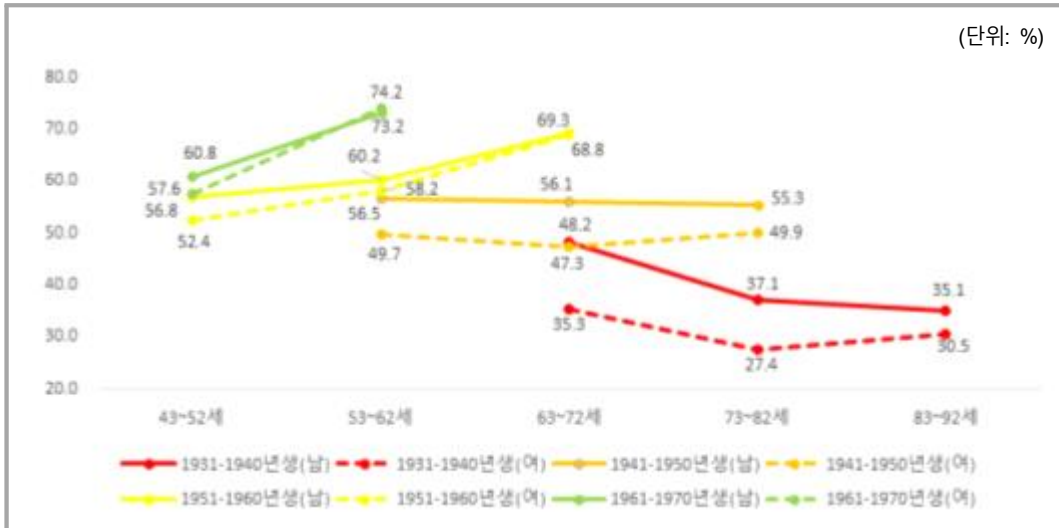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7> 출생코호트별 전체 단체 참여자 비율

성별로 보면,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단체참여 비율이 높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1930년대생은 60대~80대 모두 남녀 격차가 크지만, 남자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남녀 격차가 점차 좁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1940년대생은 50대~70대에서 남녀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1950·1960년대생은 40대~60대에서 남녀 격차가 1~4%p

내외로 작아진다. 이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자의 취미·직장·지역 기반 참여가 늘어남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8> 출생코호트별·성별 전체 단체 참여자 비율

나. 친목·사교 단체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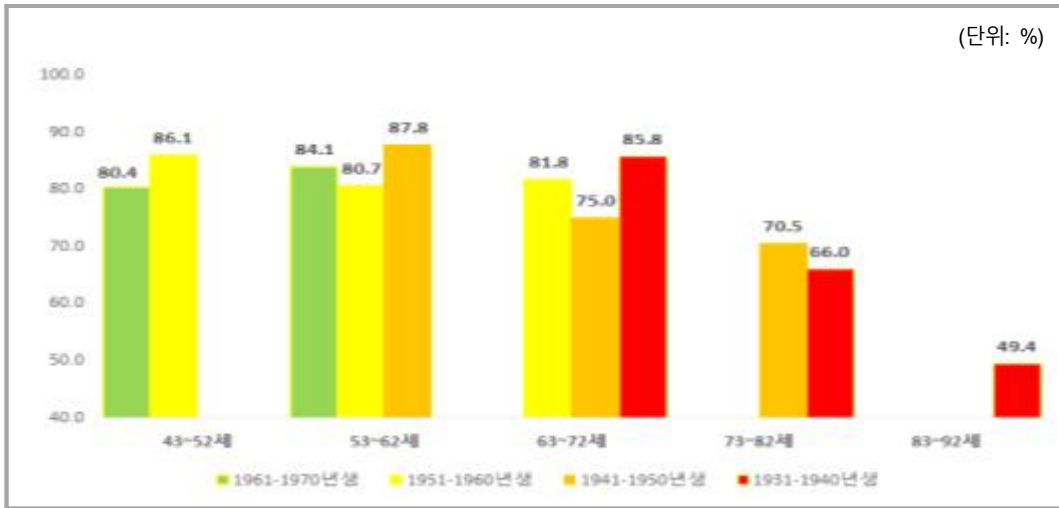
친목·사교 단체 참여자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친목·사교 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친목·사교 단체 참여자 비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코호트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1960년대생은 40대 80.4%에서 50대에 84.1%로 참여가 증가한다. 이들은 도시화와 직장 내 교류가 활발해지던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직장모임·동호회·친구·동료 중심의 친목 활동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험을 갖고 있어 중년기로 갈수록 참여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50년대생은 40대에 86.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50대에는 80.7%로 소폭 감소하지만, 60대에 다시 81.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직장 기반 네트워크와 지역 기반 관계망이 동시에 작동했던 세대로, 연령 증가 과정에서도 80% 내외의 높은 참여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인다.

1940년대생은 50대에 87.8%에서 60대 75.0%, 70대 70.5%로 연령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강한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성인기를 보낸 세대이지만, 고령기에 들어서면서 이동성, 건강 등의 문제로 사회적 접촉 기회가 줄어들며 기존 친목 활동이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생은 60대 85.8%에서 70대에는 66.0%로 크게 감소하고, 80대 49.4%까지 떨어지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 세대는 중년까지는 지역·이웃 중심의 사교 네트워크가 강했지만,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기존 모임이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29> 출생코호트별 친목·사교 단체 참여자 비율

다. 종교 단체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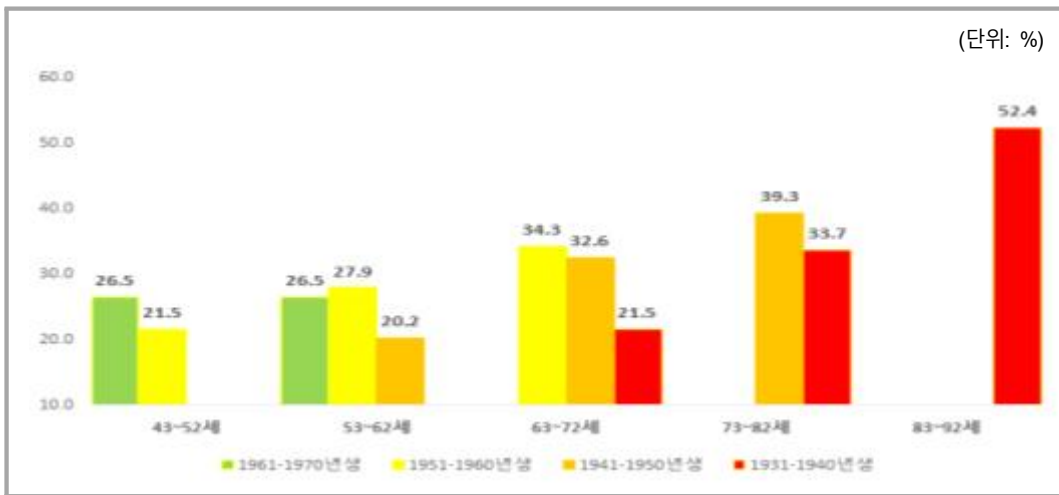
종교 단체 참여자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코호트별로 종교 단체 참여자 비율을 보면 코호트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1960년대생은 40대와 50대가 모두 26.5%로 변화가 거의 없어, 종교활동이 생활 전반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세대적 특징이 확인된다. 1950년대생은 40대 21.5%에서 50대 27.9%, 60대에는 34.3%로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 세대는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이 확장되던 때에 성인기를 보낸 세대로, 중년 이후 종교활동이 서서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1940년대생은 50대 20.2%에서 60대 32.6%, 70대 39.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상승한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에서 도시 환경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경험한 세대로, 고령기에 들어서면서 종교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지지 역할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참여율 상승이 나타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1930년대생은 60대 21.5%, 70대 33.7%, 80대 52.4%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60대 참여율이 낮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가 눈에 띄는데,

이는 종교활동이 이 세대에서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003년 사회조사 기준으로 당시 전체 고령층의 종교단체 참여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렀기 때문에, 1930년대생이 60대였던 이 시기도 낮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세대는 종교활동이 지금처럼 활발해지기 이전의 사회환경에서 성인기를 보냈고, 종교활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해 70대와 80대에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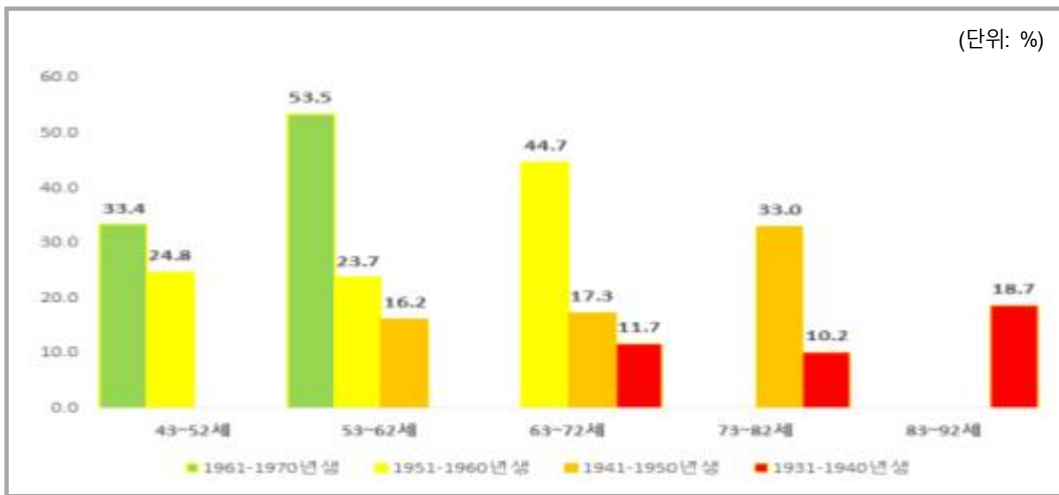
<그림 8-30> 출생코호트별 종교 단체 참여자 비율

라. 취미, 스포츠·여가활동 단체 참여자

취미, 스포츠·여가활동 단체 참여자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취미, 스포츠·여가활동 단체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생은 40대 33.4%에서 50대에 53.5%로 크게 증가해 비교 코호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와 취미 활동이 보편화된 이후에 성인기를 보낸 첫 세대로, 직장 내 동호회나 운동 모임,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여가 활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배경과 부합한다. 1950년대생은 40대 24.8%, 50대 23.7%로 큰 변화가 없지만, 60대에 44.7%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일 중심 생활이 강했던 시기를 지나 정년 또는 은퇴에 접어드는 60대에 이르러 취미와 건강 관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940년대생은 50대 16.2%, 60대 17.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대에서 33.0%로 뚜렷한 증가가 나타난다. 이 세대는 성인기 대부분을 일·가족 중심 환경에서 보냈으며, 취미 중심의 여가 활동이 일반화되기 이전 시기를 경험한 세대다. 그러나 70대에 들어서면서 지역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취미반 등 고령층 대상 여가 프로그램이 확산된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30년대생은 60대 11.7%, 70대 10.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80대에 18.7%로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대는 생애 대부분을 생계 중심 환경에서 보내 취미·스포츠 기반의 단체 활동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동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80대에서의 소폭 증가도 노인시설 프로그램 이용 증가와 같은 제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31> 출생코호트별 취미, 스포츠·여가활동 단체 참여자 비율

3. 자원봉사활동 참여

중·고령기의 코호트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조사의 ‘사회 참여’ 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3년 조사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10년 간격의 2013년, 200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며, 사회 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경우도 자원봉사에 포함해서 조사한다.

중·고령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절대적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봉사시간은 중·고령층의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현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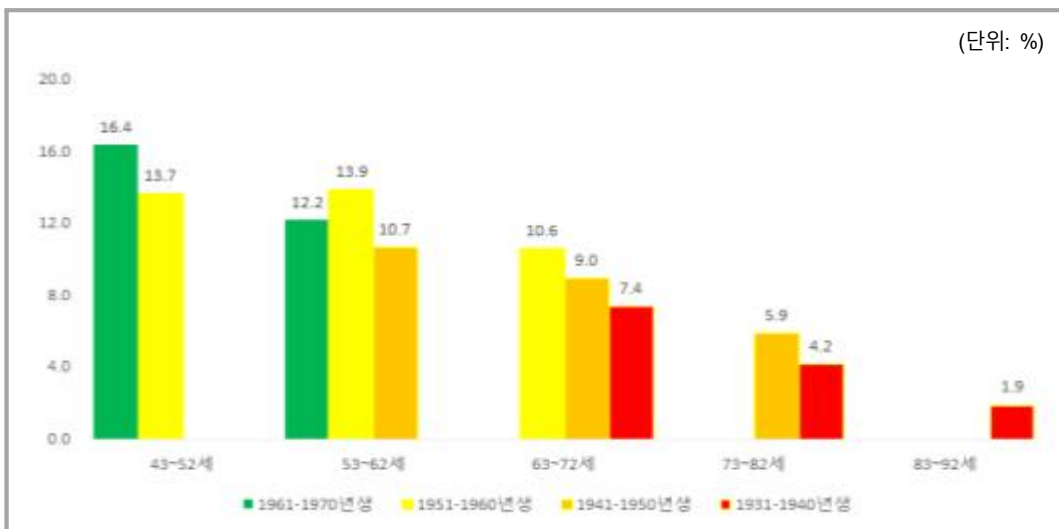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코호트별로 살펴볼 때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가 줄어드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960년대생은 40

대 16.4%에서 50대에 12.2%로 다소 낮아지는데, 이 시기는 장시간 노동과 부모 부양, 자녀 교육 부담이 동시에 존재했던 시기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 자체가 크게 축소되는 사회적 환경이 겹치면서 참여 여건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생은 40대 13.7%, 50대 13.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60대에는 10.6%로 감소한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50대 연령대를 비교해 볼 때 1950년대생(13.9%)이 1960년대생(12.2%)보다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이는 두 세대의 개인 특성 차이가 아니라, 1950년대생이 50대였던 조사 시기는 2013년으로 자원봉사센터 확충, 기업과 지자체 중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등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으로 활발했던 시기였던 반면, 1960년대생의 50대 조사 시기는 2023년으로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제한의 영향이 있던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나타난 시기효과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1940년대생은 중년기 10.7%, 60대 9.0%, 70대 5.9%로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 세대는 성인기 대부분을 생계 중심 환경에서 보내며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기 이전에 중·고령기에 도달한 세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1930년대생은 60대 7.4%, 70대 4.2%, 80대 1.9%로 네 코호트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이 세대는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 이전에 생애 대부분을 거쳤으며, 고령기에 들어서면서 신체적·이동성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 된다.



자료: 사회조사(2003년·2013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32> 출생코호트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 인간관계 만족도

중·고령기의 코호트별 인간관계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조사의 ‘사회 참여’ 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항목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항목은 2017년에 처음 조사항목으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는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자료로서 10년 간격의 종단 코호트 분석은 불가함에 따라 2017~2023년 횡단 자료에 대한 코호트별 산출 결과를 활용하여 수준과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2023년 단년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간 비교를 살펴 보았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항목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 비율은 ‘매우 만족+만족’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2017~2023년 동안 각 코호트의 연령대는 1960년대생 40~50대, 1950년대생 50~60대, 1940년대생 60~70대, 1930년대생은 70~80대에 해당한다.

연도별 산출 결과를 볼 때 네 개 연도 모두에서 1930년대생이 가장 낮고 1960년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뚜렷한 세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1960년대생은 완만한 상승 경향을 보였지만, 1950년대생, 1940년대생, 1930년대생은 코로나 시기(2021년)의 일시적 하락 후 2023년에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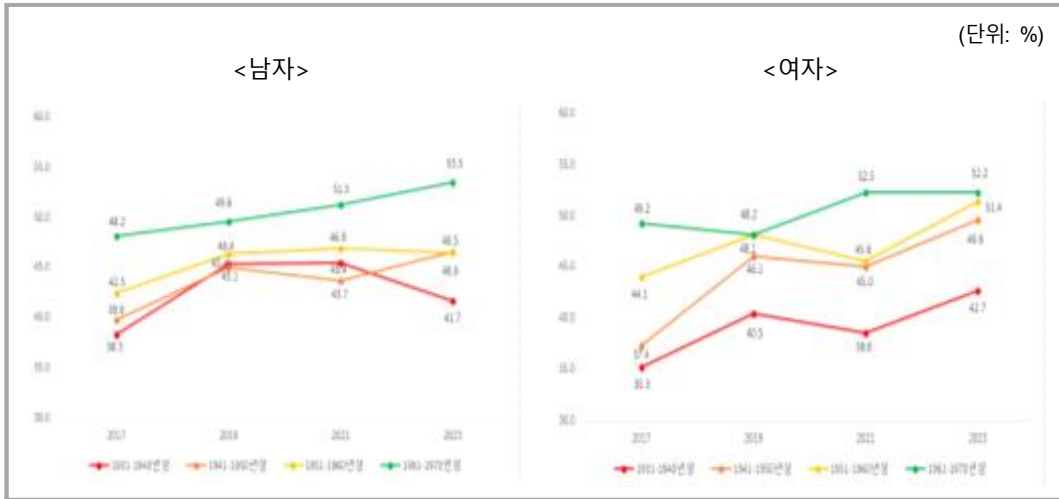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17년·2019년·2021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33> 출생코호트별 인간관계 만족도

성별 차이를 볼 때 코호트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930년대생은 2017~2021

년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3~7%p 높았으나, 2023년에는 여자가 1%p 높은 역전이 나타났다. 반면 1960년대생은 전 기간 내내 성별 차이가 ±1%p 내외로 매우 작아, 성별 격차가 거의 없는 세대로 확인된다. 특히 1930년대생 남자는 2021년 이후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활동 감소와 관계망 회복의 어려움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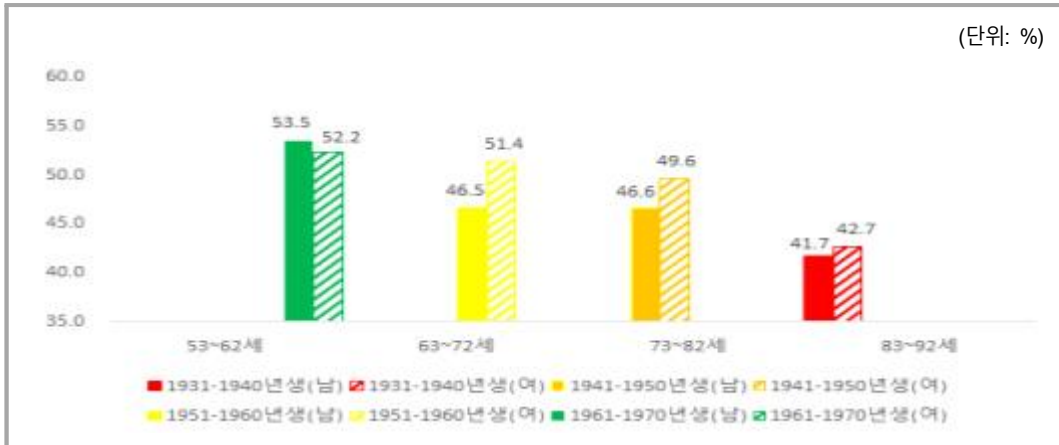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17년·2019년·2021년·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34> 출생코호트별·성별 인간관계 만족도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2023년 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별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최근 코호트일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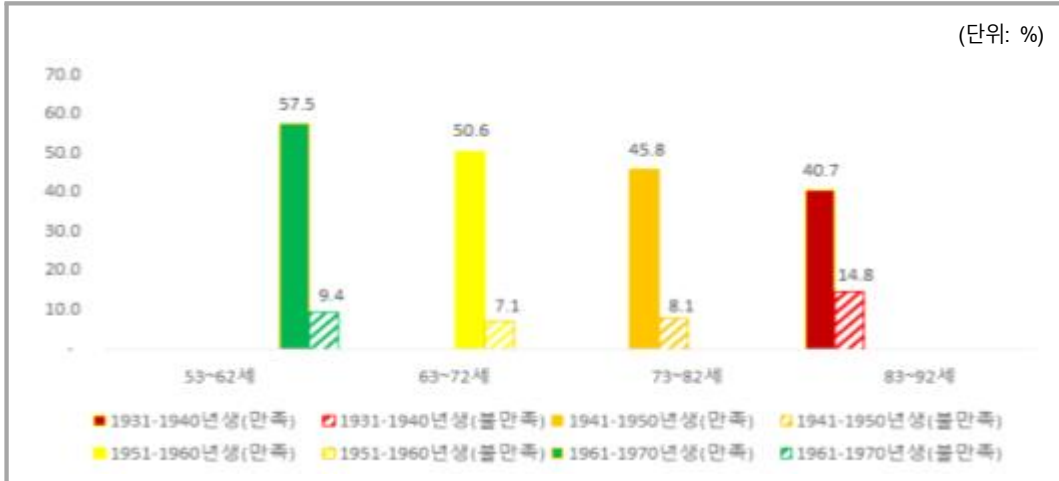
2023년에 1960년대생은 50대에 해당되는데 남자 53.5%, 여자 5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활발한 직장 생활과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가족 외 관계망도 균형적으로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남녀 차이가 거의 없어(약 1%p) 이전 코호트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1950년대생은 60대에 남자 46.5%, 여자 51.4%로 여자가 약 5%p 더 높게 나타났다, 은퇴 전후의 전환기에 있으며 배우자·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종교·취미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40년대생은 70대에 남자 46.6%, 여자 49.6%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산업화 초기 성인기를 겪었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 및 지인 중심의 관계망이 고령기에 들어서도 만족도를 지지해 주는 세대로 볼 수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약 3%p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1930년대생은 80대에 해당되며 남자 41.7%, 여자 42.7%로 코호트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 저하, 배우자 상실, 관계망 축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남자는 여자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여 정서적 고립에 취약한 양상이 확인된다.



자료: 사회조사(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35> 출생코호트별·성별 인간관계 만족도(2023년)

인간관계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회조사의 ‘주관적 만족도’ 항목을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산출한 값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만족한 집단은 모든 코호트에서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불만족 집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며 낮은 결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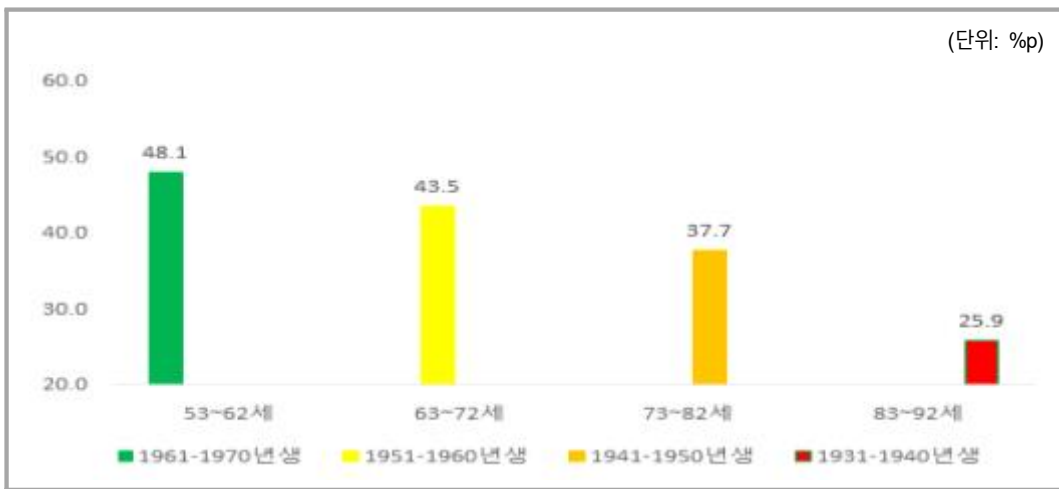
자료: 사회조사(2023년), 국가데이터처.

<그림 8-36> 출생코호트별 인간관계 만족/불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

가장 최근 코호트인 1960년대생인 50대는 인간관계 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가 57.5%인 반면 불만족 집단은 9.4%로, 48.1%p 격차가 나타났고 이는 직장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관계 기반을 유지하는 만큼, 관계의 질이 주관적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50년대생인 60대는 인간관계 만족/불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가 각 50.6%, 7.1%로, 여전히 43.5%p의 차이가 확인된다. 은퇴 전후로 관계 재편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만족 여부가 심리적 안정과 삶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40년생의 70대, 1930년대생의 80대를 볼 때 고령 코호트로 갈수록 격차는 줄어들는데 이는 관계망 자체가 축소되고, 기대 수준도 낮아지며,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건강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료: 사회조사(2023년), 국가데이터처.

* 주관적 만족도 차이=(인간관계 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인간관계 불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

<그림 8-37> 출생코호트별 인간관계 만족/불만족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 차이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1931년부터 1970년 사이에 출생한 네 개 코호트(1930년대생, 1940년대생, 1950년대생, 1960년대생)를 대상으로 중·고령기 여가자원, 여가활동, 여가활용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령기에는 신체적 제약과 관계망 축소라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나지만, 각 코호트가 겪은 사회·제도적 환경 차이는 여가 활용 방식과 사회적 관계 구조에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첫째, 여가자원 측면에서 평일·휴일 여가시간은 연령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전형적 연령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코호트 간 비교 시 최근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보다 여가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여가비용 지출은 최근 코호트일수록 더 많았으며 또한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격차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60년대생 코호트는 40대에

서 50대로 가면서 명목금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고령층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여가활용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를 볼 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동영상콘텐츠 시청’, ‘휴식활동’은 증가하고 ‘사회활동’과 문화예술 관람 등 ‘기타’ 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이는 최근의 개인형 여가활동 선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혼자서’ 활동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가족’, ‘친구’, ‘동호회’는 증가하고 ‘혼자서’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세째, 여가활용 만족도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여가활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 코호트 특성으로 해석된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가활용 만족 여부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기의 삶의 질 형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코호트에서 여가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고립도를 볼 때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일한 70대 구간에서 1940년대생보다 1930년대생의 고립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0대에서 여자는 감소한 반면 남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단체 참여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모든 코호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단체참여 비율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고 또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성별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자의 취미·직장·지역 기반 참여가 늘어남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중·고령기의 여가 및 사회적 관계 변화를 코호트 관점에서 분석하여, 세대별로 상이한 성장 환경과 사회적 경험의 차이가 고령기 생활양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동일 코호트를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종단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용 가능한 자료의 시계열 범위가 제한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시간에 따른 코호트별 변화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최근 코호트는 중년기부터 적극적 여가활동과 문화·디지털 기반 참여가 높아 고령기에도 다양한 여가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환경은 단순한 시간 활용을 넘어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기반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령기의 여가는 주관적 만족과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집단은 기본적 참여가 제약될 수 있어, 이러한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우선순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관계망의 구성 방식이 코호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은퇴 이후 관계망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여자는 배우자·부모·손자녀 돌봄 부담으로 여가 참여가 제약될 수 있어 이러한 성·코호트별 차별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코호트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고령사회 정책을 시행하여 고령기에도 사회적 연결 유지가 가능한 여가환경과 관계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후 충분한 종단 자료 축적과 다양한 통계 연계 등을 통한 자료 인프라가 보완된다면 세대별 변화 경로 비교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를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정교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제 9 장

결 론

본 연구는 출생코호트별 건강, 돌봄, 노동시장, 노후준비 및 주관적 경제상태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패널조사 등 다양한 국가 통계를 활용하여, 출생코호트가 중·고령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건강, 돌봄, 노동시장, 노후준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중·고령층이 경험하는 변화는 단순한 고령화 현상이 아니라, 코호트별로 상이한 사회적 경험·제도적 환경·생애과정의 축적이 반영된 구조적 변화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고령사회 정책이 연령 중심 접근을 넘어 코호트 기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이다.

1. 근거 기반의 정책추진을 위한 자료의 생산과 관리

가. 안정적인 자료 생산과 관리

코호트별 생애과정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고령화패널조사 등 다양한 국가승인통계가 장기적·일관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안정적 통계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 구조의 지속성과 충분한 표본 규모 덕분에 코호트 간 비교의 기반이 되었으나, 사회조사의 경우 문항 변화의 잦음, 표본크기 변동 등으로 시계열 분석에 제약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 정책의 실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목적·문항·표본 설계의 지속성 확보, 조사 간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변수 정의·분류체계의 표준화, 연령·성·코호트 단위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표본 유지, 다양한 국가통계를 생애과정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자료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는 코호트별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 기반이다.

나. 사회제도 변화를 반영한 자료 생산과 시계열 안정성의 동시 추구

한국 사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공적 돌봄 확장, 고용구조 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제도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출생코호트별 생애경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 자료 역시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춘 문항 개발과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변화 반영에만 집중할 경우 시계열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중적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 제도 변화·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보완 문항의 체계적 도입이 필요하며, 핵심지표의 시계열 유지와 비교 가능성 확보, 조사 방식·범주 기준 등 변수 관리의 장기적 일관성 강화, 조사 간 중복·단절을 줄이는 연계 및 통합 설계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제도 변화가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게 하며, 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와 설계에 필수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 코호트 접근을 통한 생애과정 이행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를 통해 건강·돌봄·노동·노후준비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코호트 간 뚜렷한 이질성과 이행 궤적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고령층을 단일 집단으로 다루는 정책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1930·1940년대생은 취약한 제도 환경 속에서 노년기에 진입하여 건강·돌봄·소득 전반에서 구조적 위험이 크고, 1950·1960년대생은 제도 확충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으며 보다 안정된 생애경로를 보이는 등 세대 간 차이는 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고령사회 정책은 코호트별 경험·행동·제도 노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단일 시점 비교가 아닌 생애과정 기반의 장기적 분석 체계 구축, 미래 고령층의 특성을 예측하여 정책 수요와 부담을 사전 파악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2. 중·고령기 생애과정 이행 관련 정책 시사점

가. 출생코호트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건강정책 추진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은 노년기에 접어들며 건강 저하 속도가 빠르고 만성질환 부담이 크며,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와 높은 건강행동 실천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 성장 환경과 제도 노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강정책은 코호트별 위험 요인과 예방 역량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요구한다. 가령 고령·취약 코호트의 경우 만성질환 집중관리, 기능저하·치매 예방, 의료·돌봄 연계 강화 등의 접근이 효과적이며, 중년 및 예비고령층의 경우 신체활동 증진, 조기질환 관리, 건강검진 참여 확대 등 예방 중심의 접근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건강행태 변화가 시기효과(흡연규제, 운동 권장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할 때, 세대 간 지속 가능한 건강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나. 가족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체계의 대응

돌봄 자원의 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공적 제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호트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30년대생은 가족 돌봄 의존의 마지막 세대이며, 1940년대생은 과도기, 1950년대생은 제도 기반 돌봄체계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에 돌봄 정책은 초고령기 돌봄 공백을 대비하는 돌봄체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돌봄체계 전환은 단순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가족구조와 코호트별 돌봄 기대·자원 변화를 아우르는 장기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코호트별 돌봄 제공자 특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돌봄 감소에 대비한 대체 돌봄자원 확보와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 독거·배우자 상실 위험이 높은 여자 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접근성 확대, 자녀 돌봄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중·고령층의 근로생애 연장을 뒷받침하는 고용정책 확대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경제활동참여율과 임금근로 비중이 증가하며 고령층의 고용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나, 50~59세 시기에 조기퇴직이 반복되는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며, 55~64세 전환기의 고용 유지 및 직무 전환 지원 강화, 고령 친화적 직무 설계·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장기근속 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 특화된 고용정책 전략이 필요하며, 남자의 경우 정년·명퇴 중심, 여자의 경우 돌봄 부담·건강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고용정책은 단순한 고용연장이 아닌, 코호트별 고용 경험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생애설계로 지원되어야 한다.

라. 노후준비 격차를 줄이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최근 코호트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아졌으나, 과거 코호트는 제도 접근성의 제약으로 취약성이 컸다. 코호트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공적연금 도입 이전·초기 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강화 등 맞춤형 빈곤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 노후준비 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보다 낮은 여자의 연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여자 근로자의 돌봄지원과 경력단절 완화 등의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후빈곤 수준은 여전히 OECD에서 높다는 점에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장>

- 강소량 외. (2019). “50+ 생애전환교육의 특성과 영향”.
- 송민혜. (2020). “[50+리포트 2020] 2호 v.20 ③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의 50+세대 지원 조례 현황과 내용”.
- 안상건, 현대환, 신영규. (2024).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연구: 교육·취업. 통계청(한국가데이터처).
- 안서연, 백학영. (2019).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베이비부머 이 전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희.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2023.12.14.자 보도자료.
- 현대환, 안성건, 김근태. (2024).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통계청.
-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장>

- 강승지. (2025.6.9.). ‘기대수명 120세’ 2045년 40%가 노인...“노화역전 기술 독점도 경계”. 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806996>
- 강혜규, 박능후, 원종욱, 이현주, 이승경, 김선미, 김계연, 양시현. (2003).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2017).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보도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1980~2020년), 원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2024), 원자료.
-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세진. (2019).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하, 김혜연. (2025). “중년기 성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가정과삶의질연구**, 43(1), 143-158. 10.7466/JFBL.2025.43.1.143
- 김태완.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이슈엔포커스**, 385. 1-8
- 도현경, 임재영. (2015). “초고령 노인의 신체기능장애와 재활 전략”. **대한노인병학회**, 19(2), 61-70.
-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한국사회복지연구원
- 방하남, 이성균, 우석진, 김기현, 김지경.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한

국노동연구원

- 변금선, 최지원. (2025).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서울연구원.
- 변금선. (2024).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5.12.3.).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보도자료
- 성혜영, 한정란, 주소현, 이금룡, 황남희, 정무성, ...윤소영. (2018). **노후준비서비스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오삼일, 채민석, 한진수, 장수정, 김대일. (2025).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 오유진. (2025.5.9.). “노인 기준, 이제는 70세로”... 학계·시민단체, 첫 공식 제안.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5/09/M4EX7GFSAJFQPP2YDTRHDSJEFA/>
- 우해봉, 장인수, 정희선. (2021). **한국의 사망력 변천과 사망 불평등-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진아. (2009.5.21.) **치매노인 100만명 시대 온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요양뉴스. https://www.xn--9d0bk37etpa.kr/_con/101407/detail/?id=34720&chkN=W83550W16708_3741R&mykeyword=&lstCd=board_careNews
- 이건아, 양숙자, 우은효. (2018).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 **한국보건간호학회**, 32(1), 5-18
- 이승호, 변금선, 고혜진. (2019). **근로생애와 고령노동**.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 이원진, 김수영. (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 이은선. (2022). **정신정서적 건강과 노인인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 이정택. (2017). **은퇴가 건강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 이지영, 백선아. (2024). “중년기 은퇴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적응과정: Double ABC-X 모델 적용”. **생활과학연구논총**, 28(1), 1-19
- 이현주, 정은희. (2016). “생애과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건강: 초기 성인기 및 중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중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53-84
- 정선영, 한지우. (2024).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BOK 이슈노트
- 조선일보. (2013.9.9.). [6075 新중년] [1] 新중년 열의 아홉은 “난 젊다, 일하고 싶다, 활기차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9/2013090900195.html
- 진성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회**, vol.38, no.5, p.31-52.
- 최요한. (2018). “주관적 건강은 실제 건강의 좋은 대리변수인가”. **노인복지연구**, 73(4), 7-28.
- 통계청. (2024).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보도자료
- 통계청. (2024). **2023년 생명표 작성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25).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
- 통계청. (2025).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25).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보도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노인 문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2869>
- 한은정, 박영우, 조윤민, 송미경. (2024).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현 노인세대와 배

- 이비부터 세대 간 특성 비교 연구”. *장기요양연구*, 12(2), 2-26. 10.32928/TJLTC.12.2.1
- 함선유, 권현지. (2024).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노동시장*.
https://mods.go.kr/board.es?mid=a90104010306&bid=12307&act=view&list_no=434576
- 행정안전부. (2024).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보도자료
- 현대환, 안상건, 김근태. (2025).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통계개발원(현 국가데이터연구원).
- Badley EM, Canizares M, Perruccio AV, Hogg-Johnson S, Gignac MA. (2015). Benefits gained, benefits lost: comparing baby boomers to other generations in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self-rated health. *Milbank Q*, 93(1):40-72. doi: 10.1111/1468-0009.12105. PMID: 25752350; PMCID: PMC4364431.
- Bram, Vanhoutte., James, Nazroo. (2015). Life Course Pathways to Later Life Wellbeing.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 Dale Dannefer. (2003).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ume 58, Issue 6, Pages S327 - S337, <https://doi.org/10.1093/geronb/58.6.S327>
- Dohoon, Lee.,Margot., Jackson.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time health trajectories and socioeconomic attainment in middle age. *Social Science Research* 54, 96-112
- Elder, G. H.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1), 4 - 15. <https://doi.org/10.2307/2786971>
- Elder, G. H. J., Johnson, M. K., & Crosnoe, R. (200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In J. T. Mortimer, & M. J.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3-19). Berlin: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0-306-48247-2_1
- Elder, G. H. J..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 Eliza K. Pavalko, Julie E. Artis. (1997). Women's Caregiving and Paid Work: Causal Relationships in Late Mid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ume 52B, Issue 4, Pages S170 - S179, <https://doi.org/10.1093/geronb/52B.4.S170>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 Co.
- Freedman, Marc. (2008). *Encore: Finding Work that Matters in the Second Half of Life*. PublicAffairs.
- Freedman, Marc. (2011). *The Big Shift: Navigating the New Stage Beyond Midlife*. PublicAffairs.
- Gilleard, C., & Higgs, P. (2016). Connecting life span development with the sociology of the life course: A new direction. *Sociology*, 50(2), 301 - 315.
<https://doi.org/10.1177/0038038515577906>
- Havighurst, R. J. (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Longmans. Green.
- Henchoz Y, von Gunten A, Büla C, et al. (2019) Do baby boomers feel healthier than earlier cohorts after retirement age? The Lausanne cohort Lc65+ study. *BMJ Open*, 9;9:e025175. doi: 10.1136/bmjopen-2018-025175.
- Jung J. C. (2013). Stress and Disease: Evidence Based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6(6): 460-461.
- Laslett P. (1987).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Ageing and Society*. 7(2):133-160.

doi:10.1017/S0144686X00012538

- Leonard D. Cain, Jr. (1964). "Life Course and Social Structure." In *Handbook of Modern Sociology*. Rand McNally.
- Lynch, C., & Danely, J. (Eds.). (2013).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 Cultural Perspectives on Aging and the Life Course* (1st ed.). Berghahn Books. <http://www.jstor.org/stable/j.ctt9qd07b>
- Mills, C.W.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Neugarten, B. L.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1), 187-198. <https://doi.org/10.1177/000271627441500114>
- OECD. (2024). *Health at a Glance 2024*.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ealth-at-a-glance-2025_8f9e3f98-en.html
- Pierce J, Giovino G, Hatzianreou E, Shopland D. (1989). National age and sex differences in quitting smoking. *J Psychoactive Drugs*. 21(3):293-8. doi: 10.1080/02791072.1989.10472170. PMID: 2809895
- Rice NE, Lang IA, Henley W, Melzer D. (2010). Baby boomers nearing retirement: the healthiest generation? *Rejuvenation Res*. 13(1):105-14. doi: 10.1089/rej.2009.0896. PMID: 20230284.
- Son G. H. (2021). Effects of smoking behaviour changes on depression in older people: a retrospective study. *Australas J Ageing*. 40(1):e37-e43. doi: 10.1111/ajag.12842. Epub 2020 Sep 3. PMID: 32881229.
- Suzman, R. M., Willis, D. P., & Manton, K. G. (Eds.). (1995). *The oldest old*. Oxford University Press.

<3장>

- 강미나. (2025). "점유형태 변화와 주거비 부담". **센서스 100년 한국의 주택 2025**. 통계청.
- 고진수. (2024). "노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문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통계개발원.
- 김정록. (2024). **60년대생이 온다**.
- 김세진 외. (2023).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희순 외. (2018). "주택점유형태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APC효과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제26권 1호** 2018. 02.: 45~62.
- 박시내 외. (2013).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 통계개발원.
- 봉인식·홍정호. (2025). "주택 유형의 변화". **센서스 100년 한국의 주택 2025**. 통계청.
- 신윤정 외. (2023).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강현 외 4인. (2017).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제2017-25호.
- 한경혜 외. (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생애주기 예측**. 서울대학교.
- 황남희 외. (2023). **미래 고령층의 사회적 기여와 노후경제수준 전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현대환 외. (2022).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20)**. 통계개발원.

<4장>

- 장금희, 류진석. (2024). "일하는 가족 주 돌봄자의 노인 돌봄부담 및 돌봄자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44(1), 1-29.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기대수명, 합계출산율.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지표.
- 김민수, 이용호, 송지은. (2024).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유형화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4(1), 426-448.
- 김유경 외. (2018).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주연. (2021). “노인의 돌봄전이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코스 관점의 적용”.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77-89. <http://dx.doi.org/10.22626/jkfrma.2021.25.1.006>
- 변금선. (2024).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4.7. 19-32.
- 송고. (2024.6.3.).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치세대’ 60년대생 30% “난 고독사할 것”.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1122100530>
- 우해봉, 장인수, 정희선. (2021). **한국의 사망력 변천과 사망 불평등: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하은, 김경민, 김주현, Kathrin Boerner, 한경혜. (2024). “초고령부모와 노인자녀 간의 돌봄 경험”. *한국노년학*, 44(5), 623-644.
- 이승호, 신유미. (2018).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중단적 관계: 재가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8(4), 1035-1055.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승은, 강유진, 김경민, 이서연. (2022). “초기 노인(65-74세)의 장래돌봄기대유형 비교: 2010년과 202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4(3), 102-134.
- 한은정, 박영우, 김희정, 박명화. (2024).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양부담, 우울, 삶의 질, 시설입소 관련 요인: 2차 자료 분석연구”.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7(1), 57-73.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4차 2012년, 9차 2022년) 원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2025.3).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유지가이드**.
- Rodrigues, R., Rehnberg, J., Simmons, C., Ilinca, S., Zólyomi, E., Vafaei, A., Kadi, S., Jull, J., Phillips, S. P., Fors, S. (2023). Cohort Trajectories by Age and Gender for Informal Caregiving in Europe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 Changes, 2004 and 2015.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78(8), 1412-1422. <https://doi.org/10.1093/geronb/gbad011>

<5장>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기본조사(1985~2025년, 5년 단위, 2025년은 1~6월분). 국가데이터처 MDIS, 다운로드.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2005~2025년, 5년 단위). 국가데이터처 MDIS, 다운로드.
-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349~378.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이원진, 김수영. (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변금선, 고혜진. (2019). **근로생애와 고령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아영, 박소은, 황남희, 한수진, 배호중. (2023).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은, 황규성. (2024). **세대별 생애노동과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6장>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해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02년, 2003~2023년, 10년 단위). 국가데이터처 MDIS, 다운로드.

김세진, 남석인. (2020).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코호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3), 114-151.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순미, 조경진. (2019). “1935~1945년 코호트 전문직 여성노인들의 일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 노인 연구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모색 작업 I”. **한국사회학**, 46(5), pp.35-78.

남상호. (2016).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pp.1-23.

변금선, 김상현, 최지원 외. (2023).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윤석명, 고경표, 김성근, 강미나, 이용하, 이정우. (2017).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희. (2023). **노후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KDI.

이원진, 정혜식, 전지현. (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황성현. (1998).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2).

이주미. (2025).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소득과 자산 특성”. **보건복지포럼**, 2025년 2월호(제340-06호).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5). 1977~2025년 사회조사 항목 변경 내역, MD.

통계청. (2025). 2025 고령자 통계. 2025.9.25.자 보도자료.

황남희, 김태완, 진화영, 김경래, 신화연, 최옥금. (2021). **중장기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정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장>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14년, 2024년). 국가데이터처 MDIS, 다운로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기대수명.
 김미혜, 정순돌, 박현주. (2014).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 미국, 영국 고령화패널 비교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987 - 1005.
 김소진. (2019). “한국 노인의 노화궤적 연구”. *한국노년학*, 39(1), 37-60.
 대한노인병학회. (2023). *노인병학*, 제4판.
 서연숙. (2011).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 연구”. *한국노년학*, 31(4), 1135-1153.
 윤명숙, 조혜정. (2007). “지역사회 노인의 음주행위, 문제음주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6, 254-287.
 오영희, 배화옥, 김윤신. (2006).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태의 관련성 연구”. *한국노년학*, 26(3), 461-476.
 오진주, 고현민(교신저자), 김선희, 김영선. (2016). “노년기 우울변화의 영향요인: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여”. *대한보건연구*, 42(2), 1-15.
 이지연, 김소현. (2010). “한국의 자살”. *한국사회학*, 44(4), 63-94.
 임진섭, 김다빈, 유정호, 정호영, 박재현. (2024).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산업융합연구*, 22(2), 105-117
 전소연, 이석구. (2023). “전·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 *농촌의학·지역보건*, 48(2), 103-117.
 정순돌, 구미정. (2011). “우울 영향요인 :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2, 305-324.
 정준수. (2020). “생애주기별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 중년, 노년 3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7, 251-297.

<8장>

강은나 외. (2015).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 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향진. (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역할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4*, Vol. 24, No. 1. 53~70.
 노혜진. (2021). *성인가족 돌봄시간의 영향요인*. KC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박명숙 외. (2024). “한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활용한 통계분석”, *사회통합연구*, 5권 2호(2024), pp. 1-41.
 이진석. (2013).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요인이 개인의 단체참여에 미치는 영향”, *통계연구*(2013) 제18권 제2호.
 이현기. (2018). “중년 이후의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2018년 제20권 제4호.
 임소현 외. (2021).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50+커뮤니티 역할 모색”. *서울시 50플러스*, 2021-023.
 진화영. (2020).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문 외. (2023). **중·고령자의 이중돌봄 책임 및 이중돌봄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 통계청. (2023). 국민 삶의 질.
- 통계청. (2024). 사회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통계청. (2025). 1977~2025년 사회조사 항목 변경 내역.
- 한경혜. (2019).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서울대학교.
- 황남희. (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2014, 037-069.
- 홍성희. (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 Elder, G. H.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 Norman B. Ryder.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 국가데이터처 인구상황판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Abstract

Cohort-Based Comparative Study of Life-Course Transitions: Focusing on Middle and Older Adulthood

**Sanggun An, Youngmi Lee, Kangbin Kim, Namhui Hwang,
Eunja Park, Sejin Kim, Soeun Park, Eunji Kim**

This study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future aging policy by adopting a life-course perspective to examine cohort differences in family and housing arrangements, caregiving, work and retirement, income and consumption, health, and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cohorts born between the 1930s and the early 1970s as they transition into later life. Beyond descriptive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generate and interpret data that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Life-course theory emphasizes that individual lives are shaped by the cumulative influence of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texts across age, period, and cohort. Major life transitions—such as education, labor market entry, marriage, and retirement—are interconnected, and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experienced at specific times exert long-term effects on entire cohorts. Cohorts therefore represent not merely birth-year groupings but populations that share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Even at the same age, later-life conditions may vary substantially by cohort, particularly during midlife and old age.

The 1931–1970 birth cohorts, who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account for approximately 38.6%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2024 and constitute the core driver of population a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creased across cohorts, especially among women, reflecting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emphasizing human capital.

In the family domain, cohort-specific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at the time of marriage and childbirth have cumulatively shaped later-life marital status and household structure. More recent cohorts exhibit delayed marriage, rising non-marriage, and increasing shar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Housing and regional patterns also differed: earlier cohorts benefited from favorable homeownership conditions, whereas later cohorts showed stronger residential fixation and greater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lear cohor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caregiving arrangements. While earlier cohorts relied primarily on family-based care, later cohorts increasingly combined spousal care with formal services, indicating a structural shift from family-centered to institution-based caregiving.

In the labor market, more recent cohorts demonstrated higher rates of economic participation in later life, particularly beyond their 60s, reflecting both financial needs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pension reforms and expanded senior employment programs. Occupational structures also shifted toward higher shares of wage workers and professional and clerical occupations.

Subjective health declined with age across all cohorts, but more recent cohorts reported better perceived health at comparable ages. Health behaviors improved over time, including reduced smoking, increased physical activity, and greater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However, rising levels of suicidal ideation among some older cohorts highlight the need for greater attention to mental health and social isolation.

In the income and consumption domain, a generational shift in sources of old-age living expenses was identified: earlier cohorts relied heavily on children, whereas later cohorts increasingly depended on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s. Subjective economic evaluations were also more positive among more recent cohorts.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s were shaped by both age-related changes and cohort-specific contexts. Although leisure time increased with age, more recent cohorts reported less leisure time but higher leisure expenditures. Leisure satisfaction rose markedly among later cohorts, while social isolation remained higher among men, particularly in advanced old 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table data production system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emphasizes the need for cohort-sensitive policies, including life-course-based health strategies, institutionalized caregiving systems, expanded employment support for older adults, and strengthened multi-tiered income security to reduce inequalities in later life.

Keywords: midlife, older age, cohort, family, hou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living expenses, health, leisure, social relationships

연구진

- 안상건(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이영미(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 김강빈(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연구보조)
-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박소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은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5-15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중·고령기를 중심으로

인 쇄	2026년 3월
발 행	2026년 3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Online)	2733-4120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